

통일과 평화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 2, 2009

2호 · 200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차 례

특집

- 류길재 | 대북정책 추진체계와 스마트파워 3
- 이수형 |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 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 34
- 김병조 |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
: 통일정책에 대한 한 제언 63

연구논문

- 김갑식 | 김정일 시대 권력엘리트 변화 103
- 김재한 |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140
- 이동기 |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162
- 이명자 | 미·소 군정기(1945~1948) 서울과 평양의 극장연구 199
- 설규주 | 학교급에 따른 학교 평화교육 실태의 차이와 의미 연구
: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사회과를 중심으로 231
- 김현아 | 새터민의 남한 사이버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275

서평

- 이상신 | 연옥의 안과 밖: 북송(北送)과 탈북(脫北)의 이야기들 337

대북정책 추진체계와 스마트파워

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은 스마트파워 개념을 적용하여 대북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북핵 문제가 해법을 찾기 어려운 현재의 조건에서 당장의 해법 추구보다는 중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발상을 갖고 접근하기 위해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하고 있는 스마트파워 개념은 유용성을 갖고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구성된 하드파워와 문화,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대외정책에 토대한 소프트파워를 잘 결합시켜 놓은 스마트파워는 비록 개념화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북정책 논의에서 간과돼 온 한국의 매력 자원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대북정책은 북한, 국내사회, 국제사회 모두를 고려하면서 추진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북한에 대한 하드파워의 구사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대북정책의 내용 외에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결합시키는 정부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스마트파워는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이 갖고 있는 매력 자원을 동원하고,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스마트파워 전략 하에서 대북정책 추진체계를 위해서 첫째, 정부 차원에서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스마트파워 전략을 대북정책에 있어서 실천하기 위한 정부 부처 내 인적·조직적 개선을 추진해야 하고, 셋째,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넷째, 시민사회 내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대북정책, 대북정책 추진체계, 스마트파워,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북핵 문제

I. 머리말

이 글은 대북정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파워’(smart power) 개념이 어떤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 스마트파워는 하드파워(hard power)와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잘 버무려 놓은 힘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드파워, 즉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하드파워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파워, 즉 문화, 외교 등 무형의 매력적인 힘도 갖추어야만 비로소 스마트파워를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개념이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대북정책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을, 그리고 국내 사회,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삼는다. 대북정책이 타깃으로 삼는 대상이 복합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일 이 중 어느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하드파워 또는 소프트파워 중 하나를 잘 구사하면 될 수 있다. 예컨대 북한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대북정책이라면 하드파워의 적절한 배합만으로도 대북정책을 훌륭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과의 교류가 지극히 제한적이므로 소프트파워가 구사될 여지가 적은 까닭 또한 하드파워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대북정책에 있어서 하드파워는 “채찍(군사력)이나, 당근(경제력)이나”라는 이분법에 함몰돼 있으며, 그 적절한 배합조차 항상 논의대상에서 비껴나 있다.

대북정책의 지평을 넓혀놓고 보면 북한만을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당장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 추진돼야 할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국내정치적 지지와 합의 기반은 물론이고, 핵문제와 같이 국제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접근에도 도움이 되지 않

는다. 대북정책은 이와 같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맥락에서 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프트파워를 결들인 스마트파워 개념의 유용성은 한번쯤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스마트파워 개념과 북한 문제 간의 상관성에 대해 언급하고 대북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는데 이 개념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글은 스마트파워를 대북정책 추진체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도외시켰던 소프트파워와 스마트파워의 현실적 적실성을 대북정책을 사례로 해서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II. 북한 문제의 고질성과 스마트파워

2009년 하반기 북핵문제는 여전히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지구촌 위를 비행하는 죽음의 여신 발퀴레(Die Walküre)를 연상시킨다. 4월 5일 ‘인공지구위성’인 ‘광명성 2호’라고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위성체를 로켓에 실어 발사했고, 5월 25일엔 2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했다. 그 사이 북한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고, 영변의 사찰관을 추방시켰으며, 폐연료봉 재처리에 착수했다. 이로써 2007년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타결된 북핵 불능화를 담은 ‘2·13합의’ 국면은 적어도 2009년 하반기 현재 종언(終焉)을 고한 것처럼 보인다. 더 중요하게는 2006년 10월의 1차 핵실험에 이은 2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공고화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¹⁾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정부는 핵실험 직후

1) 6월 13일 북한은 전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제재결의안 1874호를 통과시킨데 대해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담은 북한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기 한 달 전인 4월 20일 엘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1874호를 이끄는 기관차의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5개월째 강도 높은 대북 압박 국면을 이끌고 있다. 출범하기 전 북미관계 개선의 진양지(震央地)가 될 것으로 광광을 받았던 미국 민주당 정부는 그런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남북관계 역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온 경색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2009년 4월 21일 개성공단에서의 임금 인상과 토지 사용료 요구 등 사업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북한의 통지가 전달되어 남북 경협 의 상징물인 개성공단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더욱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현대아산 직원이 북한에 의해 억류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 문제는 1998년 이전의 상황으로 거침없이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어할 수 없는 핵무장화의 길로 질주하고, 남북관계를 비틀어 버릴 듯 덤벼들었던 북한이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유화적인 태도로 표변했다. 주지하듯이 클린턴(William Clinton) 전 대통령의 방북을 요구하여 성사시킴으로써 억류했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석방하고, 현정은 현대 그룹 회장의 방북을 수용하여 억류 직원을 풀어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신호탄으로 북한은 전방위적 대화 모드로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조문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는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 국면에 갈급하다는 인상까지 심어주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개최되었고, 북한

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http://app.yonhapnews.co.kr> (2009-04-21 10:09 송고). 또한 2008년 말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 사령부(JFCOM)가 발간한 “2008 합동작전 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을 아시아의 핵보유국으로 적시한 바 있다.

<http://app.yonhapnews.co.kr> (2009-04-24 10:38 송고).

의 임진강 무단 방류 사태로 한국인 6명이 사망한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도 개최되었다. 게다가 싱가포르에서는 정상회담을 위한 막후 접촉도 있었다. 그야말로 2009년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그러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既視感)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위기 조성 and 유화적 태도, 이어서 대화 국면, 협상, 합의,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의 결렬, 다시 위기로 이어지는 ‘제자리걸음’의 양상이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과거 북핵 국면에서 늘 보아왔던 기억의 소산일 터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볼 때 북한 문제는 고질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그렇게 남을 것이다. 작금에 드러나는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1993년에 시작된 1차 북핵 위기 이래로 북한문제(North Korea problem)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은 이 문제가 쉽게 풀리기 어렵다는 사실만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이와 같이 북핵문제를 포함해서 북한문제가 고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북한의 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탓이라고 하지만, 사실 북한이 남한을 포함해서 대외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경제교류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나선다면 북한을 적대시할 나라는 하나도 없다. 결국 도발적인 대외정책과 폐쇄성은 북한 내부의 억압성과 통제성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이는 정권의 문제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³⁾

2) 북한 문제란, 북한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한국과 주변국들의 외교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problematic)이다.

3) 북한의 정치체제는 ‘혁명전통’에 의해 많은 부분 규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권력세습에 의해 북한의 정권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만일 권력이 세습방

이와 같이 고질적인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溫家宝) 총리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을 비롯해서 다자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6자회담의 불씨는 아직 살아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만일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핵 협상의 모멘텀은 되살려질 것인지, 그리고 북핵 문제는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인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의 비밀접촉은 일단 불발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재개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만일 재개되어 북한이 정상회담의 의제로서 핵문제 논의를 수용해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관계는 전면적인 개선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 모든 의문을 떠올려도 답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마도 기시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문제의 해법은 없는 것인가. 아마도 당장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을 선선히 포기하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이며, 그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 6자회담의 5개 참가국이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내용이나 그것을 주는 절차에 관해서도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1일에 천명한 ‘일괄타결’ 방안(Grand Bargain)은 ‘크게 주고, 크게 받겠다’는 것인데, ‘몸값’을 끊임없이 불리고 있는 북한의 행동을 보면 과연 얼마나 크게 줘야 할지 알 수가 없다.⁴⁾ 또한 한국 혼자서 주겠다고 나서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줄 수도 없다. 북한은 핵문제의 협상 상대는 미국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중국조차 북한에 대

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체돼 왔다면 북한도 여타 공산권 국가들이 겪었던 체제 이행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의 정책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 김정일의 선호 때문이라기보다 정권의 계속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결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4) 북한이 북핵 협상을 핵군축협상으로 전환시키려고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압력 행사를 아예 정책 선택지에서 제외시켜 버린 상황이다. 결국 해법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푸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추진하고 수행하는 대북정책의 정당성과 매력도를 키워 나가는 것이 해법 아닌 해법이 아닌가 한다.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북핵문제는 북미 양자대화든, 6자회담이든 재개되더라도 당장 궁극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핵폐기 절차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시한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 과거와 같이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만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큰 결단’을 내려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모든 핵폐기 조치의 패키지를 수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과정은 단기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 대가로 줘야 할 인센티브 패키지가 하루아침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미수교나 안전보장을 문서로 약속하는 방식이야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단기간에 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을 채우는 일은 관련국들의 협상이 있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더구나 경제지원 패키지는 최소한 2~3년부터 5~6년 정도는 걸려야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⁵⁾

그러면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북한의 핵폐기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간은 북한체제의 전환 문제와도 깊이 연관돼 있다. 뇌졸중으로 인해 건강 이상을 겪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4월경부터 삼남(三男)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첩보가 외부세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권력승계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체제가 머

⁵⁾ 만일 경제지원 패키지에 경수로가 포함된다면 이의 건설 기간이 최소 5~6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않아 불확실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고질적이면서도 불확실성에 빠져있는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게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사했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만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방법론과 접근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구상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다.

이러한 고민과 반성을 위한 준거로서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스마트파워 개념이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파워 전략은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이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도구를 집어 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즉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법적, 문화적 도구들뿐만 아니라 그 도구들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이른바 ‘스마트파워’라는 것을 구사해야만 한다”고 천명한데서 도드라진다.⁶⁾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파워 전략은 벌써부터 국제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스마트파워의 원조 격인 소프트파워(soft power) 개념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이 글은 스마트파워의 개념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을지, 적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

6) “Statement of Senator Hillary Rodham Clinton Nominee for Secretary of Stat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anuary 13, 2009 ; <http://foreign.senate.gov/testimony/2009/ClintonTestimony090113a.pdf>. 같은 연설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스마트파워에 있어서 외교가 대외정책의 선봉장(vanguard)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논의되는 스마트파워 개념을 우리의 대북정책에 기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파워 개념의 유용성을 응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스마트파워 개념은 그 다음이라는 말이다. 당연하게도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은 스마트파워를 마음 놓고 운위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파워라는 개념이 미국적 맥락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Ⅲ. 스마트파워, 대북정책을 위한 새로운 자원인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스마트파워위원회(Commission on Smart Power)가 내린 스마트파워의 정의는 “하드파워도 소프트 파워도 아닌, 그 둘의 숨겨진 좋은 조합이다. 스마트파워는 통합 전략, 요소 기반(resource base), 그리고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모두를 끌어다 미국의 목표를 달성시킬 도구 모음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⁷⁾ 하드파워가 국가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근’—경제지원, 협력 등 경제력에 토대한 힘—과 ‘채찍’—폭력 등 군사력에 토대한 힘—을 구사하는 힘을 말한다면, 소프트 파워는 이러한 힘과는 달리 문화,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대외정책 등 세 가지 자원을 통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능력, 즉 매력을 말하는 것이다.⁸⁾

7) Th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Washington, D.C.: The CSIS Press, 2007), 홍순식 옮김, 『스마트파워』 (서울: 삼인, 2009), p. 40.

특히 스마트파워 개념을 낳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스마트파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나이(Joseph S. Nye, Jr.)가 1990년대 초부터 제기한 소프트파워 개념의 등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지는 않더라도 최근 소개도 됐고, 비판도 이뤄진 바 있다.⁹⁾ 나이는 소프트파워가 주로 세 가지 형태 그러나 여전히 두 개념 모두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하드파워를 갖춘 강대국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소프트파워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정당성”이야말로 “소프트파워의 핵심”이고, 이를 통해 “매력”(attraction)을 갖게 된다.¹⁰⁾ 나이가 말한 소프트파워는 곧 매력 자원인 셈이다. 그러나 나이는 매력이 권력 현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주로 프로파간다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통해 특정국가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동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¹¹⁾ 김태현은 이를 보완하면서 현실의 외교협상에서 매력이 권력자원으로 구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설득, 둘째, 도덕담론과 “개전사유(casus belli)를 위한 쟁투”, 셋째, 국제레

8) 위의 책, pp. 37~38 ;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홍수원 옮김, 『소프트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2004), p. 39.

9) 중국의 소프트파워 개념에 입각한 대외전략에 대해서는 신종호, “중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와 국제정치적 함의”, 『국가전략』, 제15권 1호 (2009) ; 김애경, “중국의 부상과 소프트파워 전략: 대 아프리카 정책을 사례로”, 『국가전략』, 14권 2호 (2008)을 참조할 것. 개념의 비판에 대해서는 Taehyun Kim, “Wielding Power Softly? U.S. Power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국제정치학회 춘계회의 발표논문, 2009년 4월) ; 김태현, “외교력 연구: 개념적 분석과 정책제언”, 『국가전략』, 14권 1호 (2008)을 참조할 것.

10) CSIS,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p. 38.

11) 김태현, “외교력 연구: 개념적 분석과 정책제언”, p. 18.

집의 활용이다.¹²⁾ 설득은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어 순응을 유도하는 행위이며,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협박과 회유를 포함한다. “채찍”과 “당근”의 논리도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태현의 견해는 소프트파워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역으로 하드파워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스마트파워로 전환되어야 함을 함축한다고 하겠다.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담론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명분 싸움이며, 궁극적으로 개전사유를 위한 쟁투라는 것이다. 즉 무력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무력사용이란 순수한 의미의 군사력의 사용뿐만 아니라 경제제재 등을 포함하는 ‘채찍’에 해당하는 조치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레짐에 적응하거나, 나아가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국제레짐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매력을 권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서 볼 때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는 스마트파워로 변증법적으로 종합될 수 있다. “스마트파워는 본질적으로 정당성을 가진 강력하고도 대적할 수 없는(insurmountable) 힘이다.”¹³⁾

그러면 이 같은 스마트파워와 소프트파워의 개념이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 새로운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개념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문제가 갖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II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문제는 고질적이다. 상황이 같은 패턴을 띠고 반복되고 있을 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양상이다. 북한의 정치상황이 지금과 같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문제의 해법을 찾기

12) 위의 글, pp. 19~22.

13) Kim, “Wielding Power Softly?”, p. 9.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의 관계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도 이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종호, “중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와 국제정치적 함의”, pp. 38~39. 이런 점에서 스마트파워의 개념은 미국에서 나오기 전에 중국에서 그 단초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소프트파워 전략을 대외정책과 외교에서 활용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려울 것이다. 둘째로는 북한문제는 우리의 총체적인 대외관계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외관계는 국력의 신장과 대외적 경제교류의 막대한 양적 규모에 비춰 볼 때 북한문제에 의해 결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⁴⁾ 셋째로는 통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문제이다. 현재로서 남북한이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룰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장차 북한에서 새로운 정권이 등장해서 체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상황을 증진시키고, 정정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남북한 간의 전면적인 교류가 시행된다면 통일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한 조건과 변수가 너무 많아서 매우 불확실하다. 반면에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의 가능성은 이 가능성보다는 높아 보인다. 그것의 바람직함은 차치하고 만일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우리가 주도해서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 만일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서 흡수통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민족적, 국가적 비극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당장 신속하게 핵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정책 세트로 구성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문제 자체가 너무 고질적이어서 우리의 정책 선택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며, 1993년 이래 목격해 왔듯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보다는 북미관계가 열쇠로 대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는 우리의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소위 4강

14)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은 단적인 예이다.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는 파병의 정당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외교라는 것도 상당 부분 북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 문제 등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적이고 협력하기 어려운 외교적 사안으로 구성돼 있다. 통일의 가능성을 상정할 때는 더욱 더 복잡하고 불확실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활적인 국가이익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북정책의 기초적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면 스마트파워는 전환의 준거로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기계적인 적용은 남북관계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당연히 경계돼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파워는 초강대국인 미국에나 걸맞은 개념이고 전략이다. 스마트파워위원회는 “세계적 공공재”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완함으로써 스마트파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 한국이 세계적 공공재에 투자할 만큼의 강대국도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 더구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그런 관념이 생성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스마트파워 개념 또는 전략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 등의 하드파워의 현실적 조건 위에서 우리가 간과해 왔던 소프트파워를 신장시킴으로써 대북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동시에 스마트한 대북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와 개방, 그 중에서도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걸고 이것을 막대한 경제지원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 발상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이라는 하드파워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리적인 구성에서도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제협력, 즉 한미 공조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더구나 스마트파워의 핵심 요소인 실용주의(pragmatism)를 강조하고 있어 스마트파워 전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친화력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서 김대중-노무

15) CSIS,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p. 35.

현 정부는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 궁극적으로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인 사안들도 해결될 수 있으며, 북한체제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해서 대북정책을 폈다. 역시 하드파워, 즉 경제력에 기초한 대북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나 국제사회의 협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전통적인 대면외교에 치중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어떤 정부든 한국의 외교, 특히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하드파워에 경도되어 있다. 대북정책은 북한을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데 경제력을 동원하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스마트파워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동맹 관리, 파트너십, 제도의 측면 외에도 공공외교와 경제통합 등 미국에서 스마트파워의 대상 영역으로 삼고 있는 것의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맹유지와 새로운 파트너십의 확보, 북한문제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 및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을 국제협력체제로의 적용 노력,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외교 역량 제고와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결국 세 가지 방향에서 스마트파워 전략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국내적으로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다층화, 복합화, 다변화에 대한 동의가 마련돼야 하며, 둘째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마련돼야 하고, 셋째로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기반과 방안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 분야의 외교도 마련돼야 한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이 말이 쉽지 현실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구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북한문제의 핵심이 결국은 북한의 체제변화, 즉 개

혁·개방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귀속될 때 비로소 핵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인권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문제 해결의 과정을 위기의 연속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공공외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타깃으로 하여 ‘시선끌기’와 ‘통 큰 협상’에 주력한다면 한국은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상황이 온다면 한국 정부는 그러한 여론에 밀려 수세적이며, 보여주기 위한 외교를 하게 될 공산이 크고, 이는 대북정책에도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¹⁶⁾ 따라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조용히, 부드럽게(softly), 그러나 강인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파워 전략이 함축하는 정책 가운데 가장 초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북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재정비일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의 대북정책의 스마트파워를 다지는 기초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스마트파워의 개념에서 스마트파워를 진화된 형태의 파워로 볼 수 있는 요소가 권력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발전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권력을 형성하는 권력자원들을 분절적으로 활용했다면 스마트파워는 그것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다. 정부 부처별로 같거나 비슷한 업무들을 통합하여 중복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핵심 사항으로 부각될 수 있는 문제는 조직과 예산의 조율과 운영을 맡은 관리기

16) 필자는 한국 사회의 통미봉남(通美封南) 논의는 한국 사회 스스로가 갖는 피해의식 또는 남북관계의 적대성에 기인한 구조적인 측면에 의해 비롯됐다고 본다. 말하자면 실체가 별로 없는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와 분단구조 관련 이슈를 다뤄나간다면 이런 현상은 존재할 수 없다.

구나 관리자의 역량이 뛰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스마트파워의 조정 기능을 상실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는 군사, 경제, 외교, 문화 등 권력자원에 토대를 두는데, 스마트파워는 조율 및 운영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과연 권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구성하는 자원들이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합할 경우 스마트파워의 핵심인 조율 및 운영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¹⁷⁾ 단순하게 말하면 스마트파워 전략의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는 이 전략을 추진하는 주체가 스마트해야 한다는 동어 반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에서는 대북정책 추진체계에 있어서 스마트파워 외교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스마트한 대북정책 추진체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스마트파워 외교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책추진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정책추진체계는 정책결정체계와 집행체제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파워 외교에서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와 과정이 스마트해야 하며, 또한 정책의 콘텐츠를 아무리 스마트한 것으로 채워도 이를 집행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파워 외교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더구나 스마트파워 외교는 하루아침에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매우 장기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한 정책을 스마트하게 집행하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효과가 보장된다.

17) “해제: 스마트파워 이해를 돕기 위한 쟁점 정리”, CSIS,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pp. 209~210.

정책결정과정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존재한다. 물론 정책결정 자체가 대통령이나 소수의 측근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한국에서는 정책결정체계가 무정형이거나 자의적이다. 그러나 스마트파워 전략과 같이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 정책 방향이 설정될 경우 그에 걸맞은 정책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의 정당성을 통해서 정책의 힘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정책의 내용이 정확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과정의 정당성을 경시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순간 스마트파워 외교는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역대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내용과 담론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정책결정의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에는 무관심했다.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갖춰졌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물론 아니며, 정책집행을 통해서 정책의 정당성은 끊임없이 창출돼야 한다.

미국에서 스마트파워 외교를 생각한 사람들은 스마트파워 외교를 위해서 기존의 정부 조직을 재편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내오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다. 그에 따르는 예산도 문제지만, 새로운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정치적, 문화적,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CSIS의 스마트파워위원회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스마트파워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을 확보할 묘책은 없다. 그리고 스마트파워위원회는 전면적인 정부 재조직을 제안하는 일은 철저히 피하고자 했다. 상자를 이리저리 옮기고 새로 조립하는 것이 항상 옳은 해답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기 대통령은 정부 구조와 준비성을 전략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¹⁸⁾

이를 위해서 스마트파워위원회는 “제기되는 문제들은 새 기구의 출범

18) 위의 책, pp. 154~155.

이나 기존 기구에 새로운 임무 부여를 요구”하며,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겠지만,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차기 행정부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따르기를 제안”한다고 한다.¹⁹⁾

1. 스마트파워 전략은 미국이 경쟁 사안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를 요구한다.
2. 미국은 개발과 외교, 공공외교의 고유한 차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3. 의회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스마트파워 전략을 뒷받침할 적절한 권한과 예산을 갖춘 기구(structures)를 개발해야 한다.
4. 미국은 더 많은 자유재량권과 자원을 현장 조직으로 이양하고, 그들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 정부는 민간 영역과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소프트파워 자원에 접근하여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²⁰⁾

이로 미뤄 볼 때 스마트파워 전략을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적용하면, 우리의 대북정책 결정과정도 변화해야 한다. 우선적인 과제는 정책이 결정되는 행정부 내에서의 체계가 통합되어야 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관련되는 부처나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한다.²¹⁾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이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NSC 사무처장, NSC 사무차장 등 직함으로 나뉘었던 역할을 통합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장직을 맡고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청

19) 위의 책, pp. 162~163.

20) 위의 책, pp. 163~164.

21) 정부 내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전봉근,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조정체계의 특징과 의미”, 『정세와 정책』 (2008년 5월호)을 참조할 것.

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6인이 고정 구성원으로 참가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참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교부와 외교부 장관이 외교안보통일정책 조정의 중심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명칭의 고위급 통일외교정책 조정회의를 운영하여 왔으나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외교부 장관이 그 수장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할 때 남북한 중심적, 국내 정치적 고려를 최대한 배제하고 국제사회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대처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의 외교안보통일 비서관실이 노무현 정부 이전 체제와 유사한 형태로 환원되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외교안보수석 아래에 통일, 외교, 국방, 국제안보 등 4개 비서관실을 두었다. 비서관실은 각각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파견 직원으로 충원되었고, 사실상 이들 부처의 청와대 연락사무소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유사하게 외교안보수석실에 통일, 외교, 국방 비서관 외에 대외전략비서관실을 포진하게 함으로써 과거로 회귀한 양상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NSC를 중심으로 조정역할을 하던 것과는 큰 차이를 갖는다. 다만 대외전략비서관실이 전략기획과 정책조정, 그리고 일종의 '리베로' 역할을 담당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난 1년 반 동안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정책은 통합된 정책결정 및 조정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책 조정 및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다. 현재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대북정책의 전략적 구상이나 정책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이 기구는 표면상으로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관련 부처의 장들이 모인 이 기구가 각 부처의 이

해관계를 넘어서는 전략을 수립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관(급)으로 구성된 기구가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의 전략적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상시적인 체계가 구축돼야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2008년 6월 하순부터 2009년 2월까지 이 기구는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을 제외하면 전원이 외교통상부 출신이 담당했다. 금년 2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비로소 외교부 출신과 비(非)외교부 출신이 동수를 이루게 될 정도로 외교안보정책에서 외교부의 입지가 강화됐다. 외교부 출신 구성원들이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인 대북정책의 전략 구상을 담당하지 말라는 법은 물론 없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외교부는 북한문제를 국제적·외교적인 사안으로 접근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갖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²²⁾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전략 구상이나 정책 조율 등을 통한 정책결정체계의 상위에 서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조직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이하 외안비서관실)이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외안비서관실에는 대외전략비서관실, 외교비서관실, 국방비서관실, 통일비서관실이 있다. 2009년 11월 현재 대외전략비서관실과 통일비서관실의 수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비서관실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지금의 외안비서관실 체제로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대통령

22) 이런 점에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두고 “이게 외교부 간부회의지 청와대 안보회의인가”라는 비판이나, 외무고시 10회인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간사로서 외무고시 7회인 선배들인 유명환 외교부 장관, 그리고 당시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컨트롤’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일도,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라인 180일 막전막후”, 『신동아』 (2008년 10월호), pp. 166~179.

에게 관련 사항의 경중을 따져 보고사항을 전달하고, 역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부처나 아래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총체적으로 짚어보면서 대전략을 구상하고, 그 전략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내용, 우선순위를 건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²³⁾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전략적 비전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수립에 그다지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적 대응이 표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외교안보라인의 체계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평가다.²⁴⁾

이러한 평가가 사실이라면 사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북정책에서 스마트파워 외교전략을 수행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강화하여 범부처 정책조정 기능과 정무적 판단 기능을 갖고 스마트파워 전략을 조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각 비서관실은 해당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부처의 정책적, 정무적 조정에 나서야 한다. 외교안보수석실은 정책기획, 조정, 평가, 점검 등 간접 업무에 충실하고, 직접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일선 업무는 가급적 피하고, 무엇보다 스마트파워 전략을 기획하고 전략적 구

23)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현재의 수석비서관 체제로는 어려워요. 나도 과거에 청와대에서 비서관 생활을 해봤지만, 비서관은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를 내려도 그걸 그냥 전달하는 역할 밖에 못 합니다.”라고 지적한다. 정세현, “꼭 막힌 MB 대북정책...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쓴소리: ‘북(北) 버릇 고치겠다고? 계도 구력도 다 놓칠라...’”, 『신동아』 (2008년 7월).

24) 황일도, “‘MB 용인술’로 해부한 외교안보라인 난맥”, 『신동아』 (2009년 6월), pp. 146~155 참조.

상에 따라 입안되는 정책이나 행동을 평가하며, 점검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외교안보수석실을 확대·개편하는 것도 모색해 봐야 한다. 실제로 정책 조정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결합되어 나타날 때 의미가 있다. 각 부처 고유의 역할은 그대로 두되, 대북정책을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추진하는 것이 스마트파워 전략이라고 한다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확대도 필요하다. 스마트파워 전략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외교안보수석실과는 별도의 보다 강력한 추진기구가 설치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²⁵⁾ 전임 정부가 보유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적 풍토에서 기구의 자율성이나 역량은 상당한 부분 대통령에 의해 신임을 받으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제도를 통한 역할의 보장이 아니라 인물을 통한 역할의 보장이 이뤄지는 정치문화적 풍토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는 기구에 대한 거부감이 의회와 시민사회에 뿌리 내려 있어서 정상적인 의회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의 것은 무조건 배척한다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어렵다고 가능성을 제외시키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도 정권 교체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체계가 바뀌게 되면

25) 스마트파워위원회의 권고사항에서도 국가안보자문위원회와 관리예산처(OMB) 처장 직위를 겸직시켜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조정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CSIS,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pp. 164-165.

이는 국가안보 자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파워 전략을 운위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컨트롤 타워로서의 외교안보수석실 또는 새로운 기구는 스마트파워 전략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내부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과 정책공동체 또는 인식공동체(epistemological community)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은 항상 보조적인데 머물러 있었다. 기껏해야 정부 정책의 홍보 역할이나 자문 역할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 경우에도 정부와 이른바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 고유의 정치문화이자 학계의 문화가 작용한 탓도 크지만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구조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파워의 개념을 둘러싸고도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대체로 “포용이나 강압이나”, “채찍이나 당근이나”의 이분법적 논쟁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향후에 전략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스마트파워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민간 영역과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국책 또는 민간 부문의 씽크 탱크들의 역할과 참여폭의 확대가 필요해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당장에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정부가 다양한 씽크 탱크들의 활용을 중요한 대목으로 인식한다면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씽크 탱크에서 만들어지고 제안된 다양한 방안들이 스마트파워 전략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면 컨트롤 타워에서 조율하고 조정해서 각 부처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자들과 민간 또는 씽크 탱크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 내외에서 기본적인 정책추진체계가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스마트파워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조직을 제도화시켜나갈 수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는 우선, 스마트파워 전략이 우리의 외교력을 어떻게 신장시켜야 가능한가를 살펴봐야 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실력의 행사가 매력자원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궁극적으로 외교적 영향력으로 발전하려면 실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곧 외교적 태세(diplomatic posture)의 문제다. 외교적 태세란 적극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외교과정에서, 소극적으로는 국가이익에 대한 외부적 충격—기회와 위협—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행위패턴을 말한다.²⁶⁾

외교협상에서 외교관들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이익”이라는 논리를 동원한다. 실체가 모호한 국가이익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그것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납득시키는 외교관이 유능한 외교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핵심요건이다. 따라서 정책과정 및 정치과정의 민주화는 두 가지 점에서 외교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첫째는 소프트파워의 자원, 즉 매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둘째는 행태적 차원의 소프트파워 즉 외교협상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한 나라 외교력의 가장 큰 소프트파워 자원의 하나는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일관성 있는 외교 태세라는 결론이 가능하다.²⁷⁾

²⁶⁾ 김태현, “외교력 연구: 개념적 분석과 정책제언”, p. 27.

²⁷⁾ 위의 글, p. 28.

핵심은 대북 및 외교담당 부처의 인적, 조직적 역량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문지식 축적 및 전문가 양성이다. 스마트파워는 국제 정치의 도덕담론을 지배하는 힘이고 외교력은 국제 레짐을 마스터할 때 나온다. 지금까지 주로 지역을 위주로 조직되고 운영돼온 외교통상부의 조직과 인사를 기능영역으로 확대하고 기능영역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문적 기능 영역의 확대이다. 셋째, 기능영역의 확대는 내부 인사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국제정치에 대한 전문성이 인적, 조직적 역량에 침투해 들어가야 스마트파워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내적으로 대북정책결정에 있어서 스마트파워 전략이 필요하다.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이 보다 세련되고 정교하게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고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대북정책이란 탄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 비중을 대폭 늘렸다.²⁸⁾ 사실 우리 사회에서 통일교육은 정부 정책의 홍보로 전락하였다.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이 바뀌므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대북정책이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의 구조 위에서 추진되었을 때 국제사회나 북한에게 정책이 갖는 무게가 인식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했을 때 우리 사회가 향후 북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될 것이다. 스마트파워는 정부 관료나 전문가들만의 전문성에만 토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²⁸⁾ 통일부의 2010년 예산안에서 학교 통일교육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714% 증가시켰고, 사회 통일교육에도 180% 가량 늘렸다. 『동아일보』, 2009년 11월 17일.

갖는 총체적인 역량의 강화 위에서 실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개발을 위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모델링하고 이를 북한에 설득하는 데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²⁹⁾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컨텐츠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수출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³⁰⁾ 또한 탈북자 문제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홍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실을 가지면서도 조용하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스마트파워의 구사는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9) 나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소프트파워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성공 사회의 매력적인 대안”이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부단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위크 한국판』 (2009. 1. 21), p. 48.

30) 사실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표현이나, 그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 즉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후진국에 유용하다는 주장은 중국에서나, 국제학계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 견해가 오히려 소수 견해로 남아 있다. 다수는 이러한 표현이 미국식의 경제발전 모델을 지칭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처음 구사한 사람은 요슈아 라모(Joshua Cooper Ramo)이다. *The Beijing Consensus* (London: Foreign Policy Centre, 2004). 이 논쟁에 대해서는 A Report of the CSIS Smart Power Initiative, *Chinese Soft Power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Washington, D.C.: CSIS, 2009), pp. 22~24를 참조할 것.

V. 맺음말

이 글은 북한문제가 해법을 찾기 어려운 조건에서 당장의 해법 추구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발상을 갖고 접근하기 위해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하고 있는 스마트파워 개념을 여하히 적용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려는 목적을 설정했다. 대북정책 자체가 북한문제의 해법을 찾기보다는 국내적으로는 갈등의 소재가 되고, 국제적으로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를 경원시하는 인식이 존재하게 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법은 어차피 찾기도 어렵고, 이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혼자의 힘으로는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해법 자체보다 해법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의 정당성, 즉 정책결정체계의 정당성과 이를 통해서 결정된 정책의 정당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이 갖는 매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이 갖는 간접적이고 근본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은 외교정책의 한 부분일 수 있다. 대북정책이 갖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현실이지만, 북핵문제로 인해 상당부분 국제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북정책도 국제사회를 의식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존재해야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북정책은 북한을 고려한 정책이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정당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반드시 남북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한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때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인식하게 된다

는 의미에서 그렇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체제의 장래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북한 정권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한국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정세의 주도자라는 권리를 내세운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또한 그런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이라는 전기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가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컨대 대북정책은 한국이 북한문제에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 관리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스마트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부가 취해온 정책결정체계와 집행체계, 즉 정책추진체계를 스마트파워 외교전략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자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이지만, 적어도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드파워의 자원과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소프트파워의 자원을 증대시키는 노력과 함께 현재 작동하고 있는 정책추진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현저하게 취약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접수: 2009년 11월 11일 / 수정: 2009년 11월 26일 / 게재확정: 2009년 12월 2일

【참고문헌】

- 김애경. “중국의 부상과 소프트파워 전략: 대 아프리카 정책을 사례로”. 『국가전략』, 제14권 2호 (2008).
- 김태현. “외교력 연구: 개념적 분석과 정책제언”. 『국가전략』, 제14권 1호 (2008).
- 신종호. “중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와 국제정치적 함의”. 『국가전략』, 제15권 1호 (2009).
- 전봉근.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조정체계의 특징과 의미”. 『정세와 정책』, 2008년 5월호.
- A Report of the CSIS Smart Power Initiative, *Chinese Soft Power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Washington, D.C.: CSIS, 2009.
- Nye, Jr., Jos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홍수원 옮김. 『소프트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2004.
- Ramo, Joshua Cooper. *The Beijing Consensus*. London: Foreign Policy Centre, 2004.
- Taehyun Kim. “Wielding Power Softly? U.S. Power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국제정치학회 춘계회의 발표논문, 2009년 4월.
- Th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Washington, D.C.: The CSIS Press, 2007, 홍순식 옮김. 『스마트파워』. 서울: 삼인, 2009.
- “Statement of Senator Hillary Rodham Clinton Nominee for Secretary of Stat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anuary 13, 2009).
- 『뉴스위크 한국판』. 2009년 1월 21일.
- 『동아일보』. 2009년 11월 17일.
- 『신동아』. 2008년 10월호.
- 『신동아』. 2009년 6월호.
- 〈<http://app.yonhapnews.co.kr>〉
- 〈<http://foreign.senate.gov/testimony/2009/ClintonTestimony090113a.pdf>〉

Abstract

The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Smart Power

Ryoo, Kihl-jae(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explores how the concept of smart power could be adapted into the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Given the unresolved nuclear situation with North Korea, it would be useful to consider a new paradigmatic shift for the mid- and long-term policy towards North Korea, with the concept of smart power that recently stemmed from the United States. Although smart power denotes combination of the hard power consisting of the military and economic strength with the soft power based on culture, political value, and foreign policy, is not clear in conceptualization. However, it is bringing attention to what we call the attraction resources of South Korea, in the discussion for the policy towards Pyongyang.

The North Korea policy could not be expected to be effective until it takes North Korea,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ety into account in its implementation stage. Previously,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was predominantly involved with hard power, that lacked interest in the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incorporate various resources in the process of the policy-making and policy-implementation. Smart power strategy focuses on mobilizing attraction resources vis-a-vis North Korea, and on legitimizing the policy-making and policy-implementation of North Korea policy.

This paper argues the following four points in order to enhance the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smart power. Firstly,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function of the control tower in coordinating the policy-making process. Secondly, in order to implement the smart power strategy in its policy, it needs to reform the human and organizational institutions within the government. Thirdly, the cooperating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should be elaborated. Fourthly and lastly,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civil society's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 problem and national reunification.

Keywords: North Korea policy,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smart power, hard power, soft power, North Korea nuclear issue

류길재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산학협력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김정일 시대의 북한』(공저),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공저), 『박정희시대 한미관계』(공저), “1960년대 북한의 숙청과 술탄니즘(Sultanism)의 등장”, “통합과 선린을 위한 21세기 한반도 민족주의의 모색” 등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조정 및 변화방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한미동맹의 변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체제를 국제체제론적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소극적·적극적 평화체제 개념을 제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조적 연계성을 살펴 볼 것이다.

평화체제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을 살펴보았을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재조정 핵심 쟁점은 동맹의 미래 공동비전과 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할 설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체제의 맥락에서는 유엔사의 위상 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남한의 안보, 한미동맹을 포함하는 동북아의 안보구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과 동북아다자간 안보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모두를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제어: 소극적·적극적 평화체제, 동맹 공동비전, 한미전략동맹, 전략적 유연성

* 본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논문임.

I. 서론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4월 26일~6월 5일)에서 처음 논의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유동 과정과 맞물리면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에 주기적인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었다. 특히,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주재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고위급 전략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북핵 문제의 해결 진전과 맞물리면서 재부상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 제4항에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직접 당사국 등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벌이기로 하였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2월 8일에서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 이후 최초의 구체적 이행합의인 '공동성명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를 도출하였다. '2.13 합의'에서도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6자회담 탄생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남북한 변화 관계, 북핵문제가 가지는 사안의 특수성 및 지역적·국제적 함의, 그리고 미국 및 역내 국가들의 입장과 역할 등이 고려되는 가운데 주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 졌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평화체제와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평화체제와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지만, 이 두 체제는 “같이 또 따로”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동북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동북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도 한반도 평화체제는 구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¹⁾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 중에서 어떤 것은 한반도 차원에 국한되어 있지만 또 어떤 것은 한반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차원에서도 점검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평화체제와 관련된 한미동맹의 변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조정 및 변화방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한미동맹의 변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글의 논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체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소극적·적극적 평화체제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조적 연계성을 살펴 볼 것이다. 제3절인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를 중심으로 동맹재조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 조정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고, 현재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체제와 연계시켜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을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런 측면은 동맹 재조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1)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간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구갑우·박건영·최영중,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2호 (2005), pp. 31-64 ; 박건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 (2006), pp. 199-224.

맞물려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동시에 어떤 측면은 동북아 평화체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미리 밝혀두고자 하는 점은 필자는 소극적 평화체제(제2절에서 논의)의 입장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하의 논리전개에 있어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는 소극적 평화체제를 의미한다.

II. 평화체제의 접근방법과 평화체제 공간으로서의 한반도와 동북아

1.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난 10여 년간 북핵 문제를 주축으로 펼쳐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된 핵심 쟁점중의 하나가 바로 ‘평화체제’ 문제였다. 따라서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학술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 국가들의 정책과 전략 차원에서 이해되고 또한 상황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²⁾ 그에 따라 지난 시기 국내 학계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쟁의 르네상스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 경향들³⁾은 평화체제의 구성과 내용, 범위와 정도, 절차에 대한 다양한 대안 및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중복되고 때로는 강조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2) 전재성,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1호 (2006), pp. 33~66 참조.

3)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건설: 쟁점, 과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9명의 학자가 쓴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1호 (2006) 참조.

어떤 기준에 의해 이를 분류하고 유형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평화체제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정전상태의 불안정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전쟁발생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소극적 평화 달성을 명시적·묵시적 규범, 원칙, 규칙, 정책결정의 절차 등을 포함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⁵⁾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갈등규제를 통해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한편, 갈등타결을 위해 평화체제전환과 이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⁶⁾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평화체제는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 상호 적대적 관계를 초래했던 긴장 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실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회복·유지하고 통일을 지향·기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전과정으로 규정한다.”⁷⁾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것이며,

4) 이와 관련해서 이상현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 논의를 1) 평화체제의 법적 측면, 2) 평화체제의 군사적 측면, 3) 평화체제의 국제적 조건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현,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 (2006), p. 229 참조.

5)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 (2006), pp. 104-05.

6) 문정인, “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가전략』, 제5권 2호 (1999), pp. 139-147 참조.

7) 허문영 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7.

전환된 평화체제를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전자에서의 주요 쟁점은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상호관계의 설정문제이고⁸⁾ 후자에서의 주요 쟁점은 평화체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기존 연구는 제도론적 입장과 체제론적 입장이 강조되었다. 제도론적 입장⁹⁾에서는 당사자 문제, 이슈 범위, 권한 집중도, 통제력 이슈, 그리고 제도의 유연성 문제가 중시되는 반면, 체제론적 입장¹⁰⁾에서는 평화구조, 평화기능, 그리고 활동규범 등이 강조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정의가 너무 규범적·이상적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항구성과 국제적 보장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및 개념정의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현실의 세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등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비의도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평화체제 등장의 전제 또는 해결 조건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현안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등장을 사실상 남북연합이나 통일 한국 직전의 상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화체제를 평화체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8)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상호관계의 설정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종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 쟁점과 대안 모색”, 『세종정책연구』, 제4권 1호 (2008), pp. 5~31.

9) 최영중,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론과 제도적 디자인”, 『국제관계연구』, 제12권 제1호 (2007), pp. 5~32.

10)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성남: 세종연구소, 2001), pp. 10~12.

2. 평화체제 접근방법과 소극적·적극적 평화체제

필자는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갖고 있는 이상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평화체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국제체제론적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국제체제론적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지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질서유지 메커니즘으로 이해되면서 평화체제와 관련된 행위자 문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 행위자들 간의 힘의 배분 상태, 그리고 행위자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적 요소(non-human factor)¹¹⁾라는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 한반도 국제정치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대한 국제체제론적 접근은 평화체제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불변적이고 완성적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이고 과정적인 메커니즘으로 인식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갈통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개념¹²⁾을 적용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소극적·적극적 평화체제로 구분하여 개념 정의하고자 한다. 소극적 평화가 전쟁의 부재 상태를 언급하듯이, 소극적 평화체제는 소극적 평화가 유지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갈등이 잠재되어 있고 관련 행위자들의 안보적 상호작용에 따라 평화체제가 가변성을 갖고 있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체제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소극적 평화체제는 기존의 정전체제가 법리적 측면에서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가치의 절대성이 강조되면서 소극적 평화가 장기적·구조적으

11) 행위자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적 요소들로는 무기, 자원,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12)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적 평화체제는 소극적 평화 관리 및 유지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기능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행위자들의 화해·협력적 습관과 일반화된 행위 원칙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해 소극적 평화의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평화의 제도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반면 적극적 평화가 전쟁의 부재 상태를 넘어 전쟁 발생 원인의 제거라는, 구조적 폭력의 부재를 암시하듯이, 적극적 평화체제는 소극적 평화체제가 일정 기간 이상으로 지속되어 관련 행위자들의 안보적 상호작용이 안보 가치의 상대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¹³⁾ 소극적 평화의 제도적, 규범적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적극적 평화체제에서는 남북 상호 신뢰와 이해가 보다 심화되고 상호 적대적 긴장관계를 초래했던 제반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완화·해결되면서 제도화된 평화의 확대·심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제반 관련 조치 및 실행이 이루어져 가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적극적 평화체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평화체제에 대한 접근 및 다양한 개념들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극적/적극적 평화체제는 시공간적으로 일정 부분이 상호 중첩되어 작용할 수 있다.

3.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조적 연계성

한반도 평화체제를 국제체제론적 입장에서 접근하였을 경우, 필연적

13) 안보 가치의 절대성(국가안보 패러다임)과 상대성(국제안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elga Haftendorn, "The Security Puzzle: Theory-Building and Discipline-Building in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1991), pp. 3~17 ; 이수형, "국제체제의 변화와 안보 패러다임", 미네르바정치연구회 편, 『국제질서의 패러독스』 (서울: 인간사랑, 2005), pp. 91~116.

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 단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상위의 단위인 지역체제나 국제체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소극적·적극적 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소극적 평화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상위체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해서 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의 그것과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 구한말을 정점으로 한 지난 100여 년간의 한반도 역사에서 나타난 국권 찬탈, 해방, 전쟁과 분단 그리고 긴장과 대립 및 불안정한 평화는 동북아의 구도 및 정세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면인 한반도 정전체제의 구축은 동북아 냉전체제의 축소판이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동북아 대결구도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평화체제와 필연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평화체제도 소극적·적극적 평화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동북아 안보상황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소극적 평화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세력전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안보적 상호작용이 정중동의 전략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역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추진하면서도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향후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2008년에 들어와 보다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중국과 대만은 2008년 6월에 들어와 1949년 중국 본토의 공산화 이후 처음으로 상주 대표사무소를 상호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될 중국과 대만 간의 협력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북아 여타 국가들에게도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후쿠다 야스오 내각 출범 이후 일본과 중국의 협력관계도 부각되고 있다. 6월 16일 양국은 베이징에서 그동안 두 나라 외교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중의 하나였던 동중국해 유전·가스전 공동 개발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2009년에 들어와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정책대화라는 협의체가 보다 강화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기존 역내 국가들 간의 정책대화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사이의 양자관계¹⁴⁾로 진행되어 왔으나 동북아에서 양자관계의 틀을 넘어서는 미·중·일 3국의 최초의 전략대화체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일의 정책대화는 중국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 중국을 중시하는 미국의 전략, 중국과 일본의 해빙, 미국의 중국 접근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 중국의 미·일 동맹 견제 등 복합적 작용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¹⁵⁾

현재 동북아 안보상황의 소극적 평화 지속의 또 다른 요인으로 역설적이게도 북핵 문제를 들 수 있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계기로 지역적·국제적 안보 현안으로 등장한 북핵 문제는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안보 쟁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1993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핵 문제

14) 현재 동북아 역내 국가들 사이의 주요 전략대화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전략대화, 한국과 미국의 연례안보협의회(SCM), 장관급 전략대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전략대화+경제대화), 중국과 일본의 고위급 경제대화, 미국과 일본의 2+2 전략대화(국방장관+외교장관).

15) 『한겨레』, 2009년 6월 9일.

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는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주기적인 협력과 갈등을 보여 왔다. 더군다나 2003년 8월 6자회담 성립 이후 북핵 문제는 역설적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도 보여주고 있다. 즉, 6자회담 참가국들은 내면적으로는 정중동의 국가적 실리 추구 양상을 견지하면서도 외면적으로는 북핵 해법에 일차적 관심을 집중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쟁점 영역에서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갈등적 양상을 빚지 않으면서 동북아 안보의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2009년에 들어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후계체제구도와 맞물린 제2차 북핵 실험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를 빠르게 갈등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동시에 북핵 해법을 둘러싼 6자회담 참가국들의 기존 인식과 정책 방향의 급전환을 야기하면서 동북아 안보에 새로운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북아 안보질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핵 문제와 북한의 후계구도구축 과정에서 파생될지도 모르는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비단 소극적 평화 유지에 대한 관건일 뿐 아니라 동북아가 적극적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동북아의 적극적 평화체제의 등장은 탈냉전 이후 보다 부각되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독자성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 갈등 요인¹⁶⁾의 해소 여부에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적어도

16) 동북아 안보환경과 관련하여 냉전체제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거시적 차원의 체제 속성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국제정치의 독자성 역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지 못하였다. 즉, 체제의 양축을 구성하는 미국과 소련의 상호작용의 영향이 동북아 국제정치의 독자성을 압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데탕트와 미국-소련-중국 간에 이루어진 전략적 삼각관계의 등장 이후 동북아 국제정치는 체제의 속성보다는 지역의

동북아의 소극적 평화체제의 발전과 향후 적극적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요컨대, 현 시점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 여부는 한반도의 소극적·적극적 평화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시에 동북아 평화체제의 유지와 지속과도 깊숙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상대적 독자성이 보다 부각되어 왔으며, 특히, 탈냉전 이후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계기로 동북아 국제정치의 독자성은 체제의 속성을 압도하는 양상마저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동북아 국제정치의 독자성을 견인하고 있는 역내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 의의와 견제, 갈등과 경쟁의 관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동북아 다자주의의 보다는 역내 양자주의의 선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동북아 다자주의의 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아직도 이 지역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냉전의 잔재인 진영 논리의 변형적 양상이다. 과거 진영 논리에 따라 미국은 일본 중시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동맹의 틀에 편입시켜 놓았으며, 마찬가지로 소련과 중국 역시 북한을 자신이 설정한 동맹의 틀에 편입시켰다. 이러한 동맹 구조와 동맹 구조가 발산하는 상호 적대는 시간의 흐름 속에 고착화 되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동북아 국제정치는 안보환경의 본질적 측면에서 동맹(미국·일본·한국) 대 동맹(중국·러시아·북한), 혹은 국가(미국) 대 국가(중국)의 역학관계에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기본적으로 탈냉전의 보편경쟁체제가 아닌 지정학적 경쟁논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을 지속시켜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 냉전적 속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독자성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 갈등 요인은 크게 남북관계와 양안관계 중심의 주권분쟁, 한일·러일·중일간의 영토분쟁, 한중일 간의 역사인식에 따른 과거사 문제,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에서 발생 하는 세력균형의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전재성·이수형, “동북아 안보체제의 성격과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적용가능성 분석”, 『안보학술논집』, 제16집 2호 (2005), pp. 1~62.

Ⅲ.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1. 동맹의 구조조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¹⁷⁾

한미동맹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과 관련해서 한 축에는 현실적 맥락을 중시하는 “동맹 자체에 대한 인식”이, 또 다른 축에는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 구상과 전략기조와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정책적 인식”이 존재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적 인식은 현실적 맥락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책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맹 인식은 평화변영정책의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안보전략기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적 인식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전략기조와 부합하면서 평화변영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정책적 인식은 동맹 그 자체보다는 주권국가로서 한국이 가져야만 하는 국가안보의 자주성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중적 인식은 한국이 처해있는 안보 공간의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강한 바람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현실적 맥락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뛰어 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결합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중적 동맹 인식은 역설적으로 한미동맹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정치화 내지 이념화가 심화될 수 있는 “편의적 선택의 창”을 제공하

17)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 문헌의 일부 내용을 재인용했음을 밝힌다. 이수형, “중견국가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노무현정부의 동맹재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2권 1호 (2009), pp. 3~28.

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의 동맹재조정¹⁸⁾ 전략 역시 이중적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이중적 동맹재조정 전략은 현실적 맥락을 중시하는 동맹 자체에 대한 인식에 따른 전략(동맹유지 및 강화전략)과 정책적 맥락을 중시하는 자신의 안보정책 구상과 전략기조에 따른 전략(정치적 자율성 제고전략)이었다. 동맹유지 및 강화전략은 원활하고 긴밀한 한미 협력관계를 중시하면서 미국과의 협의하에 차질 없는 동맹재조정 과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었다. 정치적 자율성 제고전략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전략기조와 구조적으로 맞물리면서 동맹재조정 과정을 통해 어떻게 국가안보의 자주성을 달성하느냐에 관한 문제였다.¹⁹⁾ 이러한 이중

18) 일반적으로 동맹조정은 크게 미시적 동맹조정과 거시적 동맹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시적 동맹조정은 동맹의 적대 세력과 목표에 있어서의 인지적·정책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가운데 동맹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 동맹조정은 보통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변화, 방위비분담 비율 및 방식의 변화, 기지이전, 군사전력의 재배치, 주둔 군사력의 증감, 군사전략의 변화 등을 야기한다. 지난 냉전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던 동맹조정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거시적 동맹조정은 동맹의 적대 세력과 동맹 목표에 있어서의 인지적·정책적 변화를 수반하는 가운데 동맹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정립해 나가는 근본적 동맹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통 국제안보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맞물려 발생한다. 따라서 거시적 동맹조정은 기존의 위협인식과 동맹 목표에 있어서의 수정·변화, 동맹의 군사구조의 근본적 변화, 주둔군 군사전력 및 동맹의 역할 변화 등으로 나타난다. 거시적 동맹조정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맹재조정 과정을 들 수 있다.

19) 자주성과 안보의 교환모델의 이론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F. Altfeld,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7 (1984), pp. 523~544 ; J.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 (1991), pp. 904~933 ; 장노순, "교환모델 동맹의 교환성: 비대칭 한미안보동맹", 『국제정치논총』, 제36권 1호 (1996), pp. 79~104.

적 동맹전략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시했던 전략은 다른 아닌 정치적 자율성 제고전략이었다. 물론 이것이 동맹재조정 과정에 있어서 동맹유지 및 강화전략이 하위적 수준이고 정치적 자율성 제고전략이 상위적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맹재조정 자체가 한미 양국 모두에게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맹재조정 과정이 일정 궤도로 올라선 이후 한미 양국은 크고 작은 수많은 정책 현안들을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복합적으로 다루어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쟁점에서의 양국 간 정책적 불협화음은 다른 정책 현안에도 영향을 미쳐 동맹재조정 과정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동맹재조정 과정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재조정 과정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 자율성 제고전략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자신이 설정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안보정책 목표 때문이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통해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를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번영을 여는데 있어서 한국의 변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냉전 종식을 계기로 진영의식의 희석, 안보주체의 다양화, 안보 위협의 불확실성 증대 등은 미국으로 하여금 변화된 국제안보환경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²⁰⁾ 특히, 9·11 테러를 전후로 부시 행정부는 기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새로운 안보전략의 구축 과정을 변환(transformation)이라 명명하면서 본토방위와 해외주둔 미군의 융통성 있는 활용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해 왔다.

²⁰⁾ 이수형·남창희·Robert Dujarric,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안보 딜레마”,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4집 2호 (2004), p. 124.

미국의 변환전략²¹⁾은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정보통신혁명이 비약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테러전,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 본토방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면서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비대칭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기동능력과 정밀타격능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유동군 개념을 현실화해 가고 있다.²²⁾ 즉, 미국의 변환전략의 핵심은 위협기반이 아닌 능력기반이라는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 미군사력을 거점방어 중심에서 유동 전력화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의 변환전략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동맹 유형이나 동맹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부시 행정부에서 특징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강조되었던 의지의 연합(coalitions of the willing)은 기존의 미국 주도의 항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공식적 동맹 행태가 향후에는 비공식적 동맹 행태로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²³⁾ 이미 미국은 소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공식적 협정을 통한 동맹관계보다는 비공식적 동맹 성격이 부각되는 특별한 연합을 강조하면서 관련국의 안보를 보장하기보다는 다양한 정도의 군사적 협력과 공동의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나타난 동맹관은 동맹의 정

21)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의 기원, 성과,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상현,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 기원, 성과, 평가”, 『국가전략』, 제13권 3호 (2007), pp. 27~54.

22) 하영선 편,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p. 15.

23) 이와 관련하여 하스(R. Haass)는 향후 국제체제의 형태는 무극체제(Nonpolarity System)로 변할 것이며 무극체제에서 동맹은 상황논리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형성·해체되는 가변적 형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ichard N. Haass, “The Age of Nonpolarity: What Will Follow U.S. Dominance”, *Foreign Affairs* (May/June 2008). 또한 국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동맹 유형의 형태 및 기능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수형, “국제체제의 변화가 동맹의 유형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 제51권 2호 (2008), pp. 111-129.

당성 혹은 효율성의 기준을 과거의 국가 가치상의 공유보다는 동맹국의 능력과 의지,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위협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달리할 가능성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²⁴⁾ 이러한 미국의 변환전략은 결국 미국과의 동맹관계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보장만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과거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인하는 데 중요했던 주둔 미군의 수나 인계철선(trip-wire) 개념 등은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니다.²⁵⁾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사변환이라는 새로운 안보전략에 입각해 변화된 국제안보의 성격과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동맹의 주목표였던 한반도 전쟁억지 이외에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관리와 국제안보에 대한 동맹의 기여에 적합한 미래 한미동맹의 역할 설정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전략기조에 바탕을 두고 평화변영정책의 제반 목표들을 구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동맹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반도 전쟁억지를 동맹의 최우선적 목표로 삼으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한미동맹의 모습을 상정하였다. 동맹비전과 동맹의 역할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을 보다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미국은 자신의 안보전략에 부합되도록 한미동맹의 지역안보를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이고, 한국은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비전과 역할을 그렸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으로의 전환 문제가 한미 양국 간에 전격적으로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상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입장에

24) Dingil Shen, "Can Alliances Combat Contemporary Threat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7, no. 2 (2004), pp. 165-179 ; Kurt Campbell, "The End of Alliances? Not So Fast",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7, no. 2 (2004), pp. 151-163.

25) 하영선 편,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p. 19.

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전략기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평화변영정책의 큰 목표중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든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에 기여하고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재조정의 핵심 쟁점은 동맹의 미래 공동비전과 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할 설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정부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동맹의 미래 공동 비전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차이로 정치적 타협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한미 양국은 가치동맹, 신뢰동맹, 그리고 평화구축동맹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의 전략화에 합의하였다. 한미동맹의 전략화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안보영역에서의 세계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미 전략동맹은 1)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 가치의 구현을 위한 가치동맹 2)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상호의존의 신뢰동맹 3)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구축동맹을 지향하는 것이다.²⁶⁾ 따라서 미국 측에서 제시하는 동맹의 비전은 대체로 한미동맹이 더 이상 한반도에 매이지 말고 변환을 통해 다기능, 포괄적 동맹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원하는 동맹상은 “going global”로 요약되며, 미

²⁶⁾ 청와대,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서울: 청와대, 2009), p. 23.

국은 한국이 글로벌 안보문제 특히,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 의제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쟁점들에서 미국과 함께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 이명박 정부도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를 내세우는 만큼 동맹비전의 공통분모가 'Global'로 수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⁷⁾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할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구축활동에의 참여로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미래 공동비전과 그에 따른 군사적 역할 확대는 이미 현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 유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한미 전략동맹에서 '전략'이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안보적 의미를 구체화 또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미 전략동맹은 일반적으로 전략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 방향이나 방침을 정해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가용자원의 배분과 관련이 있다.²⁸⁾ 따라서 '전략' 목표의 범위와 영역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와 동맹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향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한미동맹도 불가피하게 변화의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동맹정책과 평화체제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맹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평화체제의 진전이 그만큼 지연되기²⁹⁾ 때문이다.

둘째, 한미전략동맹의 요체는 평화구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맹 딜레마에 따른 연루의 위험성³⁰⁾을 항상

2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3) 2009-3, p. 33.

28) 위의 책, pp. 48~49.

29) 이상현,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p. 254.

경계하고 이를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는 동맹 관리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루의 문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려 있어 동맹의 성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관리전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법안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비준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는 파병원칙이 담겨져야 할 것으로 본다. 파병원칙의 제정은 소모적 국론분열을 예방하고 한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도 한미동맹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짜여야 한다.

한편, 2007년 2월 24일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으로의 전환에 합의하였고, 2009년 10월 22일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에 구축되었던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의 군사구조에 있어서 지휘체제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이다. 즉, 전·평시 구분없이 한미 양측이 별도의 사령부에서 각각의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새로 창설되는 협의·조정기구를 통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양국 간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기구로 가칭 ‘군사협조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다.³¹⁾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으로의 전환은 분명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면서 향후 한국은 한반도의

30) 이수형,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39집 1호 (1999), pp. 21~38.

31)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⑤: 통일외교안보』 (서울: 국정홍보처, 2008), p. 240.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국의 군사안보의 독자성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미군 전력과의 상호협력성을 증진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의지가 부각되는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 이 문제는 한국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일각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날짜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러한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이후 대두될 수 있는 1) 한미 지휘통제 문제 2) 평·전시 연계문제 3) 유사시 증원 미군전력과 한국전력의 연계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³²⁾

3. 동북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체제의 맥락에서 한미동맹 재조정을 고찰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엔사의 위상 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라 할 수 있다. 먼저, 유엔사의 위상 변화와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소극적 평화체제가 구축되었을 경우 유엔사의 위상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엔사가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및 7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3개 결의(S/1501, S/1511, S/1588)에 근거하여 북한군의 무력 공격 격퇴 및 한반도의 평화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19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 S/1588은 미국 주도 하에 유엔 회원국 지원 병력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군사령부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미국이 사령관을 임명하도록 위임하였다.

³²⁾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박휘락,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지휘통일”, 『국방정책연구』, 제24권 3호 (2008), pp. 157~185.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총 16개 유엔 회원국 병력의 연합군 형태로서 유엔사가 설립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서명자이고, 정전협정 제1조 17항은 동 협정의 준수·집행 책임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외 유엔군사령관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 측 위원 5명에 대한 임명권(제2조 20항),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시행, 출입허가(제1조 8항, 10항)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평화협정(조약) 체결 등의 조치로 정전협정이 종료될 경우, 유엔사의 해체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사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유엔사가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안보리 결의 등 유엔사 해체를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의 소극적 평화체제 구축 이후 유엔사는 동북아의 적극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로 위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유엔사의 위상변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북아의 적극적 평화체제 촉진 기구로서 유엔사의 위상 변화는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한반도의 소극적 평화체제를 국제적 합의 하에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평화 관리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는 적극적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조적 연계성을 고려했을 경우, 유엔사의 위상 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연결 고리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는 상호 연계적으로 적극적 평화체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성을 갖고 있는 한미동맹 재조정의 핵심 쟁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미국의 군사변환과 해외주둔재배치 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

의 성격과 역할을 더 유연하게 만들으로써 국방변환과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이 구상하는 군대로 재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반도 안정만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한미동맹도 미국의 네트워크화된 세계동맹 체제 속에서 하나의 동맹으로서 장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그 충격은 한미동맹관계를 포함한 한국 안보전략과 국방태세 그리고 남북관계와 대주변국 안보관계의 구조적 변화로까지 파급되고 있다.³³⁾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미 양국은 지난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도달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라는 미국의 입장을 세계전략 재구성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수용했지만,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연합군 운영방침에 적용할 때 미래 한미동맹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³⁴⁾ 따라서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고려하여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원칙과 절차를 확립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어떤 상황과 기준, 판단에 따라 동원할 것인지 수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해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전략 운영의 기본요건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체제와 갈등을 야기할 부담요인일 수도 있다.³⁵⁾ 요컨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논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다 구

33) 최종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구상”, 이수훈 편,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9), pp. 294~300.

34) 김기정, “전환기의 한미동맹: 이론과 현상”,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1호 (2008), p. 104.

35) 이상현,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 p. 250.

체적이고 상세한 지침 등이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하여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조정 및 변화 방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의 진척여부와 관계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맹 조정의 주요 쟁점인 동맹의 미래 공동 비전 및 군사적 역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은 이미 상당부분 조정과정을 지나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고려했을 경우 이들 문제 및 유엔사의 위상변화 문제가 쟁점 현안으로 재등장하거나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전략화에 있어서 '전략' 개념의 구체화가 필요하고,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보다 구체화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남한의 안보, 한미동맹을 포함하는 동북아의 안보구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과 동북아다자간 안보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모두를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³⁶⁾

³⁶⁾ 박건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 전략”, pp. 213~214.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양립성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여건 등을 갖춰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이 세계 어느 곳의 분쟁에도 동원될 수 있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일 동맹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일 미군의 주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97년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2002년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 등 소위 ‘유사법제’를 정비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본격화된 한미동맹 재조정의 파급 범위는 한미 양국은 물론 주변국가들의 안보전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한미동맹 조정 내용들은 향후 논의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비록 한미동맹의 조정과정이 선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동맹 조정은 평화체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2009년 10월 29일 / 수정: 2009년 11월 17일 / 게재확정: 2009년 11월 17일

【참고문헌】

- 구갑우·박건영·최영중.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2호 (2005).
-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⑤: 통일외교안보』. 서울: 국정홍보처, 2008.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3) (2009)
- 김기정. “전환기의 한미동맹: 이론과 현상”.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1호 (2008).
- 박건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 (2006).
- 박종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 (2006).
- 박휘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지휘통일”. 『국방정책연구』, 제24권 3호 (2008).
- 문정인. “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가전략』, 제5권 2호 (1999).
-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성남: 세종연구소, 2001.
- 이상현.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 기원, 성과, 평가”. 『국가전략』, 제13권 3호 (2007).
- .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 (2006).
- 이수형. “중견국가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노무현정부의 동맹재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2권 제1호 (2009).
- . “국제체제의 변화가 동맹의 유형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2008).
- . “국제체제의 변화와 안보 패러다임”. 미네르바정치연구회 편. 『국제질서의 패러독스』. 서울: 인간사랑, 2005.
- 이수형·남창희·Robert Dujarric.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안보 딜레마”.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4집 2호 (2004).
- 이수형.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39집 1호 (1999).
- 이종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 쟁점과 대안 모색”. 『세종정책연구』, 제4권 1호 (2008).
- 장노순. “교환모델 동맹의 교환성: 비대칭 한미안보동맹”. 『국제정치논총』, 제36권 1호 (1996).
- 전재성.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1호 (2006).

- 전재성 · 이수형. “동북아 안보체제의 성격과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적용가능성 분석”. 『안보학술논집』, 제16집 2호 (2005).
- 청와대.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서울: 청와대, 2009.
- 최영중.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론과 제도적 디자인”. 『국제관계연구』, 제12권 1호 (2007).
- 최종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구상”. 이수훈 편.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9.
- 하영선 편.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 허문영 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Altfeld, M.F.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7, (1984).
- Campbell, Kurt. “The End of Alliances? Not So Fast”,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7, no. 2 (2004).
-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 Haass, Richard N. “The Age of Nonpolarity: What Will Follow U.S. Dominance”. *Foreign Affairs* (May/June 2008).
- Haftendorn, Helga. “The Security Puzzle: Theory-Building and Discipline-Building in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1991).
- Morrow, J.D.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 (1991).
- Shen, Dingil. “Can Alliances Combat Contemporary Threat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7, no. 2 (2004).

Abstract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US Alliance: Structural Relationship with A Peace System in Northeast Asia

Lee, Soo-hyung(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draws increasing attention since the 9·19 joint statement in conclusion of the fourth Six-Party Talks was issued. The statement was a comprehensive approach which compensates economic assistance, energy provision, and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North Korea, the U.S., and Japan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 also aimed at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struction of a multilateral security arrangement in Northeast Asia in order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problem. Thus, once the negoti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peace system gets into strides, a number of issues will be raised and debated regarding peace system and especially ROK-U.S. alliance.

This paper tries to examine some important issues(the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Combined Forces Command,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FK and so on), relating restructuring ROK-U.S. alliance on peace system perspectiv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For the purpose of this, I will evaluate previous debates about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sent the concept of negative and positive peace system. In this lines, I will examine some important issues relating restructuring

ROK-U.S. alliance with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Keywords: negative/positive peace system, common vision of ROK-U.S. alliance,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FK,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이수형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안보』, 『국제체제의 변화가 동맹의 유형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국제연합 안보리와의 역학관계: 탈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안보 역할을 중심으로』, 『중견국가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노무현정부의 동맹재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

통일정책에 대한 한 제언

김병조(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국문요약

최근 한국사회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치지향에 따라 좌우로 갈라지고, 통일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남남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인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다. 통일문제에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헌신하는 주체적 집단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시기에, 한때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던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되돌아보게 된다.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선호했던 일반 국민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민주화가 통일 환경을 촉진하고 진전시켰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민주화 이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이에, 한국 정부는 비로소 통일과 관련된 적극적인 선언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심지어 남과 북 사이에 기본합의서를 도출할 수도 있었다.

실증분석 자료로는 통일평화연구소가 실시한 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민주화 선호변수'를 추출하였으며,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조사대상을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 '민주화를 중간정도 선호하는 집단', '민주화를 약하게 선호하는

* 이 글의 초안은 2009년 11월 5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엄, 『2009년 남북관계와 국민의식: 일상생활 속의 통일』에서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당시 토론해주신 송실대 강원택 교수님과 익명의 두 분 평가자에게 감사드린다.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이 필요함을 지적해주셨으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집단'으로 3분하였다.

이어서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식에 있어서,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민주화 선호가 중간정도이거나 약한 집단에 비해 통일에 대한 욕망이 매우 큰 집단이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통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앞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요 지지 세력이 될 것이다.

둘째, 그러나 민주화선호가 강한 집단과 여타 집단사이에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유사한 인식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정치지향에 따른 좌-우와 달리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 간에는 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정부 통일정책이 민주주의 가치를 갖고 있을 때,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면 지지를 철회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정부를 비난하게 된다. 이에 통일정책에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구축되려면, 정부가 민주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어: 통일정책, 민주화 선호경향, 통일의식, 강한 민주화 선호집단

I. 머리말

냉전시대에는 정부가 통일 논의를 독점하고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통치권과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졌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비교적 높았지만 구호만 난무했을 뿐, 실제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 사회단체의 통일에 대한 관심 역시 실질적이기 보다 명분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예컨대 1979년 3월 재야에서 결성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공동의장 윤보선·함석헌·김대중)'은 단체명에서 민족통일을 표방하였지만 실제 활동은 민주주의에 치중하였다.

하지만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 변화와 국내정세 변화로서의 민주화가 통일논의에 새 지평을 열어놓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

는 통일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북한바로알기 운동을 시작하고 통일논의를 개방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도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새로운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에 관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남북 상호 인적교류를 위한 문호개방을 제안하고, 1989년 9월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전문가의 주장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과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회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¹⁾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민주화 보다는 탈냉전의 영향을 크게 받아 추진되었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에 새로운 통일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를 이룩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배후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론은 1989년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일부 수정해서 1994년에 공포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쳤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한반도를 국내외 상황이 상당히 크게 변화였다. 이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전제를 견지하면서도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통일론을 모색하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연성복합통일론’이 대표적인 연구이다.²⁾

하지만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통일방안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회세력을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통일방안이 실현될 수

1) 임동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의 확립”, 최장집 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파주: 웅진싱크빅, 2007), p. 288.

2) 통일평화연구소,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연성복합통일론』,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학술심포지움 (2005년 5월 19일).

있을 것이다. 통일 추진 사회세력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2000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대표적인 연구가 통일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진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방안’ 협동연구사업이다. 이 연구는 이후 통일정책에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보다 구체화된다.³⁾ 연구자들은 통일에 필요한 시민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시민단체(NGO) 외에 일반시민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통일정책에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특히 일반시민의 통일 정책 참여가 확대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주목하고자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에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확정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2000년대 이후 통일정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많은 시민단체가 통일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통일 NGO가 크게 활성화되어 보수단체와 반목하면서 나타난 갈등”이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⁴⁾ 나아가 통일 NGO의 대표성, 실적주의, 상업화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통일 NGO들이 자신들에게 혜택이 되는 의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간접적이지만 통렬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⁵⁾

현재 한국 시민사회는 정치 성향별로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고, 이들 간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달리하면서 심

3) 대표적인 연구로는 전성훈 외,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7).

4) 김국신,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통일연구원 편,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통일연구원, 2005), p. 57.

5) 위의 책, p. 60.

한 ‘남남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치지향 집단이 선호하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은 국내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는 실질적인 로드맵이 되기 힘들 것이다.⁶⁾

둘째,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로 발전할수록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일반국민의 여론이 중요해졌다. 국민 개개인이 정책수립과 정책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반국민의 여론이 점점 더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마찬가지이다. 일반국민들 역시 통일정책에 일반국민의 영향력이 크다고 자임하고 있다. 2005년의 전국 규모 조사에서 “귀하는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어느 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일반국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24.7%였다.⁷⁾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 일반국민의 통일정책에 대한 무관심 증대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1994년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91.6%이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하였다.⁸⁾ 그러나 2009년도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6%, ‘반반/그저 그렇다’가 23.6%, ‘필요하지 않다’가 20.6%이다.⁹⁾ 질문 양식이 다르기

6) 그렇다고 남남갈등을 회피하는 식으로 소극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남북통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로드맵일수록 보수와 진보 간에 의견대립이 첨예할 것이고, 정부가 남남갈등을 두려워해서 해당 정책을 회피하면 결국에는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주변적인 정책만 추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 박종철,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통일연구원 편,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통일연구원, 2005), p. 106의 <표>. 제시된 6개의 선택지별 응답 순서는 일반시민(24.7%), 정치인(21.8%), 언론(19.7%), 대통령과 청와대(14.8%), 정부부처(10.8%), 시민단체(8.2%) 순이었다.

8) 통일연구원,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1994).

때문에 두 조사를 역면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통일의식이 약화된 것만은 틀림없다.¹⁰⁾

일반국민의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되는 시점임에도, 실제로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층이 늘어나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층,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층이 늘어날수록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통일에 무관심 할수록 일상생활에 보다 가까운 교육정책이나 복지정책, 경제정책 등을 우선시하고 통일정책은 뒷전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면 통일 무관심층이나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증가는 불가역적인 현상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민주화’ 역시 비현실적이고 멀게만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민주화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항상 높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민주주의 가치가 확산되고 마침내 민주화가 이룩되었다. 통일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일반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집단이 형성되고, 이들이 지지하고 후원하는 통일정책을 근간으로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상과 같은 통일지향 사회집단을 찾을 것인가? 통일지향 집단이 남남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적

9) 통일평화연구소,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참고로 2007년도 2008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을 제시하면, 각각 63.8%, 51.6%였다.

10) 정확하게는 ‘통일지향의식’이라고 해야 하지만 편의상 ‘통일의식’이라고 칭하였다. 전태국은 통일의식을 ‘한국인들이 남북통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상, 관념, 감정, 의지, 열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전태국, “변화하는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권력엘리트의 영향”, 『통일전후 동독 엘리트의 사회적 지위 변화』, 한독사회학회 ·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학술대회 (2009년).

넘 지평을 넘어선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이에 이같은 과거 민주화를 추진했던 시민사회의 역량이 통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¹¹⁾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지닌 집단의 통일의식은 어떠하며, 이들의 통일의식을 분석했을 때 향후 통일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과 민주주의 간에 관계를 설정하고, 이어서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지닌 사회집단의 존재를 탐색해야한다. 이에 한국 현대사에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기초로 일반국민을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3분하고, 이들 집단이 명목상의 집단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재적인 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관련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타집단과 비교한 다음, 이들이 선호하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의 논의가 통일 내지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II. 통일,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 선호경향

남북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지향으로 민주주의, 민족(주

11) 민주주의와 통일을 연계시켜보자는 문제의식은 2007년 통일의식조사에 참여한 연구진, 특히 박명규 교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민주화 선호’ 변수를 조작화하는 데 사용한 변수가 약간 다르지만, 해당 년도 통일 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김병조, “한국사회의식과 대북정책 평가의 관계분석: 통일과정에서 남남갈등 극복과 민주화선호집단의 기여 가능성 모색”,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통일연구소 특별심포지움 (2007년) ; 박명규 외 공저, 『2008 통일의식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의), 평화, 인권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이 중 그동안 많이 분석된 것이 ‘민족주의’와 통일과의 관련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하에서 독립을 위해 좌파와 우파가 ‘민족주의’ 우산 하에 결합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분단이후에도 민족주의는 남북 대화나 통일 논의의 핵심에 존재했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 민족/민족주의는 ‘국민대 민족’, ‘민족대 탈민족’, ‘국가대 탈국가’라는 다중의 긴장 관계 속에 놓여있다.¹³⁾ 물론 여전히 한국의 민족주의가 남북통일을 합의하는 데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지만,¹⁴⁾ 민족주의만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데는 분명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평화’와 통일, ‘인권’과 통일을 연계시키는 작업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편가치로서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예상외로 민주주의를 통일과 연계시킨 논의는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박명림은 한국 현대사 분석을 통해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와 만나지 않는 한 통일이 바람직한 내용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남북한의 민주주의 발전 없이 평화·통일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¹⁵⁾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도 “1980년대 이후 민족문제를 새롭게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주의 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운동의 공”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¹⁶⁾

12) 하영선, 전재성, 김수암은 각각 ‘평화’, ‘민족’, ‘인권’을 남북관계 및 통일연구와 관련해서 개념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영선 외 공저, “남북관계 분석 및 통일연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평화, 민족, 인권 개념 분석”, 통일평화연구소 엮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통일평화연구소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제1차 (2009년 2월 5일).

13) 박명규, “한국 내셔널 담론의 의미구조와 정치적 지향”, 『한국문화』, 제41집 (2008), pp. 245~262.

14) 송두율,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2000).

15) 박명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통일』 (서울: 세종연구소, 1999).

민주주의 없는 남북한 ‘민족주의’가 남북 간에 화해보다는 대립을 야기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면, 통일논의가 진정 남북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¹⁷⁾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토양이 굳건하게 존재해야 비로소 통일논의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평화나 인권 같은 보편가치는 ‘민주주의’ 가치 지향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의 특정 사회운동세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사회집단에 의해 사회운동이 촉발되었을지언정, ‘민주화’ 같은 거대한 사회운동이 소수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일부에서 ‘민주화운동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¹⁸⁾ 특정 집단과 민주주의를 연계시키고 있지만, 이 경우 민주화 이전 단계의 분석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민주화운동세력’의 헌신에 힘입은 바 크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배후에 민주화를 열망했던 다수의 국민들이 존재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현재도 민주주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실제 사회집단으로 존재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이념은 당위적인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성향처럼 자기 평가를 통해서 집단을 식별하기 힘들다. 이에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이 우리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지를

16) 최형익,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의 조건: 하나의 민주주의적 관점”,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2호 (2006), p.63.

17) 평화, 민족, 인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에 커다란 인식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매우 느슨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18) 고성국, “민주화운동세력과 제도권의 역관계”, 『사상과정책』, 25 (198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돌베개, 2008).

활용해서 민주주의 지향집단을 색출하려고 한다.¹⁹⁾

〈표 1〉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한 제반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평균값을 3년 동안 제시한 것이다.²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평가가 지난 3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평균값이 대부분 소수점 2째 자리에서 0.01~0.05 차이가 나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10월 유신'의 경우에도 평균에서 0.09의 차이가 날 뿐이다. 표준편차는 더욱 유사해서 가장 큰 차이가 '5·16'의 경우인 데 0.03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포가 달라도 평균값이나 표준편차가 유사할 수 있다. 이에 응답분포를 [그림 1]로 제시하였다. 연도별로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단기간에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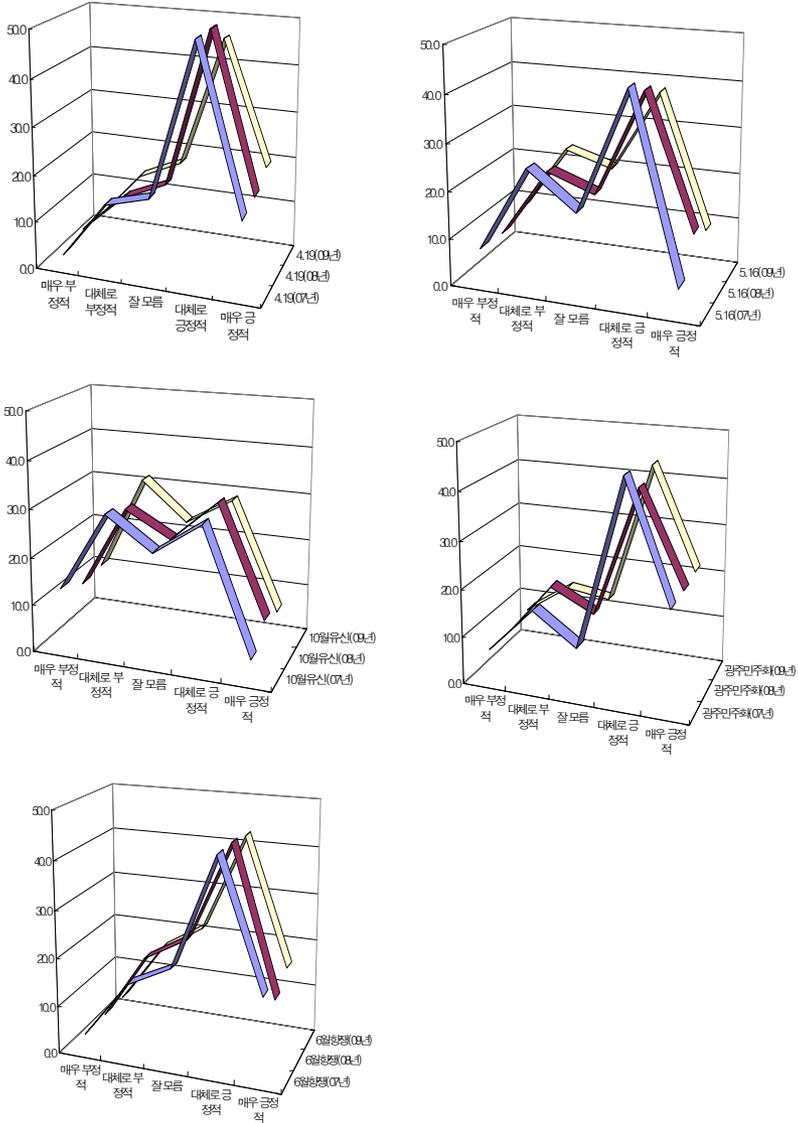
〈표 1〉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 (평균, (표준편차))

사건	2007년 (1,200명)	2008년 (1,213명)	2009년 (1,203명)
4·19	.31(.50)	.32(.51)	.32(.52)
5·16	.07(.55)	.15(.57)	.08(.58)
10월 유신	-.09(.56)	-.00(.58)	-.06(.56)
광주민주화 운동	.28(.59)	.25(.60)	.28(.60)
6월 항쟁	.28(.53)	.22(.52)	.25(.53)

점수부여 : '매우 긍정적=1.0', '대체로 긍정적=0.5', '잘 모름=0.0',
'대체로 부정적=-0.5', '매우 부정적=-1.0'

19) 그 사건은 4·19, 5·16, 10월 유신,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5가지 사건이다.

20) 각 사건에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는지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이라는 5응답 중에 고르도록 하였다.



[그림 1]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응답분포(2007~2009)

각 사건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살펴보면 (<표 1> 참조), 4·19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이어서 광주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이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에는 다소 처진 상태로 5·16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0월 유신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0'에 가까운 '·' 평가가 나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대등하게 존재하되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들 사건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가 어떤 가치지향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5가지 사건 중 4·19,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은 '민주화' 운동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에 이견이 적을 것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갖고 있다고 간주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해서, 이들이 '반민주주의' 가치지향을 가졌다고 바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민주-반민주 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들 사건이 무질서, 혼란 등을 야기하였다고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을 평가했는지는 5·16이나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에서 보다 명확하지 않다. 5·16이나 10월 유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와 연계시키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 경우는 민주-반민주 축을 기초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민주-반민주 축이 아니라 근대화, 경제성장, 사회질서 등과 연계시켜 평가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민주-반민주' 축만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재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민주-반민주' 축 외에 '질서-무질서'나 '성장-분배' 등 다양한 축을 고려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사건을 평가한 기준 가치가 무엇인지 요인분석을 통해 그

잠재변수를 추출하였다. 만일 주성분 분석에서 하나의 요인만 추출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민주주의 변수(민주-반민주 축)일 것이다.²¹⁾ 하지만 실제 주성분 분석 결과는 3개년 모두에서 2개의 요인(Eigen Value 1 이상)이 추출되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데, 한 가지 변수가 아니라 2가지 변수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선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카이저(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을 통해 회전된 성분행렬을 구하였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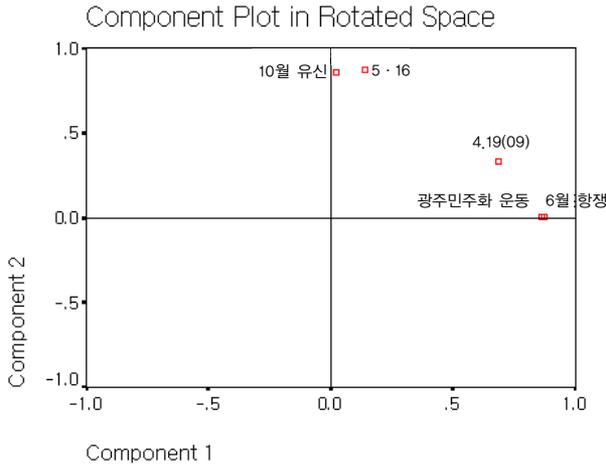
〈표 2〉 성분행렬

	2007년				2008년				2009년			
	성분행렬a		회전된 성분행렬b		성분행렬a		회전된 성분행렬b		성분행렬a		회전된 성분행렬b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성분	
	1	2	1	2	1	2	1	2	1	2	1	2
4·19	.761	-.069	.705	.295	.738	.033	.526	.518	.754	-.070	.682	.329
5·16	.563	.646	.196	.834	.672	.568	.120	.872	.569	.672	.142	.869
10월 유신	.387	.749	-.008	.843	.295	.601	-.008	.802	.458	.720	.022	.853
광주민주화	.778	-.363	.857	.043	.834	-.558	.860	.024	.743	-.438	.863	.007
6월 항쟁	.764	-.417	.871	-.011	.843	-.518	.863	.080	.749	-.447	.872	.003

a 추출된 2성분

b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 3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21) 요인분석을 하기보다 '각 사건에 대한 응답 점수를 합해서 변수를 만들면 어떤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게 하려면 5개 사건에 대한 응답이 단일 차원을 측정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한다. 그러나 질문들이 단일차원을 측정했다면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변수(요인)가 하나이어야 하지만 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에 요인분석을 활용한 것이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하려면 처음부터 '민주주의 척도'가 포함된 조사를 해야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척도'가 포함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림 2] 2009년 성분도표(베리맥스 회전후)

그리고 [그림 2]는 2009년도의 경우에 한정해서 성분도표를 제시한 것이다.²²⁾ ‘성분1’이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및 ‘4·19’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성분2’가 ‘10월 유신’ 및 ‘5·16’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분1’은 통상 민주화 운동에 포함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라는 변수 명을, ‘성분2’는 사회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사건으로 보아 ‘안정 선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민들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민주화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²³⁾

²²⁾ 2009년도 경우만 제시한 것은 2007년, 2008년도 성분도표도 극히 유사한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²³⁾ 한편 여러 분이 ‘안정 선호’ 변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었다. 하지만 안정 선호 변수에 대한 분석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안정 선호 변수는 민주화 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변수이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안정 선호 변수와 민주화 선호변수는 한 변수의 양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변수라는 점이다.

이 글이 민주주의 지향가치가 통일외의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민주화 선호 변수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007~2009년 3년간 민주화 선호변수는 <표 3>과 같은 기술 통계 특성을 갖고 있다.

<표 3> 민주화 선호 변수와 집단구분 (2007~2009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민주화 선호 '강' (0.5이상)	민주화 선호 '중' (-0.5~0.5)	민주화 선호 '약' (-0.5이하)	계(명)
민주화 선호 (2007)	0.0 1.0	-2.72 1.82	32.3 (388)	37.1 (445)	30.6 (367)	100.0 (1,200)
민주화 선호 (2008)	0.0 1.0	-2.69 2.10	33.0 (400)	32.0 (388)	35.0 (425)	100.0 (1,213)
민주화 선호 (2008)	0.0 1.0	-2.87 1.83	32.9 (396)	35.6 (428)	31.5 (379)	100.0 (1,203)

민주화 선호 변수 값이 0.5이상인 국민을 '강한 민주화 선호집단(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값이 0.5미만, -0.5이상 집단을 '중간정도 민주화 선호집단(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값이 -0.5미만 집단을 '약한 민주화 선호집단(민주화 선호 '약)'으로 구분했을 경우,²⁴⁾ 지난 3년 동안 민주화 선호에 따른 집단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비록 민주화 선호 집단구분이 성, 연령, 교육수준과 같이 외적으로

²⁴⁾ 집단을 구분하는 데 정해진 절대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민주화 선호 변수 값 ± 0.5 를 기준으로 3분하였다. 보다 엄격하게 ± 1.0 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 1.0 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경우 연도별 집단 구성이 15% 내외, 70% 내외, 15% 내외였다. 여론을 통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수가 되어야 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민주화를 선호하는 층을 판별해낸다는 점에서 다소 느슨한 기준을 채택하였다. 한편, 민주화 선호점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을 25%, 50%, 25% 식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안받기도 하였지만, 이 글이 '민주화 선호'라는 변수의 존재 자체부터 알아보는 시도였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 점수 자체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명확하기 드러난 집단구분이 아니라 연구자가 설정한 범주이기는 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집단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민주화 선호 경향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집단 구분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화 선호경향은 ‘관용성(tolerance)’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 4>).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90% 정도가 ‘시위나 집회’를 ‘허용해야한다(‘반드시’+‘대체로’)’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는 민주화 선호도가 낮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에서는 75% 이상이 촛불집회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4> 민주화 선호 변수와 관용성(2009년) (단위 :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시위 및 집회 허용 에 대한 생각 (정부 정책에 항의하 는 공개집회) $\chi^2=153.95, p<0.001$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42.3	20.8	12.1
	대체로 허용해야 한다	49.9	58.4	52.2
	가급적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7.3	18.5	28.5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0.5	2.3	7.1
'촛불시위가 우리 사 회에 긍정적인 역할 을 했다는 의견에 대 한 평가 $\chi^2=174.46, p<0.001$	매우 찬성	38.6	16.8	9.8
	다소 찬성	37.6	32.2	30.3
	반반/ 그저 그렇다	15.7	34.1	28.0
	다소 반대	5.8	11.2	19.3
	매우 반대	2.3	5.6	12.7
탈북자(새터민)에 대 한 친근감 $\chi^2=24.94, p<0.00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5.6	1.4	2.4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38.2	32.1	29.8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9.2	59.5	57.5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6.9	7.0	10.3
탈북자 수용에 대한 인식 $\chi^2=31.31, p<0.00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한다	55.6	40.9	43.5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39.9	45.8	43.5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4.5	13.3	12.9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성도 마찬가지이다. 탈북자를 예로 들었지만,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탈북자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결국 민주화 선호변수로 구분된 집단이 실제적인 사회집단으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서 민주화 선호 경향이 정치지향 변수분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통상 보수 보다 진보가 관용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집단 간에 나타난 관용성의 차이가 실은 정치성향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표 5〉를 보면 ‘진보’는 40% 이상이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 속하고, 반대로 보수는, 2007년을 제외하면, 40% 이상이 민주화 선호가 약한 집단에 속한다. 더구나 연도별로 진보성향이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반대로 보수의 경우, 민주화 선호에 포함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성향과 민주화 선호 간에는 서로 관계가 있고, 약간씩이지만 관련성이 조금씩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민주화 선호경향과 정치성향 (단위 : %)

정치성향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계(명)	
진보	2007	42,2	34,3	23,4	100,0(303)
	2008	46,7	29,4	23,9	100,0(289)
	2009	48,5	27,4	24,1	100,0(299)
중도	2007	26,6	38,9	34,5	100,0(568)
	2008	28,3	36,0	35,7	100,0(583)
	2009	29,9	41,1	28,9	100,0(581)
보수	2007	33,3	36,7	30,0	100,0(327)
	2008	29,3	27,3	43,4	100,0(341)
	2990	23,8	33,1	43,0	100,0(323)

²⁵⁾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진보는 보수에 비해 관용성이 높게 나온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와 정치성향 간의 연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비록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비율이 높지만, 진보성향 중에서도 민주주의 지향이 약한 사람이 20%가 넘는다. 반대로 중도나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최소 20%는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 통상 '진보 정치성향'과 '민주주의 선호경향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다.²⁶⁾ 실제로는 수적으로 중도나 보수가 진보 보다 많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에서 진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2/3 정도는 중도와 보수가 차지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과 진보 성향 집단이 서로 중첩되지만, 두 집단 구성원의 일치성보다는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왜냐하면 정치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에서 남남갈등이 나타나지만, 민주화 선호성향 차이는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화 선호경향 별로 민주주의와 통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3년 계속 물어보았고, 2009년에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았다(〈표 6〉).

분석결과 모든 조사에서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에서 통일과 민주주의 간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민주화 성향이 약한 집단에서는 통일과 민주주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그리고 민주화 선호경향별 민주주의와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²⁷⁾

²⁶⁾ 한국사회 민주화에 진보 정치성향 집단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도나 보수 정치성향 집단에도 민주화를 열망하는 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표 6〉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 (단위 : %)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계 (명)
통일과 남한민주주의 (2007) $\chi^2=11.64$ $p<0.05$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5.0	17.8	17.2	19.9 (239)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0.9	33.3	29.5	31.4 (376)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4.1	49.0	53.3	48.7 (584)
통일과 남한민주주의 (2008) $\chi^2=10.35$ $p<0.05$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1.3	18.8	19.8	20.0 (24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8.0	22.9	19.8	23.5 (285)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50.8	58.2	60.5	56.6 (686)
통일과 남한민주주의 (2009) $\chi^2=9.53$ $p<0.05$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3.0	17.1	17.9	19.3 (23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2.8	32.2	28.2	31.2 (375)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4.2	50.7	53.8	49.5 (596)
통일과 북한민주주의 (2009) $\chi^2=18.51$ $p<0.001$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34.8	27.6	23.5	28.7 (345)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8.5	28.7	25.9	27.8 (334)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6.6	43.7	50.7	43.6 (524)

마지막으로 통일과 민주주의의 선후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

27) 이론적 논의와 달리 실증분석에서는 민주주의와 통일이 관계없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질문자체가 일반국민에게 매우 생소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통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지만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조사결과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연계시킨 논의가 희소한 현실과 관계가 있다. 민주주의와 통일 간에 어떤 관계를 상징하는 지에 관해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으려면 앞으로 민주주의와 통일을 연계하는 담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진다'는 응답 비율과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을 비교하면, 남한의 경우에는 '남한 민주주의 → 통일'을 상정하는 경우가 '통일 → 남한민주주의'를 상정하는 경우보다 많다. 남한 내 민주주의 공고화 노력이 통일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전망케 하는 조사결과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 → 북한 민주주의'를 상정하는 경우가 '북한 민주주의 → 통일'을 상정하는 경우보다 많다. 이는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역량이 없다는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화 선호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민주화와 통일의 선호성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남한 민주주의 → 통일 → 북한 민주주의'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민주화 선호경향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민주화 선호경향별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²⁸⁾ <표 7>은 남북통일의 필요성, 통일가능시기,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되는 정도, 통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면 통일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χ^2 검증 결과 참조).

²⁸⁾ 2007년, 2008년 자료에 대해서는 과거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2009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한다.

〈표 7〉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 (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chi^2=70.63$ $p<0.001$	매우 필요하다	38.1	19.2	16.9
	약간 필요하다	30.8	31.1	31.7
	반반/그저 그렇다	18.7	26.6	25.3
	별로 필요하지 않다	10.4	18.0	20.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	5.1	6.1
통일가능시기 $\chi^2=44.92$ $p<0.001$	5년 이내	2.3	2.8	3.2
	10년 이내	23.2	14.0	13.7
	20년 이내	31.8	24.5	26.9
	30년 이내	15.4	20.1	12.9
	30년 이후 불가능하다	14.9 12.4	17.3 21.3	17.2 26.1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chi^2=26.44$ $p<0.001$	가능한 빨리 통일	11.6	7.7	6.3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73.2	65.2	66.8
	현재대로가 좋다	10.9	18.7	17.2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4.3	8.4	9.8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되는 정도 $\chi^2=73.78$ $p<0.00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4.0	10.7	7.1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42.9	36.0	39.1
	별로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27.3	42.8	40.4
	전혀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5.8	10.5	13.5
통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chi^2=46.28$ $p<0.00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8.6	2.3	1.3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2.2	19.6	17.4
	별로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53.3	54.2	52.8
	전혀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15.9	23.8	28.5

최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통일이 불가능하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통일에 무관심한 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 '강' 집단은 70% 정도가 통일이 필요('매우 필요'+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민주화 선호 '중' 집단과 민주화선호 '하' 집단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각각 50.3%, 48.6%로 50% 정도이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 중에서 통일이 필요 없다('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5% 미만이고, 통일보다 현재대호가 좋거나 관심이 없다는 사람의 비율은 합해서 15%를 약간 상회한다. 이에 반해 민주화 선호 '중' 집단과 민주화 선호 '약' 집단에서는 은 25% 내외가 통일이 필요 없거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선호 '중' 집단과 민주화 선호 '약' 집단에서는 통일보다 현재대호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비율도 25%를 상회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지향 집단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에 대해 관심과 욕구가 큰 것은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선호 '강' 집단에서는 24%가 통일이 남한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율은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에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합치면, 강한 민주화 선호 집단은 2/3 정도가 통일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 집단에서는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도 통일이 자신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²⁹⁾ 이는 민주화 선호집단도 대체로는 통일과정이 어렵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²⁹⁾ 물론 상대적으로는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집단에서 타 집단에 비해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그 격차는 타 질문에 대한 응답에 비해 작은 편이다.

주화 선호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통일지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개인적인 이득보다 사회전체의 이득을 중시하고, 단기적인 이해관계보다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과거 민주화를 추진할 때, 민주화 주도 집단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과 유사한 사고 형태이다. 이 점이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주도 집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데 이어 민주화 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표 8〉).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민주화 선호경향에 관계없이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관점이 다수이며, 이어서 경계대상,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한 관계를 보는 인식에 있어서는 민주화 선호성향 별로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북한 정권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정도’가 민주화 선호 ‘중’ 집단이나 민주화 선호 ‘약’ 집단 보다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도 75% 정도가 북한 정권이 통일을 희망하지 않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화 선호성향이 강한 집단이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다소 낮게 평가하고 ‘북한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도 조금 낮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를 보았을 때, 이 부분 역시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단 간에 인식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정권에 대한 시각은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점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을 ‘친

복세력'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나아가 '중복세력'으로 보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표 8〉 북한에 대한 인식(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x^2=12,10$ $p = n.s.$	지원대상	15,2	18,7	18,2
	협력대상	57,1	47,7	47,5
	경쟁대상	2,3	2,3	2,1
	경계대상	18,7	22,2	20,8
	적대대상	6,8	9,1	11,3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정도 $x^2=16,17$ $p<0,05$	매우 원한다	3,8	1,4	3,4
	다소 원한다	20,7	18,9	15,3
	별로 원하지 않는다	51,8	54,9	48,7
	전혀 원하지 않는다	23,7	24,8	32,5
향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x^2=15,80$ $p<0,05$	많이 있다	12,4	12,6	18,5
	약간 있다	45,5	54,2	47,5
	별로 없다	35,4	27,1	27,7
	전혀 없다	6,8	6,1	6,3
북한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x^2=14,35$ $p<0,05$	매우 위협을 느낀다	24,6	26,2	29,8
	다소 위협을 느낀다	43,5	51,4	47,2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26,1	18,2	17,7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5,8	4,2	5,3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의견 $x^2=12,28$ $p = n.s.$	매우 동의한다	41,9	42,5	46,4
	다소 동의한다	42,7	42,5	34,8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9,3	8,9	10,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8	4,7	5,0
	잘모름	1,3	1,4	3,7
최근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x^2=39,99$ $p<0,001$	많이 변하고 있다	8,8	4,4	8,4
	약간 변하고 있다	42,9	41,6	28,8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37,6	39,0	39,3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10,6	15,0	23,5
북한정권(대화와 타협이 가 능한 상대) $x^2=62,27$ $p<0,001$	매우 가능	5,6	2,6	0,5
	어느 정도 가능	48,7	34,1	31,1
	별로 가능하지 않음	36,6	49,5	47,8
	전혀 가능하지 않음	9,1	13,8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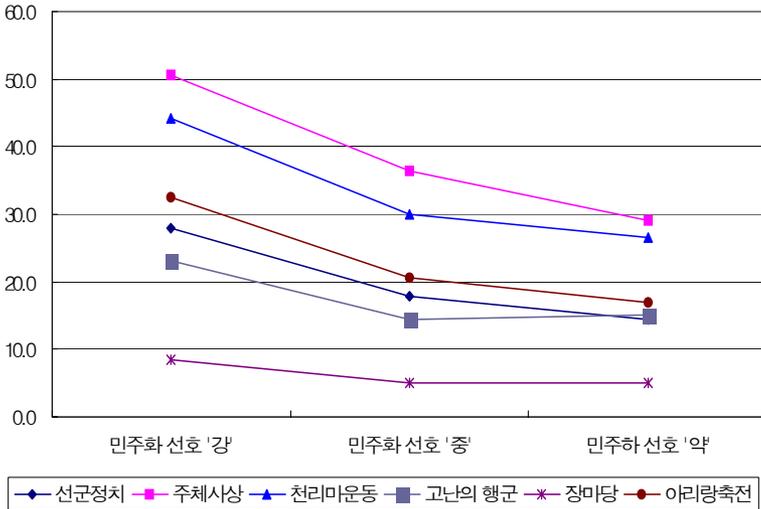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중에서도 민주화 선호경향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최근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이나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과 상대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타 집단과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북한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차이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지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을 현실적인 통일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의 북한 인식에 대한 이상과 같은 해석에 대해 북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그와 같은 반론에 대응할 수 있다. 즉, 생활수준, 법률제도, 선거방식, 언어생활, 생활풍습, 가치관 등 각각에 대해 남북한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모든 측면에서 민주화 선호성향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를 선호하는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에 남북한 사회생활 차이를 인정하는 정도는 동일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북한사회 인지도 면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타 집단이 비해 북한을 보다 잘 알고 있었다(그림 3). 민주화 선호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물론 응답자

스스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조사결과를 고려한다면 민주화 선호집단에 대해 북한을 모르는 집단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³⁰⁾



[그림 3] 분야 별 '안다(잘 안다+조금 안다)'는 응답 비율(2009년)

IV. 민주화 선호경향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민주화 선호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통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접촉을 통해 북한 변화를 야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화 선호집단은 타 집단에 대해 관용성이 높은 집단이었다. 민

³⁰⁾ 북한 일반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모른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차이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표 8〉 참조).

주화 선호집단이 이상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표 9〉 참조).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는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른 집단보다 많아서 60%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다른 집단은 반대이다. 민주화 선호 ‘중’ 집단에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5%가 넘고, 민주화 선호 ‘약’ 집단에서는 2/3 정도가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분포는 앞으로도 당분간 대북지원에 대해서 국민 합의 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표 9〉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chi^2=67.41$ $p<0.001$	매우 도움이 된다	12.6	6.5	4.7
	약간 도움이 된다	47.5	36.7	28.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8	41.6	43.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1	15.2	23.0
남북경제협력기 북한 개혁· 개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 $\chi^2=108.88$ $p<0.001$	매우 도움이 된다	23.4	8.2	7.2
	약간 도움이 된다	58.1	57.0	44.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2	27.6	39.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3	7.2	9.0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민 족도(2009년) $\chi^2=65.50$ $p<0.001$	매우 만족	0.8	2.8	4.7
	다소 만족	19.2	31.6	36.4
	다소 불만족	55.6	54.3	47.8
	매우 불만족	24.5	11.2	11.1
대북정책결정시 국민의견반 영 정도 $\chi^2=58.60$ $p<0.001$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1.5	0.7	0.8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14.4	23.1	26.2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3.5	63.3	58.5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0.6	12.9	14.6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 민주화 선호집단은 대북지원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 '강' 집단에서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80%가 넘고 있다. 물론 타 집단은 민주화 선호 집단보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다. 민주화 선호성향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을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북지원과 달리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민주화 선호지향이 약한 집단에서도 50% 이상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모든 집단에서 남북경제 협력에 대해 50%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비교적 적게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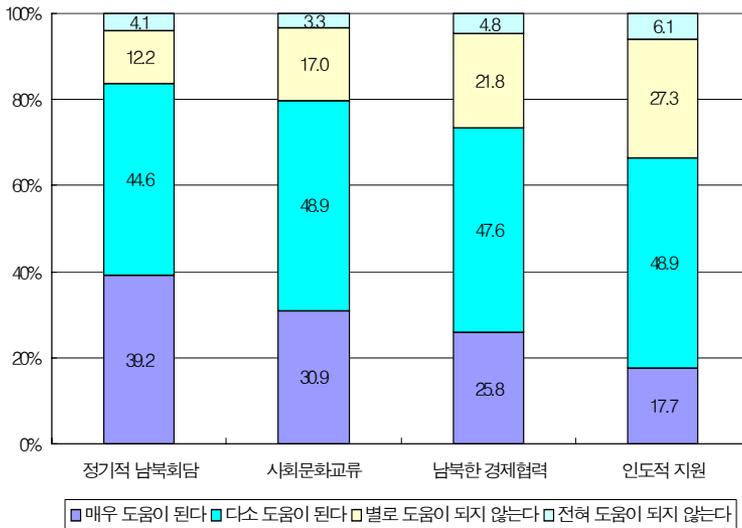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교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교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민주화 선호집단의 불만이 높은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³¹⁾

대북정책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정부 간 교류가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리라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대북정책의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와 일반국민들을 대북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주화 선호집단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정부가 대북정책 결정시 국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대북정책에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정책을 포함하여 대북정책 전

31)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정부 신뢰도는 매우 낮게 나온다. 그런 점에서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진술이다. 한편 타 집단에서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나 국민 의견 반영 정도 역시 민주화 선호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이지 결코 절대수치 면에서 높은 것은 아니다.

반에 대해 관심 및 열의가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에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민주화 선호집단의 의견에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화 선호집단이 특히 선호하는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기로 한다. [그림 4]는 민주화 선호 ‘강’ 집단에 한정해서 여러 대북정책이 통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정리해서 제시한 것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4가지 대북정책 중에서 정기적 남북회담이 통일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회문화교류, 남북한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순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여러 분야 대북 정책 중 정기적 남북회담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비록 민주화 선호집단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불만이 크다 할지라도, 통일과정에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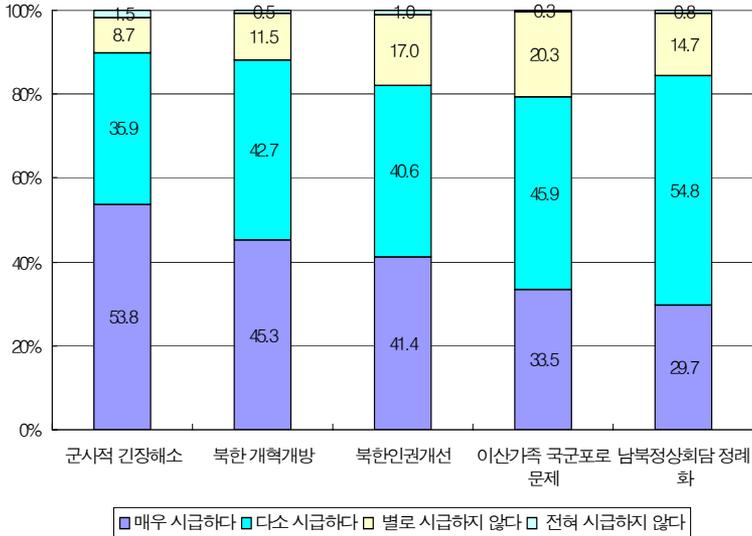
[그림 4] 대북정책별 통일에 도움 주는 정도(민주화선호집단, 2009년)

상대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있어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다 점도 중요하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인도적 대북 정책을 중시하고 있지만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 민주화 선호집단과 대북 인도적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간에 정책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주화 선호집단의 대북 사안별 시급성에 대한 평가는 [그림 5]와 같다.³²⁾ 민주화 선호집단은 군사적 긴장해소가 남북한 간에 합의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이 북한 개혁·개방, 북한 인권개선 순이다.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해결,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는 평가이다.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은 군사적 남북긴장완화가 보다 근원적인 치유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한편, 민주화 선호집단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서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 선호집단도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리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것이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주화 선호집단의 생각은 '중요한 사항이나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32) 질문 문항에는 그밖에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군철수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민주화 선호집단은 남한에서의 미군철수에 대해 9.7%가 '매우 시급하다', 20.4%가 '다소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타 집단에 비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30% 정도에 불과한 수치이며, 또한 타 집단과의 차이도 타 분야보다 크지 않았다.



[그림 5] 대북 사안별 시급한 정도(민주화선호집단, 2009년)

마지막으로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대북 현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09년 8월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 정책 현안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결과를 분석하기에 대북정책 현안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는 크게 한국 요인과 북한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한국 요인을 살펴보자. 한국 요인은 정권교체 요인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고, 전 정부가 남북한 사이에 체결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한편, 김정일 정권이 지속된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기를 원했다.³³⁾ 그리고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이 강화된 것도 남북관계가 경색하게 된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데, 이 역시 남한 측의 정권교체 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어서 북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관계를 경색하게 만든 중요한 북한 측 요인이 있는데,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벗어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였다. 또한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북한은 2008년 12월 북한의 남북직통전화선을 단절하였으며, 12월에는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폐쇄, 개성관광·남북열차 운행중단, 개성·금강산 상주체류인원 절반 감축 등 소위 '12.1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2009년 3월에는 개성공단 근무 근로자 억류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성공단에서의 경제교류가 크게 위축되었다.

〈표 10〉은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계승에 찬성하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60% 정도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한다는 데 찬성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교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는 예견된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33)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남북합의 계승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체결한 남북합의 내용보다, 남북합의를 체결한 당사자가 바로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이기 때문이다.

〈표 10〉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 해야한다 $\chi^2=117.04$ $p<0.001$	매우 동의한다	18.4	8.9	7.1
	다소 동의한다	42.9	34.8	33.8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4.7	36.7	31.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1	16.1	20.6
	잘 모름	3.8	3.5	7.4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 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chi^2=61.71$ $p<0.001$	매우 찬성	18.4	8.9	7.1
	다소 찬성	42.9	34.8	33.8
	반반/그저 그렇다	24.7	36.7	31.1
	다소 반대	10.1	16.1	20.6
	매우 반대	3.8	3.5	7.4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해야한다 $\chi^2=55.77$ $p<0.001$	매우 찬성	21.8	14.7	13.5
	다소 찬성	47.6	46.0	40.6
	반반/그저 그렇다	22.3	35.7	31.1
	다소 반대	6.8	3.5	12.7
	매우 반대	1.5	0.0	2.1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 야 한다 $\chi^2=21.72$ $p<0.01$	매우 찬성	22.2	13.8	16.1
	다소 찬성	32.4	36.0	34.3
	반반/그저 그렇다	31.6	36.4	34.6
	다소 반대	10.7	13.3	11.6
	매우 반대	3.1	0.5	3.4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chi^2=44.58$ $p<0.001$	매우 찬성	13.6	14.0	20.1
	다소 찬성	30.1	32.7	31.9
	반반/그저 그렇다	24.5	33.6	31.7
	다소 반대	24.0	17.8	13.5
	매우 반대	7.8	1.9	2.9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한다 $\chi^2=40.48$ $p<0.001$	매우 찬성	13.9	13.1	15.0
	다소 찬성	40.4	47.1	39.3
	반반/그저 그렇다	25.5	31.6	35.9
	다소 반대	14.4	7.0	6.6
	매우 반대	5.8	1.2	3.2

하지만 민주화 선호집단 내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3이 넘는다. 그리고 타 집단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0%가 넘는다. 비록 민주화 선호집단 내의 다수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한다는데 찬성할지라도 타 집단에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개성공단 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는 개성공단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층이 60% 이상 두텁게 존재하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50%에 못 미치고 있다. 개성공단을 어느 정도 규모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북 인권문제에 관련해서는 민주화 선호집단에서 타 집단보다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한다는 데 찬성의견이 많아, 70%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 지향이 인권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예측이 가능했던 조사결과이다. 또한 타 집단에서도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한다는데 50% 이상이 찬성한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결과이다.

또한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민주화 선호집단에 속한 사람의 5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북인권문제가 중요하지만, 정부처럼 책임질 수 있는 집단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책임질 수 없는 민간단체가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경우 효과도 적고 자칫 대화와 타협상대로서의 북한 정부를 잃어버릴 우려도 있다고 보는 듯하다.

한편 북핵 문제와 대북지원, 그리고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집단이 민주화 선호도가 약한

집단 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상대적으로 민주화 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해 온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아마도 북한과의 교류단절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집단 내에서도 북핵 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하고 국제 제재조치에 동참해야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많다. 북핵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현 정책을 민주화 선호집단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민주화 선호집단도 남북관계에 '북한 변수'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 정권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한과 남한국민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민주화 선호집단도 대북 지원정책이나 남북한경제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지만, 북한 정부의 대남정책에 대해서 보다 큰 불만을 갖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V. 맺음말

2009년은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이 마련된 지 20년 되는 해이자, 독일이 통일한 지 20년 되는 해이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변화된 국내외 정세에 맞는 통일방안을 새롭게 준비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방안과 함께 통일을 추진하는 주도 세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년 전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통일 열기는 많이 식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룩했다면, 이들 집단이 통일과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여기서 민주주의 가치에 주목하게 된 것은, 그동안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체계로 민족주의가 주로 분석되었지만, 실제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민족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있다는 이론적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요인분석 해서 '민주주의 선호' 변수를 추출하였고, 변수 값에 따라 일반국민들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관용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된 집단이 단순히 명목상으로 구분되는 가공의 집단은 아니다. 이들은 집단 간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실재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된 3집단은 정치성향별 집단과 일부 중복되지만, 동일한 집단은 결코 아니었다. 민주화 선호에 따라 구분된 집단과 정치지향에 따라 구분된 집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민주화 선호집단이 추구하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남남갈등을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민주화 선호집단과 타 집단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통일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집단이다. 타 집단에 비해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갖고 있으며, 통일이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 선호집단은 향후 통일정책 추진에 주요 지원세력이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과 타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면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과 타 집단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타 집단 보다 북한 정권을 관대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존재한

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집단이 소위 통일지상주의나 북한을 낭만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집단은 아니었다. 현실적인 남북대치상황에 대해서는 타 집단과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이질화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은 다 집단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존재를 현실로 인정한 가운데 접촉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를 모색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제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타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미래의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타 집단에 비해 보다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된 데 대해 민주화 선호집단은 한국정부 보다 북한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서 어느 정부건 통일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통일의식이 높은 집단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그런데 현재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에 적극적인 집단이다.

이 점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이 통일문제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민주주의 가치지향과 일치할 경우이다.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이 민주화 선호집단의 가치지향과 크게 상치할 경우 정책을 비판할 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 통일정책이 시민사회와 유리된 채 걸돌고 통일정책 거버넌스 논의는 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고성국. “민주화운동세력과 계도권의 역관계”. 『사상과정책』, 25 (1989), pp. 59~72.
- 김국신.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통일연구원 편.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통일연구원, 2005. pp. 1~83.
- 김병조. “한국사회의식과 대북정책 평가의 관계분석: 통일과정에서 남남갈등 극복과 민주화선호집단의 기여 가능성 모색”.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통일연구소 특별심포지움 (2007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돌베개, 2008.
- 박명규. “한국 내셔널 담론의 의미구조와 정치적 지향”. 『한국문화』, 제41집 (2008), pp. 245~262.
- 박명규 외 공저. 『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7.
- . 『2008 통일의식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 박명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통일』. 세종연구소. 연구논문 99-16. 1999.
- 박종철.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제도혁신과 가치 합의”. 통일연구원 편.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통일연구원, 2005. pp. 86~179.
- 송두울.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2000.
- 임동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의 확립”. 최장집 외 공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웅진싱크빅, 2007. pp. 283~339.
- 전성훈 외 공저.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7.
- 전태국. “변화하는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권력엘리트의 영향”. 『통일전후 동독 엘리트의 사회적 지위 변화』. 한독사회학회·통일연구원 주최 국제학술대회 (2009년).
- 최형익. “한국 민족주의와 통일의 조건: 하나의 민주주의적 관점”.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2호 (2006), pp. 51~74.
- 통일연구원.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1994.
- 통일평화연구소.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연성복합통일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움 (2009년 5월 19일).
- 하영선 외 공저. “남북관계 분석 및 통일연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평화, 민족, 인권 개념 분석”.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통일평화연구소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제1차 (2009년 2월 5일).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Inclination' and 'Unification Perception': A Recommendation to the Unification Policy

Kim, Byeong-jo(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n these days South Korea has faced some difficulties in pursuing the unification policy effectively. The civil society groups divided into left and right to the political orientation. And this causes serious 'south-south conflicts' to the unification policy. Additionally among the Koreans, the desires and wishes toward unification have diminishing sharply. There seems no main group who devotes eagerly or sincerely to the unification problem.

At this moment, I have recalled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Korea which was once regarded as impossible or unrealistic to achieve. I assumed that the democratization could be finally accomplished owing to the existence of extensive ordinary peoples who hoped and preferred democracy.

If reviewing the recent Korean history, it might be concluded that democratization activated and progressed the unification circumstances. Only after the democrat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set up more positive declarations and plans about the unification and even reached 'basic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from the end of 1980' to the early of 1990',

For the analysis, using the national survey datum which were initiated by IPUS(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s Studies), I classified the people along the opinions to the democracy. First, I extracted the democracy inclination variable by factor analysis. Then, I grouped the people into three

according to democratic preference score. I named the three groups, as 'strong democracy inclination group(SDIG)', 'medium democracy inclination group(MDIG)', and 'weak democracy inclination group(WDIG)'.

Next, I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c inclination' and 'unification percep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unification perceptions, SDIG has more desire and wish to the unification comparing to MDIG and WDIG. SDIG has positive and future-oriented perspective to the unification. SDIG might become main supporter to carrying future unification policy.

Second, to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though the SDIG has different perceptions in some area, SDIG often shows similar perceptions with other groups. This means that, in contrast to left and right demarcation, groups divided by democratic inclination might not initiate south-south conflicts to the unification policy.

Third, SDIG strongly supports government unification policies which shares democratic values. But government drives a policy which is not in line with democratic values, SDIG not only withdraws support but blames the policy and government. So I suggest that government should pursue democratic unification policy to form the civil society governance in the realm of unification.

Keywords: unification policy, democracy inclination, unification perception, strong democracy inclination group

김병조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2008 통일의식조사』(공저), "A Comparative Analysis of Democratic Consolidations After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선진국에 적합한 민군 관계 발전방향 모색: 정치, 군대, 시민사회 3자 관계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김정일 시대 권력엘리트 변화*

김갑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엘리트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노동당,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국방위원회와 인민군대, 주요 공장·기업소 등이다. 그리고 분석시기는 김일성이 생존해 있던 199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 권력엘리트의 세대교체는 2.5세대 또는 3세대로 일정정도 진행되었고 중앙 차원의 변화보다는 지방차원(공장·기업소)의 변화가 많고 정치·군사관료의 변화보다는 경제전문가의 변화가 많았다. 향후 후계구도와 연동되어 세대교체가 더 진행될 것이다. 김정일의 후견세력인 혁명1세대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상징적 차원(혁명선배 존재)에서 후계자의 후견세력으로 혁명2세대(한국전쟁·전후복구세대)가 배치되며 정책집행·실무 그룹엔 '새 세대'(40대 이하)가 중심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 권력엘리트, 세대교체

I. 서론

일반적으로 북한 지도부는 주체사상(선군사상)으로 뭉친 단일화·획일화된 혁명엘리트로 알려져 있다. 즉 하이글레이와 버튼(Higley & Burton)

* 본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논문임.

의 엘리트 유형(민주적 합의통합형, 분열형, 이념적으로 단합된 혁명형) 중 전형적인 제3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¹⁾ 이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묘사하고 있는 전체주의 독재자 밑에서 권력과 통치·통제의 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주의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전체주의 엘리트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²⁾

그러나 최근 북한이 초보적 수준이나마 경제개혁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이른바 3실(실리·실적·실력)이 권력엘리트가 지녀야 할 주요 능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 전반적인 세대교체와 맞물리면서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특징이자 기존 엘리트 구조 내에서의 긴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김정일 시대에 들어 김일성 시대의 혁명1세대와 2세대가 권력의 중심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대신 혁명3세대와 4세대 상당수가 진입하였다. 즉, 김정일 시대의 권력엘리트는 김정일이 중앙당에 들어간 1960년대에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중앙위원회에 들어온 인물들, 김일성종합대학의 1960년대 동창생들, 김정일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간부들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모스크바 등 해외 유학파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 행정, 외교 등에서 전문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 김정일의 신임이 두터운 직업적 경제, 행정, 기술관료 출신이며 대부분이 60~70대 연령층이다. 하지만 최근 40~50대의 혁명3세대들이 급부상하면서 간부층원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³⁾

이는 북한 정치체제 연구에 있어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 John Higley and Michael G. Burton, "The Elite Variable in Democratic Transitions and Breakdow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Feb. 1989), p. 29.

2) Hannah Arendt, "The Totalitarian Leader", in Barbara Kellerman (ed.), *Political Leadership: A Source Book* (Pittsburgh: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6), pp. 212~213.

3)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97.

현재 북한학계는 현안인 북핵문제, 북한체제의 안정성 및 후계문제 등에 매몰되어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북한 엘리트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김용현, 박완신, 최성, 양성철, 김구섭, 현성일 등이 있다.⁴⁾ 그러나 이들 연구는 김정일 시대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김일성 시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북한 엘리트에 대한 기초자료로는 ‘인명록’이 대표적인데, 통일부, 조선일보사, 연합뉴스사, 동아일보사, 서울신문사 등에서 북한 인명록을 편찬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 엘리트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박형중 등의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김일성 시대의 엘리트와 김정일 시대의 엘리트를 비교 분석하고 이 바탕 위에서 김정일 시대 당·정·군 엘리트를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세대교체’의 틀에서 분석하지 않고 대체로 서술적이다. 그리고 당정분리에 의해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엘리트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노동당,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국방위원회와 인민군대, 주요 공장·기업소 등이다. 그리고 분석시기는 김일성이 생존해 있던 199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이다. 다만 2009년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의 엘리트는 이때까지를 포함한다.⁵⁾ 본 연구는 권력엘리트 세대교체 여부까지 분석하려

4) 김구섭,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김용현, “사라진 엘리트, 떠오르는 엘리트: 북한 엘리트 연구”, 『통일한국』, 통권 160 (1997); 박완신,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신북한행정론』 (서울: 지구문화사, 2002);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서울: 박영사, 1995); 최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체제』 (서울: 한국방송출판, 2002);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5) 주 참고자료는 통일부,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09』 (서울: 통일부, 2008); 통일부,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08』 (서울: 통일부, 2007); 통일부,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04』 (서울: 통일부, 2003); 통일부, 『북한기관·단체

고 하지만 북한 권력엘리트의 나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체 여부를 중심으로 접근하되 출생연도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세대교체 여부까지 살펴본다.

II. 북한의 세대관과 간부선발 원칙

1. 세대관과 세대구분

일반적으로 세대는 사회역사적 세대를 지칭한다. 즉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공유된 경험에 기초하여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가지며, 자신이 속한 코호트에 대하여 최소한 느슨한 수준에서라도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이다.⁶⁾ 이는 의식, 태도, 행위양식 면에서의 유사성과 안정성의 경향, 세대 구성원간의 동류의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세대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에서도 세대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은 ‘매 세대들이 그들이 살며 투쟁하여 온 역사와 생활경위, 생활체험에서 각기 자기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 세대를 주체사상의 관점

별 인명집 1999』(서울: 통일부, 1998); 통일부, 『2009 북한의 주요인물』(서울: 통일부, 2008); 통일부, 『2008 북한의 주요인물』(서울: 통일부, 2007); 통일부, 『2004 북한의 주요인물』(서울: 통일부, 2003); 통일부, 『1999 북한의 주요인물 자료집』(서울: 통일부, 1998); 라ヂオプレス 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組織別人名簿 1993』; 라ヂオプレス 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組織別人名簿 2004』 등이다.

6) 박재홍, 『한국의 세대문제』(과주: 나남, 2005), pp. 85-86.

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이전의 세대구분이 사회연령적 구분이었다며 이제는 세대를 “사회와 역사발전에서 차지하는 해당 역사적 시대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특히는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북한은 이전의 세대이론에 대해 “세대는 거의 동시에 출생하고 동일한 연령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사회연령적으로 이해하여 왔다. 또한 세대를 동시대인 즉 같은 역사적 시기에 사는 각이한 연령의 사람들의 집단으로 바라보았다. 대체로 출생의 동시성, 생활기간 등을 위주로 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3세대 1세기론’을 주장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우리 혁명의 1세대, 2세대는 조국을 광복하고 우리의 조국땅 위에 인민대중 중심의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위훈을 세운 세대이며, 혁명의 3세대, 4세대는 그것을 튼튼히 고수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으로부터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대”⁸⁾라는 해당 역사발전의 시기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세대를 정의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세대구분에서는 단순연령 효과(age effect)보다 동기효과(cohort effect)를 기본으로 하여 역사적 경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역사적 격변을 통해 세대가 구분되며 각 세대별로 의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동일한 생애주기(life stage)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출생 코호트를 기본 준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⁹⁾

7) 리광선, “세대에 대한 주체적 이해”, 『철학연구』, 3호 (2001), p. 32.

8) 위의 글, p. 32.

9) 만하임(K. Mannheim)은 세대를 출생 연도에만 기준을 둔 세대와 공통된 정치적·사회적 경험에 기초를 둔 세대로 구분하였다. 만하임은 출생 연도에 기준

하지만 북한의 세대구분은 모호한 점이 많다. 1세대, 2세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나 3세대, 4세대에 대해서는 이 두 세대를 이전 두 세대와 구별하지만 각각에 대한 엄밀한 규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3세대와 4세대를 이른바 ‘새 세대’로 함께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¹⁰⁾ 북한의 공식 문헌에 따르면, 혁명1세대는 항일혁명투사들을 가리키고 2세대는 한국전쟁 참가자들과 전후 천리마대고조 시기의 참여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 세대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식 사회주의가 수립된 이후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¹¹⁾

-
- 을 둔 세대를 언급하기 위해 ‘위치(location)’라는 용어를, 공통된 정치적·사회적 경험을 기초로 한 세대를 설명하기 위해 ‘실제성(actua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세대의 실제성은 공유의식과 특이한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리청(Li Cheng)은 이러한 만하임의 세대연구에 기반하여 중국의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기준으로 정치 엘리트를 5세대로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 세대의 공통된 경험이 각 세대의 집합적인 정체성과 결집력을 만들었다고 파악하였다. Karl Mannheim,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Paul Kec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2).
- 10) 중국의 권력승계로 인한 정책 변화 및 정치개혁의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수의 학자들이 세대 논의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 중 대표적으로 리청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정치 엘리트는 1999년을 기준으로 5세대로 나눌 수 있다. 제1세대는 대장정 세대로 마오쩌둥을 핵심으로, 저우언라이, 류샤오치, 린 바오 등이 대표적이다. 제2세대는 항일전쟁 세대로 덩샤오핑을 핵심으로, 후 야오방, 자오쯔양, 화궈펑, 차오스 등이 대표적이다. 제3세대는 사회주의 건설기 세대로 장쩌민을 핵심으로, 60대 및 70대 초반의 리펑, 주룽지, 리란칭, 리 루이환 등이 대표적이다. 제4세대는 문화대혁명 세대로 후진타오를 핵심으로, 40대 후반 및 50대로 원자바오, 쟁칭훙, 우방궈, 리창춘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제5세대는 경제 개혁 세대로, 40대 초반의 당 간부에 해당된다. 리청 지음, 강준영 외 옮김, 『차이나스 리더스』 (서울: 예담차이나, 2002).
- 11)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 12. 25),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119~120 ; 김정일,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 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음악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1990. 2. 25),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9.

여기서 새 세대는 사전적 의미로 ‘청소년, 청년 학생’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이다.¹²⁾ 따라서 새 세대는 청소년기와 소년기에 있는 모든 연령층인데, 조선소년단원(9~13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14~30세)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연령층에 따른 구분보다는 사회역사적 경험, 즉 시대의 변화와 과업에 따른 구분이 더 의미가 크다. 즉 ‘3세대 1세기론’을 부정한 북한의 세대구분에서 1세대와 2세대가 김일성과 함께 혁명과 건설을 한 세대라면, 새 세대인 3세대와 4세대는 김정일과 혁명과 건설을 함께 한 세대이다. 따라서 3세대와 4세대인 새 세대는 ‘선군혁명세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체험한 세대’로 불린다.¹³⁾

그런데 위 전성호의 글에서 1세대, 2세대와 구분되는 3세대의 규정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1970년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역사적인 시기에 자라난 세대들.” 이 단서에 따르면, 3세대가 ‘1970년대에 자라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 출생을 1950년 중반까지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은 북한의 전후 복구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이전 세대에 비해 물질적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1975년부터 시작된 11년 의무교육의 수혜자로서 정규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또한 김정일이 대학을 졸업하여 당사업을 개시한 시기이다.

그러면 3세대와 4세대는 어떻게 구분한가? 그것의 단서는 1993년 2월 28일 『로동신문』에서 고등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농촌과 탄광 부문으로 진출하기로 결심한 학생들에게 ‘혁명의 4세대’로 지칭한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4세대는 1970년대 중후반 출생자들이다. 정규교육체계가 완비되어 본격화된 교육수혜를 받았으며 성장기를 고난의 행군시기에 보냈다. 그리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다. 북한

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 1146.

13) 김현일, “선군시대의 새 세대”, 『청년문학』, 2호 (2004), pp. 31~32 ; 전성호, “혁명의 3세, 4세”, 『로동신문』, 2006년 2월 28일.

의 세대구분을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북한의 세대구분과 특징

세대	활동시기 및 출생년도	지도자	특징
1세대	항일무장투쟁 참가자	김일성	-정규교육 못 받음 -사상성 강함
2세대	한국전쟁, 전후복구 참여자	김일성	-정규교육 못 받음 -사상성 강함
3세대	50년대 중반~70년대 중반 출생자 (현재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김정일	-일제폭압과 전쟁 겪지 않음 -정규교육 받기 시작 -김정일 당사업 개시時 출생함 -성장기 물질적 혜택 받음
4세대	7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 (현재 30대 중반 이하)	김정일	-일제폭압과 전쟁 겪지 않음 -정규교육 수혜자 -김정일 후계자 확정 이후 출생함 -성장기 물질적 혜택 받음.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겪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세대구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대를 20년 간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인구재생산주기’를 어머니가 첫 아이를 낳을 때의 나이와 그 딸이 성장하여 첫 아이를 낳은 때까지의 나이 간격이라며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이라는 것이다.¹⁴⁾ 이를 근거로 세대를 나누었을 경우 사회연령적 구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만, 1세대 항일빨치산 세대(80~90대), 2세대 6.25참전세대(60~70대), 3세대 전후세대(40~50대), 4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20~30대) 등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다.

¹⁴⁾ 리련희, “인구재생산과 그에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 『경제연구』, 2호 (2003), p. 45.

2. 간부선발 원칙

북한에서 간부선발의 첫째 표징은 당에 대한 충실성이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⁵⁾ 이 원칙은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간부선발 배치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간부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 간부선발 배치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우리 당의 간부대렬을 김일성주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릴 수 있으며 간부대렬에 이색분자, 우연분자들이 끼여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¹⁶⁾

둘째, 실질적 수행능력이다. 간부선발 배치에서 이력서에서만 의존하는 현상을 없애고 당사자의 실제 사업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치실무적 자질이 높고 조직적 수완이 있는 사람들을 간부로 등용한다는 것이다.¹⁷⁾

셋째, 당의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치하여 간부대렬을 노·장·청 배합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후속세대(새 세대) 양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만큼 간부대렬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합법칙적 현상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계승성을 보장할 수 있게 간부대렬을 로, 중, 청을 배합하여 전망성 있게 꾸리며 그 질적 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합니다.”¹⁸⁾ 하지만, 북한은 간부 배치사

15) 김일성, “함경북도 당단체들의 과업”(1959.3.23), 『김일성 저작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02.

16) 김정일,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1978. 12.25),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211~212.

17)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1986.1.3),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18.

업에서 세대교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절충적이다. 사상적으로 노쇠하고 지휘능력을 상실한 일꾼들을 깨기 있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일꾼들로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¹⁹⁾ 간부 요해사업을 통해 계속 그 자리에 두어야 할 사람, 교체해야 할 사람, 재교육을 시켜야 할 사람 등으로 나누어 간부배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²⁰⁾ 아마 세대교체에 대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 간부등용 원칙에서 차별적인 부분도 있다. 김일성 시대에는 간부등용에 있어 출신계급이 중요시되었는데 노동계급, 고농·빈농 출신이 우대되었다. 당국가건설에서 이들이 기본 토대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인텔리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간부선발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출신간부를 많이 등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노동계급의 전위부대인 것만큼 마땅히 간부대렬을 노동계급출신으로 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합니다.…… 앞으로 간부대렬을 노동계급출신을 위주로 하여 꾸려야 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학생출신을 간부로 선발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간부선발사업에서 기본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²¹⁾

반면, 1980년대 이후 김정일 시대에는 새 세대들을 대담하게 등용하자는 입장으로 선화하였다. 간부 충원에 있어 전문성, 능력, 학력 등이 중

18)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1991.6.1),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15~316.

19)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8.2), 『김정일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220.

20) 김정일, “전당이 동원되어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1978.5.29),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88 ; 김정일, “도, 시, 군 당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77.4.9), 『김정일 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408.

21) 김일성, “1971년 사업방향에 대하여”(1970.12.28),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467~468.

요하게 된 것이다. 2006년 1월 김정일은 “이제는 사회생활 전반에서 사람들의 학력을 중시해야 한다.” “간부는 지식이 있어야 발언권이 서고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하지 않아 지식이 없는 간부는 발언권이 설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근 여러차례에 걸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면 경제부문 지도일군들 가운데서 사상적으로 로쇠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대담하게 대학을 나온 젊은 사람들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습니다.……당일군들 가운데서도 사상적으로 퇴쇠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대담하게 능력 있고 쾌기있는 젊은 사람들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당일군신분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로쇠하고 수준이 낮으면 정치적으로 예리하지 못하고 투쟁력도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당의 통일과 단결에 해를 주는 현상에 대하여서도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가려볼 줄 모르며 투쟁의 불도 걸지 못합니다. 사상적으로 로쇠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당일군대렬에 두고서는 혁명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으며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일 수 없습니다.”²²⁾

Ⅲ. 부문별 엘리트 교체 실태

1. 노동당 엘리트

1) 당 정치국

김일성 생존시인 1993년 당 정치국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정치국 정

²²⁾ 김정일,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당조직들의 과업”(1982.9.7), 『김정일 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32.

위원은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강성산, 리종옥, 김영남, 박성철, 서철, 최광,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계응태 등 13명이었고, 후보위원은 김철만, 강희원, 연형묵, 김태현, 최영립, 최태복, 홍성남, 김용순, 조세웅, 홍시학, 리선실 등 11명이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유헌통치를 끝내고 제1기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1999년 당 정치국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정치국 정위원은 김정일, 김영주, 김영남, 박성철, 전병호, 한성룡, 계응태 등 8명으로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가 새로 충원되고 리종옥과 오진우는 사망하였으며 서윤석, 최광, 서철, 강성산 등이 탈락하였다. 후보위원은 김철만, 양형섭, 연형묵, 최영립, 최태복, 홍성남, 홍석형, 리선실 등 8명으로 홍석형과 양형섭이 새로 등장하고 조세웅은 사망하였으며 홍시학, 김용순, 김태현, 강희원 등은 탈락하였다. 비교적 당 정치국의 변화가 심하였지만 탈락자가 11명, 진입자가 3명으로 충원보다는 탈락의 성격이 강했다.

제2기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인 2003년의 정치국 구성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리선실만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켰다. 2007년에도 계응태와 연형묵이 사망한 것만 변동사항이고 나머지는 2003년과 같다. 2007년 12월 현재 당정치국 정위원은 김정일, 김영주, 김영남, 박성철, 전병호, 한성룡 등이고 후보위원은 김철만, 양형섭, 최영립, 최태복, 홍성남, 홍석형 등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혁명1세대에 해당되는 80세 이상들이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 정치국 위원 구성에서 새로 충원은 드물고 사망으로 인한 변화만 있는 것은 그 만큼 당 정치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표 2〉 당 정치국 인물 변화

	2007년	2003년	1999년	1993년	비고
정위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1942년생(67세)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1920년생(89세)
				오진우	1995년死
				강성산	
				리종옥	1999년死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1928년생(81세)
	박성철	박성철	박성철	박성철	2008.10.28 사망
				서 철	
				최 광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1926년생(83세)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1923년생(86세)
				서운석	
	계응태	계응태	계응태	2006년死	
후보위원	김철만	김철만	김철만	김철만	1918년생(91세)
	양형섭	양형섭	양형섭		1925년생(84세)
				강희원	
		연형묵	연형묵	연형묵	2005년死
				김태현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1929년생(80세)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1930년생(79세)
	홍성남	홍성남	홍성남	홍성남	1929년생(80세)
				김용순	
				조세웅	1998년死
				홍시학	
	홍석형	홍석형	홍석형		1929년생(80세)
			리선실	리선실	2000년死

2) 당 비서국

2007년 12월 현재 당 비서국 비서는 김종린(근로단체), 한성룡(경제), 최태복(국제), 김기남(선전), 전병호(군수), 김국태(간부) 등 6명인데 최태복(79세)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80대 초중반이다. 이들 모두는 김일성 생존시인 1993년 이래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1기 김정일 정권 출범 후인 1999년의 경우 새로 충원된 사람은 없고 서관희, 황장엽, 윤기복, 박남기 등이 비서에서 제외됐다. 제2기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인 2003년의 구성에서는 계응태가 탈락하고 김용순은 사망했으며 대신 선전선동 담당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정하철(76세)이 등장했다. 그러나 2007년 숙청설이 제기되고 있다.

〈표 3〉 당 비서국 비서 변화

	2007년	2003년	1999년	1993년	비고
총비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비서				김정일	
	김종린	김종린	김종린	김종린	1924년생(85세)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1923년생(86세)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1930년생(79세)
	김기남	김기남	김기남	김기남	1926년생(83세)
				서관희	1997년 숙청설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1926년생(83세)
	김국태	김국태	김국태	김국태	1924년생(85세)
		정하철			1933년생(76세)
				윤기복	
				박남기	
				황장엽	1997년 망명
			계응태	계응태	2006년死
		김용순	김용순	2003년死	

3)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1980년도 정위원 145명, 후보위원 103명, 총 248명으로 출발하였는데, 이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면서 위원수가 증가하여 김일성 사망 전인 1993년에는 정위원 185명, 후보위원 143명, 총 328명이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사망이나 기타 사유로 탈락자만 발생하고 신규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1999년에는 정위원 106명, 후보위원 85명, 총 191명이었고 제2기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2003년에는 정위원 88명, 후보위원 73명, 총 161명이었으며 2007년 말에는 정위원 77명, 후보위원 70명, 총 147명으로 축소되었다.²³⁾

2007년 말 위원수는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의 60% 정도이고 위원수가 많았던 1993년 당시의 45% 정도이다. 그리고 정위원 77명 중 출생년도가 파악된 70명의 평균 나이는 79세이고, 후보위원 70명 중 출생년도가 파악된 29명의 평균 나이는 76세로 고령이다. 대체로 한국전쟁 및 전후복구세대인 혁명2세대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향후 7차 당대회가 개최되어 중앙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현재 위원을 그대로 유임하더라도 100~150명을 신규 임명해야 한다. 혁명2세대가 신규 충원이 되더라도 그 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대다수가 혁명3세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²³⁾ 현재 알려진 바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마지막 개최가 1993년 12월 제6기 21차 회의이다. 이때까지는 전원회의가 개최되면서 정위원, 후보위원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4〉 당 중앙위원회 위원 변동

	1980년	1993년	1999년	2003년	2007년
정위원	145	185	106 10入 89出	88 0入 18出	77 0入 11出
후보위원	103	143	85 17入 75出	73 0入 12出	70 0入 3出
계	248	328	191 17入 154出	161 0入 30出	147 0入 14出
비고			후보→정: 3 정→후보: 7 사망확인: 37 해임·미확인 : 127	사망확인: 30	사망확인: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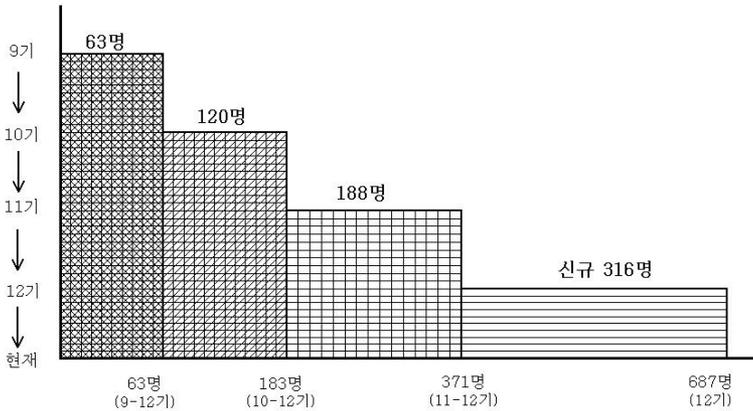
2. 국가기관 엘리트

1) 최고인민회의

북한은 1990년 9기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이후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8년만인 1998년 10기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 11기를 개최하였고 2009년 4월 12기를 개최하였다. 9기부터 12기까지에 선출된 대의원은 각각 687명이다. 구성원 변화에 있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큰 편이다. 10기 최고인민회의 구성이 8년 만에 이루어졌지만 9기와 비교하여 유임자가 268명(39%)이었고 신규 총원이 419명(61%)이었다. 2003년 11기 최고인민회의의 구성은 10기와 비교하여 유임자가 341명(49.6%), 신규 총원이 346명(50.4%)으로 절반이 바뀌었다. 최근 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유임자가 371명(54%), 신규 총원이 316명(46%)으로 나타났다. 계속 연임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9기부터 12기(1990년부터 2009년 4월 현재)까지 계속 유임된 대의원은 63명이고, 10기부터 12기(1998년부터 2009년 4월 현재)까지 계속 유임된 대의원은 183명이며, 최근 2회 연임한 대의원은 371명이다.

〈표 5〉 최고인민회의의 기별 유임·해임 여부

	9기(1990년)	10기(1998년)	11기(2003년)	12기(2009년)
유임		268명(39%)	341명(49.6%)	371명(54%)
해임		419명(61%)	346명(50.4%)	316명(46%)
총	687명	687명	687명	687명



〈그림 1〉 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계속 유임 및 신규 총원

이처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에서 신규 총원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로 교체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다른 기관의 구성원보다 정치적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대신 통일전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대의원 인물 변화가 심한데 그것은 주로 비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의 총복들로 꾸려졌으며 풍부한 지식과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일군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단련된 경험이 있는 일군들,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갈 젊은 일군들로 옹게 배합되어 꾸려졌다.”는 북한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²⁴⁾

한편, 9기부터 12기 사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직업별 분포에서 11기 이전과 12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11기까지는 노동자가 30% 초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협동농장원이 10% 정도이며 나머지가 50% 중후반대이다. 그러나 선군사상을 지배이데올로기로 격상시킨 12기에서는 노동자와 협동농장원 비율이 각 10% 정도이고 ‘군인’ 범주가 추가되었고 그 비중이 17%에 달했다. 성별은 11기까지는 남성 79.9%, 여성 20.1%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12기에는 남성 비율이 84.5%까지 상승하였다. 연령면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5세 이하 1~3%, 36~55세 50% 정도, 56세 이상 50% 정도를 정책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의원 구성에 있어 대졸이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는 68.2%, 1998년에는 85%, 2003년에는 91.9%, 2009년에는 94.2%였다. 이와 더불어 교수, 박사,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64.5% → 72.2% → 89.5% → 90.4%로 증가하였다. 이는 대의원의 학력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신 훈장 수여자 각종 영웅, 명예칭호를 받은 자는 63.8% → 52.3% → 48% → 42.4%로 그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구성의 변화는 위원 개인별 신상변동 측면보다는 최고인민회의가 통일전선적 조직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조직 수장의 교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은 입법기관이므로 법조계 그리고 각 당의 대표, 각 근로단체 대표, 교육·과학계 대표, 소수의 정치인 등으로 되어 있다. 2009년 4월 현재 상임위원 중 정치인으로는 김영남 위원장, 홍석형 함북도당 비서 등이고, 법조인으로는 최영림 서기장이며, 정당인은 김영대 부위원장(사회민

24) 『로동신문』, 2009년 4월 10일.

〈표 6〉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 비교

		9기(1990년)	10기(1998년)	11기(2003년)	12기(2009년)
직업	노동자	37%	31.3%	33.4%	10.9%
	협동농장원	10.4%	9.3%	9.3%	10.1%
	기타	52.6%	59.4%	57.3%	79%(<small>균인16.9%</small>)
정당	조선로동당	87.5%	87.5%		
	조선사회민주당	7.4%	7.6%		
	천도교청우당	3.2%	3.4%		
	기타	1.9%	1.5%		
성	남성	79.9%	79.9%	79.9%	84.4%
	여성	20.1%	20.1%	20.1%	15.6%
연령	35세 이하	2.9%	1.9%	2.2%	1%
	36~55세	56.8%	48.5%	50.1%	48.5%
	56세 이상	40.3%	49.6%	47.7%	50.5%
학력	대졸이상	68.2%	85%	91.9%	94.2%
	전문대 이하	31.8%	15%	6.1%	5.8%
기타	명예칭호	63.8%	52.3%	48%	42.4%
	전문가	64.5%	72.2%	89.5%	90.4%

주당), 강영섭(그리스도교), 류미영(천도교), 심상진(불교) 등이고, 근로단체 대표는 리용철(청년동맹), 김병팔(직업동맹), 로성실(여맹), 강창육(농근맹) 등이다. 변영립(과학원장), 태형철(사회과학원장) 등은 교육·과학계를 대표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 차이점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 과학·교육계 인사의 발탁이 증가하였고 대신 대남관계 인사인 양형섭을 제외하고는 모두 탈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2기에 통일전선부장인 김양건이 위원에 피선되었다. 어쨌든 각 조직 수장의 변화에 따라 상임위원회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표 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비교

	2009	2003	1999	1993	출생년도 (나이)	사망 년도	주요약력
위원장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1928년(81세)		
				양형섭	1925년(84세)		
부위원장	김영대	김영대	김영대		1937년(72세)		사회민주당 중앙위 위원장
	양형섭	양형섭	양형섭		1925년(84세)		조평통 부위원장
				려연구			
				백인준	1920년	1999년	
서기장	최영림				1929년(80세)		중앙검찰소장
		김윤혁	김윤혁		1926년	미상	前정무원 부총리 당 중앙위 위원
				리몽호	1930년(79세)		
명예부위 원장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1920년(89세)		
		박성철	박성철		1913년	2008년	
참사		고성순			1926년(83세)		외무성 책임책사
위원	강영섭	강영섭	강영섭		1931년(78세)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 위원장
	류미영	류미영	류미영		1921년(88세)		조선천도교회 중앙지 도위 위원장
	심상진 (08,07)				1944년(65세)		불교도연맹 위원장
		유영선			1941년(68세)		
			박태화		1919년	2005년	
	리용철 (07,12)				1928년(81세)		청년동맹 1비서
		김경호			1958년(51세)		
			리일환				
				최룡해	1948년(61세)		사로청 중앙위 위원장
	김병팔 (07,07)				1934년(65세)		직업총동맹 위원장
		럼순길	럼순길				
				한기창		1993년	
	로성실 (08,10)						여맹 중앙위 위원장
		박순희			1955년(54세)		
		천연옥		1945년(64세)			

			김성애	1924년(85세)		
강창욱 (04.12)						농근맹 중앙위 위원장
	승상섭	승상섭				
			박수동	1923년	1994년	
	리광호	리광호				前과학원장 당중앙위 과학교육부장
변영립	변영립			1929년(80세)		과학원장
태형철	태형철	태형철		1953년(56세)		사회과학원장
홍석형	홍석형 (01.07)			1929년(80세)		함북도당 책임비서
		리철봉		1936년(73세)		강원도당 책임비서
			정하철	1933년(76세)		당중앙위비서 (선전선동)
		리길송		1923년(86세)		중앙검찰소장
			정두환	1912년(97세)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의장
			정준기	1924년(85세)		조평통 부위원장
			정신혁	1920년	2003년	
			리계백			
			류호준			
김양건				1938년(61세)		당 통일전선부장

2) 내각

내각 총리단 구성에 있어 김정일 시대를 김일성 시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당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일성 시대의 총리단은 거의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이었던 반면, 김정일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는 정치적 고려와 상관없이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탁하고 있다. 김영일 총리, 로두철·오수용 부총리 등은 공개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소장파에 해당된다. 2007년 4월 총리에 선임된 김영일은 1944년생이고 2003년 9월 부총리에서 임명된 로두철 역시 1944년생이며 오수용도 마찬가지이다.

〈표 8〉 내각 인물 변화

	2009년	2003년	1999년	1993년	출생	사망	★	약력
총리	김영일				1944(65세)			육해운상
		박봉주			1939(70세)		☆	
			홍성남		1929(80세)		★	함남도당 책임비서
				강성산	1931(78세)		★	
부총리	곽범기	곽범기	곽범기		1939(70세)			
	로두철	로두철			1944(65세)			
		전승훈			1951(58세)			전 금속기계공업상
	태종수						☆	대안기계기업소 지배인
			조창덕		1938(71세)			조선과학기술총연맹
				김영남	1928(81세)		★	↑ 상임위원장
				최영립	1929(80세)		★	중앙검찰소장
				김달현	1941	2000년	★	2.8비날론연합기업소
				홍성남	1929(80세)		★	
				김환	1929(80세)		★	
				김복신	1925(84세)		★	
				김창주	1922	2003년	★	
				강희원	1920	1994년	★	
				김윤희	1926(83세)		★	
			장철	1926	2003년	★		
명예참사		김복신			1944(65세)			전자공업상
					1925(84세)		★	

* ★ 당중앙위 정위원, ☆ 당중앙위 후보위원

김일성 시대와 비교하여 김정일 시대에 들어 상(장관)급 교체가 빈번한 편이고 더욱이 최근인 2007년 이후 교체된 경우는 37개 부처 중 절반이 넘는 19개 부처이다. 2007년 이후 교체된 상은 외무상, 육해운상, 석탄공업상 등 3개, 2008년 이후 교체된 상은 전력공업상, 금속공업상, 철도상, 무역상, 임업상, 체육지도위원장 등 6개이며, 2009년 이후 교체된 상은 국가계획위원장, 전자공업상, 농업상, 수산상, 도시경영상, 상업상, 수매양정상, 재정상, 조선중앙은행총재, 수도건설상 등 10개이다.

〈표 9〉 상급 인물 변화

부서	취임연월
외무성	박의춘(07.05) ⇐ 백남순(98.09)
인민보안성	주상성(04.07) ⇐ 최용수(03.07) ⇐ 백학림(00.04)
국가계획위원회	로두철(09.04) ⇐ 김광린(03.09) ⇐ 박남기(98.09)
전력공업성	허택(08.12) ⇐ 박남철(06.12)
석탄공업성	김형식(07.01)
채취공업성	강민철(05.11) ⇐ 리광남(03.09) ⇐ 손중호(99.09)
전자공업성	한광복(09.04) ⇐ 오수용(99.12)
금속공업성	김태봉(08.12) ⇐ 김승현(05.06)
기계공업성	조병주(05.07)
건설건재공업성	동정호(05.03) ⇐ 조윤희(98.09)
철도성	전길수(08.10) ⇐ 김용삼(98.09)
육해운성	라동희(07.07) ⇐ 김영일(98.09)
농업성	김창식(09.01) ⇐ 리경식(03.07) ⇐ 김창식(01.02) ⇐ 리하섭(98.09)
화학공업성	리무영(03.09) ⇐ 박봉주(98.09)
경공업성	리주오(01.05) ⇐ 리연수(98.09)
무역성	리룡남(08.03) ⇐ 림경만(04.04) ⇐ 리광근(00.12) ⇐ 강정모(98.09)
임업성	김광영(08.10) ⇐ 석군수(04.06) ⇐ 리상무(98.09)
수산성	박태원(09.04) ⇐ 심기엽(05) ⇐ 리성용(98.09)
도시경영성	황학원(09.04) ⇐ 최종건(99.04)
국토환경보호성	박송남(06.03) ⇐ 장일선(99.04)
국가건설감독성	배달준(98.09)
상업성	김봉철(09.01) ⇐ 리용선(98.09)
수매양정성	문용조(09.01) ⇐ 최남균(01.12) ⇐ 백창룡(98.09)
교육성	김용진(03.09) ⇐ 변영립(99.05)
체신성	류영섭(05.07) ⇐ 리금범(98.09)
문화성	강릉수(06.06) ⇐ 김진성(05.12) ⇐ 최익규(03.09) ⇐ 강릉수(99.09)
재정성	김완수(09.01) ⇐ 문일봉(00.01) ⇐ 림경숙(98.09)
노동성	정영수(05.02) ⇐ 리원일(98.09)
보건성	최창식(06.10) ⇐ 김수학(98.09)
체육지도위원회	박학선(08.02) ⇐ 문제덕(04.03) ⇐ 박명철(99.11)
국가검열성	김익순(98.09)
원유공업성	김희영(미상)
국가과학원	변영립(03.06) ⇐ 리광호(97.06)
조선중앙은행	리광근(09.01) ⇐ 김완수(00.10)
내각사무국	김영호(05.03) ⇐ 정문산(99.09)
중앙통계국	김창수(96.03)
수도건설부	김응관(09.04)

3) 국방위원회

과거에는 국방위원회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1998년에는 김정일, 조명록, 리용무, 김일철, 전병호, 김영춘, 연형묵, 리을설, 백학림, 김철만 등으로 출발하였으나 2003년에는 리을설, 백학림, 김철만 등이 고령(?)으로 탈락하고 대신 제2경제위원장인 백세봉과 최룡수(인민보안상 역임)가 충원되었다. 그러나 2009년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구성 인원이 늘었고 그 범위도 넓어졌다. 2003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는 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3명으로 확대되었다. 올 초 오극렬 당 작전부장이 부위원장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신임 위원은 장성택, 주상성, 우동측, 주규창, 김정각 등 5명이고 최룡수는 탈락하였다.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인 주규창은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하여,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은 고령인 조명록을 보좌하기 위해서, 인민보안상 주상성은 탈락한 최룡수 대신 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점은 비군인 출신 당 행정부장 장성택과 국가안전보위부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수석부부장 우동측의 선출이다. 이번 국방위원회 구성의 특징은 사회통제 기구인 당 행정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군 총정치국 등의 책임자가 총망라되었고, 후계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장성택이 선출되었으며, 김정일(67세)과 더불어 혁명2세대로서 그보다 네 살 이상 적은 백세봉, 장성택, 김정각 등이 그리고 장성택, 오극렬, 김영춘 등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이 국방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표 10〉 국방위원회 인물 변화

	2009년	2003년	1999년	1993년	출생년도	사망년도
위원장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1942년(67세)	
제1 부위원장	조명록(차수)	조명록(차수)	조명록(차수)		1930년(79세)	
부위원장				오진우	1917년	1995년
부위원장	리용무(차수)	리용무(차수)	리용무(차수)		1923년(86세)	

	김영춘(차수)				1936년(73세)	
		연형목			1932년	2005년
			김일철(차수)		1933년(76세)	
	오극렬(대장)				1931년(78세)	
				최광	1918년	1997년
위원	김일철(차수)	김일철(차수)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1926년(83세)	
					최룡수(상장)	1936년(73세)
	백세봉	백세봉			1946년(63세)	
		김영춘(차수)	김영춘(차수)			
			연형목			
			리을설(원수)	리을설	1921년(88세)	
			백학림(차수)		1918년	2006년
			김철만	김철만	1918년(91세)	
				리하일	1935년(74세)	
				주도일	1922년	1994년
				김광진	1927년	1997년
				김봉률	1917년	1995년
		장성택			1946년(63세)	
		주상성			1933년(76세)	
	우동측					
	주규창			1933년(76세)		
	김정각(대장)			1946년(63세)		

3. 군부 엘리트

1) 인민무력부²⁵⁾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 부장은 1998년 9월 이래 현재까지 유임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부부장에는 김양점(상장), 려춘석(대장), 리태일(상장), 김두남(대장), 정창렬(대장), 박재경(대장), 김상익(상장), 손삼술(중장) 등이 있다. 려춘석과 정창렬은 1998년부터 부부장이었고 나머지

²⁵⁾ 2009년 2월 11일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되었고 인민무력부 총참모장에 리영호 평양방어사령관이 임명되었다. 이 부분은 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는 2003년 이후이다. 1998년부터 부부장에 올랐던 리영수(중장)는 2007년에는 보이지 않았다. 중장으로는 손삼술과 김정각이 들어있고 60대는 김양점과 김정각이다. 대변인은 장성익이 1998년부터 맡고 있는데 대좌에서 소장으로 승진하였다.

〈표 11〉 인민무력부 인물 변화

	2007년	2003년	1999년	1993년	출생년도	사망년도
부장	김일철(차수)	김일철(차수)	김일철(차수)		1933년(76세)	
				오진우	1917년	1995년
부부장	김양점(상장)	김양점(상장)			1944년(65세)	
	려춘석(대장)	려춘석(대장)	려춘석(중장)		1930년(79세)	
	리태일(상장)	리태일(상장)				
	김두남(대장)	김두남(대장)			1930년(79세)	
	정창렬(대장)	정창렬(대장)	정창렬(대장)	정창렬	1923년(86세)	
	박재경(대장)				1933년(76세)	
	김상익(상장)	김상익(상장)			1943년(66세)	
	손삼술(중장)					
		김정각(대장)	김정각(대장)		1946년(63세)	
		리영수(중장)	리영수(중장)			
			리병옥(대장)		1936년(73세)	
			오룡방(대장)		1925년	2000년
				김봉률	1917년	1995년
				김광진	1927년	1997년
			리병옥	1936년(73세)		
			전문섭	1919년	1998년	
			김영철	1945년(64세)		
대변인	장성익(소장)	장성익(소장)	장성익(대좌)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리을설 원수가 맡고 있다가 최근 참모장에서 승진한 윤정린 상장(11기 최고인민회의 최초 진출)이 대신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정치위원은 최성수 상장에서 김금선 상장으로 대체되었다.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 인민무력부 부부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정각(1946년생) 대장이 2007년 이후 맡고 있다. 현 부국장은 현철해 대장, 김기선 대

장(간부국 국장에서 이동), 심상대 상장, 리이준 중장 등이다. 2003년에 보였던 리이준 중장, 박재경 대장, 지영춘 상장, 오경훈 중장, 리병삼 상장 등은 보이지 않는다. 이 중 박재경 대장은 무력부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보위사령부 사령관은 원응희 대장이 맡고 있었는데 2004년 사망함에 따라 김원홍 상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군사재판국 리병일 국장과 군사검찰국 김병남 소장 그리고 후방총국 리덕규 부국장은 1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총참모부 총참모장은 2007년 4월 김영춘 차수가 국방위원회 전임으로 하자 그 자리에 김격식 대장이 들어왔다. 부총참모장은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1999년에는 박승원 상장, 안피득 상장, 리봉죽 중장이었다가 2003년 전에 최부일 중장, 한원화 중장, 전진수 상장 등이 추가되었고 2007년 전에 김형용 상장, 리태원 상장 등이 추가되었다. 전차교도지도국장은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전기련 상장에게서 원명균 상장으로 교체되었고, 해군사령관은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김윤심 대장에서 정명도 상장으로 교체되었다. 평양방어사령관 역시 이 시기에 박기서 차수에서 리영호 상장으로 바뀌었다.

〈표 12〉 인민무력부 예하 인물 변화

구분	직위	2007년	2003년	1999년	1993년	출생	사망
호위사령부	사령관	윤정린(상장)					
	참모장		리을설(원수)	리을설(원수)		1921(88세)	
	정치위원	김금선(상장)	윤정린(상장)	윤정린(상장)			
총정치국	국장	조명록(차수)	조명록(차수)	조명록(차수)		1930(79세)	
	제1부국장	김정각(대장)				1946(63세)	
	부국장	현철해(대장)	현철해(대장)	현철해(대장)		1934(75세)	
		김기선(대장)				1943(66세)	
		심상대(상장)					
		리이준(중장)	리이준(중장)	리이준(중장)		1934(75세)	
			박재경(대장)	박재경(대장)		1933(76세)	
	지영춘(상장)						

			오경훈(중장)	오경훈(중장)				
			리병삼(상장)					
간부국	국장		김기선(대장)	김기선(상장)		1943(66세)		
보위사령부	사령관		김원홍(상장)					
			원응희(대장)	원응희(대장)		1939	2004년	
군사재판국	국장		리병일(소장)	리병일(소장)				
군사검찰국	국장		김병남(소장)	김병남(소장)				
후방총국	부국장		리덕규(소장)	리덕규(소장)		1937(72세)		
			김격식(대장)			1940(69세)		
총참모부	총참모장		김영춘(차수)	김영춘(차수)		1936(63세)		
					최광	1918	1997년	
	부총참모장		박승원(상장)	박승원(상장)	박승원(상장)			
			안피득(상장)	안피득(상장)	안피득(상장)			
			김형용(상장)					
			리봉죽(상장)	리봉죽(중장)	리봉죽(중장)			
			최부일(상장)	최부일(중장)				
			한원화(중장)	한원화(중장)				
			전진수(상장)	전진수(상장)			1930(79세)	
			리태원(상장)				1948(61세)	
						황철산	1927	1987년
						김광진	1927	1997년
						김강환	1931(78세)	
						지기선		2007년
				리홍순				
				리종산	1922(87세)			
				전재선	1940(69세)			
				권중영	1936	2006년		
각군사령부	경보교도지도국장	리태철(상장)	리태철(상장)	리태철(상장)				
	전차교도지도국장	원명균(상장)	원명균(상장)			1934(75세)		
	포병사령관		정호균(상장)					
	해군사령관		정명도(상장)					2006년
			김윤심(대장)	김윤심(중장)				
	공군사령관		오금철(상장)	오금철(상장)	오금철(상장)			
						조명록	1930(79세)	
	평양방어사령관		리영호(상장)					
			박기서(차수)	박기서(상장)		1929(80세)		
평양방어부사령관		김남경(중장)	김남경(중장)	김남경(중장)				

2) 당 중앙군사위원회

2007년 중앙군사위 명단과 1999년 명단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리두익, 오룡방, 백학림이 사망하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용무가 위원을 그만두었다. 대신 2003년부터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유일한 60대 김두남이 새로 추가되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대장 이상이며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리용철만 군사칭호가 없다.

〈표 13〉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단

	2007년	2003년	1999년	1993년	출생-나이	사망
위원장	김정일(원수)				1942년(67세)	
				김일성	1912년	1994년
위원	리을설(원수)	리을설(원수)	리을설(원수)	리을설	1921년(88세)	
	조명록(차수)	조명록(차수)	조명록(차수)	조명록	1930년(79세)	
	김영춘(차수)	김영춘(차수)	김영춘(차수)		1936년(73세)	
	김익현(차수)	김익현(차수)	김익현(차수)		1916년(93세)	
	리하일(차수)	리하일(차수)	리하일(차수)		1935년(74세)	
	김일철(차수)	김일철(차수)	김일철(차수)	김일철	1933년(76세)	
	박기서(차수)	박기서(차수)	박기서(차수)		1929년(80세)	
	김명국(대장)	김명국(대장)	김명국(대장)		1940년(69세)	
	김두남(대장)	김두남(대장)			1930년(79세)	
	리용철	리용철	리용철		1928년(81세)	
		김정일(원수)	김정일(원수)	김정일		
		백학림(차수)	백학림(차수)	백학림	1918년	2006년
			리두익(차수)	리두익	1921년	2002년
			리용무(차수)		1923년(85세)	
			오룡방(대장)	오룡방	1925년	2000년
				오진우	1917년	1995년
				전문섭	1919년	1998년
				오극렬	1931년(77세)	
				김철만	1918년(90세)	
				김강환	1931년(77세)	
			태병렬	1916년	1997년	
			주도일	1922년	1994년	
			최상옥	1929년(79세)		
			리봉원	1925년	1997년	
			최광	1918년	1997년	

3) 군 장성급 변화

2007년 말 현재 원수는 김정일과 리을설 등 2명이다. 그리고 차수는 11명이다. 이 중 10명은 10년 전부터 차수였던 장성들이다. 김룡연(2008년 사망), 국방위 부위원장, 당중앙위원인 김영춘(1936년생), 당민방위부장, 당중앙위 위원인 김익현(1916년생), 국방위원, 당중앙군사위원인 김일철(1933년생), 국방위 부위원장, 당중앙위원인 리용무(1923년생), 인민군 군수동원총국장 출신의 리종산(1922년생), 당중앙위원, 당중앙위 군사부장 리하일(1935년생), 평양방어사령관, 당중앙위원 박기서(1929년생), 제1군단장, 당중앙위 후보위원 전재선(1940년생), 인민군 총정치국장, 국방위 제1부위원장 조명록(1930년생), 그리고 2002년 4월에 차수로 승진한 당중앙위원이며 장성택의 형인 장성우(1933년생), 이들은 군원로들인데 이 중 전재선이 가장 젊은 편이다.

2007년 말 현재 대장은 총 14명이다. 1999년경에도 대장이었던 장성은 9명이다. 당중앙위원, 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승진한 김격식(1940년생), 당중앙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두남(1930년생), 당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원인 김명국(1940년생), 당중앙위 후보위원, 8군단장 김성규(1946년생),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욱(1936년생),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재경(1933년생),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정창렬(1923년생), 당중앙위원, 인민보안상 주상성(1933년생),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총국장 현철해(1934년생), 이들 중 김명국, 김성규 등이 젊은 편이다. 그리고 승진자로는 2002년 4월 前해군사령관 김윤심, 당중앙위원,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1946년생),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려춘석(1930년생) 2003년 8월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김기선(1926년생), 2000년 10월 국방위 행정국장 리명수(1937년생) 등 5명이다. 이들 중 나이나 위상으로 볼 때 김정각과 리명수를 눈여겨봐야 한다.

2007년 12월 현재 상장은 총 72명이다. 1999년 이전에 상장에 있었던 장성은 50명이다. 1999년에서 2003년 사이 승진자는 18명이다.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승진자는 5명이다. 2007년 말 현재 중장은 총 231명이다. 1999년에도 중장이었던 장성은 176명이고,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승진한 장성은 27명, 2003년 이후에 승진한 장성은 29명이다.

소장은 1999년에는 884명, 2003년에는 987명, 2007년에는 1073명으로 늘었다. 1999년에서 2003년 사이 유임 863명, 신규 124명이었고,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유임 976명, 신규 97명이었다. 대체로 장성으로의 진급은 매년 20~30명으로 추정된다.

4. 공장·기업소 엘리트²⁶⁾

통일부 인명부에 적시되어 있는 기업소 당비서·지배인·기사장 등의 직책수는 총 370개다.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체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통계상 교체수치는 실제 교체수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 중 1999년부터 2007년 말 현재까지 같은 자리를 한 사람이 차지한 경우는 146개로서 39.5%이고 (빈칸을 포함해) 2003년 또는 2007년에 한번이라도 교체한 경우는 224개로서 60.5%이다. 따라서 유임보다는 교체가 더 많았다(실제로는 50%대).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비서 자리는 131개인데 계속 유임이 64자리로 48.9%, 지배인 자리는 133개인데 계속 유임이 45자리로 33.8%, 기사장 자리는 106개인데 계속 유임이 37개로 34.9%이다. 당비서의 유임률은 50% 정도 되고 지배인과 기사장의 유임률은 40%를 밑돈다. 즉 이 시기 당비서 직책은 상대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사장과 지배인

²⁶⁾ 통일부 인명부에 기업소 당비서·지배인·기사장의 경력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있지 않아 누구냐에 상관없이 교체비율을 검토한다.

직책은 교체가 60%대로 상대적으로 잦았다.

〈표 14〉 기업소 당비서·지배인·기사장 변동 현황

구분	직책수	1999~2007년 계속 유임	교체
당비서	131	64 (48.9%)	67 (51.1%)
지배인	133	45 (33.8%)	88 (66.2%)
기사장	106	37 (34.9%)	69 (65.1%)
총계	370	146 (39.5%)	224 (60.5%)

한편, 교체된 경우만 살펴보면, 당비서 67개 자리의 경우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교체된 것이 31개로 46.3%,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교체된 것이 36개로 53.7%, 2003년과 2007년 연속적으로 교체된 것이 11개로 16.4%이다. 지배인 88개 자리의 경우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교체된 것이 42개로 47.7%,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교체된 것이 46개로 52.3%, 2003년과 2007년 연속적으로 교체된 것이 22개로 25.0%이다. 기사장 69개 자리의 경우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교체된 것이 25개로 36.2%,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교체된 것이 44개로 63.8%, 2003년과 2007년 연속 교체된 것이 11개로 15.9%이다. 총 224개 자리는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교체된 98개로 43.8%,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교체된 것은 126개로 56.2%, 2003년과 2007년 연속 교체된 것은 44개로 19.6%이다. 이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발표되고 제2기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업소 임원의 변동이 심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배인의 경우 2003년과 2007년 연속 교체된 것이 25% 달한 것도 지배인 실적에 따른 교체가 많은 것이 아닌가 싶다.

〈표 15〉 기업소 당비서·지배인·기사장 교체 현황

구분	직책수	1999~2003년 1회 교체	2003~2007년 1회 교체	2003, 2007년 연속교체
당비서	67	31 (46.3%)	36 (53.7%)	11 (16.4%)
지배인	88	42 (47.7%)	46 (52.3%)	22 (25.0%)
기사장	69	25 (36.2%)	44 (63.8%)	11 (15.9%)
총계	224	98 (43.8%)	126 (56.2%)	44 (19.6%)

IV. 결론에 대신하여: 권력엘리트 교체의 정치사회적 효과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 권력엘리트의 세대교체는 2.5세대 또는 3세대로 일정정도 진행되었고 중앙차원의 변화보다는 지방차원(공장·기업소)의 변화가 많으며 정치·군사관료의 변화보다는 경제전문가의 변화가 많았다. 그런데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후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것과 연동해 향후 세대교체가 더 진행될 것이다. 김정일의 후견세력인 혁명1세대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상징적 차원(혁명선배 존대)에서 후계자의 후견세력으로 혁명2세대(한국전쟁·전후복구세대)가 배치되며 정책집행·실무그룹엔 ‘새 세대’(40대 이하)가 중심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혁명3, 4세대는 일제폭압과 전쟁을 겪지 않고 정규교육을 받았으며 김정일의 당사업 개시와 더불어 출생하거나 성장한 세대이다. 그리고 성장기에 물질적 혜택을 받았지만 또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도 받았다. 따라서 이들은 혁명1, 2세대에 비해 혁명과 건설의 역사가 부족한 반면, 젊음으로 인해 외부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정치사상적으로도 그리 견결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로의 교체는 변화 지향적이다. 이것을 북한에 적

용하면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에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4세대 기술관료가 등장하였지만 이들은 정치제도에 회의적이며 정치적 민주주의의 개방성과 평등에 대해 무관심하다. 오히려 그들은 민주주의를 경제기술적 성취의 장애물로 여기기까지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일정정도 진행된 세대교체를 두고 단편적으로 민주화와 개혁·개방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물론 새로 충원된 인물들이 이전에 비해 젊고 학력이 높으며 전문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점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개혁개방의 확대를 예견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자기가 서 있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른 정향을 보일 수 있다. 즉 엘리트와 일반 주민간의 인식의 격차가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 일반 주민들의 불평의 공격지점은 중간 간부들이다. 따라서 중간 간부가 인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정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동구 사회주의 체제 붕괴 교양에서도 북한 지도부는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한다.

결국 북한 사회에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방향이 중국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는 통제하되 경제적으로는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간이 장시간 지나면 통제와 혁신이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적 공간에서는 최대한 실리를 보장하되 정치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는 급변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지체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정치과정은 일방이 타방을 타도하면서 ‘지그재그’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반면, 북한의 정치과정은 중국과는 달리 일방과 타방을 결합시키고 절충시켜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와 인텔리를 절충시키고 농촌과 도시를 절충시키고자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인사 정책에 있어서도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새로운 인물을 충원시키는 이른바 노·장·청 통합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부부장제 역시 이러한 관점

에서 파악할 수 있다.

세대교체는 분명 사회적 변동의 요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대교체는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그리고 정치·군사부문보다는 행정·경제부문에서 활발하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체제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김정일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세대교체로 인한 체제변동을 예상하기란 어렵다. 오히려 북한의 세대교체 방향이 체제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경제적 요구를 제도권 안에 반영함으로써 그것의 정치성을 희석화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명2.5세대, 3세대로의 세대교체는 권력승계에 일단 긍정적이다. 새로운 후계자가 등장하면 그를 지지하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세대교체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권력승계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후계자는 새로운 세대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승계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복잡해지면 권력승계와 관련해 세대간, 그리고 세대 내에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권력재편기에 권력갈등과 사람교체가 가장 빈번하다. 권력경쟁에서 승리한 집단은 논공행상을 할 수밖에 없고 패배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세대교체가 새로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접수: 2009년 11월 2일 / 수정: 2009년 11월 16일 / 게재확정: 2009년 11월 19일

【참고문헌】

- 김구섭.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 김용현. “사라진 엘리트, 떠오르는 엘리트: 북한 엘리트 연구”. 『통일한국』, 통권 160 (1997).
- 박완신.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신북한행정론』. 서울: 지구문화사, 2002.
-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서울: 박영사, 1995.
- 최 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체제』. 서울: 한국방송출판, 2002.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 통일부.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09』. 서울: 통일부, 2008.
- .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08』. 서울: 통일부, 2007.
- .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04』. 서울: 통일부, 2003.
- .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1999』. 서울: 통일부, 1998.
- . 『2009 북한의 주요인물』. 서울: 통일부, 2008.
- . 『2008 북한의 주요인물』. 서울: 통일부, 2007.
- . 『2004 북한의 주요인물』. 서울: 통일부, 2003.
- . 『1999 북한의 주요인물 자료집』. 서울: 통일부, 1998.
- Arendt, Hannah. “The Totalitarian Leader”, in Barbara Kellerman (ed.), *Political Leadership: A Source Book*, Pittsburgh: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6.
- Higley, John and Michael G. Burton. “The Elite Variable in Democratic Transitions and Breakdow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Feb. 1989).
- ラヂオプレス 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組織別人名簿 1993』.
- ラヂオプレス 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組織別人名簿 2004』.

Abstract

The Change of Power Elites in the Kim Jong-II Era

Kim, Kap-sik(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 of North Korea power elites in the Kim Jong-II era who take up their positions at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Cabinet,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factory. The time span is from early in 1990s to 2007. The features of this change in the last 10 years are as follows. From 2,5 generation to the third one; local changes more than central changes; the changes in economic experts more than in political or military bureaucrats. Larger generational shift will be proceeded in relation of the supreme power succession. The first revolutionary generation who have propped up Kim Jong-II would step down, the second revolutionary generation (the Korean War, post-war restoration generation) who would act as guardian for a successor would fill in the vacancy in the name of 'respect for revolution seniors', and 'new generation' (under forties) would emerge as core elites in charge of policy implementing and practical affairs.

Keywords: North Korea, Power Elite, Generation Change

김갑식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남북관계와 북한변화: 남북관계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 『Suryong's Direct Rule and Political Regime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 Il』 등이 있다.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김재한(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국문요약

본 연구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이 남한 내 보혁계층을 각각 대표한다고 전제하고, 두 신문 사설이 북한, 정부 대북정책, 미국, 정부 대미정책 등을 지지 혹은 비판하는 성향을 집계하였다. 그러한 사설 분석을 통해 다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북한을 바라다보는 계층 간 차이는 매우 지속적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최근 늘었지만,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간의 호감도 차이는 20년 동안 거의 상수(常數)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이다. 반면에 미국을 보는 계층의 인식은 수렴(收斂)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두 개 신문의 차이는 북한에 대한 입장으로 차이가 나지, 미국에 대한 입장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미정책은 남남갈등 양극화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계층 간 양극화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견할 수 있고,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한 계층 간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견할 수 있다.

양극화는 구조균형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경쟁 계층이 반북 성향을 갖는다고 자신이 친북 성향을 갖는다든지, 혹은 경쟁 계층이 친미 성향을 갖는다고 자신이 반미 성향을 갖는다든지 하게 되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로 판단컨대 북한과 관련하여 진보계층이 우호적이면 보수계층은 무조건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미국과 관련하여 보수계층이 우호적이면 진보계층은 무조건 적대적이라는 흑백의 도식화는 사실이 아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대상에 대해 정치적 대립을 보였지만 그렇게

* 본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논문임.
20년 기간의 신문사설 코딩작업을 수행한 엄태일 조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유의한 수준의 대립은 발견할 수 없다. 이제까지 남남갈등의 연구는 서로 다름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본 연구의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남남갈등이 서로 다름에 기초하고는 있지만 서로 유사함도 크며, 특히 적의 적은 친구라는 구조균형적으로 늘 반응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주제어: 남남갈등, 양극화, 구조균형,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포용정책

I. 시작하는 말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한사회 내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분열은 이른바 남남갈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남남갈등은 이제 새로운 용어도 아니고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그 용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먼저 사용했느냐를 둘러싼 논쟁이 있을 정도로 갈등적 현상은 존속하고 있다.¹⁾

북한을 둘러싼 남남갈등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였는데,²⁾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김재한³⁾은 남한 사회의 보혁 계층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각각 대변한다고 전제하고 17년 기간 두 신문

1) 남남갈등이라는 용어가 분열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개념이라는 주장과, 이와 반대로 색깔논쟁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라는 주장도 있다. 남남갈등 용어의 출처가 북한 문건 혹은 보수 언론이라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언론재단 DB에 의하면, 남남갈등이라는 용어가 처음 신문에 등장한 것은 북한의 문헌도 아니고 보수 언론도 아닌 1997년 8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서이다.

2) 함인희, “남남갈등해소와 여성의 기여방안”, 『분단, 평화, 여성』, 통권 6호 (2002) ; 이한우, “남남갈등을 넘어”,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4) ; 이우영, “북한관과 남남갈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4).

3) 김재한, “남남갈등과 대북 강온정책”, 『국제정치연구』, 제9집 2호 (2006).

의 사실을 분석하였다. 북한 및 대북정책과 관련된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실 논조의 연도별 집계 분석은 대북 포용정책의 등장 이래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지지/반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입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자체에 관한 남남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계층이 명확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그러한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남남 간 갈등의 양상이 정권별로 과연 다른 것인지 또 상대 계층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반응도 달라지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이 아닌 월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일한 북한의 행태 혹은 동일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두 대표적 신문이 과연 상반되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상대 신문의 반응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한 사실 논조의 유사 혹은 대립 여부를 몇 개 사안들로 판단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재될 수밖에 없고 또 통계적 유의성을 얻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실의 월별 집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또 남남갈등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을 둘러싸고도 전개된다. 김재한⁴⁾은 남한에서 누가 북한과 미국에 대해 신뢰하고 누가 불신하는가를 분석하여 그러한 신뢰/불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드러낸 바 있는데, 노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 북한을 덜 신뢰하고 미국을 더 신뢰하였으며, 또 북한이나 미국을 신뢰/불신하는 경향이 지역별로도 달랐다. 그리고 일본과 대만을 불신하는 계층일수록 북한을 미국보다 더 선호하는

4) Chae-Han Kim, "Who in South Korea Trust North Korea and Who Trust the United State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4, no. 2 (2002).

경향을 보였으며, 북한을 이해하는 계층일수록 한겨레신문을 읽거나 시민단체 지도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글은 미국 및 대미정책이 남남갈등의 한 요소라고 전제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변화추이를 정리하고자 한다.⁵⁾ 또 그러한 변화추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드러내어 남남갈등이 정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닌지도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설계

1. 분석내용

이 글은 두 가지 개념에 기초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양극화(polarization) 개념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양극화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양극화 관련 논의는 여기서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나와 있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간단히 이 글에서는 다름 정도가 심한 것을 양극화로 부르고 그 다름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양극화 심화로 부르기로 한다. 양극화는 큰 차이를 말하고, 양극화 심화는 그 차이의 증대이다. 남남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남남 간의 다름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과연 남남갈등이 양극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구조균형(structural balance) 개념이다. 북한 및 미국과 관련된 여

⁵⁾ 남남갈등의 축에 미국을 포함시키면 중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한데, 대중국 인식이나 정부 대중정책에 관한 작업도 필요하다. 더구나 보혁을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뿐만 아니라 제3의 언론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작업은 추후 추진하고자 한다.

러 인식들은 경쟁상대의 인식과 반대로 진행된다는 믿음도 있다. 만일 남한 내부가 두 개의 경쟁 집단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것이라면, 특정 외부집단에 대한 그 두 집단의 우적(友敵)감은 서로 반대일 것으로 전제된다. 구조균형 이론에서 적의 친구는 적이고, 적의 적은 친구이어야 안정적인 관계라는 것이다.⁶⁾ 이러한 이론은 인간관계의 우적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심리학에서 발전되었고 사회집단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의 우적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정치학에서 응용되어 왔다. 남한과 북한 간의 우적 관계도 미국이라는 행위자를 함께 감안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듯이 특정 계층의 대북 인식은 경쟁상대 계층의 대북 인식과 깊은 연관을 갖는 것이다. 상대가 친북이면 나는 반북이고, 상대가 반북이면 나는 친북의 행태를 보여주는지는 검증해야 할 가설이다. 미국을 둘러싼 남한 내부의 계층 간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경쟁 상대가 특정 국가나 특정 정책을 지지하면 자신은 그 국가나 정책을 비판하게 되는 식의 국내정치적 남남갈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남남갈등 변화추세는 양극화 여부로, 남남갈등 구조는 구조균형여부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방법

대북정책 관련 신문보도를 분석한 기존 시도들이 있었지만,⁷⁾ 대북

⁶⁾ D. Cartwright and Frond Harary, "A Note on Freud's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0, (1960), pp. 287-290 ; Frond Harary,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n 1956",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 no. 2 (1961), pp. 167-178 ; Christopher Carney, "Structural Balance, Regime Type, and Interstate Affect: The Third World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vol. 17, no. 1 (Spring 2000), pp. 133-154 ; Chae-Han Kim, "Explaining Interstate Trust/Distrust in Triadic Relation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3, no. 4 (2007).

포용정책 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았고 또 다른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수집 작업이 불가피하다. 여기서는 대북정책 및 대미정책과 관련하여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의 기존 정리⁸⁾를 더 체계화하고자 한다.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바라볼 때 정권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언론매체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다. 두 신문은 북한 및 미국을 보는 대립적인 두 인식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정 신문은 국민 일반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편향된 인식을 보도할 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구독료를 생각하는 언론이 신문구독자의 인식과 상반된 내용을 계속 보도하기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두 신문만으로 일반여론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두 신문이 남남갈등의 대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매체임은 분명하다. 물론 더 큰 비용으로 연구목적에 맞는 더 엄밀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비용 대비 효과라는 측면에서 두 신문의 사설만을 분석한다.

한국언론재단 DB를 이용하여 제목에 북(북한) 혹은 미(미국)가 들어간 사설들을 수집하였다. 기간은 한국언론재단 DB가 가능한 1990년 1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이다.⁹⁾ 북한, 정부 대북정책, 미국, 정부 대미정책 등에 우호적인 사설이면 각각 +1, 비판적인 사설이면 각각 -1로 코딩한 후 월별로 집계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그 연구의 근거자료를 그 연구자들이 직접 주관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연구자의 선입관에 맞게 기

7) 박선원, “남남갈등과 언론” (경남대북한대학원 주최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11월) ; 박흥원, “언론과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경남대 주최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5월) ; 이우영, “북한관과 남남갈등”.

8) 김재한, “남남갈등과 대북 강온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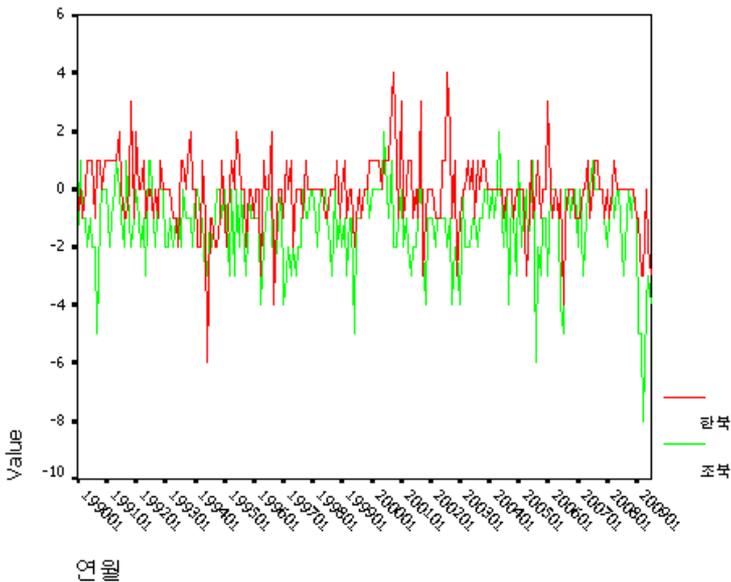
9) 조선일보 자료는 자료수집 개시 당시에는 한국언론재단DB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조선일보DB를 이용하였다.

초자료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필자는 코딩 작업을 관리 감독만 하고 직접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필자의 선입관이 코딩 내용과 무관하도록 노력하였다.

Ⅲ. 분석결과

1.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림 1〉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월별 지지/비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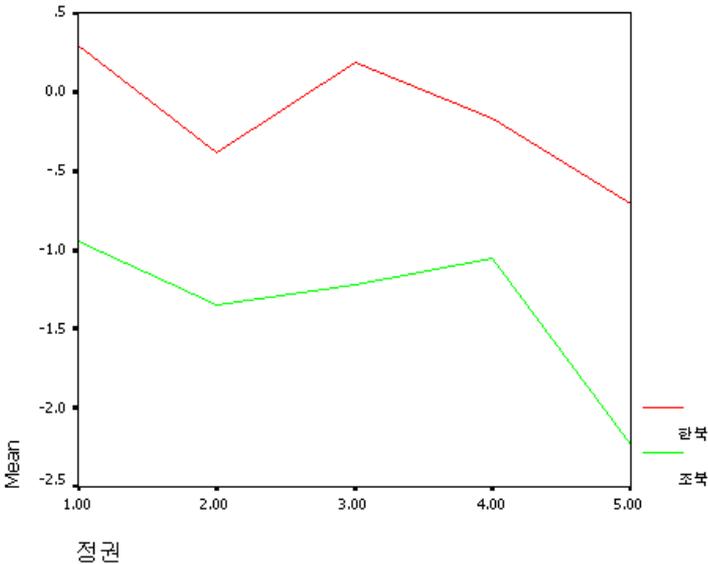
한북: 북한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북: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우호적 사실은 +1, 비판적 사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한 것임

〈그림 1〉에서 보듯이 조선일보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비해 한겨레신문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월별 집계치를 정권별로 평균을 낸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에서 한겨레신문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라면, 조선일보는 분명한 비판적 논조를 일관되게 보였다. 두 개 신문 간 논조 차이는 김영삼 정부 및 노무현 정부 때 와서 그 전후에 비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정부 때에 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북한을 보는 남남갈등의 양극화가 어느 순간에 심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림 2〉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정권별 지지/비판 추이



한북: 북한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북: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1: 노태우정부, 2: 김영삼정부, 3: 김대중정부, 4: 노무현정부, 5: 이명박정부
우호적 사실은 +1, 비판적 사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하여 정권별로 평균 낸 것임

북한에 대한 두 개 신문의 사실논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함께 가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에 대한 사실 논조의 월별 집계치는 +.293 (sig=.000, N=235)의 상관계수 값을 보였다. 경쟁 신문이 북한을 비판한다고 하여 북한을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경쟁 계층이 북한을 지지한다고 하여 북한을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즉 적의 적은 친구라는 구조균형적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겨레신문 사실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한 달에는 조선일보도 우호적으로 변했으며, 또 조선일보 사실이 북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변한 달에는 한겨레신문도 비판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의 행위에 대해 경쟁 언론과 반대로 무조건적인 반대나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면 극우반동이나 좌익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신문이 무조건 반대되는 사실 논조를 견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정권별로 분석해도 비슷한 결과이다. 김영삼 정부 때 북한에 대한 논조 변화의 방향은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r=+.267$, sig=.039, N=60). 북한의 특정 행동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지지/비판 방향은 유사했었다. 주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행태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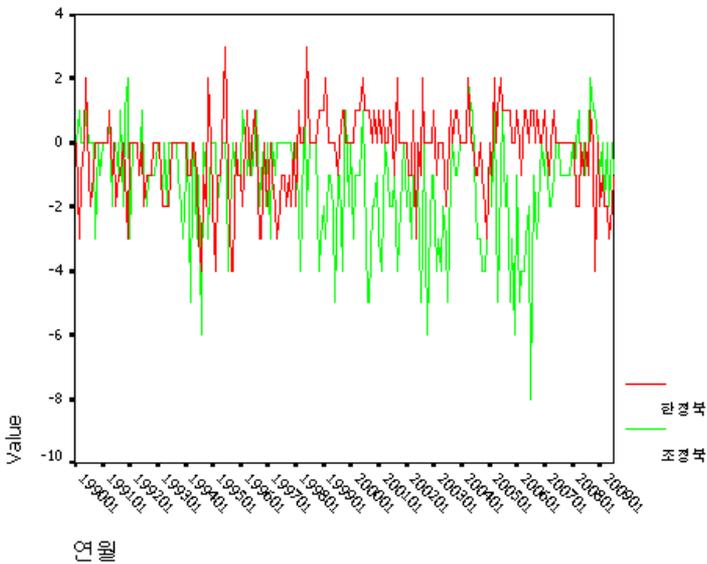
북한에 대한 논조의 두 신문 간 관계는 김대중 정부 기간에도 비슷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한겨레신문 입장 변수는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 입장 변수와 +.361의 상관관계를 가졌다(sig=.005, N=60).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선 북한의 행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북한 행태 변화에 대해 남남은 정도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게 반응하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은 조사에 포함된 사례(개월) 수가 17개에 불과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얻기 어렵지만, 그러한 작은 표본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유사성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대북 논조는 보였다($r=+.746$, sig=.001, N=17). 이 또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개성공단 근로자 억

류, 북한 핵프로그램 개발 등 북한 행태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차이

〈그림 3〉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월별 지지/비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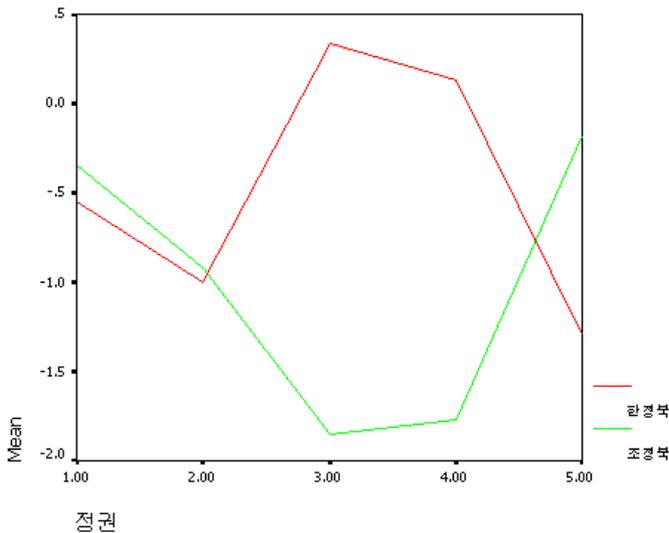


한정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정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우호적 사실은 +1, 비판적 사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한 것임

〈그림 3〉에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한겨레신문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조선일보는 비판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였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그러한 경향이 지속하였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조선일보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즉 두 개 신문은 구조균형적으로 대립적인 모습을 보인다. 상대 신문이 지지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상대 신문이 비판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김대중 정부 때에 가장 심했다. <그림 4>에서 정부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극화의 정도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극화 정도의 심화는 김대중 정부 때가 유일하였다.

<그림 4>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정권별 지지/비판 추이



한정북: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정북: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1: 노태우정부, 2: 김영삼정부, 3: 김대중정부, 4: 노무현정부, 5: 이명박정부

우호적 사실은 +1, 비판적 사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하여 정권별로 평균 낸 것임

조선일보의 사실 논조 변화와 한겨레신문의 사실 논조 변화가 서로 역인 경우는 많지 않다. 유일하게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관계는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이다. 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논조의 두 신문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99$),

sig=.131, N=235). 이러한 역의 관계는 양극화 심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남남갈등은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¹⁰⁾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남북갈등은 남남화해'이고 동시에 '남북화해는 곧 남남갈등'이라는 등식이다. 이러한 등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고 대신에 대북 포용정책이 남남갈등을 표면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인식의 양극화는 심화되지 않았으며 대신에 <그림 4>에서 보듯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비판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권별로 보면 더 명확해진다. 노태우 정부 때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두 개 신문 논조의 상관계수는 음(-)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r=-.105$, sig=.529, N=38).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두 개 신문의 논조 변화는 매우 약한 역의 방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때에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두 개 신문이 상대의 논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매우 약한 경향을 보였다($r=-.032$, sig=.807, N=60).¹¹⁾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상대 계층의 지지에 대응해 오히려 반대하거나 혹은 상대 계층의 비판에 대응해 오히려 지지하는 경향을 매우 약하게 보였다. 즉 김대중 정부 기간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해 함께 지지하거나 아니면 함께 비판하는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두 개 신문의 논조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노태우 정부 및 김대중 정부 시기에 보혁계층이 약간 국내정치적으로 대립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 및 김대중 정부는 모두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정치적 반대가 작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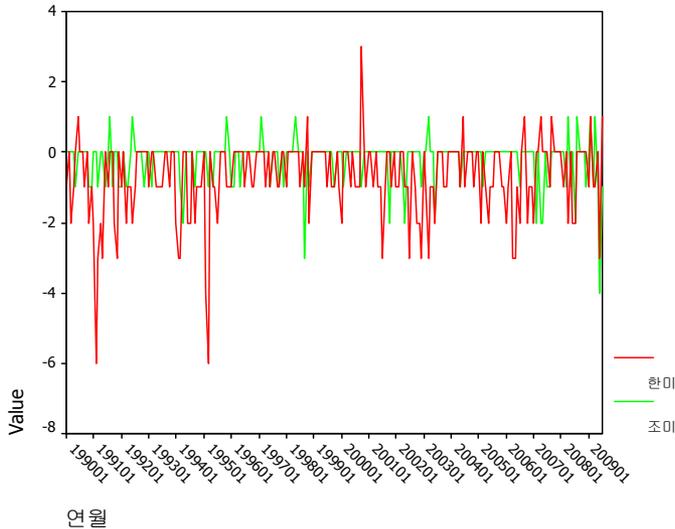
10) 최진욱 외,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통일연구원, 2003).

11)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개 신문이 서로 같거나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 사례 연구는 추후 작업할 예정이다.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남갈등이 새로 생겼다는 인과론적 설명보다는,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남남갈등이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듯하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모두 정권교체에 성공한 정부인데, 앞선 정권과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했고 따라서 대북정책에 따른 남남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기도 했다. 만일 남남갈등이 순전히 정치적인 것이라면, 정부 대북정책과 관계없이 상대에 대한 반대로만 전개되었겠지만, 남남 간 갈등이 심했던 시기는 모두 정부 대북정책의 큰 변화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따른 갈등의 표출로 볼 수 있다.

3. 미국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림 5> 미국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월별 지지/비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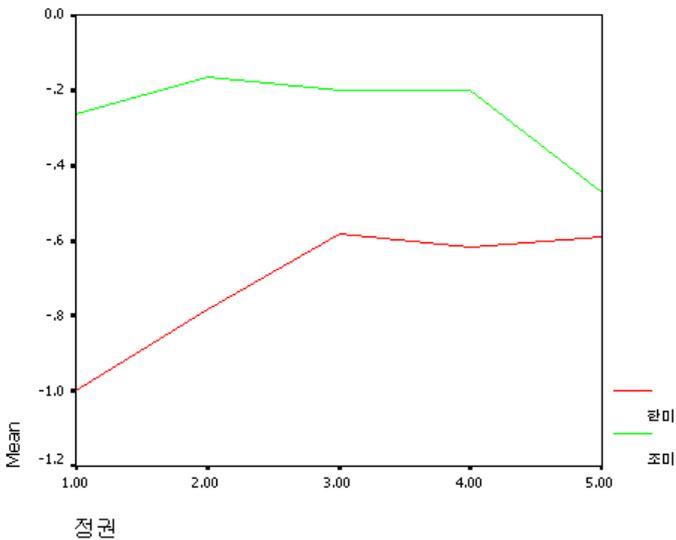
한미: 미국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미: 미국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우호적 사실은 +1, 비판적 사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한 것임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듯이 미국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보다 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두 개 신문 간 입장 차이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겨레신문이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등을 거치면서 대미 비판의 강도가 약화되었고 또 조선일보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 비판적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두 계층 간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그림 5〉와 〈그림 6〉으로 판단하자면, 미국을 둘러싼 남남 간 양극화는 약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6〉 미국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정권별 지지/비판 추이



한미: 미국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미: 미국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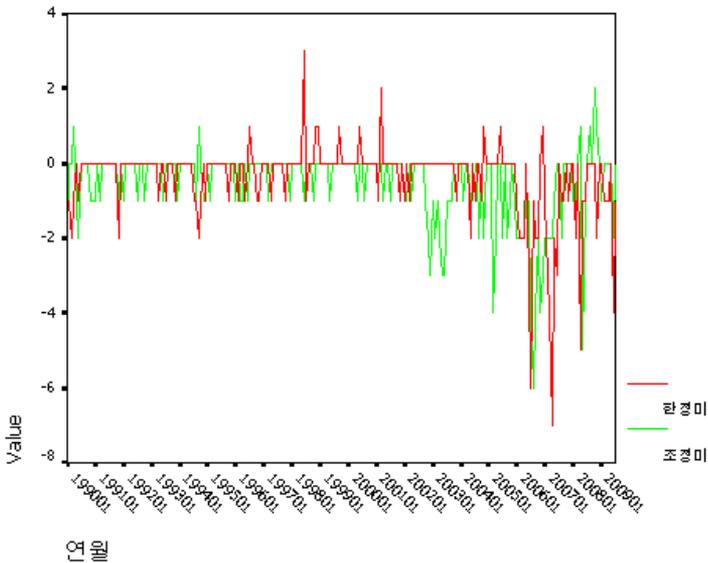
1: 노태우정부, 2: 김영삼정부, 3: 김대중정부, 4: 노무현정부, 5: 이명박정부
우호적 사실은 +1, 비판적 사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하여 정권별로 평균 낸 것임

미국에 대해 두 개 신문의 논조 변화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r=+.063$, $sig=.339$, $N=235$), 이는 양극화 심화를 억제하였다. 노태우 정

부 기간 미국에 대해 두 개 신문 논조의 상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r=-.074$, $sig=.658$, $N=38$), 미국에 대해 두 개 신문의 논조 변화는 매우 약한 역의 방향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미국 자체에 대해 상대 계층이 비판적으로 보도하면 오히려 우호적으로 보도하게 되는 경향을 매우 약하게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r=-.135$, $sig=.304$, $N=60$). 노태우 정부 및 노무현 정부 시기에 미국을 두고 두 계층이 대립적인 견해를 정치적으로 표출했을 때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지지 차이

〈그림 7〉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월별 지지/비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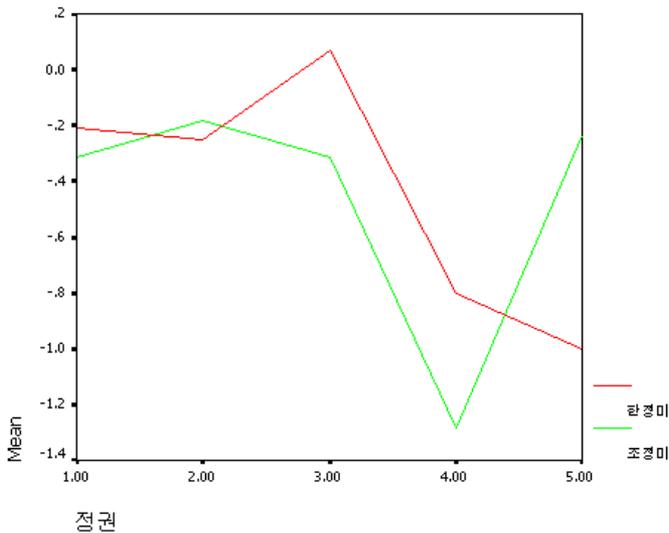
한정미: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정미: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우호적 사실은 +1, 비판적 사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한 것임

〈그림 7〉과 〈그림 8〉에서 정부 대미정책과 관련된 계층 간 양극화는 점차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김영삼 정부 때에는 대미정책과 관련한 양극화가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양극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대미정책 관련 양극화의 정도는 유사하지만 보혁 모두가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림 8〉에서 보듯이, 정부 대미정책과 관련된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심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미정책 관련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대미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계층과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계층이 서로 뒤바뀌었다.

〈그림 8〉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의 정권별 지지/비판 추이



한정미: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논조

조정미: 정부 대미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

1: 노태우정부, 2: 김영삼정부, 3: 김대중정부, 4: 노무현정부, 5: 이명박정부

우호적 사실은 +1, 비판적 사실은 -1로 하여 월별로 집계하여 정권별로 평균 낸 것임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한 논조는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40$, $sig=.000$, $N=235$).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해 한 계층이 더 비판적일 때 다른 계층도 마찬가지로 비판의 방향으로 더 가는, 즉 함께 움직이는 논조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조금 달라진다. 김영삼 정부 기간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상대의 논조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약한 경향을 보였다($r=-.212$, $sig=.103$, $N=60$). 김대중 정부에서도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해 두 개 신문이 상대의 논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매우 약한 경향을 보였다($r=-.033$, $sig=.803$, $N=60$). 김영삼 정부 및 김대중 정부의 시기에 정부의 대미정책을 둘러싸고 두 계층이 약간 정치적으로 대립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기간은 좀 더 특이한 경향을 보였다.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해서는 두 계층이 <그림 8>에서 보듯이 월평균 0.5건 정도의 차이를 보였지만 그 경쟁 상대 논조와 주로 같은 방향의 변화를 보였다($r=+.255$, $sig=.049$, $N=60$). 두 계층이 서로 다른 견해를 견지했지만 상대의 반응과 무조건 반대로 대응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IV. 나가는 말

북한을 보는 계층 간 차이는 매우 지속적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최근 늘었지만,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간의 호감도 차이는 20년 동안 거의 상수(常數)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이다. 반면에 미국을 보는 계층의 인식은 <그림 6>에서 보듯이 수렴(收斂)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두 개 신문의 차이는 북한에 대한 입장으로 차이가 나지, 미국에 대한 입장

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의견을 갖는 극단적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북한이나 미국과 같은 외부 존재에 대한 양극화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둘러싼 양극화 심화는 본래 민주주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다수에게 만족을 주는 쪽으로 선택되어야지 다수에게 불만족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림 4>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그림 8>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은 심화된 양극화의 예이다.

양극화는 구조균형적 남남갈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경쟁 계층이 반북 성향을 갖는다고 자신이 친북 성향을 갖는다든지, 혹은 경쟁 계층이 친미 성향을 갖는다고 자신이 반미 성향을 갖는다든지 하게 되면, 양극화는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남남갈등을 억제시켜야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로 판단컨대 북한과 관련하여 진보계층이 우호적이면 보수계층은 무조건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미국과 관련하여 보수계층이 우호적이면 진보계층은 무조건 적대적이라는 흑백의 도식화는 사실이 아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대상에 대해 정치적 대립을 보였지만 그렇게 유의한 수준의 대립은 발견할 수 없다.

이제까지 남남갈등의 연구는 서로 다름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본 연구의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남남갈등이 서로 다름에 기초하고는 있지만 서로 유사함도 크며, 특히 국내 경쟁상대와 무조건 반대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는 여러 후속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및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뿐만 아니라 제3의 언론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접수: 2009년 8월 3일 / 수정: 2009년 11월 16일 / 게재확장: 2009년 11월 18일

【참고문헌】

- 김재한. “국내정치와 안보”. 『안보학술논집』, 6권 2호 (1995), pp. 215~275.
- . “북한체제의 대내적 위기와 대외적 대응”.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 pp. 61~80.
- . “남남갈등과 대북 강온정책”. 『국제정치연구』, 제9집 2호 (2006).
- .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정책”. 『통일전략』, 제7권 제2호 (2007).
- 남궁영.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해석”. 『국제정치연구』, 제7권 2호 (2004), pp. 25~43.
- 박선원. “남남갈등과 언론”. 경남대북한대학원 주최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11월.
- 박종철 외.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2005.
- 박홍원. “언론과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경남대 주최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5월.
-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4.
- 이우영. “북한관과 남남갈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4.
- 이한우. “남남갈등을 넘어”.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pp. 93~110.
- 최진옥 외.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최진옥 외.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통일연구원, 2003.
- 함인희. “남남갈등해소와 여성의 기여방안”. 『분단, 평화, 여성』, 통권 6호 (2002).
- Carney, Christopher. “Structural Balance, Regime Type, and Interstate Affect: The Third World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vol. 17, no. 1 (Spring 2000), pp. 133~154.
- Cartwright, D. and Frond Harary. “A Note on Freud’s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0, (1960), pp. 287~290.
- Harary, Frond.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n 1956”.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 no. 2 (1961), pp. 167~178.
- Kim, Chae-Han, “Who in South Korea Trust North Korea and Who Trust the United State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4, no. 2 (2002).
- Kim, Chae-Han, “Explaining Interstate Trust/Distrust in Triadic Relation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3, no. 4 (2007).

Abstract

Conflicts in South Korea over North Korea and the US

Kim, Chae-han(Hallym University)

This study measured the attitudes of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toward North Korea,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ie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s US policies during 1990~2009. The following are found.

First, each attitude toward North Korea is very constant for the twenty years. The Chosun Ilbo has shown constantly negativ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while the Hankyoreh has done constantly positive ones. On the other hand, their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tends to decrease.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are not distinguished by the tone of press comments on the United States, but by the press comments on North Korea.

Second,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related to the South-South conflict. Polarization o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was found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ile polarization on policies toward the United States was shown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olarization is related to structural balance, which means that a group feels friendly toward an enemy of its foe while it feels negatively toward a friend of its foe. Each of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however, showed often the same attitudes that the other press did toward Nor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presses did not always comment positively on North Korea when the other press editorialized negatively on

North Korea. The same was found on the United States. Two rival groups in South Korea have some commo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some incompatible ones.

Keywords: South-South conflict, polarization, structural balance, Chosunilbo Ilbo, Hankyoreh, Sunshine policy

김재한

미국 로체스터 대학(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림대 정치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동북아공동체』, 『DMZ평화답사』, 『동서양의 신뢰』, 『Reciprocity in Asymmetry』, 『Explaining Interstate Trust/Distrust in Triadic Relations』 등이 있다.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이동기(서울대 서양사학과 강사)

국문요약

서독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지향은 애초 나치의 파괴적 과거사에 대한 비판적 대결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아데나워의 서방통합정책의 효과로 발생했다. 서독의 정치경제적 성과와 정치문화의 서구화에 대한 자의식이 탈민족적 정체성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연방공화국 자의식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식의 이데올로기화한 체제정당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서독 탈민족주의자들은 현실 세력으로 등장한 ‘재-민족화’ 조류들과의 대결을 통해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전통적 민족사의 단절과 반성을 토대로 삼게 되었다. 이를테면 1980년대 중반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론에서 보듯 보편주의적 규범과 가치는 민족 또는 국가 특수적 경험에 대한 성찰적 정치문화와 비판적 자기정체성을 매개로 확보되는 것이었다.

한편 1970/80년대 서독의 ‘이-민족화’ 테제 주창자들은 동독의 국가적 인정과 체제 존중을 누구보다 더 앞서 그리고 철저히 주장했다. 상대의 인정을 통한 자기존재의 인정의 과정을 통해 서독의 탈민족론은 서독의 고유한 정치적 정체성의 존재를 확인해나갔다. 동방정책을 통한 동서독 간 교류협력은 민족 간 유대를 만들어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질성을 확인하며 자기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양 체제 내에서 발현되는 양상은 균질적이지도 균형적이지도 않았다. 통일 전과 통일과정에서 서독 탈민족론자들이 겪은 비극의 핵심 원인은 민족정체성을 넘어선 그 동서독 개별 정체성 간의 비균질성과 불균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1989/90년 ‘전환’기에 그들은 동독의 민주혁명과 민족적 전망의 역동적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무관심했기에 의미 있는 대안적 정치 전망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주제어: 탈민족 담론, 이-민족화 테제, 헌법애국주의, 동방정책, 서방통합, 독일통일

I. 머리말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독일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다.”¹⁾ 독일통일 15주년이 되는 1886년에 나온 니체의 이 언급은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19세기 유럽의 국민국가 건설과 민족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자국의 “지체된 민족(Die verspätete Nation)”²⁾(Helmuth Plessner) 형성과 혼란스런 독일 정체성 및 문화를 목도하며 나온 회고적 성격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것은 오히려 20세기 후반 분단 독일에서 전개된 민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슬한 견해들의 등장을 예언하는 말이었다. 독일사의 ‘특수한 길(Sonderweg)’을 주장하는 논의야 점차 잦아들고 있지만³⁾ 민족 정체성의 존재 유무와 민족공동체의 향방을 둘러싸고 독일인들이 전개한 무수한 지적 사유와 정치적 상상은 그 자체로 매우 ‘특수’하다. 특히 20세기 후반 냉전과 분단 시기 독일은 유례없는 민족 담론의 백화제방(百花齊放)을 경험했다. 독일적 정체성을 자문하는 문화적 전통에 더해 나치즘의 파국 및 분단 현실은 독일인들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민족의 경로를 모색하는 여러 사유 실험들을 자극했다.⁴⁾

1) 프리드리히 니체, 김정현 옮김, 『니체 전집 14, 선악의 저편』 (서울: 책세상, 2002), p. 242(인용문은 저자의 수정 번역임).

2) Helmut Plessner, *Die verspätete Nation* (Stuttgart: Kohlhammer, 1959).

3) 독일사의 ‘특수한 길’과 관련해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논쟁의 결산에 대해서는 “Interview with David Blackbourn and Geoff Eley on 20th anniversary of *The Peculiarities of German History*: Forum”, *German History*, vol. 22 (2004), pp. 229~245를 참조하라.

4) 분단 시기 독일의 민족 문제 토론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Florian Roth, *Die Idee der Nation im politischen Diskurs, Die Bundesrepublik zwischen neuer Ostpolitik und Wiedervereinigung* (1969~1990) (Baden-Baden: Nomos,

그런데 분단시기 독일에서는 민족적 공속감과 기대지평을 공동의 사유공간으로 확장하는 논의 못지않게 독일민족의 ‘정상화’가 탈민족(postnational) 내지 초민족(supranational) 정체성과 정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한 흐름도 작지 않았다.⁵⁾ 물론 분단 독일에서 민족의 존재나 연속 그리고 민족정체성의 존속 등을 부정하면서 국민국가로의 재통일의 가능성과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탈민족’ 담론과 그 정치는 ‘초민족’ 지향의 다양한 정치적 구상 및 그 현실적 발전들과는 기본적으로 구분된다. 초민족적 발전과 그 미래구상은 국민국가 중심의 정치 틀의 초월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민족 논의와도 일부 접점을 갖는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국가의 권능을 더 상위의 국제적 기구나 조직에 이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에 그 자체로는 탈민족적 논의 흐름들과 직접 조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⁶⁾ 그렇기에 이 글은 민족 또는 국민국

1995) ; Bettina Westle, *Kollektive Identität im vereinten Deutschland, Nation und Demokratie der Deutschen* (Opladen: Leske + Budrich, 1999), pp. 40~86. 한편 서독 민족중립주의자들의 다양한 민족 담론에 대해서는 Alexander Gallus, *Die Neutralisten: Verfechter eines vereinten Deutschland zwischen Ost und West, 1945~1990* (Düsseldorf: Droste, 2001). 서독에서 민족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Jürgen C. Heß, “Die Bundesrepublik auf dem Weg zur Nation” *Neue Politische Literatur*, 3/Jg. 26 (1981), pp. 292~324.

- 5) 이에 대한 압축적 정리로는 Heinrich August Winkler, “Nationalismus, Nationalstaat und nationale Frage in Deutschland seit 1945”, in H. A. Winkler and Hartmut Kaelble eds., *Nationalismus - Nationalitäten - Supranationalität* (Stuttgart: Klett-Cotta, 1993), pp. 12~33을 참조하라. 한편 분단 시기 서독의 탈민족 담론 전반에 대해서는 Jens Hacker, *Deutsche Irrtümer, Schönfärber und Helfershelfer der SED-Diktatur im Westen* (Berlin: Ullstein, 1992)을 참조하라.
- 6) ‘초민족성(Supranationalität)’의 개념적 이해에 대해서는 Guido Thieme, “Supranationalität als Novum in der Geschichte der internationalen Politik der fünfziger Jahre”,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History*, vol. 4 (1998), pp. 5~21을 참조하라.

가의 경계를 넘어선 초민족적 국제적 질서의 구상과 그 발전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다만 분단 독일에서 하나의 독일민족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국민국가로의 재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부인하는 탈민족적 논의의 흐름들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그 독특한 성격을 해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주로 서독의 탈민족론에 집중하는데 그 이유는 지면상 제약 외에도 1970~1980년대 동독 지배자들의 '이(二)민족론'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동독사 연구에서 이데올로기 비판의 관점에서 술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분단 서독에서 전개된 탈민족 담론과 정치의 역사적 발전 양상과 특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독의 탈민족 지향의 흐름들을 규정할 몇 가지 배경 요인들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본은 바이마르가 아니다.”⁷⁾ 일차대전 직후와는 달리 이차대전 후 독일정치와 사회에서는 민족주의가 더 이상 정치적 동원이나 흡인력의 근거가 될 수 없었다. 홀로코스트로 인한 독일 민족주의의 정당성의 상실은 탈민족화(Denationalisierung)의 주요 기반이었다.⁸⁾ 둘째, ‘제4제국’의 출현에 대한 유럽 주변국들의 두려움과 우려 또한 전후 시기 내내 독일인들의 새로운 민족정체성 탐색을 강하게 압박했다.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 모리악(François Mauriac)의 언명, “우리는 독일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것이 돌인 것이 기쁘다”는 말

7) Fritz René Allemann, Bonn ist nicht Weimar (Köln: Kiepenheuer & Witsch, 1956)

8) 독일 민족주의 역사에 대한 가장 탁월한 분석가인 하인리히 아우구스트 빙클러는 전후 독일에서 민족주의가 쇠약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나치즘의 교환적 효과, 둘째, 경제성장과 대량소비시대의 등장으로 민족주의의 흡인력 상실, 셋째, 전후 서독에서는 민족주의가 더 이상 사회적 하강에 대한 두려움의 마취제가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두려움을 부르는 것이 오히려 공산주의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감정이었다는 사실이다. 민족주의에 기초한 독자 노선적 고립이 아니라 초민족적 서방통합이야말로 안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H. A. Winkler, “Nationalismus, Nationalstaat und nationale Frage in Deutschland”, p. 16.

이 대다수 비독일 유럽인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이라면 1989~1990년 독일 통일 국면에서 영국의 대처 수상이 독일 통일에 반대하며 수시로 꺼내들은 낡은 유럽지도는 그 정서를 적극적으로 국제 정치적 실천에 옮긴 전형적 예였다. 셋째, 장기적 전망으로서의 유럽통합 및 유럽공동체라는 초민족적 정치현실 또한 독일의 탈민족 담론을 규정했다. ‘독일분단이 곧 유럽분단’이라는 사실은 독일인들에게 독일문제에 대해 ‘독일적 해결’이 아니라 ‘유럽적 해결’의 전망을 열어주는 것이었다.⁹⁾ ‘독일적 독일’이 아니라 ‘유럽적 독일’의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분단 독일에서 전통적 민족주의의 제한과 통제 및 민족적인 것에 대한 견제와 의심이 불가피했다. 그 외에도 서방통합과 동방정책의 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이미 탈민족론의 배경적 요소라기보다는 그 형성 과정의 핵심 계기이기에 따로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겠다.

II. 서독 탈민족론들의 발전 양상과 특징

1. 탈민족론의 등장: 서방통합의 논리적 귀결

서독 탈민족론의 등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애초 그것이 전쟁과 학살이라는 민족사적 과거에 대한 반성의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949년 분단 이후 1970년대 중후반까지는 서독 여론 사회에서 누구도 분명하게 홀로코스트의 경험으로부터 탈민족 지향을 도출해내지 않았다. 독일분단은 냉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나치즘의 파국적 발전의 연

⁹⁾ 물론 독일분단과 유럽분단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극복들의 상호작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Timothy Garton Ash, *In Europe's Name, Germany and the Divided Continent* (New York: Vintage, 1993), pp. 1~27을 참조하라.

장으로 이해되었다. 그런 한 독일민족의 재통일은 오히려 나치 과거를 민족사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의 일부로 당연하게 전제할 수 있었다. 분단 초기 국면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민족 간 화해와 통일,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주장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나치즘의 핍박을 직접 받고 전후 그것의 극복을 주창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전후 누구보다도 민족적이었던 서독 사민당 당수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를 비롯해 민족중립주의를 주창한 다양한 조류의 민족적 정치가들은 다시는 독일 땅에서 전쟁과 학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했다.¹⁰⁾ 물론 1950년대 민족 지향의 정치와 사상적 조류에 극단적 민족주의나 극우 정치세력이 함께 결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요체는 적어도 1950~1960년대까지는 나치즘의 파국에 대해 역사 비판적 태도를 취하더라도 그것이 곧장 민족적 전망에 대한 회의적 입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서독 정치무대를 뜨겁게 달군 학생운동과 재야운동(APO-Bewegung)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흔히 이해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기 내내 '신좌파(Neue Linke)'로서 자기정체성을 찾아 나갈 때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¹¹⁾

이에 반해 탈민족 담론의 초기 양상을 규정지은 것은 서독 초대 수상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의 서방통합정책이었다. 동서냉전 블록 형성에 조용하며 추진된 아데나워 정부(1949~1963)의 서방통합정책과 강자우위 정책(Politik der Stärke)은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독일통일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였고 실제로는 민족 통합적 정체성만 약화시켰다.

¹⁰⁾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A. Gallus, *Die Neutralisten*, pp. 57~295.

¹¹⁾ 서독 68운동과 68세대에서 나타난 민족문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동기, “서독 68운동과 독일정책: 민족좌파로서의 신좌파?”, 『독일연구, 역사, 사회, 문화』, vol. 17 (2009. 6), pp. 65~107.

서방통합정책은 사실 그 자체로 독일 근대외교사의 ‘혁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민족적 전통(‘특수한 길’)과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그것은 극단적 민족주의의 극복 뿐 아니라 정치문화 및 일상문화에서 탈민족화를 초래했다. 이 혁명과 단절은 경제성장에 기초한 서독 사회의 물질적 복리와 결합하여 서독 사회에 새로운 지향의 근거를 마련했다.¹²⁾

서독 사회의 이 새로운 발전에 조용해 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Jaspers)는 1960년 라디오 방송 인터뷰 및 자유주의적 주간지 『디자인트(Die Zeit)』를 통해 “독일 통일 요구가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견해를 처음으로 밝혔다.¹³⁾ 자유에 대한 민중의 기본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한 국민국가적 차원에 대한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야스퍼스는 보았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자유 달성과 주권 확보를 예로 들어 “앞으로 통일 없이도 자유가 확보될 수 있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은 다 이룬 셈이다”고 강조하며 동독과의 통일보다는 동독에서의 자유 확대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즉 통일을 유예 내지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동독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었다. 그런데 야스퍼스는 사실 아데나워가 추구한 독일정책의 기본 원리, 즉 ‘통일이전에 자유’ 내지 ‘자유를 통한 통일’의 기본 관점과 구상을 더 밀어붙여 “자유는 절대적인 요구이고 통일은 상대적인 것이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보기에 통일과 자유는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서로 분리 가능한 목표였다.¹⁴⁾ 야스퍼스는 국민국가로서의 독일이라는 정치적 가정과 단호히 결별하고 연방공화국(서독)을 궁극적인 정치적 사회

¹²⁾ H. A. Winkler, “Nationalismus, Nationalstaat und nationale Frage in Deutschland”, p. 16.

¹³⁾ Karl Jaspers,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Über Aufgaben deutscher Politik* (München: Piper, 1960), p. 110.

¹⁴⁾ Jens Hacker, *Deutsche Irrtümer*, pp. 282~283을 참조하라.

화 형식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동서독 간 하나의 국민 국가로의 재통일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에 기반해 동독 주민의 자유 확대 내지 삶의 개선을 정치적 의제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곧 서독의 체제 내 모든 정당들과 여론사회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았다. 아직은 다만 골로 만(Golo Mann)같은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유사한 주장을 전개했을 뿐이다.¹⁵⁾

2. 1970년대 서독 정체성의 확인과 '이-민족화' 테제

서방통합과는 달리 1969년 이후 빌리 브란트 주도의 사민당/자민당 연정의 동방정책은 더 직접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자기인정 및 분리된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했다. 주지하듯이 동방정책은 무엇보다 1945년의 전후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추진되었다. 그런 한 동독을 국가로서 사실상 인정하는 것은 그 출발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여론사회에서 동방정책 구상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지하며 동방정치가들을 동반했던 상당수 자유주의적 좌파 지식인들은 동방정책의 발전 속에서 동독의 인정을 통한 연방공화국의 자기인정이라는 결론에 함께 도달했다. 이를테면 1972년 비판적 자유주의 계열의 주간지 『디 자이트(Die Zeit)』의 편집자 테오 쉰머(Theo Sommer)는 동방조약들의 승인 결과가 지닌 함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전후 유럽에 생겨난 현실들의 인정은 동시에 연방공화국의 자기인정을 의미한다. 연방공화국은 마침내 자신의 존재와 있는 그대로 화해하고 이제부터 자신의 국가이성(Staatsräson)에 대해 솔직해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¹⁶⁾

¹⁵⁾ Golo Mann, *Deutsche Geschichte des 19. und 20. Jahrhunderts* (Frankfurt am Main: Fischer Verlag, 1966), p. 1048.

¹⁶⁾ F. Roth, *Die Idee der Nation im politischen Diskurs*, p. 112에서 재인용.

이와 함께 분단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여전히 하나의 민족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들이 강화되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많은 자유주의적 또는 시민주의적 경향의 지식인들은 ‘독일 민족’의 지속적 존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를테면 1969년 이래 서독 사민당 계열의 대표적 지식인인 쿠르트 존타이머(Kurt Sontheimer)는 야스퍼스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연계하여 분단 독일에서 하나의 민족정체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¹⁷⁾ 비록 앞선 시기의 민족 통일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야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지만 “하나의 민족을 일상적으로 갱신하는 국가 내에서의 공동생활이라는 추진력이 부재하다”는 것이 그의 논거였다. 정치학자 존타이머는 분단이라는 조건하에서 독일인들은 두 개의 국가주민(Staatsvolk)으로 갈려 각기 서로 다른 정치 질서와 사회 체제에 속하게 된 현실을 부각시키면서 동서독 간에는 정치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했다. 공동의 역사나 언어, 문화전통 등에 의거한 정체성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한편 1970년대 초 서독인들이 하나의 단일한 독일 민족 정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된 서독 정체성’을 강하게 내재화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이는 무엇보다 루츠 니트함머(Lutz Niethammer)와 게르하르트 슈바이글러(Gerhard Schweigler)였다.¹⁸⁾ 먼저 서독 사회사 전통의 좌파 역

17) 이하 내용은 Kurt Sontheimer, “Nation und Nationalismus in der Bundesrepublik” (1969), in Hans Steffen ed., *Gesellschaft in der Bundesrepublik*, 2. Tei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1), pp. 130~152 ; *Deutschland zwischen Demokratie und Antidemokratie. Studien zum politischen Bewußtsein der Deutschen* (München: Nymphenburger Verlagshandlung, 1971)을 참조하라.

18) Lutz Niethammer, “Traditionen und Perspektiven der Nationalstaatlichkeit für die BRD(1971)”, in *Deutschland danach. Postfaschistische Gesellschaft und nationales*

사가 니트함머는 실증적 연구에 기초해 서독인들이 “서독 국가와 준(準) – 민족적 동일화”를 경험하고 있음에 의거해¹⁹⁾ 서독 사회를 일종의 국가 민족(Staatsnation)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서독(연방공화국)을 “숨겨진 민족(Krypto-Nation)” 내지 “준(準) – 민족으로 다져진 국가사회”라고 규정했다. 슈바이글러는 한발 더 나아가 서독 뿐 아니라 동독에서도 사실상 새로운 독자적 민족의식이 생겨나고 있음을 다양한 주제별 경험적 설문 조사를 통해 제출했다.²⁰⁾ 이어 자유주의 좌파 계열의 학자들 또는 급진적 – 대안적 정치입장을 지닌 지식인들은 1970년대 내내 독일에서의 ‘이(二) – 민족화(Bi-Nationalisierung)’ 경향을 확인하고 선전하는데 열심이 었다. 한스 몸젠(Hans Mommsen)과 볼프강 몸젠(Wolfgang Mommsen) 형제, 발데마르 베손(Waldemar Besson), 마리오 라이너 램시우스(Mario Rainer Lepsius), 정치학자 에버하르트 슐츠(Eberhard Schluz), 에른스트 – 오토 첼필(Ernst-Otto Czempiel) 등이 대표적 인물들이었다.²¹⁾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식인들의 탈민족적 관찰과 주장들이 동서독

Gedächtnis (Bonn: Dietz, 1999), pp. 74-169 ; Gerhard Schweigler, *Nationalbewusstsein in der BRD und DDR*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3).

- 19) 이를테면 1971년의 조사에 따르면 서독 정치가들이 “우리 민족의 이익”이라고 말할 때 서독 주민들의 41%는 단지 서독을 떠올릴 뿐이고 38%가 동독과 서독 모두와 연관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Lutz Niethammer, “Traditionen und Perspektiven der Nationalstaatlichkeit für die BRD(1971)”, p. 164. 서독의 독자적 국민 정체성의 발전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와 경험적 보고는 Gerhard Schweigler, *Nationalbewusstsein in der BRD und DDR*, pp. 106-188도 참조하라.
- 20) 슈바이글러의 분석에 따르면 1969년 동독 주민의 43%는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을 지지하고 단지 25%만이 반대한다고 했다. 또 1960년대 중반 동독 주민들의 동독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증대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Gerhard Schweigler, *Nationalbewusstsein in der BRD und DDR*, pp. 95-105를 참조하라. 그러나 1961년 이후의 동독 주민들의 여론 조사는 간접적인 것이어서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 21) 그들의 다양한 탈민족적 관찰과 주장에 대해서는 F. Roth, *Die Idee der Nation im politischen Diskurs*, pp. 111-145 ; Jens Hacker, *Deutsche Irrtümer*를 참조하라.

간의 접촉과 교류가 본격화된 때 나왔다는 것이다. 동독에서 서독과 유사한 일국적 정체성 내지 동독-국민 형성이 실제 얼마나 진행 중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독의 장래에 대해 그들은 유사한 정치적 결론을 내렸다. 이를테면 존타이머는 “통일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포기하고 동독 사람들의 상황 개선에만 매달릴” 것과 서독인들의 구체적인 정치적 책임은 단지 서독에만 해당되며 서독인들이 서독에서 그것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아마 동독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저 너머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²²⁾ 존타이머는 동독의 전체주의적 지배성격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동독이 미래에도 여전히 사회주의국가로 유지할 것이며 동독주민들의 다수가 그 체제에 순응해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의식을 발전해갈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같은 탈민족적 관찰과 진단은 동서독 간 대화와 협력정치的基本구상과 일치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전혀 조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1970년대 동독 국가 지도부는 ‘현실적 서방정책’을 내세우며 동서독간 국가통일을 완전히 포기했을 뿐 만 아니라 ‘이(二)-민족’ 테제를 공식적 입장으로 선전했다. 한편 1970년대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슈미트 사민당 총리들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독일 민족의 지속적 존재를 부정한 적도 없고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서독 정부의 ‘실용적 동방정책’은 통일논의를 전면 유보할 것을 전제했다. 결국 동서독 간 교류가 과연 민족지향의 동방정치가들이 기대했던 대로 민족 간 결속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동방정책의 지식인 지지자들이 진단한대로 동독과 서독의 ‘이(二)-민족화’ 경향을 새로운 독일정치의 조건으로 전제하고 수용

²²⁾ K. Sontheimer, “Reden über Deutschland” *Reden über das eigene Land ; Deutschland* 6. (München, 1989), p. 45 ; “Volk und Nation im Nachkriegsdeutschland” *Die Mitarbeit, Zeitschrift zur Gesellschafts- und Kulturpolitik*, Jg. 18 (1969), p. 104.

해야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이 '이-민족화'의 대변자들은 그 문제에 더 천착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을 만났다. 그것은 1970년 후반부터 서독 정치와 여론사회 일각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재-민족화' 경향이었다.

3. 1979~1983년 탈민족론의 강화: '재-민족화' 경향과의 대결

1978~1979년부터 1980년 초반까지 서독 정치와 여론 사회는 두 가지 주요한 계기를 통해 민족 문제에 대한 새롭고 격렬한 토론을 경험했다. 나토(NATO) 재무장 토론과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비롯된 '제2차 냉전'의 개시와 연방공화국 건국 30주년을 맞이한 서독의 자기정체성 질문이 그것이다. 이 시기 많은 수의 서독 지식인과 정치가들은 신문과 학술 잡지 그리고 저작을 통해서 민족정체성 존재 유무, 동서독 간 관계와 독일 통일 전망, 유럽에서의 평화 구축 문제의 연관관계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논쟁적으로 제출했다.

먼저 전통적인 권력정치 지향의 민족주의자들²³⁾에 더해 새롭게 등장한 민족혁명적 신우파(Neue Rechte) 그룹들²⁴⁾ 및 학생운동과 평화운동에

23) 가장 대표적인 것은 Hans-Dietrich Sander, *Der nationale Imperative, Ideengänge und Werkstücke zur Wiederherstellung Deutschlands* (Krefeld: Sinus Verlag, 1980) ; Caspar von Schrenck-Notzing and Armin Mohler eds., *Deutsche Identität* (Krefeld: Sinus Verlag, 1982).

24) 신우파(독일판 뉴라이트) 그룹들의 입장은 먼저 볼프강 슈트라우쓰(Wolfgang Strauß)와 헤닝 아이히베르크(Henning Eichberg) 및 잡지 '비어 젤프스트(wir selbst: 우리 스스로)'가 대변했다. 이에 대해서는 Alexander Gallus, *Die Neutralisten*, pp. 397~409 ; Henning Eichberg, *Nationale Identität, Entfremdung und nationale Frage in der Industriegesellschaft* (München: Herbig Verlag, 1978) ; "Balkanisierung für Jedermann? - Nation, Identität-Entfremdung in der Industriegesellschaft", *Befreiung*, Nr. 19/20 (1980), pp. 46~69 ; *Abkoppelung, Nachdenken über die neue deutsche Frage* (Koblenz: Bublies Siegfried, 1987) ; Eckhard Jesse, "Zeitschriftenporträt:

서 성장한 한 흐름인 민족좌파(Nationale Linke)²⁵들은 독일의 분단문제가 국제적 냉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원인이라고 보며 독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유럽에서 평화가 달성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동방정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통일논의를 원천 배제한 것을 비판했다. 국민국가로의 재통일을 통한 독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주장이었다. 분단 독일의 양쪽에는 아직 강력한 민족 감정과 공속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일깨우는 것이 정치와 지식인들의 역할이라고 보았기에 그들 사이의 근본적인 정치적 견해 차이나 인적 문화적 이질감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민족지향적 공동의 대오를 결성해 정치무대와 여론사회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²⁶

이 “기이한 국외자들”(볼프강 벤오어)의 “민족운동”에 대항해 탈민족지향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유럽의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는 것은 독일통일이 아니라 유럽분열의 극복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공동의 유럽

wir selbst”, *Jahrbuch Extremismus & Demokratie*, Bd. 11 (1999), pp. 239~253. 한편 그들과 유사한 경향의 가치보수적 신우파 지식인들에 대해서는 Wolfgang Venohr, ed., *Die deutsche Einheit kommt bestimmt* (Bergisch-Gladbach: Luebbe Verlagsgruppe, 1982) ; *Ohne Deutschland geht es nicht. Acht Essays von sieben Autoren zur Lage der deutschen Nation* (Krefeld: Sinus Verlag, 1985)을 참조하라.

²⁵ 서베를린과 쾰른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들 민족지향의 좌파들에 대해서는 이동기, “서독 68운동과 독일정책: 민족좌파로서의 신좌파?”, pp. 97~104.

²⁶ 특히 1984~1985년 민족혁명적 신우파와 민족좌파들은 수차례나 공동으로 선언문 내지 저작집을 발간하며 정치토론회 등을 통해 연대활동을 벌였다. “Den Frieden retten - Deutschland vereinen”, Eckhard Jesse, ed., *Renaissance der deutschen Frage* (Stuttgart: Klett-Cotta, 1987), pp. 47~48 ; “Anstoß für eine deutsch-deutsche Alternative, Materialbrief Deutsche Probleme - Probleme mit Deutschland”, 1. Jg., Nr. 2 (November 1984), Archiv Grüne Gedächtnis, BII 1-5146 ; Herbert Ammon and Theodor Schweisfurth, *Friedensvertrag - Deutsche Konföderation - Europäisches Sicherheitssystem, Denkschrift zur Verwirklichung einer europäischen Friedensordnung mit 50 Seiten Dokumenten* (Stamberg, 1985).

안보체제”(에곤 바르) 확립을 통한 “유럽의 유럽화”(페터 벤더)에 의거해 유럽적 해결만이 평화의 유일한 과정이라고 확신했다.²⁷⁾ 독일문제는 단지 이 유럽적 해결 속에서 극복될 것이며 민족으로의 회귀 또는 전통적 국민국가의 재창출은 분단 독일에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주로 사민당과 녹색당 소속의 정치가들 그리고 자유주의적 좌파 지식인들은 유럽 평화가 독일분단의 지속과 동서양 진영의 균형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았기에 소련과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독일통일 문제가 국제적 토론의 쟁점으로 부각되면 동서독 관계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양독 국가의 실제적 이익의 증진을 교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⁸⁾

게다가 군사블록 간 대결이라는 국제정치적 현실 외에 독일의 ‘재민족화’(아르노 클뢰네)²⁹⁾가 불가능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이미 서독에서 발전한 실제 사람들의 삶의 현실과도 동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당시 독일문제와 관련한 토론에 참여했던 좌파적 지식인들과 학자들은 강제적인 전(全)독일(gesamtdeutsch) 의식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독일 민족주의의 재등장과 이데올로기화된 민족의식의 신드롬을 불러일

²⁷⁾ Günter Gaus, *Wo Deutschland liegt. Eine Ortsbestimmung* (Hamburg: Hoffmann u. Campe Verlag, 1983) ; Peter Bender, *Das Ende des ideologischen Zeitalters. Die Europäisierung Europas* (Berlin: Severin und Siedler, 1981) ; Egon Bahr, “Gemeinsame Sicherheit. Gedenken zur Entschärfung der nuklearen Konfrontation in Europa” *Europa-Archiv*, Folge 14 (1982), pp. 421~430 ; Andreas Vogtmeier, *Egon Bahr und die deutsche Frage. Zur Entwicklung der sozialdemokratischen Ost-und Deutschlandpolitik vom Kriegsende bis zur Vereinigung* (Bonn: Dietz, 1996), pp. 222~264, 333~357.

²⁸⁾ 이를테면 Egon Bahr, *Was wird aus den Deutschen? Fragen und Antworten* (Reinbek: Rowohlt Verlag, 1982), p. 23 ; Peter Bender, *Das Ende des ideologischen Zeitalters*, p. 228을 참조하라.

²⁹⁾ Arno Klönne, *Zurück zur Nation? Kontroversen zu deutschen Fragen* (Köln: Diederichs Eugen, 1984), pp. 86~102.

으킬 것이라고 심각히 우려했다.³⁰⁾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 서독의 비판적 역사가들과 지식인들은 나치의 민족사적 파국을 여전히 부정하며 연합국의 독일 ‘점령’에 대항할 민족 혁명을 주창하고 있던 극우세력들의 재결집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를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의 범죄로 단죄하되 이를 다시 독일민족의 오랜 독립과 통일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서의 일탈쯤으로 간주하는 변호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신우파 및 민족보수주의자들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도 맞서야 했다.³¹⁾ 이를테면 대표적 탈민족적 비판역사가 한스 몸젠(Hans Mommsen)은 민족사적 연속성과 전독일적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이 새로운 경향이 서독 주민들, 특히 청년 세대들의 비판적 역사상과 조응하지 못한 낡은 집착임을 강조하

30) 이에 대해서는 Lutz Niethammer, “Bundesrepublik und Nation” *Politik und Kultur*, vol. 4 (1977), pp. 26~36 ; Arnon Klönne, “Vorsicht, nationale Sozialisten, November 1978 (Auszug), nach: das da-Avanti Nr. 11, November 1978”, Peter Brandt and Herbert Ammon eds., *Die Linke und die nationale Frage. Dokumente zur deutschen Einheit seit 1945* (Reinbek: Rowohlt Verlag, 1981), pp. 352~353 ; Hans Mommsen, “Auf der Suche nach der Nation.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Nationalbewusstseins”, *Evangelische Kommentare*, Nr. 10/Jg. 12 (Oktober 1979), pp. 565~567 ; “Nationalismus und transnationale Integrationsprozesse in der Gegenwar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9 (1980), pp. 3~14 ; Jürgen Kocka, “Nation und Gesellschaft. Historische Überlegungen zur deutschen Fragen” *Politik und Kultur*, vol. 1 (1981), pp. 3~25. 특히 비판적 역사가들이 적극적으로 이 ‘정체성’ 논쟁에 참여했는데 그 이유는 애초 논쟁이 1978년 11월 말 각주 문화부장관의 회의에서 역사 교과서에서 독일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결의한데 대한 비판으로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3. November 1978”,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6 (1979), pp. 343~356 ; Karl-Heinz Janßen, “Chauvinismus in der Schule. 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 Schablonen aus Bonn”, *Die Zeit*, vol. 8, no. 12 (1978), p. 5.

31) 특히 Hellmut Diwald, *Geschichte der Deutschen* (Frankfurt am Main: Propyläen Verlag, 1978) ; Wolfgang Venohr, “Die Herrschenden und der Neue Patriotismus”, *Die Neue Gesellschaft*, 29. Jg., (August 1982), pp. 725~727을 참조하라.

였고 서독과 동독 모두에서 이미 비스마르크식의 국민국가적 전통이 종결되었다고 지적했다.³²⁾ 더불어 분단 독일에서 언어와 공통의 문화적 전통에 기초한 민족적 연대와 민족의식의 강조란 인위적인 또는 강제적인 역사상의 빈약한 토대에 불과해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이-민족화' 경향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독일 내 지역적-지방적 정체성의 강화 및 횡단국가적(transnational) 통합과정이라는 유럽적 현실의 발전에도 단지 시대착오적 교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렇듯 1979년대 후반부터 서독의 탈민족론의 대변자들은 새롭게 서독 정치 무대에 등장한 '재-민족화' 경향에 맞서 적극적으로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위적 민족정체성의 극복이라는 비판적 역사의식의 문제를 자신들의 탈민족론을 채우는 내용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서독정체성의 현재적 확인이 비극적 민족사의 역사적 극복이라는 민주적 과제 및 평화를 위한 미래의 초민족적 유럽구상과 접목됨으로써 서독 탈민족론은 그 고유의 색깔을 만들어 나갔다. 그리하여 1980년 초반 서독의 탈민족론은 좌파-자유주의 여론 사회에서 공동의 정치적 지향과 사유 운동의 근거로 발전할 수 있었다.

Ⅲ. 1980년대 헌법애국주의 논쟁

1. 돌프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

“나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요!” 1969년 사민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구스타프 하이네만

³²⁾ Hans Mommsen, “Nationalismus und transnationale Integrationsprozesse in der Gegenwart”, pp. 8-9.

(Gustav Heinemann)은 “연방공화국을 사랑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이후에도 서독 여론사회에서는 ‘간단치 않은 조국 (Schwieriges Vaterland)’에 대한 불편함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표현되었다. 그러나 1979년 서독 건국 30주년을 전후해 서독의 자기인정과 서독 주민의 집단적 자기정체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것과 민족의식 및 초민족 지향과 어떤 관련을 맺을지가 중요한 지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분단 독일에서 국가정체성과 (탈/초)민족 의식의 관계는 1980년대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 논쟁에서 그 특수한 양상을 드러냈다.

서독에서 헌법애국주의를 처음 설파한 정치학자 돌프 슈테른베르거(Dolf Sternberger)가는 오랫동안 칼 야스퍼스와 함께 친교를 나누고 같이 지적 작업을 수행했다(학술 잡지 ‘디반들룽 Die Wandlung: 변화’의 공동편집자)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그는 이미 1947년, 그리고 다시 1950년대 후반부터 헌법국가에 대한 애국주의적 감정에 대해 논했고 “친국가적 태도(Staatsfreundschaf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³³⁾ 1979년 서독 건국 30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글에서 슈테른베르거는 이제 더 확연히 서독의 국가발전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갖고 ‘헌법애국주의’ 개념을 본격적

33) 이미 1947년 슈테른베르거는 조국에 대한 공화주의적 이해와 헌법애국주의에 대한 개념적 구상을 선보였다. “조국이란 개념은 정치헌법에서 비로소 구현된다. 조국은, 레오폴트 랑케가 일종의 보수적인 신비주의 방식으로 민족체로 이해했던 것, 또는 다르게 말한다면 이성적 능력은 배제된 ‘어둡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궁’이 아니다. 조국은 밝은 빛 아래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조국의 실제 헌법에 활발하고 자유롭게 성숙하게 참여할 때에만 조국을 사랑할 수 있다.” Dolf Sternberger, “Begriff des Vaterlandes”(1947), in Dolf Sternberger, *Ich wünschte ein Bürger zu sein’ Neun Versuche über den Staa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67), p. 37 ; “Das Vaterland” (1959), in *Verfassungspatriotismus. Schriften X* (Frankfurt am Main: Insel, 1990), pp. 11~12 ; *Staatsfreundschaft. Schriften IV* (Frankfurt am Main: Insel, 1980), pp. 211~245.

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³⁴⁾ 그에게 있어 헌법애국주의는 먼저 지난 30년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해온 자유로운 공화국 서독이 자기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개였다. 슈테른베르거는 독일 분단의 현실에서 독일인들에게 조국이란 곧 헌법(‘기본법’)이며 낡은 조국애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헌법애국주의를 제안했다. 그가 보기에 독일에서 민족감정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독일인들은언제가 될지 모를 미래의 독일통일에 대한 막연한 희망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헌법 또는 완전한 헌법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일종의 조국이다.” 그는 18세기 말 까지 모든 형태의 애국주의는 법과 공동의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된 ‘헌법적 애국주의’였음을 역사적으로 환기시키며 아리스토텔레스나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 연구에 의거했다.³⁵⁾ 슈테른베르거가 생각했던 이 헌법애국주의는 단순히 헌법의 조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국은 “우리 모두를 이 나라의 시민으로 속하게 하고 우리가 매일 참여하며 계속해서 형성해가는 살아있는 헌법에서 채워지”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헌법애국주의는 단순히 성문헌법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정부, 의회, 야당, 관료, 노조 등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에 필요한 충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불만의 표출은 국가에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 슈테른베르거의 생각이었다. 대신 공화국의 시민은 국가와 헌법을 방어할

³⁴⁾ Dolf Sternberger, “Verfassungspatriotismus”(1979), in *Verfassungspatriotismus. Schriften X* (Frankfurt am Main, 1990), pp. 13~16 ; “Verfassungspatriotismus. Rede bei der 25-Jahr-Feier der ‘Akademie für Politische Bildung’”, *Schriften X*, pp. 17~31.

³⁵⁾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가 지닌 사상사적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Volker Kroneberg,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erspektiven für eine weltoffene Nation* (Wiesbaden: Vs Verlag, 2006), pp. 191~194 ; Jan-Werner Müller, *Another Country: German Intellectuals, Unification and National Ident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p. 93~94 ; Jörg Pannier, *Das Vexierbild des Politischen: Dolf Sternberger als politischer Aristoteliker* (Berlin: Akademie-Verlag, 1996)를 참조하라.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화주의적 헌법애국주의가 과연 민족적 애국주의의 대체물이냐는 것이다.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는 19세기 이후 확산된 국민국가에로의 충성 요구를 넘어선 논의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헌법 질서의 차별성과 소속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단 독일에서 민족적 동질성과 일체감을 상대화 내지 주변화했다. 그의 글에는 공동의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이 지닌 역할을 찾아 볼 수 없기에 흔히 이해되는 바의 민족 지향적 애국주의와는 구분된다. 그렇지만 슈테른베르거는 동독 시민들과의 민족적 연대를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헌법애국주의가 독일의 민족 정서와 나란히 병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며 독일인들이 민족적 공속감과 통일 지향을 간직할 필요가 있음을 여전히 인정했다.³⁶⁾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폭정하에서는 애국주의가 존재할 수 없”음을 지적했기에 동독인들이 서독인들과 구분되는 동독 애국주의를 가지며 독자적 정체성을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결국 슈테른베르거는 집단적 공동체로서의 충성과 결속을 헌법국가적 공화주의 영역에서 여전히 유지하고 강화하는 한편 ‘이(二)국가상태(Zweistaatlichkeit)’를 당연시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동서독 간 집단적 연대와 결속의 정치적 상상과 정체성의 논거를 제공하였다. 그렇기에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는 1990년 통일 이후 많은 보수-자유주의적 지식인들과 우파 정치가들에 의해 동서독을 통합할 민족적 애국주의로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36) Volker Kroneberg,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 195 ; Wolfgang Bergem, *Identitätsformationen in Deutschland* (Wiesbaden: Vs Verlag, 2005), p. 160 ; 원준호, “헌법애국심과 통일독일의 정체성 문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3호 (2002년 10월), p. 200.

2. 위르겐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

이에 반해 비판적 철학자 하버마스는 1980년대 중후반 역사가논쟁 (Historikerstreit)의 와중에서 이 헌법애국주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탈민족적 독일의 자기의식”의 표현으로 간주했다.³⁷⁾ 하버마스는 서독이 서구정치문화를 수용하고 법국가적 질서를 확립하고 서방에 정치적으로 긴밀히 결합된 것을 전후 시대의 중요한 업적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슈테른베르거와는 달리 하버마스는 서독의 고유한 정치적 정체성의 문제에 매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애국주의가 국민국가적 틀에서 확증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하버마스가 보기에 헌법애국주의는 특수주의적 자기정체성으로서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인습적이고 탈-민족적인 정체성”을 채우는 내용이 되어야 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국민적 전통을 의문시하고 역사적 연속성을 극복하여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정치문화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에서는 슈테른베르거적 의미의 특정 국가나 헌법에 대한 충성 또는 민주적 국가의 방어를 넘어 다원주의적이고 다문화주의적인 시민적 자유와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의사소통의 확장과 민주적 절차의 정착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보편주의적인 헌법 원리를 공유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 기반을 둔 탈민족적 정체성의 단초들은 단지 독일연방공화국을 넘어선 발전 속에서만 전개되고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버마스는 국민국가

37) 이하 내용은 다음 저술들에 기초했다. Jürgen Habermas, *Eine Art Schadenabwickl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7) ; *Die nachholende Revolutio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0), pp. 149~224 ; Rainer Nickel, “Verfassung und Verfassungspatriotismus”, in Hauke Brunkhorst and Regina Kreide and Cristina Lafont eds., *Habermas-Handbuch* (Stuttgart: Metzler, 2009), pp. 377~378 ; V. Kroneberg,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p. 202~215.

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현실에서 탈민족적 헌법애국주의가 유럽통합 과정을 위해 유용한 개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하버마스에게 있어 이 보편주의적인 정치규범으로서의 헌법애국주의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가치나 정체성에 의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과 질서에 대한 복종과 같은 인습적인 정치윤리가 아니라 오히려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아우슈비츠! 정치문화와 역사의식에서의 파시즘의 극복은 특정한 역사적 관점을 형성하고 그것으로부터 탈민족적 정체성은 법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에 의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독의 특수한 정체성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을 초래한 민족사적 연속성의 완전한 단절과 극복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적 의사소통과 학습과정을 전제한다. 결국 하버마스의 탈민족적 헌법애국주의는 흔히 비판받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민족적 정체성도 부정하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세계 보편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국가공동체 성원의 집단적 자기의식과 민족사에 대한 자기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한 정체성”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었다.³⁸⁾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국가특수적인 비판적 민족의식의 모든 확정적 내용들이 “보편주의적 가치지향의 필터 속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한 국가와 사회는 자신의 민족사적 특수한 경험을 배경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 대결을 통한 정치문화 속에서 바로 보편적인 탈민족적 집단 정체성, 즉 헌법애국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1980년대 후반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를 둘러싸고 전개된 뒤이은

38) Jürgen Habermas, “Grenzen des Neohistorismus”, in *Die nachholende Revolution*, pp. 149~156, 특히 pp. 151~153. 하버마스는 “보편적 원칙들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의 **특정한**(강조: 하버마스)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bid., p. 152.

논쟁을 결산하기는 아직도 쉽지 않다.³⁹⁾ 한편으로 역사가 논쟁의 맥락에서 민족사의 단절과 자기 성찰적 정체성에 동의하는 많은 자유주의적 좌파 지식인들과 여론사회가 하버마스의 탈민족적 헌법애국주의를 지지하였다. 작가 귄터 그라스(Günter Grass), 사회학자 라이너 램시우스(M. Rainer Lepsius), 역사가 마틴 브로차트(Martin Broszat), 정치학자 존타이머(Kurt Sontheimer), 역사가 볼프강 몸젠(Wolfgang Mommsen)과 한스-울리히 벨러(Hans-Ulrich Wehler) 등 사민당 계열의 지식인들과 보수적 정치학자 칼 디트리히 브라허(Karl Dietrich Bracher)가 그들이다. 오랫동안 분단독일에서 이(二)-민족화 내지 탈민족화 과정을 관찰하며 그것의 현실적 함의를 성찰하던 그들에게 하버마스는 적절한 정치사상적 개념과 관점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 특히 주로 보수적 지식인들에게 이 개념은 감정이 결여된 “인위적 구성물”에 불과했다. 특히 동서독을 잇는 민족(국가)적 연대의식, 공속감, 역사적 정체성의 문제없이 애국주의를 논하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 또한 강했다. 보수적 정치학자 헤르만 뤼베(Hermann Lübe), 민족통일의 지지자 작가 마틴 발저(Martin Walser), 카톨릭 계열의 보수적 정치학자 한스-페터 슈바르츠(Hans-Peter Schwarz), 역사학자 하겐 술체(Hagen Schulze), 정치학자 칼-루돌프 코르테(Karl-Rudolf Korte) 등 보수적 지식인과 학자들 및 랄프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와 악셀 호네트(Axel Honneth) 등의 비판적 학자들 일부도 쉽사리 그 개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결국 1989~1990년 예기치 않은 동독붕괴와 독일통일이 이 탈민족적 애국주의 개념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통일 후 하버마스로부터

³⁹⁾ 이 논쟁에 대해서는 Jan-Werner Müller, *Another Country*, pp. 97~98 ; W. Bergem, *Identitätsformationen*, pp. 164~167 ; V. Kroneberg,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p. 211~215.

터 슈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주의, 또는 더 분명한 민족적 애국주의로 — 물론 민족주의와는 구분되고 보편주의적 내용을 담고— 다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보수 지식인 및 우파 정치가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그럼에도 초민족적 유럽통합의 전망 속에서 하버마스의 탈민족적 헌법애국주의는 여전히 많은 비판적 지식인들의 중요한 지적 공유 지점이자 자극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 통일 이후 유럽통합의 정치적 과정이 의미있게 전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지체되고 굴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통일 독일에서는 이제 우파든 좌파든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내 조국도 사랑할’ 나름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IV. ‘예기치 않은’ 통일과 탈민족 정치

1. 1989년 가을 콜 정부의 독일정책

1980년대 서독에서 탈민족 논의는 비판적 지식인과 여론사회의 담론으로 끝나지 않았다. 1980년대에는 서독의 일부 정치 지배엘리트들도 — 비록 하나의 단일한 독일민족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재창출이나 급속한 독일통일에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1982년 헬무트 콜 수상 주도의 집권 기민련(CDU)/기사련(CSU)/자민당(FDP) 연정은 그 이전 1970년대 사민당/자민당 연정 시기의 동방정책과 그 정신을 철저히 계승하면서 “실용주의적 독일정책”의 기초를 이어갔다.⁴⁰⁾ 동독 체제가 자체 붕괴의 문턱으로 막 들어선 1989년 10월 말 이전 까지

⁴⁰⁾ 이에 대해서는 이동기, “보수주의자들의 ‘실용주의’적 통일정책—1980년대 서독 콜 정부의 동방정책 계승”, 『역사비평』 83 (2008년 여름), pp. 350~373.

서독의 보수-자유 연정은 아직 동서독 간 상호협력의 상호주의적 '연계(Junktim)'를 통해 동독 내정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고 공세적 통일강령을 통해 동독 체제를 흔들고자 하지도 않았다. 물론 콜 수상은 규범적이고 명목적인 차원에서 몇 차례 공식적 선언과 연설들을 통해 독일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실제 정책과 활동에서 그는 '이(二)국가주의자(Zweistaatler)'들과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콜 수상 또한 당시 전망이 보이지 않는 독일통일 보다는 유럽통합의 현실정치적 확장과 강화를 더 중요한 독일정치적 과제로 간주했다. 그렇기에 그는 당내 전통적 민족보수주의자들 및 하나의 단일한 민족적 정체성에 기초해 독일의 재-민족(주)화를 추구했던 뉴라이트 그룹들로부터 연신 비판받았다. 그렇지만 동독 체제의 붕괴가 현실로 들어난 1989년 11월 28일 콜 수장은 독일통일 '10개 조항 강령'을 제시하며 순식간에 모든 민족 재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쥐 수 있었다.

2. 사민당과 녹색당의 탈민족 대안들

반면 1980년대 내내 이(二)국가상태나 이(二)민족-테제에 의거해 국민국가로의 재통일을 포기하고 초민족적/탈민족적 해결책을 독일의 정치적 미래 구상으로 적극 선전한 정치가들은 두 좌파 야당에 몰려 있었다. 먼저 사민당의 지도적 정치가들은 독일에서 이국가상태가 장기 지속하는 것을 '정상적인' 현실로 받아들였다. 1980년대 야당으로서의 사민당이 내건 '제2기 동방정책'은 독일문제의 해결 보다는 유럽평화체제 구축과 유럽공동체 구상을 겨냥했다.⁴¹⁾ 1980년대 후반 사민당의 주요 정치가들 중 가장 민족 지향적이었던 브란트조차도 '재통일'이란 용어를 거부했

41) 이에 대해서는 Frank Fischer, "Im deutschen Interesse" *Die Ostpolitik der SPD von 1969 bis 1989* (Husum: Matthiesn Verlag, 2001), pp. 117~265을 참조하라.

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국민국가가 재탄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극히 회의적이었다.⁴²⁾ 그러나 민족의 현재와 미래, 다시 말해 하나의 단일한 독일민족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했다. 빌리 브란트처럼 여전히 하나의 단일한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공동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공속감에서 찾는 이들이 한 켠에 있었다. 그들은 동독주민들과의 민족적 결속과 연대를 여전히 강조하며 기본법의 통일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새로운 차기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던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으로 대표되는 사민당내 탈민족 지향의 정치가들에게 ‘독일민족’이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승인할 뿐 아니라 동독의 독자적 시민권을 인정할 것도 주장했다. 결국 1989~1990년 겨울 독일 통일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국면에서 사민당은 ‘통일되지 않은 채 통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⁴³⁾ 당시 사민당 당수이자 원내 총무였던 한스 요헨 포겔(Hans Jochen Vogel)과 브란트 등은 콜의 애초 통일구상, 즉 국가연합을 통한 연방국가로의 독일통일 및 통일독일의 나토(NATO)에로의 잔류 그리고 곧 1990년 1월 중순 그 구상의 변화, 다시 말해 국가연합 단계의 포기를 통한 급속한 통일 추진 등에 모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이에 반해 좀 더 젊거나 더 좌파적인 다수의 사민당 정치 지도자들, 특히 라퐁텐을 비롯한 “브란트의 손자들”은 시종 완강하게 탈

42) 1980년대 브란트의 양면적 독일통일관에 대해서는 Wolfgang Schmidt, “Was ‘Reunification’ the final objective of Willy Brandt’s Ostpolitik? Reflections on the discussion about the German question 1949~1990”, 『유럽통합과 독일의 분단, 통일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의 통일과제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2009년 5월 20일~23일), pp. 105~117.

43) Daniel Friedrich Sturm, *Uneinig in die Einheit. Die Sozialdemokratie und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1989/90* (Bonn: Dietz, 2006).

민족 전망의 해결책을 고수했다. 그들은 이미 현실적 정치일정으로 들어선 독일통일 자체를 거부하거나 최대한 유예시키면서 유럽통합을 통한 독일문제 해결 또는 이중적 국가연합을 통해 독일통일과 유럽통일의 동시적, 병행적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버마스과 그라스를 비롯한 상당수의 좌파 지식인들이 연이어 성명과 의견을 제출하며 국민국가로의 급속한 재통일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와 '재-민족(주의)화'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그 노선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들은 연이은 선거패배와 정치적 지지의 상실로 그 의미를 잃어갔다. 결국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의 제국의회 앞에서 새로운 "통일수상" 콜이 독일통일을 선언할 때 그 옆에서 있던 브란트는 통일의 또 다른 주역으로 빛을 발했지만 같은 자리에서 있던 라퐁텐은 어색한 미소를 지니며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민당과는 달리 녹색당(Die Grünen)은 처음에는 콜의 통일공세에 당황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전반기 평화운동에서 출발한 '민족좌파' 그룹들이 일찍이 정치적으로 배제, 소외된 뒤 녹색당은 탈민족 지향이 이미 정치적 함의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녹색당의 다양한 정파들은 동독에 대한 평가, 군사동맹 문제 그리고 통합유럽의 구체적 상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지만 독일문제가 이미 1945년 5월 8일 이후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특히 그들은 독일 분단을 나치 독재의 전쟁과 학살에 대한 '정당한 징벌'로 인지하였다.⁴⁴⁾

44) 녹색당 내 중심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던 '대서양주의자(Atlantiker)' 분파의 대표 정치가 요쉬카 피셔가 1987년 서베를린에서 행한 한 연설은 당시 녹색당 정치가들의 민족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독일 문제는 1945년 5월 8일 이후 더 이상 열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두 번의 전쟁, 칠천만 명이 넘는 사망자들, ……, 아우슈비츠와 여타 절멸수용소에서의 민족살해 그리고 1945년 5월 8일 4대 열강 군대의 독일제국의 완전한 궤멸로 이미 해결되었다." "Zwischen Wiedervereinigungssillusion und Nato-Austrittsfiktion."

게다가 그들은 독일과 유럽에서 평화 정착은 독일 분단을 국민국가적 방식으로 극복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국가상태에 기초해 이루어지는 블록 해체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989년 겨울에도 녹색당의 탈민족 정치가들은 콜의 통일정책에 반대하며 동독의 개혁, 그것을 위한 서독 정부의 시급한 경제적 지원, 개혁된 동독의 정치적 주권 인정, 그리고 그것을 통한 유럽통합만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 과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1990년 2월 초에 들어서야 요슈카 피셔(Joschka Fischer)를 비롯한 ‘현실주의자들(Realos)’과 안트예 풀머(Antje Vollmer) 중심의 ‘출발(Aufbruch)’ 그룹은 동독 주민들이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통일지향의 현실에 떠밀려 뒤늦게 교조적인 이(二)-국가론과 단절했다. 특히 ‘출발’ 그룹은 ‘생태 국가연합(Ökologische Konföderation)’안을 독일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동서독간 ‘민족 결합’(통일이 아니라!)을 수용하되 동독이 “서독의 시칠리”가 되지 않도록 “확장을 통한 부유함”이 아니라 “차이를 통한 부유함”의 원칙을 제기한 것이었다.⁴⁵⁾ 그들은 연방주의적 정치 원리를 환기시키며 독-독 간 결합과 유럽통합의 동시적 발전을 내세웠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애초 동독의 민주혁명을 주도했던 시민운동 세력 및 사통당(SED) 내 개혁공산주의자들 또한 같은 시기에 유사한 구상을 통해 흡수 통일에 반

Rede von Joschka Fischer zu den Grundsätzen einer neuen Deutschlandpolitik, gehalten am 20. November 1987 in der Urania Berlin”, Archiv Grüne Gedächtnis (이하 AGG) 1337, p. 5; “Protokoll der deutschlandpolitischen Debatte der Fraktion Die Grünen im Bundestag am 16. Juni 1984”, AGG, B. II, 1, Nr. 2715.

45) Grüner Aufbruch 1/90, “Ökologische Konföderation beider deutscher Staaten; Gemeinsamkeit in Autonomie”, AGG, Die Grünen im Bundestag 1983~1990, Bd. II, 1: Deutsche Einheit-Umweltpolitik-Sozialpolitik; Antje Vollmer, “Tips für David. Plädoyer für eine ökologische Konföderation”, in Frank Blohm and Wolfgang Herzberg eds., *Nichts wird mehr so sein, wie es war. Zur Zukunft der beiden deutschen Republiken* (Leipzig: Luchterhand Literaturverlag, 1990), pp. 117~125.

대하며 이중적 국가연합 구상에 의존해 동독의 자생적, 독자적 발전을 보장하고 주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⁴⁶⁾ 하지만 1990년 3월 18일 동독의 최초이자 최후의 자유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이 기본법 23조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지함으로써 동서독의 모든 탈민족 대안구상들은 역사의 에피소드로 전락하고 말았다.

3. 독일 통일과 탈민족주의자들의 한계

그런데 흔히 이해하듯 이 과정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붕괴로 사전에 모든 것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먼저 당시 탈민족 지향의 다양한 독일문제 해결책들이 정치적 의미를 잃은 것은 서독 콜 수상의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고 실용적이면서도 권력지향적이었던 통일정책의 추진 탓이다. 이미 콜은 한편으로는 11월 말 '10개조 통일 강령'에서 국가연합을 매개로한 단계적 방식의 국민국가적 통일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우파 민족보수주의자들과 신우파 및 극우파 그룹들의 지지를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통합의 장기적 전망("독일은 우리의 조국이고 유럽은 우리의 미래다")을 그 나침으로 제시하고 군사동맹 문제를 아예 통일논의에서 일시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탈민족 지향의 독일문제 해결 주창자들의 예봉을 꺾어 버렸다.

이에 반해 동독의 반체제 운동가들은 민족문제의 존재에 처음부터 관

⁴⁶⁾ Konstanze Borchert and Volker Steinke and Carola Wuttka eds., *Für unser Land Eine Aufrufaktion im letzten Jahr der DDR* (Frankfurt am Main: Iko Verlag, 1994) ; Wolfgang Harich, "Nochmals: Die Grünen der DDR zur deutschen Frage", in *Keine Schwierigkeiten mit der Wahrheit* (Berlin: Dietz, 1993), pp. 161~168 ; Gregor Gysi, "Wird es einen demokratischen Sozialismus in der DDR geben", in Frank Blohm and Wolfgang Herzberg eds., *Nichts wird mehr so sein, wie es war*, pp. 64~75.

심이 없었고 11월 중순 들어 ‘민주혁명’이 통일운동으로 전환되는 조짐에 소극적으로 응수했다. 또 서독의 탈민족 좌파들은 동독 주민들의 현실적 민족 지향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그것을 단지 서독의 풍요에 대한 물질적 욕구의 기형적 발현쯤으로 보았고 새로운 공격적 민족주의로의 전화 가능성이라는 허수아비를 밀치느라 바쁘기만 했다. 게다가 이 동서독 내 탈민족 지향의 좌파 정치가들은 독일 땅에서의 민족적 결속과 유럽대륙의 지역적 통합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잘 지적했지만 그 둘이 각각의 독자적 차원과 동력을 지닌 분리된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못했다. 탈민족 좌파들은 1980년대 내내 민족좌파들 및 신우파들이 독일통일과 유럽평화정착의 이중적 과정으로서 제시했던 국가연합안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또 그들은 —콜을 비롯한 체제 내 우파 정치가들과는 달리— 1989년 가을/겨울에도 동독 내 민주화 운동과 민족 전망의 역동적 관계에 대해 주목하지 못했다. 그들은 동서독 간 분단문제의 복합성과 민족적 과제의 현실정치적 역동성과 함의를 방기한 채 미래에 걸려 있는 유럽통합이라는 신기루에 의지하다가 결국 기대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았던 통일”⁴⁷⁾ 국면을 빈손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뒤늦게 국가연합안에 매달렸지만 1990년 1월 중순 이후 국가연합은 이미 통일론이 아니라 반(反)통일론이 되었다. 결국 1989~1990년 전환기 그들의 탈민족 정치는 미래지향적 지평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반(反)민족적’, 반시대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47) Konrad H. Jarausch, *Die unverhoffte Einheit 1989~1990*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

V. 맺는말

전후 분단 독일에는 “좋은 의미의 독일적인 것은 탈독일적인 것”⁴⁸⁾이라는 니체의 이른 경구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먼저 주목할 것은 비판적 자유주의 지식인들과 좌파적 여론사회로 하여금 ‘독일적인 것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추동한 것은 애초부터 서방통합을 통한 서독의 정치경제적 성과와 정치문화의 서구화에 대한 자의식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아데나워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그 연방공화국 자의식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식의 이데올로기화한 체제정당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비극적이고 파과적인 전통적 민족사의 단절과 반성에 기초해 있었다는 점에서 서독의 탈민족론자들은 사실 아데나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구 친화적 보편주의자들이었다. 이를테면 하버마스의 헌법애국주의론에서 보듯 보편주의적 규범과 가치는 민족 또는 국가 특수적 경험에 대한 성찰적 정치문화와 비판적 자기정체성을 매개로 확보되는 것이었다. 물론 서독의 탈민족적 지향과 정체성이 처음부터 나치즘의 파국적 결과로 직접 주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독의 좌파적 탈민족론자들은 인위적이거나 가상적으로 세워둔 ‘공격적 민족주의’라는 허수아비와 맥락없이 싸운 것이 아니라 1970년대 후반부터 현실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과거사 변호론적인 ‘재-민족화’ 조류들과 대결을 벌이면서 비판적인 역사의식을 탈민족론의 근거로 채워나갔다.

아울러 이 탈민족론자들이 동독의 국가적 인정과 체제 존중을 누구보

48) 프리드리히 니체, 김미기 옮김, 『니체 전집 8,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II』, (서울: 책세상, 2002), p. 185 (인용문은 저자의 수정 번역임).

다 더 앞서 그리고 철저히 주장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상대의 인정을 통한 자기존재의 인정의 과정을 통해 서독의 탈민족론은 서독의 고유한 정치적 정체성의 존재를 확인해나갔다. 동서독 간 교류협력은 민족 간 유대를 만들어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질성을 확인하며 자기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양 체제 내에서 발휘되는 양상은 균질적이기도 균형적이기도 않았다. 서독 탈민족론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동독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동독정체성’이 아니라 ‘독일정체성’을 찾아나서고 있었다. 통일 전과 통일과정에서 서독 탈민족론자들이 겪은 비극의 핵심 원인은 민족정체성을 넘어선 그 동서독 개별 정체성 간의 비균질성과 불균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한편 통일 후 동독주민들이 겪은 비극의 한 원천은, 서독 탈민족론자들이 잘 진단한대로 서독에서 이미 ‘독일정체성’이 아니라 ‘서독정체성’이 더 강했다는 사실이다.

탈민족론은 애초 하나의 단일한 집합적 정체성의 이데올로기적 부과나 강제적 지속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민족’이라는 신화를 넘어 현실로 존재하는 다양한 지향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탈민족론의 의의라면 그것은 스스로 ‘상상하’고자 하는 초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문제는 분단 일국적, 민족적, 초민족적 정체성들 중 하나의 규범적 우위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당위적 공존을 공허하게 강조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성급한 인위적 규범이나 지식 담론을 만들기 전에 한 정치공동체 내 다양한 주체들의 서로 다른 정체성들의 현실적 형성 과정 및 그 변화와 병존/마찰의 구체적 양상과 역동성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접수: 2009년 10월 26일 / 수정: 2009년 11월 17일 / 게재확정: 2009년 11월 22일

【참고문헌】

- 원준호. “헌법애국심과 통일독일의 정체성 문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3호 (2002).
- 이동기. “보수주의자들의 ‘실용주의’적 통일정책—1980년대 서독 콜 정부의 동방정책 계승”. 『역사비평』, 83 (2008).
- . “서독 68운동과 독일정책: 민족좌파로서의 신좌파?”. 『독일연구, 역사, 사회, 문화』, vol. 17 (2009).
- Archiv Grüne Gedächtnis. 1337, BII 1-5146, B. II, 1-2715.
- . Die Grünen im Bundestag 1983-1990, Bd. II, 1: Deutsche Einheit-Umweltpolitik-Sozialpolitik.
- Ash, Timothy Garton. *In Europe's Name. Germany and the Divided Continent*. New York: Vintage, 1993.
- Bahr, Egon. “Gemeinsame Sicherheit. Gedenken zur Entschärfung der nuklearen Konfrontation in Europa”. *Europa-Archiv*, Folge 14 (1982).
- . *Was wird aus den Deutschen? Fragen und Antworten*. Reinbek: Rowohlt Verlag, 1982.
- Bender, Peter. *Das Ende des ideologischen Zeitalters. Die Europäisierung Europas*. Berlin: Severin und Siedler, 1981.
- Bergem, Wolfgang. *Identitätsformationen in Deutschland*. Wiesbaden: Vs Verlag, 2005.
- Blohm, Frank and Herzberg, Wolfgang (eds.). *Nichts wird mehr so sein, wie es war. Zur Zukunft der beiden deutschen Republiken*. Leipzig: Luchterhand Literaturverlag, 1990.
- Brandt, Peter and Ammon, Herbert (eds.). *Die Linke und die nationale Frage. Dokumente zur deutschen Einheit seit 1945*. Reinbek: Rowohlt Verlag, 1981.
- Diwald, Hellmut. *Geschichte der Deutschen*. Frankfurt am Main: Propyläen Verlag, 1978.
- Eichberg, Henning. *Nationale Identität, Entfremdung und nationale Frage in der Industriegesellschaft*. München: Herbig Verlag, 1978.
- Fischer, Frank. “Im deutschen Interesse” *Die Ostpolitik der SPD von 1969 bis 1989*.

- Husum: Matthies Verlag, 2001.
- Gaus, Günter. *Wo Deutschland liegt. Eine Ortsbestimmung*. Hamburg: Hoffmann u. Campe Verlag, 1983.
- Gallus, Alexander. *Die Neutralisten. Verfechter eines vereinten Deutschland zwischen Ost und West 1945-1990*. Düsseldorf: Droste, 2001.
- Habermas, Jürgen. *Eine Art Schadenabwickl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7.
- . *Die nachholende Revolutio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0.
- Hacker, Jens. *Deutsche Irrtümer. Schönfärber und Helfershelfer der SED-Diktatur im Westen*. Berlin: Ullstein, 1992.
- Harich, Wolfgang. *Keine Schwierigkeiten mit der Wahrheit*. Berlin: Dietz, 1993.
- Heß, Jürgen C. "Die Bundesrepublik auf dem Weg zur Nation". *Neue Politische Literatur*, 3/Jg. 26 (1981).
- Jaraus, Konrad H. *Die unverhoffte Einheit 1989-1990*.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
- Jaspers, Karl.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Über Aufgaben deutscher Politik*. München: Piper, 1960.
- Jesse, Eckhard (ed.). *Renaissance der deutschen Frage*. Stuttgart: Klett-Cotta, 1987.
- Kocka, Jürgen. "Nation und Gesellschaft. Historische Überlegungen zur deutschen Fragen". *Politik und Kultur*, 1 (1981).
- Klönne, Arno. *Zurück zur Nation? Kontroversen zu deutschen Fragen*. Köln: Diederichs Eugen, 1984.
- Kroneberg, Volker. *Patriotismus in Deutschland. Perspektiven für eine weltoffene Nation*. Wiesbaden: Vs Verlag, 2006.
- Mann, Golo. *Deutsche Geschichte des 19. und 20. Jahrhunderts*. Frankfurt am Main: Fischer Verlag, 1966.
- Mommsen, Hans. "Auf der Suche nach der Nation.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Nationalbewusstseins". *Evangelische Kommentare*, Nr. 10/Jg. 12 (Oktober 1979).
- . "Nationalismus und transnationale Integrationsprozesse in der Gegenwar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9 (1980).
- Müller, Jan-Werner. *Another Country: German Intellectuals, Unification and National Ident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Niethammer, Lutz. "Bundesrepublik und Nation". *Politik und Kultur*, 4 (1977).

- . “Traditionen und Perspektiven der Nationalstaatlichkeit für die BRD(1971)”, in *Deutschland danach, Postfaschistische Gesellschaft und nationales Gedächtnis*, Bonn: Dietz, 1999.
- Pannier, Jörg. *Das Vexierbild des Politischen: Dolf Sterberger als politischer Aristoteliker*, Berlin: Akademie-Verlag, 1996.
- Plessner, Helmut. *Die verspätete Nation*, Stuttgart: Kohlhammer, 1959.
- Roth, Florian. *Die Idee der Nation im politischen Diskurs. Die Bundesrepublik zwischen neuer Ostpolitik und Wiedervereinigung (1969~1990)*, Baden-Baden: Nomos, 1995.
- Sander, Hans-Dietrich. *Der nationale Imperative. Ideengänge und Werkstücke zur Wiederherstellung Deutschlands*, Krefeld: Sinus Verlag, 1980.
- Schmidt, Wolfgang. “Was ‘Reunification’ the final objective of Willy Brandt’s Ostpolitik? Reflections on the discussion about the German question 1949~1990”, 『유럽 통합과 독일의 분단, 통일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의 통일과제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2009년 5월 20일~23일).
- Schweigler, Gerhard. *Nationalbewusstsein in der BRD und DDR*,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3.
- Sontheimer, Kurt. “Nation und Nationalismus in der Bundesrepublik” (1969), in Hans Steffen (ed.), *Gesellschaft in der Bundesrepublik*, 2. Tei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1.
- . *Deutschland zwischen Demokratie und Antidemokratie. Studien zum politischen Bewußtsein der Deutschen*, München: Nymphenburger Verlagshandlung, 1971.
- . “Reden über Deutschland”, in: *Reden über das eigene Land; Deutschland 6*, München, 1989.
- Sterberger, Dolf. *Ich wünschte ein Bürger zu sein’ Neun Versuche über den Staa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67.
- . *Staatsfreundschaft, Schriften IV*, Frankfurt am Main: Insel, 1980.
- . *Verfassungspatriotismus, Schriften X*, Frankfurt am Main: Insel, 1990.
- Sturm, Daniel Friedrich. *Uneinig in die Einheit. Die Sozialdemokratie und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1989/90*, Bonn: Dietz, 2006.
- Thiemeyer, Guido. “Supranationalität als Novum in der Geschichte der internationalen

- Politik der fünfziger Jahre".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History*, vol. 4 (1998).
- Venohr, Wolfgang (ed.). *Die deutsche Einheit kommt bestimmt*. Bergisch-Gladbach: Luebbe Verlagsgruppe, 1982.
- Vogtmeier, Andreas. *Egon Bahr und die deutsche Frage. Zur Entwicklung der sozialdemokratischen Ost-und Deutschlandpolitik vom Kriegsende bis zur Vereinigung*. Bonn: Dietz, 1996.
- Westle, Bettina. *Kollektive Identität im vereinten Deutschland. Nation und Demokratie der Deutschen*. Opladen: Leske + Budrich, 1999.
- Winkler, Heinrich A. and Kaelble, Hartmut (eds.). *Nationalismus - Nationalitäten - Supranationalität*. Stuttgart: Klett-Cotta, 1993.

Abstract

The Postnational Discourse and Politics in the Divided Germany
and its Reunification Process

Lee, Dong-ki(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SNU)

The West German postnationalism had developed itself on its initial stage, not so much of coming to terms with the national past of the Nazism but as effect of the Adenauer's policy of Western integration. The self-consciousness of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s in FGR was based on a new postnational identity among not a few liberal or left intellectuals in West Germany. Coped with the nationalistic political forces that strived for a 're-nationalization' of the divided Germany the postnational exponents confirmed the tendency of the West Germans to a separated national identity and stood up against a compelled German national consciousness as a whole. The universalistic norm and value which the postnational intellectuals advocated could be confirmed only by breaking off with the negative national history and tradition, as the Habermas' constitutional patriotism could be seen. They had nothing so in common with a ideological system legitimation, as with the achieved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through the self-reflexive confrontation with the Holocaust.

The West German advocates for the bi-nationalization thesis we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y had argued most ardently for the recognition of the East German State as a second German state and for the respect for its system. In recognition of the other they could find their own

specifics out and develop a self-identity. It should be remarked that the German-German contacts and cooperation through the Ostpolitik had also brought forth a sense of distance and difference towards the national partner and strengthened the separated self-identity, at least in West-Germany. But they had been not able to consider of the disequilibrium and inhomogeneity of the separate developed national consciousness in two German states. In addition, in the critical phase of German reunification 1989/1990 the postnational exponents had a disregard of the dynamic relationship of the democratic revolution and the coming national desire in East Germany and could not make a proper counterproposal to the existing national expectation of the East Germans.

Keywords: postnationalism, bi-nationalization thesis, constitutional patriotism, Ostpolitik, Western integration, German reunification

이동기

독일 예나대학교에서 '1949~1990년 분단 독일의 국가연합 통일안'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 서양사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보수주의자들의 '실용주의'적 통일정책—1980년대 서독 콜 정부의 동방정책 계승』, 『경제인의 시간들: 분단 독일 초기(1949~1956) 국가연합 통일안의 등장』, 『1950년대 후반 동독 사통당의 국가연합 통일안』 등이 있다.

미·소 군정기(1945~1948)

서울과 평양의 극장연구*

이명자(동국대 문화학술원 연구원)

국문요약

해방이 되자 문화인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문화건설'을 조직했다. '문화건설'의 목표는 일본 잔재를 털어내고 봉건문화를 근절하여 근대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영화인들도 이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쳐 1945년 12월 전체 영화인의 모임인 '조선 영화동맹'으로 결집하여 문화건설에 힘을 보태었다. 그러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조선의 영화산업의 조건에서 조선의 영화는 강력한 미·소군정의 문화정책 아래에 놓였다.

이 연구는 정책, 산업, 문화형성의 공간인 극장을 통해 군정 당시 남북에서 극장정책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었던 적산극장 처리문제의 비교, 당시 서울과 평양의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와 상영방식, 그리고 그 함의를 분석하였다.

미군정기 서울의 극장은 16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18개에 달했다. 여기서 극장은 연극, 악극, 전통연예물들이 영화와 함께 상영되는 공간이었으며 외화의 상영비율이 높았다. 외화 중에서도 미국영화는 미군정이 설립한 중앙영화배급사를 통해 거의 독점적으로 배급되며 극장을 점령했다. 점령국에 적합한 영화로 선정된 액션, 멜로, 코미디류의 미국영화는 미국이 외국에 전파하고 싶은 자국의 이미지—강하고 아름다운 미국—를 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소군정기 평양의 극장은 6개에서 출발해 점차 증가했다.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극장에서 연극, 악극, 가극 등이 동시 상연되었으나 점차 영화관과 공연장의 개념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3·8선으로 인해 남한에서부터 영화수급이 막히자 평양의 극장을 점령한 것은 거의 소련영화였다. 소련영화는 사회주의 이후 소련의 변화상, 플호츠, 협동노동, 공업화

* 본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논문임.

등 사회주의 근대화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군정과 미국문화의 영향으로 남한은 경쟁과 자본화가 심화되고 미국영화를 통해 일상적으로 미국문화에 점차 익숙해졌다.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놓이게 된 남한의 극장과 달리 북한의 극장은 국영화되어 상업활동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소련이 요구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문화적 역할에 주력하게 되었다. 영화가 보여준 미국과 소련의 이미지는 조선의 대중들이 근대 민족문화를 상상하는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었다. 미·소군정이 조선에 소개한 영화를 통해 남북의 대중들이 근대성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남북의 문화는 점차 상이한 구성과정을 경험했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 영역에서만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화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군정기의 문화연구는 현재 남북 문화의 이해를 넓혀주는 고리가 될 것이다.

주제어: 극장, 군정기(1945~1948), 미국군정, 소련군정, 근대성, 적산극장, 상영관습, 프로그램

I. 서론

해방이 되자 문화인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문화건설’을 조직했다. ‘문화건설’의 목표는 일본 잔재를 털어내고 봉건문화를 근절하여 근대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영화인들도 이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쳐 1945년 12월 전체 영화인의 모임인 ‘조선영화동맹’으로 결집하여 문화건설에 힘을 보태었다. 그러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조선의 영화산업의 조건에서 조선의 영화문화는 군정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였다.

남북에 진주한 미·소 양국은 이미 유럽에서 실험한 근대화 정책 및 자국의 문화정책을 한반도에서 실험하고자 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영속화하는데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영화를 그 핵심적 기제로 삼았다. 미군정은 1946년 3월 설립한 공보부(DPI: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에 영화과를 두고 미국 대중문화의 보급에 힘을 쏟

았다. 균정 내 영화과의 설치와 동시에 미국은 중앙영화배급사(이하 중배) 조선사무국을 설치하고 한국 내 미국영화의 공식 배급기구로서 활용했다.

소련군정도 1945년 10월 3일 구성한 소련 민정부를 통해 소련영화 및 문화의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소련의 문화 및 영화정책은 “역사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본주의 문화를 대체”¹⁾하려는 사회주의 문화운동의 일환이었다. 혁명을 통해 문화의 대중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었던 소련은 ‘소련영화산업수출공사(Sovexportfilm)’²⁾와 1945년 11월 11일 설립한 ‘조소문화협회’를 주축으로 자국의 영화를 북한에 소개했다.

이와 같이 대중영화에서 교육, 신문, 잡지, 도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전개된 미군정과 소군정의 문화정책이 막 해방을 맞이해 출발선에 놓인 남북의 문화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정작 균정기의 문화연구는 너무나 약소한 것이 현실이다. 균정기 관련 연구 자체가 적지만 그나마 연구된 분야도 정치, 경제 영역이거나 미국문화정책 중심의 연구들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³⁾

이 연구는 정치경제 중심의 연구를 벗어나 서울과 평양의 극장이라는

1) 찰스 암스트롱, “북한문화의 형성, 1945-1950”, 『현대북한연구』, 2권 1호 (1999), p. 124.

2) RG 332, box57, “North Korea Today” (1947), p. 18 ; 찰스 암스트롱, 위의 논문, p. 129에서 재인용.

3) 문화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신효숙, 『북한의 문화 형성과 대중교육 : 1945-1950』 (서울: 교육과학사, 2001)이 있고 학위논문으로 조혜정, “미군정기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현경보, “미군정의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 황윤억, “미군정의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 안진이, “미군정의 문화정책과 시각문화 : 1945-1948” (서울대학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조혜정, “미군정기 극장산업 현황연구” 『영화연구』, 14호 (1998) 등이 있다.

문화공간을 통해 군정기 남북에서 진행된 문화구성 과정을 밝히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서울과 평양의 극장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서울과 평양이 남북 문화의 중심지로서 당대 남북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정기의 문화구성을 극장을 통해서 보는 이유는 극장이 정책, 영화산업 그리고 한 사회의 일상 문화가 만나는 꼭지점에 놓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극장은 그 프로그램 성격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대중들의 기호와 의도를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⁴⁾ 실제로 대중들이 영화를 보고 즐기며 근대 문화를 만나고 익히는 공간으로서 사교와 문화전파의 공간이다. 따라서 극장은 단순히 정책이 일관하는 공간 혹은 대중이 완전히 점유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영화정책, 산업과 대중이 충돌적으로 만나 타협하고 경험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군정 당시 남북에서 극장정책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었던 적산극장 처리문제의 비교, 당시 서울과 평양의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와 상영방식을 비교할 것이다. 남북한의 자료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로 정책 차원에서만 연구된 군정기(1945~1948)의 문화를 서울과 평양의 극장을 통해 복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군정기 문화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II. 적산극장의 처리

해방 직후 군정청의 영화정책 가운데 영화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문제 중 하나는 일제시기 일본인 소유였던 적산극장의 처리 문제였다. 해

⁴⁾ 임중엽, 『극장의 역사』 (서울: 살림, 2005), p. 10.

방 당시 남한에는 97개소의 극장이, 북한 지역에는 90여 개의 극장이 있었는데 거의 전부가 일본인 소유의 극장이었다.⁵⁾ 적산극장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국가에서 경제적 지배집단으로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⁶⁾의 문제이자 해방 조선의 문화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였다.

해방전 극장의 90%가 일본인 소유였고 조선인이 그 관리를 맡은 것은 소수에 불과했다. 미군정은 귀속재산 관리법에 의거해 1946년 2월 신문을 통해 적산극장을 대여하기 위해 입찰을 시도했다. 이때 입찰대상이 된 극장은 서울의 16개 관 중 10개 극장이 해당되었다. 입찰공고가 나자 극장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얽혀 논쟁이 되었다. 외국의 경우 인구 1만~2만 명당 1개의 극장이 존재하는데 비해 당시 남한은 “인구 20만에 1개의 극장”⁷⁾이 있을 뿐이었고 극장에서 영화, 연극, 악극 등 공연이 이루어지기에 바빴기 때문에 극장입찰을 받는다는 것은 곧 커다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적산극장 문제는 첨예한 관심사였고 그만큼 논쟁도 많았다.

입찰공고에 대해 결국 종전의 폐해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서 심의위원을 선정해 이들이 입찰에 응한 사람들을 심의 후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되었다. 그런데 심의 후 추천방식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⁸⁾

5) 『동아일보』 1946년 2월 14일자에는 당시 조선의 극장수가 202개 관이며 남한에 116개 관, 북한지역에 86개 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경향신문』에서는 남북 총 극장수가 186개소라고 해 신문마다 약간 통계의 차이를 보인다.

6) 유석춘·최복천, “미군정기의 지배구조와 자본축적”,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 변동과 사회사Ⅱ』 (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p. 120.

7) 『예술신문』, 1947년 2월 4일.

8) 이것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일례로 부산에서는 부산의 4대 극장인 조선, 대화, 삼일, 항구극장의 관리인을 강제로 경질하여 파란이 일어났다. 『예술신문』,

적산 극장의 관리인 문제는 계속해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고 적산극장 입찰도 연기되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조선문화가 어디로 가든 말든 극장을 “자기의 치부도구로 이용하려는 일부 모리배의 망동을 방관하는 것이 죄악”⁹⁾이라는 공분까지 생겨났다. 또한 과거에는 일본인 소유였던 극장이지만 해방이 된 현재도 조선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점이 당대인들에게 좌절감을 주었다. 일제시기 문화정책의 산물이 고스란히 남아 “그야말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하고는 가난한 조선의 인민들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혀 정글의 어둠속에서 살고 있는 것”¹⁰⁾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가진 것이다.

미군정은 1947년 7월 20일 갑자기 적산극장의 불하를 결정하고 그동안 관리인에게 위임관리하던 극장들을 불하했다. 수도극장은 5천만 원,¹¹⁾ 성남은 3천만 원, 조선극장은 1천 50만 원, 서울극장은 4천여 만 원에 불하되어 개인 소유가 되었다. 불하가격은 10년 동안 1년 단위로 할부하는 방식인데 처음에 총액의 2할을 불입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년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미군정청에서 극장의 매매를 허락하자 “이육에 눈이 어두운 친구 블로커들은 극장경영권을 둘러싸고 일대 쟁탈전”¹²⁾을 벌였다. 아무튼 남측에서 적산극장을 둘러싼 오랜 논쟁은 극장의 개인소유로 일단락 되었다. 문제는 문화예술인들 가운데는 극장가격의 20% 선납조건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때문에 이미 특혜를 받고 있던 극장 관

1946년 2월 5일.

- 9) 『예술신문』, 1946년 2월 5일.
 10) 『경향신문』, 1946년 11월 7일.
 11) 수도극장의 불하가격에 대해 『조선신문』에서는 5천만 원, 『자유신문』에서는 4천만 원이라고 달리 전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극장이 1번관인데 비해 다른 극장들이 2번관인 것으로 보아 5천만 원설이 더 맞다고 여겨진다.
 12) “극장은 국영이거나 문화인에게나/극장은 민중의 학교”, 『중앙신문』, 1945년 11월 11일.

리인들에게 극장이 넘어간 점이다. 또 나머지 금액을 20년 분할 상환하라는 조건은 당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거의 무상분배와 같았기 때문에 특혜논란이 줄어들 수 없었다.

한편 북한은 적산극장을 국유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북한은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이름으로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법령을 발표했다.

조선인민을 착취하고 조선의 자원을 일본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일본이 조선 내에 건설한 일체의 기업소, 발전소, 탄광, 광산, 철도 등은 반드시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국가의 발전과 조선인민의 생활향상에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중략)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사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의 반역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상업 및 문화기관, 은행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인민의 소유 즉 국유화한다.¹³⁾

법령에 따라 문화기관으로서 북한의 모든 극장은 국영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적산극장도 모두 무상몰수되어 국유화되면서 남한과 달리 북한은 자연스럽게 적산극장 문제를 해결했다. 국유화 결과 1946년 6월 현재 총 상설영화관 105개 관 중 개인소유가 37개소, 국유화극장이 68개소로 되었으며 국유극장은 인민위원회 선전부 소속의 북조선극장영화관위원회에서 운영하였다.¹⁴⁾ 국유화조치에 대해 물론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조치는 당시 조선인들이 소망하던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조치였고¹⁵⁾ 따라서 남측에서 적산극장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된 것과 달리

13)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V』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p. 177.
 14) 서광제, 『북조선기행』 (서울: 청년사, 1948), p. 136 ; 한상언, “해방기 영화인조직 연구”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석사학위논문, 2007), p. 105에서 재인용.
 15) 소련군사령관 슈티코프의 특별보좌관이었던 그래프초프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유화법령이 채택되기 전까지 북한의 인텔리들은 소련군이 북한의 물자를 소

북측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보다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산의 불하’, ‘원조의 배분’ 등 당시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 많았으므로 문화의 건설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개입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 영화인들 사이에 추민의 ‘국(國)영화론’¹⁶⁾에 대한 공감과 극장을 사영기관이 아닌 “학교나 교회와 마치 한가지로 극장도 도덕적 기관”¹⁷⁾이므로 사영(私營)에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던 탓에 북한에서 적산극장의 국영화는 적절한 조치로 여겨졌고 그만큼 갈등의 소지도 적었던 것이다. 남측에서 이루어진 적산극장의 대여입찰에 대해 “조선의 극장예술을 길러나야 할 중요한 문화재를 순전히 상품적인 입장에서 처리”¹⁸⁾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 대다수였던 만큼 국가가 이를 무상몰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소군정하에 이루어진 적산극장의 국영화에 대해서는 남측신문에서조차 선망의 대상으로 언급되곤 했다.¹⁹⁾

련으로 반출할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는데 국유화가 발표되고 일제의 기업소, 설비들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이관되자 태도가 달라졌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볼 때 국유화조치가 인텔리들에게 만족감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전현수, “산업의 국유화와 인민경제의 계획화: 공업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권 1호 (1999), pp. 89-90.

16) 종합예술인 영화산업은 거대한 자본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데 조선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국가 차원에서 기술자 양성, 기재수입, 흥행과 극장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거대 자본이 드는 영화전문촬영소는 국가가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국영화론의 핵심내용이었다.

17) “극장의 공공관리”, 『동아일보』, 1946년 2월 14일.

18) “극장입찰은 모리배 호이/문화관계 대표들이 반대건의”, 『자유신문』, 1946년 3월 27일.

19) “예술인의 복행문제/진즉 고려되어야 할 요제”, 『예술신문』, 1946년 11월 18일. 자의 기사를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북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 남측에서 극장은 외화의 시장이 되고 있으며 자본의 부족으로 필름과 종이를 구할 수 없는데 비해 북에서는 국영화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영화인들이 월북

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정이나 권력층에 연계된 일부 사람들이 극장을 사영화함에 따라 남측에서 적산극장은 치부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반면 북한의 극장은 “교양수단으로서의 영화작품과 그의 향유자인 인민대중과의 연계를 맺어주는 중요한 공간”²⁰⁾으로 새롭게 의미전환하여 극장에 대한 남북의 문화적 인식차가 시작되었다.

Ⅲ. 남북의 극장 문화 비교

1. 남한의 극장문화

해방 당시 극장시설은 영사실에 영사기 2대와 음향재생기 1대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구의 경우 영사기 4~5대와 음향재생기 수대를 갖춘 것에 비하면 열악한 조건이었다. 지정좌석제를 실시하는 극장도 1947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한 시공관 한 곳뿐이었고 냉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도 드물었다.

1) 극장의 산업 관행

일제시기부터 극장은 개봉관과 비개봉관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개봉관은 ‘봉절극장’ 혹은 ‘일번관’, ‘일류극장’으로 불렸는데 새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영화를 처음으로 받아서 개봉하는 극장을 의미하고 ‘이번관’, ‘재상영관’, ‘이류극장’으로도 불린 비개봉관은 개봉관에서 일차적으로 상영한 영화를 받아서 상영하는 극장이다. 미군정 당시 서울의 16개 극장 중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진단을 하고 있다.

20) 정태소, “우리나라 영화보급발전의 자랑찬 로정”, 『조선영화』, 11호 (1993). p. 22.

개봉관은 약초극장에서 이름을 바꾼 수도극장, 명치좌에서 이름을 바꾼 국제극장, 그리고 1946년 5월 20일 문을 연 국도극장 정도였다.

해방 후 인구증가와 더불어 서울은 산업화와 무관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고²¹⁾ 이는 극장의 증가를 가져왔다. 해방당시 서울에만 16개 관이던 것이 1946년에 수도, 국제, 국도, 중앙, 서울, 단성, 동양, 제일, 장안, 한성, 우미, 명동, 성남, 영보, 도화, 광무, 화신, 계림의 18개 관으로 1948년도에 돈암동에 동보극장이 개관하여 19개 관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 국도, 서울극장은 미국이 조선에 설립한 중배와 계약을 맺은 극장으로 주로 미국영화를 상영했다.

당시 신문에서는 일류극장으로 수도와 국도, 시공관을, 나머지를 이류극장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류극장들 사이에서도 ‘삼변관’, ‘사변관’으로 세밀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에 존재했던 각 영화관의 위상을 다음의 극장협회비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표 1〉 극장협회비(1947)²²⁾

극장	기존회비	변경 회비	비고
국제, 수도, 국도	4,000(원)	7,000(원)	봉절극장
단성사, 동양	1,500(원)	4,000(원)	
중앙, 서울, 제일, 성남, 영보	1,500(원)	3,000(원)	
명동, 우미	1,000(원)	2,000(원)	
한성, 도화	1,000(원)	1,500(원)	
광무, 계림	500(원)	1,000(원)	

* 출처: “극장협회 임시총회”, 『예술신문』, 1947년 2월 27일자 기사내용을 필자가 표로 재구성.

21) 강인철, “미군정기 남한 유입인구의 사회인구학적 분석과 정치적 효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I』, pp. 186~187.

22) 극장협회는 원래 ‘한성극장협회’였다가 1946년 11월 18일에 ‘서울시극장협회’로

1947년 극장 협회비의 조정내용을 보여주는 위 표를 보면 기존에 4천 원에서 7천 원으로 회비가 인상된 국제, 수도, 국도극장이 당시 개봉관으로서 규모나 관객 수에 있어서 단연 앞섰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극장은 영화 및 각종 연예물의 개봉(봉절)관이었음은 물론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거나 지정좌석제의 실시, 안내원을 두는 것으로 다른 극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였다.

단성사, 동양, 중앙, 서울, 제일, 성남, 영보는 기존에는 동일하게 1천500 원이었으나 단성과 동양은 4천 원으로 인상, 나머지는 3천 원으로 인상해 해방과 더불어 달라진 각 극장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이번관에서 개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특히 중하위권 이번관은 대부분 재상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영화보다 악극, 가극의 공연에 주력했다. 단성사나 동양극장처럼 극장의 성격상 전통연예물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관은 외화 위주로 이번관은 악극 등 전통연예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당시 대중들이 외화는 고급문화로, 전통연예물은 하위문화로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서울의 물가는 1945년 8월에 비해 1948년 8월에 10배가 상승²³⁾하는 등 불안정한 상승을 계속했다. 이런 현실은 당시 극장 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해방 당시 10원이었던 요금을 1946년 11월 5일 15원으로 조정하는 등 자주 인상되었다.

명칭을 바꾸고 이사장에 홍찬, 부이사장에 이창용, 이사에 김상진, 박응면을 선출했다.

23) 김기원, “미군정기 사회경제”, 『한국사 18: 분단구조의 정착 2』 (서울: 한길사, 1994), p. 67; 유팔무, “미군정기 남한사회의 ‘삶의 질’과 일상생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1』 (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9), p. 273에서 재인용.

〈표 2〉 서울의 극장요금

연월	영화	연극	공연(음악, 무용 등)
1945.8	10원		
1946.11	15원		
1947.1	20원	30원	50원
1947.9	30원	50원	70원
1948.8	극장입장료 자율조정제로 전환		

* 출처: 군정기 당시 각 신문의 기사를 필자가 표로 재구성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서양영화 개봉작에 80원, 재상영에 60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극장요금체계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고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1948년 8월 1일에는 극장입장료 제한을 폐지하여 각 극장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적산극장 처리와 동일하게 해방정국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이 문제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군정은 극장이 내야 하는 입장세를 1948년 6월 1일자로 3할에서 10할로 인상하는데 극장들은 반대의 뜻으로 1948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휴관했다. 영화인들은 극장입장세가 유흥세보다 더 가혹하게 매겨졌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²⁴⁾ 또 입장요금이 10~20원 정도 차이가 났음에도 개봉관과 비개봉관 사이에 보үүл을 동일하게 적용한 점 역시 극장측의 불만사항이었다. 무엇보다 입장세율의 인상은 한국영화보다 외국 영화에 이로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극장입장에서 영화 외에도 악극, 쇼 공연 등 조선연예물의 상연이 중요했는데 외국영화는 120원만 내면 되었지만 영화보다 입장요금이 높은 조선연예물은 200~300원을 내야했기 때문에 그리잖아도 외화에 밀리는 조선영화 및 연예물에 타격이 아닐 수

24) 『동아일보』, 1948년 6월 1일.

없었다.

또 배급사와 극장 측이 반반으로 나누어 부담해왔던 극장선전비를 중배는 1946년부터 극장 측에 떠넘겼다. 중배와 계약한 수도, 국도, 서울극장이 이에 반발해 선전재료 내지 예고편 기타 선전관계물을 무료로 제공해달라고²⁵⁾ 요청했지만 그들의 요구는 끝내 무산되어 결국 극장 측이 전담하게 되었다. 미국영화가 남측의 극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흥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미국의 정책이 남한 내에서 갖는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영화는 하루동안 한개 관에서 한편의 영화가 평균 6~7회 정도 상영되는데 당시 영화 상영시간표를 보면 평일 평균 3회, 주말 4~5회 정도 상영하였고 다른 볼거리와 동시 상영하는 경우가 흔했다.

〈표 3〉 중앙극장 시간표

동시상영	1회	2회	3회	4회	5회
영화 (밤의태양)	11:00~12:35	1:25~2:55	3:45~5:15	6:10~7:15	8:15~10:15
쇼 (여름의환상곡)	12:45~1:15	3:05~3:35	5:25~5:55	7:55~8:30	

* 출처: 중앙극장의 광고문, 『서울신문』, 1948년 7월 1일.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영화지만 각 회의 상영시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회는 늦은 시간임을 감안해 동시공연하는 쇼 공연을 없애고 영화 역시 1시간으로 단축해 상영했다. 상영시간에 맞추기 위해 영화의 길이를 조절하여 상영하는 관습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²⁶⁾ 자

25) 『예술신문』, 1946년 12월 16일.

26) 위경혜, 『호남의 극장문화사』 (서울: 다홍미디어, 2007), p. 90.

본의 영향이 강해지는 현실에서 작품보다 상영의 편의성과 흥행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극장의 관행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제작되는 영화가 거의 없었고 영화수입도 원활하지 않았던 탓에 극장의 가장 큰 고민은 영화를 공급하는 문제였다.

해방된 뒤로 소련영화가 수삼편이 수입되었거니와 미국영화는 아즉 속히 수입될 가망이 없다. 그러나 ……소련영화는 계속하여 수입할 가망이 있는데 미국영화는 원체 조선의 영화시장이 협착함으로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각 영화회사의 지사 갖춘 것이 설치되리라는 것은 아즉 요원하나 수입이 될 때에는 종전과 가치 다른 나라를 거처서 드러오지 안코 조선은 독립국가인고로 곳장 수입이 될 것이요 한 작품마다 일년 계약으로 매매가 될 것갓다고 추측이 된다.²⁷⁾

독립국가가 되어 이제는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국가대 국가로 영화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해방이 되고 몇 달이 지나도 영화수입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의 시장이 작아 미국영화사들이 배급을 주춤하고 있는 사이 소련은 영사관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화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런 관계로 1946년의 3·1절 기념행사에서도 소련영화가 미국영화보다 더 많이 상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탁통치가 결정되고 좌우의 대립이 심해지자 미군정은 1946년 3월 9일자로 남한 내 소련영화의 상영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이런 상황을 틈타 극장들이 일제시기 때 제작했거나 상영했던 영화를 재상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청전>(1925)이나 나운규의 <아리랑>(1926)

²⁷⁾ “외국영화 언제 드러오나/영화제작 자재 수입계획”, 『중앙신문』, 1945년 11월 30일.

외에도 일제시기 대표적 황국신민화를 주제로 한 영화인 〈군용열차〉²⁸⁾를 재편집해 〈락양의 젊은이〉로 제목을 바꿔 상영하는 일도 있었다.²⁹⁾ 이는 일제문화를 청산하자는 당대 대중들의 소망을 완전히 배반한 행위였음에도 극장을 영리추구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관점과 태도가 극장경영자들 사이에 팽배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일제시기 수입한 영화를 상영하다보니 외국영화에 일본어 자막을 붙인 채 상영하는 등 일제문화청산이라는 구호와 달리 현실에서는 상업적 이득에 따른 혼재현상이 흔했다.

한편의 영화나 공연물의 상영일수는 보통 4~5일 정도를 넘지 않았다. 현재에 비하면 상영사이클이 매우 짧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신 지금과 달리 상영된 영화가 같은 극장에서 두 번, 세 번 재상영되는 일이 흔했다. 영화수급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인데 재고영화조차 없어 1946년 5월에는 9개 극장이 임시 휴관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해방공간에서 극장 프로그램은 조선영화, 악극 등의 조선연예물 그리고 외화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조선영화는 1946년 4편, 1947년 13편, 1948년 8월 15일 이전까지 16편만 제작되었다.³⁰⁾ 당시 남한에서 제작된 영화는 〈자유만세〉(1946), 〈해방된 내 고향〉(1947)과 같이 해방의 기쁨을 담은 영화와 주로 ‘계몽영화협회’에서 제작되던 〈의사 안중근〉(1946), 〈윤봉길의사〉(1947)와 같은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제작된 작품 대다수는 35mm 필름을 구할 수 없어 16mm 영화로 퇴행하였다.³¹⁾

28) 〈군용열차〉는 1938년 서광제 연출작품으로 조선의 두 청년이 중국스파이들로부터 일본의 군용열차를 지켜낸다는 이야기이다. 카프영화운동에 가담했던 서광제가 친일파로 전향해 만든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29) “일제의 국책영화 기만상영으로 모리/관객의 물론이 자자/오욕의 열매로 위안불원”, 『서울신문』, 1946년 3월 4일.

30) 조혜정, “미군정기 극장산업 현황연구”, p. 508.

31)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서울: 소도, 2004), pp. 217~219.

영화의 제작편수가 적은 대신 청춘극장, 자유극장, 극예술협회 등에서 올린 연극과 백조, 라미라, 반도가극단의 가극, 백민, 신천지, 남대문 악극단 등의 악극이 활발히 공연되었다. 조선연예물들의 예제를 보면 〈녹두장군〉, 〈마의 태자〉, 〈단종애사〉 류의 사극과 〈홍도야 우지마라〉,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며누리죽엄〉 류의 신파성이 짙은 청춘남녀사랑물이나 가족애정물이 대부분이었다. 사극물은 독립상황에서 안중근 등의 독립투사들이 영화로 조명되던 것과 맥을 같이하며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인물들을 극화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과 더불어 민족문화건설이라는 대의 안에는 봉건문화의 청산도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여전히 전통적 애정관, 가족관에 묶여 갈등을 빚는 사회현실은 신파애정물에 투영되었다.

한편 외화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작품들이 다양한 장르와 스타를 내세우며 상영되었지만 미국영화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1945년 11월부터 1948년 3월까지 수입된 외화 총 700편 중 미국 공보부 뉴스영화 38편, 미국뉴스 289편, 미국극영화 422편이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미국영화의 영향력과 중배의 독점형태를 알 수 있다.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수도극장의 경우 1946년 한해동안 상연한 공연물은 총 44종인데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물 23종을 제외하고 외화가 21편을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 미국영화가 19편이었다. 중배와 계약을 맺지 않은 단성사의 상연물 43종 중 외화가 17편이고, 12편이 미국영화였다는 사실은 어느 극장을 막론하고 외화 그중에서도 미국영화의 상영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반증한다.³²⁾

상영된 미국영화의 면면을 보면 〈철완 다산(타잔)〉이나 〈쾌남 락클

32) 이는 『한성일보』, 『동아일보』의 1946년의 광고를 분석해 도출한 수치이므로 광고를 내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었고 총편수에는 동시상영인 경우도 2편으로 산입하였다.

린)와 같은 액션영화, <우리집의 낙원>과 같은 코미디, <첫사랑>, <아라스카의 정열>과 같은 멜로드라마들로 구성되었다. 수많은 모험 액션물들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마을을 수호해주는 타잔처럼 ‘정의롭고 강한’ 미국의 이미지를 만들었으며 코미디영화와 멜로드라마는 자유연애와 평등주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이미지를 연결하는데 일조했다. 극영화 외에도 <원자폭탄의 위력>, <극동전법재판>, <민주주의 선거 알아두자>와 같이 원자폭탄, 제2차대전, 민주주의 등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이나 미국의 근대적 제도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들이 상영되었다.³³⁾ 미국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에 대해 “미국사회의 부패나 타락상을 다룬 영화, 미국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영화,……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제국주의를 암시할 수 있는 영화” 등이 신생독립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서를 만들었다.³⁴⁾ 이렇게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 영화가 보여주는 미국의 현실은 ‘아름다운 국가 미국’이라는 계획된 이미지였다.

때마침 우리 해방의 선진 미국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게 된 것은 비단 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진보된 기술과 수리론(手理論)은 우리 영화의 큰 비료가 되기 때문. 더구나 미국 영화가 아니면 기도할 수조차 없는 (1)트랙크 촬영법(예를 들면 <시아고(市俄古)의 화재장면, <비는 온다>의 홍수장면 등) (2) 테크닉, 칼라(색채영화)와 아름다운 자연미 (3)입체영화의 원근관계와 영상의 입체감과 그 모조이론 토대 등 어느 것 하나 빼 것 업시 모다 우리 영화가 배워야 할 사료가 되기 때문이다.³⁵⁾

33) 조혜정, “미군정기 극장산업 현황연구”, p. 506.

34) “Operational Guidance for Motion Picture” OWI, April 21, 1944, RG 59, Lot 52-249, Records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Public Affairs and Cultural Relations(Archibald Macleish), Box 1, 김균, “미국의 대외 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한국언론학보』, 제44권 3호 (2000), p. 66 재인용.

‘미국영화가 아니면 기도할 수조차 없는’ 기술력은 ‘우리영화가 배워야 할 사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편 조선과 다른 미국영화의 ‘생활감정과 풍습’ 때문에 우려를 낳을 만큼 미국영화는 이질적인 것이기도 했다. 그렇긴해도 남한의 극장을 거의 점령한 미국영화들은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며 서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선진화의 욕망”³⁶⁾과 근대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이와 같이 해방공간에서 서울의 극장은 외화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영화가 점령했고 그 뒤를 이어 악극, 가극과 같은 조선연예물이 차지했다. 악극류가 보여주던 애정신화와 가족비극에서부터 외화들이 보여주는 개인화, 민주적 관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극장에서 전개되는 가운데 조선영화나 연예물에 비해 외화의 영향력을 막강하게 느끼며 영화에서 본 미국의 문화를 근대화의 모델로 상정했다.

2. 북한 지역의 극장문화

1) 극장의 상영 관행

북한의 통계에 따르면 1946년 기준으로 북측에는 81개소의 영화관이 있었고 평양에만 6개의 영화관이 있었다.³⁷⁾ 『조선신문』,³⁸⁾ 『로동신문』, 『민

35) 용천생, “외국영화수입과 그영향”, 『서울신문』, 1946년 5월 26일.

36) 이선미, “‘미국’을 소비하는 대도시와 미국영화—1950년대 한국의 미국영화 상영과 관람의 의미”, 상허학회, 『1950년대 미디어와 미국표상』 (서울: 깊은샘, 2006), p. 92.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1946~196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 (국립출판사, 1961)에는 문화시설 수에서 극장과 영화관을 분리하고 있다. 1946년에 극장 2개, 영화관 81개가 있었으며 평양시 영화관의 수가 그 가운데 6개소란 의미이다. 또 이 통계에서 1949년에 극장 11개소, 영화관 110개소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투사신문』 (1948년 11월 19일)을 보면 1944년에 전체 76개소의 극장이 있었고 1948년에는

주조선』, 『투사신문』 등에서 소개하는 평양의 영화관은 1947년 1월 기준 대중극장, 조선극장, 삼일극장, 문화극장, 노동극장, 명성극장, 고려극장 등 7개 관으로 증가했고 1947년 5월 국립극장의 탄생에 이어 1948년에는 동평양극장, 서평양극장이 생겼다. 또 모란봉극장과 ‘로극’³⁹⁾이라 불리는 극장에서도 영화상영이 이루어졌으며 시립예술극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노동극장과 1948년 12월 30일에 영화상설극장으로 ‘교통구락부’⁴⁰⁾가 생겨나면서 영화상영이 활기를 띠었다.

소군정은 북한을 사회주의화 하면서 흥행장으로서 극장이라는 기존관념과 달리 극장을 교육기관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책을 펼쳤다. 그들은 “과거 일부유한계급들을 상대로 그들의 오락장소에 지나지 않았던 극장 및 영화관”⁴¹⁾을 인민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 이동영사활동과 더불어 농촌과 각 지역 직장 내에 영화관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극장이 도시에 집중된 결과 문화향수권에서 소외된 지역인민들에게 문화를 되돌려주고 직장 내에서 간편하게 노동과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기

115개에 이른다는 기사가 있어 통계숫자와 약간 차이가 난다. 통계는 1947년에 7개로 증가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선청년』에는 1947년에 평양에만 극장이 12곳이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아마 극장과 영화관을 분리 또는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남한에서도 그랬듯이 공연장이 영화상영관으로 활용되었고 연극영화상연관이 구별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극장이라는 명칭이 영화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신문에 영화상영 정보를 보면 이미 1947년도에 7개소 이상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38) 『조선신문』은 후에 『소비에트신보』로 명칭변경하여 소련의 소식을 알려주는 신문이었다.

39) 로극은 ‘대중극장’을 ‘대극’, 수도극장을 ‘수극’이라고 부르던 당시 관행을 생각할 때 러시아극장의 준말로 여겨지며 소련군정이 소유한 극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에서 미군이 부민관을 점유하고 자신들의 영화관으로 사용한 예와 마찬가지로 소련이 점유한 극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40) 영화관 개관 안내글에서 교통구락부는 소련영화를 우선적으로 상영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41)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p. 363.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차이를 감안하면 실제 평양의 극장 수는 훨씬 더 많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에도 문화의 중심지는 서울이었으므로 3·8선으로 통행이 막히자 북측에서는 영화의 수급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북측지역은 불가피하게 소련영화의 막대한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다. 북측에서는 미국영화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반면 소련영화의 상영은 자유롭게 허용했다. 영화관의 국유화가 이루어지면서 문화의 방향성은 더욱 수월해졌다.

소련영화를 전담하여 수입하는 ‘인민영화사’가 1945년 11월에 만들어졌으며⁴²⁾ 1946년 7월에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내에 5명으로 구성된 ‘영화보급협회’가 조직되었다. 1946년 12월에는 사영으로 운영되던 인민영화사와 영화보급협회를 통합하여 ‘북조선극장영화관위원회’로 재편하며 위원장을 주인공, 서기장을 추민이 맡았다. 위원회 산하에는 이동영사대를 두었다. 배급 지역은 모두 7개의 지역, 평양특별시위원회, 평안남도위원회, 평안북도위원회, 황해도위원회, 강원도위원회, 함경남도위원회, 함경북도위원회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상업성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문에서 영화광고를 없애고 안내 또는 정보기사를 통해서 영화상영내용을 알렸다. 영화요금은 1946년에는 15전이었고 화폐개혁후인 1948년에는 10원, 기타 특별홍행요금이 40~50원이었다.⁴³⁾ 입장세는 시 소재 극장의 경우 입장액의 30%, 그 외 소재 극장은 15%로 세금징수는 매일 이루

42) 전쟁 전까지 북한에 있다가 월남한 시인 박남수에 의하면 인민영화사는 형식상 민간기업이었고 사장은 황갑영(후에 월남함)이었으나 전무로 있었던 삼일기업사 사장 박정호가 실권을 갖고 있었다. 인민영화사가 1945년 12월부터 1946년 12월까지 ‘문예총’에 약 20만 원, ‘조소문화협회’에 약 30만 원씩 매월 지원했다고 한다. 그 밖에 인민영화사는 ‘문예총’ 산하 단체인 각 극장에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박남수(현수) 저, 우대식 편저, 『적지 6년의 북한문단』, (서울: 보고사, 1999), p. 53.

43) 서광제, 『북조선기행』, p. 82 ; 한상연, “해방기영화인조직연구”, p. 106에서 재인용.

어졌다.⁴⁴⁾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입장요금이 서울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입장세에서 흥행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 차등제가 실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극장의 부족을 보완해 ‘조소문화협회’의 이동영사활동이었으며 1946년 333회, 1948년 6월 현재 1,153회의 이동영상활동이 있었다. 지방과 각 직장으로 영사활동을 나간 결과 1948년 11월 한달 동안 8개의 직장에서 6천 명이 이동영사활동의 혜택을 받았다. 이때 상영된 영화는 모범적 소비에트 영화로 불려지는 〈차파예프〉, 〈대급전〉, 〈베를린〉, 〈10월의 레닌〉, 〈총가진 병사〉, 〈무지개〉와 같은 소련영화였다.⁴⁵⁾ “(공장)로동자들의 숙소는 새 가구, 축음기, 자봉침, 자전거들이 놓여있고……공장구락부에서는 매일 영화를 상영하며 음악연주회도 있고 연극도 자조 상연한다.”⁴⁶⁾ 공장의 모습을 묘사한 이 내용만 보아도 활발한 이동영사활동으로 일반인들의 문화체험의 범위가 남한의 그것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대비 극장 시설이 적었고 운동차원의 영사활동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극장에서의 영화 상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동영사 사업이었고 특히 좌우이념대립이 강한 당시 상황에서 영화를 정책선전과 홍보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3·8선 지역에서의 이동영사 활동을 강조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동영사활동은 서울에서 좌파 영화인들에 의해 미국의 중배에 맞서는 새로운 배급방식으로 여겨져 운동차원에서 실행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소군정하의 북측에서 극장은 국유화가 되면서 상업성을 대신해 계몽과 교육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상설영화관만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이동영사활동을 통해 일상생활과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44) 서광제, 위의 책, p. 82 ; 한상연, 위의 논문, p. 106에서 재인용.

45) 『투사신문』, 1948년 11월 19일.

46) “새로운 문화활동에 입각”, 『조선신문』, 1947년 6월 29일.

폭이 넓어졌다. 군정기 북한에서 자본주의 문화의 결을 거슬러 사회주의 문화를 형성하려는 시도 속에서 극장 역시 흥행장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의미변화하고 ‘영화보기’가 오락행위를 넘어서 문화운동, 계몽운동의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2) 프로그램

북한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극장은 영화전용관이 아니라 영화, 연극, 가극, 영화가 동시에 상연되는 공간이었다. 북한의 신문을 참고해보면 서울의 극장과 마찬가지로 한 번 상영했던 영화를 재상영, 연장상영하거나 극장 자체를 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북측에서도 영화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해방공간에서 평양의 극장 프로그램은 조선영화, 조선연예물, 외화로 구성되었다. 군정기 동안 북측에서는 1946년도에 2편, 1947년에 2편, 1948년에 7편의 기록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우리의 건설>(1946), <민주선거>(1946), <영원한 친선>(1947)과 같이 모두 기록영화였다.⁴⁷⁾ 군정기 기록영화는 1946년 8월 설립된 영화제작소에서 제작되었는데 해방된 이후 북한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소련과의 우호적 관계를 과시하는 내용들로서 계몽적 성격이 강했다. 이들 기록영화는 주로 소련에서 수입한 극영화와 동시상영되었다.

조선연예물은 연극, 악극, 가극 등이었는데 북한이 악극과 같은 신파성 연극을 제거하려고 했음에도 반도가극단과 조선악극단 등 악극단의 공연도 있었다. 서울의 극장에서 보여주던 조선연예물들이 그 제목에서

⁴⁷⁾ 소군정기에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는 1946년 <우리의 건설>, <민주선거>, 1948년 <인민위원회>, <승리의 민주건설>, <승리의 구월>, <8.15>, <인민군대>, <영원한 친선>, <홍광>, <자라나는 민주모습>, <남조선 연석회의> 등이 있다. 이명자, 『북한영화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p. 203.

부터 신파적 애정물의 특징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과 달리 평양의 조선연예물의 예제는 〈항도〉, 〈최후의 밀사〉, 〈백두산〉 등 신파적 성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고상한 리얼리즘’에 따라 리얼리즘적 연기와 표현양식이 장려되면서 악극이더라도 남한에서 공연되는 것과는 차별성을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⁴⁸⁾

서울과 마찬가지로 평양도 외화의 강렬한 영향아래 놓였다. 특히 남한처럼 일제시기 만들어진 친일영화들이 극장에서 상영될 수 없었고 몇 편의 기록영화만 제작되던 상황에서 소련, 중국, 동유럽의 극영화가 주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평양의 “모든 극장에서는 소비에트영화가 절대적 인기를 끌고”⁴⁹⁾있었고 1946년에만 소련영화를 관람한 관객이 250만 명에 이르렀다. 소련영화는 상영편수도 많았지만 조선영화가 보여주지 못한 소재와 장면으로 많은 조선인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⁵⁰⁾

먼저 색채와 농담과 조화의 미, 즉 색채의 원근과 중경정도하고 선명한 대비와 조화는 참으로 경이 그것이라 하겠다. ……다음 트릭(특수촬영을 위

48) 1951년 월남해 영화음악에 종사한 진정근은 북한에서 영화경험과 남한에 와서 본 경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 “거기는 신파적인 그런거는 발도 못 붙여. 내가 쥔 침에 여기와서 보니까 신희극단이 제일 유명하거든. 시공관에서 〈퇴우〉라는 걸 한다고 그래, 가서보니까 대한민국 최고 배우라는 김동원씨가 나와서 하는데 그 목소리가 그제 꾸며대는걸 그냥 하고 있더라고. 그걸 잘한다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 이북에서는 저건 명함도 못내미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국영상자료원편, 『한국영화를 말한다—1950년대 한국영화』, pp. 260~261.

49) 대중극장의 경우 1947년 2월에 모두 10편의 영화를 상영했는데 이 가운데 기록영화 〈민주선거〉를 제외하면 모두 소련영화였고 3월에 상영한 영화 10편도 모두 소련영화였다. 소련영화 〈아르비트의 대의원〉의 경우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상영하기로 했으나 12일까지 연장상영 했다. 조선극장은 1947년 2월에 상영한 영화 세편 모두가 소련영화였고 동년 3월의 8편의 상연작 중 연극 두편과 공연 한편 등 영화외의 공연을 제외하면 5편 모두 소련영화였다. 『조선신문』, 1947년 4월 26일.

50) 한국영상자료원편, 『한국영화를 말한다—1950년대 한국영화』, p. 260.

한 장치와 조작)와 촬영기술의 웅대성과 기술적 효과는 에른스트 루비취의 〈십계〉도, 엘리펜슈탈의 〈청광〉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우수한 기술적 월등, 예술적 우수를 품고 있다.⁵¹⁾

소련영화는 당시 북한에서 만들어진 영화와 달리 기술적인 면에서 월등했다. 기록영화 몇 편이 제작되는 상황에서 ‘선명한 색채 조화’를 보여주는 소련영화는 조선영화가 성취해야 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소련영화가 담은 내용은 소련의 사회주의화 이후 성공적인 산업화와 생활 모습이었다. 〈레닌〉, 〈시약〉과 같은 ‘역사적 혁명영화’와 〈탐정의 위훈〉, 〈무지개〉와 같은 ‘예술영화’가 소개되어 큰 인기를 모았다.⁵²⁾ 그런데 작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이들 작품이 첩보영화에서부터 청소년영화, 멜로영화로 구분할 수 있는 영화로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기초한 점만 제외하면 대중 장르로서의 소질을 갖춘 영화들이었다.

물론 소련영화는 주로 사회주의화 이후 생활을 보여주며 “북조선인민들에게 소련의 진실성과 소비에트인민의 문화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⁵³⁾ 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지끼쓰판〉이란 영화는 소비에트사람 행복한 주민으로 된 따지끼쓰판의 무수한 부원—풍부한 꿀호즈 과수원과 포도원……과거에 아모 권리없던 피압박민족 따지크족이 소비에트주권이 후 오늘에 그 얼마나 부요하고 쾌활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⁵⁴⁾ 있으며 또 다른 영화 〈먼 곳의 신부〉는 카자흐스탄을 배경으로 “민족문화의 生長, 근로자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 민족간의 형제적 친선”⁵⁵⁾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화 이후의 풍족한 생활, 문화적 태도의

51) 추민, “〈석화〉시사회”, 『민주조선』, 1947년 3월 20일.

52) 『조선신문』, 1947년 4월 26일.

53) 『조선신문』, 1947년 4월 26일.

54) 『조선신문』, 1946년 11월 15일.

55) “영화부문에서 본 문화생활”, 『투사신문』, 1948년 11월 19일.

변화, 소비에트에 소속된 이후의 행복의 증가 등을 보여주는 이유는 북한지역에 대한 소련의 속내를 드러내는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소련영화를 접하면서 “북조선 인민은 수다한 예술영화 중에서도 특히 선진 소련의 예술영화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자기의 커다란 고양의 대상”⁵⁶⁾으로 삼았다. 소련영화는 당시 북한에서 “부르조아 예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한 선진문화, 문화의 선봉대”⁵⁷⁾로 인식되었다. 영화를 통해 소련의 ‘고상한’ 현실을 본 북측의 대중들은 근대 민족문화 건설에 있어 부르주아 문화와는 거리를 둔 소련의 문화를 진보적인 것으로 섭취해 남측 대중들과는 다른 근대 민족국가의 모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평양의 극장에서 조선영화는 거의 북조선에서 제작된 기록영화였고 그 외에는 조선연예물과 소련영화가 주를 이루었다. 신파적 성격을 탈각한 조선연예물과 선진적 문화를 보여준 소련영화는 서울의 극장에서 보여지는 예제들에 비해 국가의 문예정책과 방향성을 함께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IV. 결론

미·소균정의 정책적 목표아래 다수의 영화들이 조선에 소개되어 남북의 영화관은 이들의 영화들로 거의 채워졌으며 해방 후 조선 사람들이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장 큰 경로는 바로 영화였다.⁵⁸⁾ 물질 기반을

56) 위의 신문, 1948년 11월 19일

57) “소비에트예술은 세계각국 문화인들에게 있어 광명으로 된다”, 『조선신문』, 1948년 9월 7일.

58) 임희섭, “한·미 문화관계에 대한 연구—한국인의 미국문화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있는 조선영화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이 조선영화가 흥내 낼 수 없는 물량과 기술력, 질적 우수성으로 무장한 외화들이 극장가를 점령했다. 스티븐 로스(Steven J. Loss)나 피터 롤린스(Peter C. Rollins)가 지적하고 있듯이 영화는 단순히 오락거리가 아니라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역사적 창이자 국가의 정서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것⁵⁹⁾으로, 대중은 미국과 소련의 영화를 보며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모방하였다.

영화는 사회적 표현이란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의 문화적 현실과 아메리칸적 사고태도, 생활태도 등을 알고 또한 거기에서 배울 바를 배우고 좋은 점을 섭취해야할 것이다.⁶⁰⁾

해방후 위대한 소련 군대와 소련정부의 우의적 방조에 의한 소련영화는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일상적으로 선진적 소련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각 방면에 있어서 소련문화섭취에 커다란 역할을 놀았던 것이다.⁶¹⁾

극장관람으로 남북의 대중들은 각각 미국영화가 소개한 거대자본의 영화를 통해 개인주의와 자유연애를 익히고 소련영화를 통해 꼴호즈의 집단노동, 사회주의적 생활태도와 같은 소비에트식 생활방식을 습득했다. 이로써 극장이라는 공간은 남북의 대중들이 서로 다른 정책, 서로 다른 문화를 만나고 경험하며 앞으로 건설할 근대 문화의 모습을 상상하는 공간이 되었다.

로”, 고려대 아세아문화연구소, 『한국문화에 미친 미국문화의 영향』 (서울: 현암사, 1984), p. 96.

59) 김영덕, 『영화로 본 미국문화』 (서울: 신아사, 2008), p. 2.

60) 이태우, “미국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향신문』, 1946년 10월 31일.

61) “선진소련문화의 교류/민족문화건설에 공헌”, 『투사신문』, 1948년 11월 13일.

그런데 당대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보면 미국영화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는데 비해⁶²⁾ 소련영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남한과 달리 북한이 문예정책을 일관되게 국가에서 관리하며 언론통제를 이루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찰스 암스트롱이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의 점령정책이 많은 부분에서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⁶³⁾ 문화정책에서도 실패하며 영화인들의 원성을 산 일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문화예술인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 적산극장의 처리와 같이 미공보부의 영화정책은 다소 일방적이었기 때문이다. 중배의 독점형포로 극장자본이 제작자본으로 순환하지 못하는 기형적 영화산업이 형성되면서⁶⁴⁾ 남한의 영화인들은 미군정의 영화와 정책을 자주문화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반면 소군정의 문화정책은 지도자로서의 소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문화건설의 핵심역할을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맡김으로서 토착문화를 강조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⁶⁵⁾ 당시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조선영화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조선인들이 열망하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 형태였다. 이런 차이로 인해 미·소문화에 대해 영화인들이 느끼는 공감정도

62) 당시 신문에서는 “〈오페라 헬〉, 〈우리집의 낙원〉, 〈훌륭한 휴일〉 등과 같은 좋은 휴먼이즘영화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내용은 아메리카 영화의 독특한 마술과 도박성, 공허성, 그리고 광조성(狂躁性), 넌센스, 예로튀시즘 등에 의하여 일정한 환영(幻影)의 시간을 강제할 뿐이다. 물론 그 일정한 시간을 강제하는 능력과 험러운 영화의 기술적 위대성 그리고 자본의 힘에는 경탄하지 않을 수 없으나 대체로 미국영화에는 시와 사상이 결여된 감이 있다는 것을 아러야 할 것이다(이태우, “미국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향신문』, 1946년 10월 31일)”와 같이 미국영화가 보여주는 미국식 생활방식이나 상업영화양식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63) 찰스 암스트롱, “미국과 소련군정의 비교연구”, 『국제문제』, 302호(1995), p. 29.

64) 조혜정, “미군정기 극장산업 현황연구”, p. 523.

65) 찰스 암스트롱, 『북조선탄생』, p. 268.

는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미군정과 미국문화의 영향으로 남한은 경쟁과 자본화가 심화되고 미국영화를 통해 경험한 미국문화에 점차 익숙해졌다.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놓이게 된 남한의 극장과 달리 북한의 극장은 국영화되어 상업 활동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소련이 요구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문화의 역할에 주력하게 되었다. 영화가 보여준 미국과 소련의 이미지는 조선의 대중들이 근대 민족문화를 상상하는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어 현재 남북문화를 차별화하는 토대를 형성했다.

■ 접수: 2009년 9월 9일 / 수정: 2009년 10월 14일 / 게재확정: 2009년 10월 19일

【참고문헌】

- 강만길 외 편. 『한국사 18: 분단구조의 정착 2』. 서울: 한길사, 1994.
- 강현두·원용진·전규찬. 『현대 대중문화의 형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V.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 . 『북한관계사료집』 25,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파주: 한울, 2008.
- 김 균. “미국의 대외 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한국언론학보』, 제44권 3호 (2000).
- 김영덕. 『영화로 본 미국문화』. 서울: 신아사, 2008.
- 박남수(현수) 저. 우대식 편저. 『적지 6년의 북한문단』, 서울: 보고사, 1999.
- 상허학회. 『1950년대 미디어와 미국표상』. 서울: 깊은샘, 2006.
- 송낙원. “해방후 남북한 영화형성기”. 정태수 책임편집. 『남북한 영화사 비교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7.
- 안드레이 란코프.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 정치사』. 서울: 오름, 1999.
- 윤초. 『북조선기행』. 서울: 조선중앙일보출판부, 1947.
- 위경혜. 『호남의 극장문화사』. 서울: 다홀미디어, 2007.
- 이명자. 『북한영화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임종엽. 『극장의 역사』. 서울: 살림, 2005.
- 임희섭. “한·미 문화관계에 대한 연구—한국인의 미국문화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 아세아문화연구소. 『한국문화에 미친 미국문화의 영향』. 서울: 현암사, 1984.
- 전현수. “산업의 국유화와 인민경제의 계획화: 공업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권 1호 (1999).
- 정태소. “우리나라 영화보급발전의 자랑찬 로정”. 『조선영화』, 11호 (199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 조혜정. “미군정기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 “미군정기 극장산업 현황연구”. 『영화연구』, 14호 (1998).
- 찰스 암스트롱. “미국과 소련군정의 비교연구”. 『국제문제』, 302호 (1995).
- . “북한문화의 형성, 1945-1950”. 『현대북한연구』, 2권 1호 (1999).

- 찰스 압스트룡, 김연철·이정우 옮김. 『북조선탄생』. 파주: 서해문집, 2006.
- 추 민. “조선민족영화운동의 회고와 전망”. 『신문학』, 1946년 11월.
- 한국영상자료원. 『신문기사로 본 한국영화 1945~1957』. 서울: 공간과사람들, 2004.
- 엮음. 『한국영화를 말한다—1950년대 한국영화』. 서울: 이채, 2004.
- 엮음. 『한국영화를 말한다—한국영화의 르네상스 2』. 서울: 이채, 2006.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1, 2』. 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9.
- 한상언. “해방기 영화인조직 연구”.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석사학위논문, 2007.
- 현경보. “미군정의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 황윤익. “미군정의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 『경향신문』, 1946년 10월 31일. 이태우. “미국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경향신문』, 1947년 2월 2일. “조선극장문화 위협하는 중앙영화사의 배급 조건”.
- 『노력인민』, 1947년 7월 9일. “다이나마트를 던져 문화공작단공연을 방해”.
- 『대동신문』, 1946년 3월 13일. “시내극장 대여입찰”.
- 『동아일보』, 1946년 2월 14일. “극장의 공공관리”.
- 『민주조선』, 1947년 3월 20일. “〈석화〉시사회”.
- 『서울신문』, 1946년 3월 4일. “일제의 국책영화 기만 상영으로 모리/관객의 물론이 자자/오욕의 열매로 위안 불원”.
- 『서울신문』, 1946년 4월 19일. “군정법령으로 영화는 검열”.
- 『서울신문』, 1946년 5월 26일. 용천생. “외국영화수입과 그영향”.
- 『예술신문』, 1947년 2월 21일. “극장측 최후조건 제시?말성만흔 「중배」문제의 동정”.
- 『자유신문』, 1946년 10월 19일. “영화의 상영검열통제/허가법령 115호를 제정공포.”
- 『중앙신문』, 1945년 11월 11일. “징세제폐지 진정/흥행업자들이 군정청에”.
- 『중앙신문』, 1945년 11월 30일. “외국영화 언제 드러오나/영화제작 자체 수입계획”.
- 『중앙신문』, 1946년 1월 24일. “38이북 영화소식”.
- 『중앙일보』, 1945년 11월 24일. 안석주. “건국과 문화제언”.
- 『투사신문』, 1948년 11월 13일. “선진쓰러문화의 교류/민족문화건설에 공헌”.
- 『투사신문』, 1948년 11월 19일. “영화부문에서 본 문화생활”.
- 『조선문학』. 문학예술출판사. 창간호, 1947.
-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1950.

Abstract

A Study on the Theater during Military Government(1945~1948)
and Its Implications for modernity

Lee, Myung-ja(Academy of Cultural Studies, Dongguk Univ.)

This study analyzed the comparison of the problems to deal with JeokSan Theater(return properties) which was at the center of heated debate in relation to the theater polic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t the time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rough the theater where was the space of the formation of policies, industries and cultures, the films which were projected in theaters in Seoul and Pyeongyang, and the projecting method, and the implication.

During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the theaters in Seoul amounted to 18 theaters by increasing gradually from 16 theaters. Here, the theaters were the spaces where plays, musical dramas, entertainments along with films were shown, and the screening rates of foreign films were high. U.S. movies in also foreign films occupied the theaters by being distributed almost exclusively through Central Film Distributor which U.S.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U.S. movies of action, melo, comedies, which were selected as the movies suitable for the occupying nation, played a prominent part in organizing its own country's image - the strong and beautiful U.S. - which U.S. wanted to spread to foreign countries.

During Soviet military government, the theaters in Pyeongyang increased gradually after starting with 6 theaters. Though plays, musical dramas,

operas were shown simultaneously in the theaters as well as in South Korea, the concept of a movie theater and a performance hall began to be separated gradually. when the movie supply from South Korea was blocked because of the 38th parallel, Soviet movies occupied most theaters in Pyongyang. Soviet movies showed the results of socialist modernization such as Soviet change after socialism, kolkhoz, cooperative labor, industrialization.

Under the influence of U.S. military government and U.S. culture, South Korea got more deeply in competition and capitalization, and got used gradually to U.S. culture every day through U.S. movies. In contrast to the theaters in South Korea placed on the market principle of capitalism, the theaters in North Korea gave commercial activities a wide berth according as they were nationalized and focused on the role of the culture under socialism which Soviet required. The images of U.S. and Soviet which the movies showed became a barometer for people in Korea to image the modern national culture.

Keywords: theater, military government period (1945-1948), U.S. military government, Soviet military government, modernity, return properties, projecting practices, program

이명자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김정일 통치시기 가족멜로드라마 연구—북한의 근대성과 그 변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전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7·1경제관리조치'이후 북한영화에 나타난 혁명적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긴장관계』, 『영화로 만나는 남북의 문화』, 『북한영화사』, 『북한영화와 근대성』 등이 있다.

학교급에 따른 학교 평화교육 실태의 차이와 의미 연구*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사회과를 중심으로

설규주(경인교육대학교)

국문요약

세계화, 다문화 등의 사회 변동과 함께 인류가 겪는 갈등의 양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 해결과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평화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반세기가 넘게 남북 분단과 갈등을 겪어온 우리나라 현실에서 평화교육의 가치는 더욱 절실하다. 본 연구는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화교육이 학교급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그에 기반하여 학교 평화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 사회과를 통한 평화교육 수업을 관찰하였고 교사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평화교육은 학교급의 특성, 교사의 전공 배경, 교과 성격과 내용, 학습자의 수준 등의 측면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학교급의 장점을 살리면서 전반적인 학교 평화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급간 연계성과 학교급별 맥락성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평화교육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평화교육, 학교 평화교육, 사회과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본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논문임.

I. 서론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다소 낭만적인 의미와는 달리,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인류는 상호의존적 관계 못지않게 대립과 갈등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지구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남북, 이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매개로 한 갈등 양상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 대체로 동질적, 폐쇄적이었던 한국 사회가 다원화, 개방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갈등이 부분적으로 치유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갈등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질 뿐,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갈등과 대립의 직접적, 간접적 원인을 해소하여 완전한 평화와 공존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갈등을 완화시키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원만한 조정과 해결에 이를 수도 있고, 반대로 반목과 대립으로 이어져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손해를 겪을 수도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 해결과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평화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특히 학교라는 공식적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은 정규 교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그 가치와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갈등과 대립이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학교 평화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그것이 학교급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에 그 의미를 파악한 후, 향후 학교

평화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평화교육 현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현장 수업 관찰 및 면담 방법을 택하였다. 수업 관찰은 학습내용 및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 평화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인 사회과 수업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면담은 수업을 담당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평화교육 실태의 한 단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위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II장에서는 먼저 학교 평화교육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학교 평화교육의 개념과 배경, 학교평화교육의 중요성 등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교 평화교육과 사회과교육의 관계를 2007,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학교 평화교육 실태가 제시될 것이다. 여기서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평화교육을 주제로 실시된 사회과 수업 관찰 내용과 수업 교사와의 면담 내용 분석을 통해 학교 평화교육 현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관찰 및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평화교육의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학교급의 측면, 교사 개인 변인의 측면, 교과 내용의 측면, 학습자의 특성 측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V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의 학교 평화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II. 학교 평화교육과 사회과 교육

1. 학교 평화교육의 의미와 의의

1) 평화교육의 개념과 성립 배경

(1) 개념의 확장

평화교육을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평화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폭력이나 전쟁, 테러 등 물리적, 신체적 반(反)평화 요소가 부재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교육은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는 물론, 차별, 무시, 빈곤 등과 같이 구조적이고 간접적인 요소들까지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띠면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교육을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히스(Hicks)와 갈통(Galtung)이 구분한 폭력과 평화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히스와 갈통은 폭력을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그에 대응하는 소극적,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두 사람의 견해를 참고하여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폭력의 성격과 그에 대응하는 평화의 성격

폭력	직접적 폭력	간접적 폭력
성격	물리적, 신체적 폭력	구조적, 잠재적 폭력
예	폭동, 테러, 전쟁 등	빈곤, 인종 차별, 성차별, 무시 등
	⇕	⇕
평화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성격	직접적 폭력의 부재 상태	간접적 폭력의 부재 상태

(2) 국내외적 배경

평화교육은 1950년대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는 제2차 대전 직후였기 때문에 국제이해교육에서 다른 평화라는 개념은 주로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구조적 현상으로서의 폭력을 다루기보다는 대체로 직접적인 폭력과 같은 비평화적 요소와 소극적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평화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책임감 등을 높이는 데 평화교육의 주요 목적이 있었다. 한편, 1970년대부터 독일에서 대두된 비판적 평화교육은 사회의 갈등 구조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¹⁾ 이러한 관점에서는 ‘폭력의 부재’ 자체는 그 폭력이 직접적인 것이든 간접적, 구조적인 것이든 모두 소극적 평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평화를 적극적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비판적 평화교육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비평화적 요인과 폭력의 원인 및 조건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평화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²⁾

한편, 우리나라의 평화교육은 통일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남북 분단과 대결이라는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평화는 곧 전쟁 부재, 남북 화해, 남북 협력과 거의 동치의 의미로 쓰였을 뿐 아니라, 통일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역시 평화였기 때문에 ‘남북’ 그리고 ‘통일’이라는 맥락과 별도로 평화교육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평화교육은 크게 반공교육(1948~1987), 통일·안보교육(1988~1991), 통일교육(1992~) 등의 단계를

1) 고병현, “캐나다와 영국의 평화교육”, 『초등우리교육』, 10월호 (1991), p. 50.

2) 정영수,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연구』, 제31권 제5호 (1993), p. 176.

거치며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³⁾ 특히 1992년 이전까지는 반공이나 안보가 크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평화라는 용어 자체가 때로는 용공으로 오해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도 활성화되기 어려웠다.⁴⁾

1992년부터 정부의 정책 기조 및 사회적 분위기가 통일 쪽에 방점을 찍으면서 평화교육은 단순한 통일의 수단 차원을 넘어 보다 다차원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에 대한 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평화교육에 대한 일대 전환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⁵⁾ 이 시기에 평화교육 개념은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비평화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기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확대되어 이해되기도 했다.⁶⁾ 이에 따라 평화교육의 영역도 사회적 갈등 해결, 문화적 다양성 존중 등으로 확장되었다.⁷⁾

(3) 한국적 상황에서의 평화교육의 특징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논하는 평화교육의 핵심 의제는 여전히 통일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⁸⁾ 통일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평화교육의 실천 단계에서 맥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3) 설규주, “갈등해소 중심의 통일교육과 사회과 논쟁문제 학습”, 『시민교육연구』, 제33집 (2001).

4) 정영수,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p. 174.

5) 박광기 외,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6) 정영수,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p. 175.

7) 민정숙, “한국사회의 갈등과 평화교육의 방향”,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1권 제1호 (2006) ; 양기근, “세계화 시대의 평화의 문화 실현전략—문화다양성과 평화교육을 통한 접근”,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흥논집』, 제29권 (2001).

8) 박광기 외,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있다. 평화교육의 궁극적, 이론적 지향점이 인류에게서 비평화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각 사회가 처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별히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사회와, 대체로 안정된 사회에서의 평화교육은 그 목적, 내용, 방법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컨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인종 간의 평화적 공존이 평화교육의 핵심이 될 수 있고 북아일랜드에서는 종교 간의 평화적 공존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될 수도 있는 것이다.⁹⁾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화를 논함에 있어서 남북 분단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있어 남북 분단 문제는 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남북 간의 대립이나 갈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남쪽 내부에서의 갈등 및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평화교육을 위한 노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통일교육과 연계된 평화교육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남북 갈등이 국내외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맥락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면 계속 그 양상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지역이나 이념 등으로 인한 갈등은 물론 세대, 계층, 집단 간 갈등도 새롭게 늘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적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종이나 민족, 종교적 갈등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평화교

⁹⁾ 추병완,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적 접근의 타당성”, 『통일문제연구』, 제15권 1호 (2003), p. 98 ; 박광기 외, 위의 책.

육은 통일교육을 포함하여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갈등해결교육, 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 등과의 연계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가운데 그 내용과 방법을 풍부히 확보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2) 학교 평화교육의 중요성

첫째, 학교는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평화교육 관련 지식, 기능, 가치·태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가정과 사회의 역할도 학교 못지 않게 중요하고 그러한 사회화 기관들과 협조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한편 그와는 별도로 학교가 담당해야 할 몫은 여전히 존재한다. 학교는 점점 더 다원화되어가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를 늘 접하게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갈등에 대처하고 평화를 일구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학교는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미 사회과, 도덕과를 중심으로 갈등 해결, 평화 등의 내용 요소가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를 통해 평화교육 관련 내용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다. 또한, 국어과, 체육과, 음악과 등의 교과에서 평화교육 관련 기능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서 역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행사나 특별 활동과 같은 비교과 영역을 통해서도 평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다양한 반(反)평화적 요소와 갈등 및 그것의 해결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명시적, 암묵적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장소다. 또한 권력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과 대립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 차

원뿐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자체로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학교 평화교육과 사회과교육의 관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교과들 중 특히 사회과는 평화교육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교과 중 하나다. 사회과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리, 역사 등의 세부 영역을 통해 남북 관계, 남북 통일 문제 등은 물론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갈등 양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제(諸)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과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토론, 의사결정 등의 형태로 사회과의 교수학습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과를 통해 학교 평화교육의 의미있는 단면을 깊이 살펴보는 것은 학교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학교 평화교육과 사회과교육과의 밀접한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사회과교육의 성격과 목표 측면에서

2007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과의 성격과 목표 측면에서 평화교육과의 관련성을 고찰해 볼 수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사회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시민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¹⁰⁾

10)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교육과정』 (2007).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

위의 내용은 곧 사회과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는 인권, 관용, 타협, 사회 정의, 공동체 의식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덕목 혹은 기능은 모두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갖추고 있을 때 발휘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의미, 넓은 의미의 평화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과는 이미 교과과정의 성격과 목표 측면에서 평화교육과 연대하여 실시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2) 사회과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2007년, 2009년에 개정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를 중심으로 사회과의 내용과 평화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 사회과 (3~6학년)

〈표 2〉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분석

학년	대단원명	성취기준	평화교육과의 관련성
3	(6) 다양한 삶의 모습들	⑥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필요한 문화 상대주의적인 인식과 태도
4	(2) 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	① 다양한 의견 차이와 갈등을 조정해 가는 민주적 정치 생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이견과 갈등의 조정을 통한 공동체 생활
	(6)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② 성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양성 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양성 평등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존중을 통한 평화적 공존

		⑥ 생활 방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u>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의 중요성을</u> 이해한다.	
5	(6)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①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u>분단과 6·25 전쟁</u> 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④ 대한민국의 발전, <u>평화 통일</u> , 인류 문화의 향상을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본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
6	(1) 아름다운 우리 국토	⑦ <u>북한 지역의 자연·인문 지리적 특성을</u> 이해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
	(4)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④ <u>인권을 존중하는</u> 태도를 기른다. ⑥ <u>관용, 대화, 타협, 절차 준수</u> 등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인권 존중 및 민주적 기능 습득을 통한 평화적 공존
	(5)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⑤ 지구촌에서는 <u>여러 가지의 갈등과 문제가</u>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와 단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⑥ 세계 여러 지역의 <u>문화적 다양성을</u> 이해한다.	지구촌의 갈등 해결을 통한 평화적 공존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
	(6)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u>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는 문제를</u> 생각해 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⑥ <u>세계 인류의 번영과 평화로운 삶을</u> 위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조사해 본다.	남북 분단에 대한 인식 및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교육과정』 (2007) ;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 교육과정』 (2009).

(2) 중등 사회과 (7~10학년)¹¹⁾

〈표 3〉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분석

학년	대단원명	성취기준	평화교육과의 관련성
7	(4) 지역마다 다른 문화	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함을 파악한다. 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u>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과 상호관련성</u> 을 설명한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문화의 다양성 이해
	(7) 개인과 사회 생활	⑤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차별 현상을 이해한다. ⑥ <u>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 및 해결 방안</u> 을 제시한다.	차별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적극적 평화 실현
	(8) 문화의 이해와 창조	②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u>자문화 및 타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태도</u> 를 가진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9) 우리의 생활과 법	② 법은 분쟁을 예방하여 서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이해한다. ③ <u>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u> 하기 위한 사법 제도와 그 원리를 이해한다.	분쟁과 갈등의 예방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회 제도의 활용
8	(3) 대한민국의 발전	① 광복과 정부수립, <u>분단과 6·25 전쟁</u> 을 국내외 정세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④ 북한 역사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노력	남북 분단 및 화해 협력 과정 이해

¹¹⁾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1학년부터 10학년 까지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중 사회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으며 3학년~6학년은 초등학교, 7학년~9학년은 중학교, 10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다.

		을 탐구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춘다.	
	(5) 아시아·아프리카 민족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① 제국주의 침략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인들이 수탈과 억압을 당하였음을 안다. 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과정을 파악하고 조선과 청의 대응 과정을 이해한다.	제국주의로 인한 전쟁과 억압 및 고통 이해
	(6) 현대 세계의 전개	① 제1차 세계대전이 총력전이란 새로운 양상을 띠었음을 이해한다. ④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알고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 사례를 설명한다. ⑥ 냉전의 완화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과정을 설명한다.	전쟁으로 인한 학살, 인권 침해, 대결과 고립 등 고통 이해
9	(5) 통일 한국의 미래	③ 국토 통일과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 ④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u>통일의 필요함</u> 을 깨닫고 <u>통일 후의 바람직한 국토 공간 모습</u> 을 그려 본다.	남북을 둘러싼 주변 여건 이해 및 통일의 의미 파악
	(7)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① 민주 사회에서 <u>다양한 이익이 표출되어 갈등이 일어나는 국면</u> 을 이해한다. ② 다양한 사회 문제가 <u>정치 과정을 통해 해결되는 양상</u> 을 이해한다.	갈등의 민주적 해결을 통한 평화적 공존
10	(6) 사회 변동과 문화	② 현대 사회의 <u>다양한 갈등 양상</u> 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u>해결 방안</u> 을 모색한다. ④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u>다양한 문화 갈등의 양상</u> 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u>해결 방안</u> 을 모색한다.	사회 갈등, 문화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통한 평화적 공존

<p>(7)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p>	<p>① 현대 민주 국가에서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으로서 <u>인권 보장</u>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법의 역할과 관련지어 탐구한다. ⑤ 현대 사회에서 <u>인권 및 사회 정의와 관련된 쟁점</u>을 사회·문화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p>	<p>인권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통한 적극적 평화 구현</p>
<p>역사¹²⁾ (7)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의 수립</p>	<p>③ <u>대한민국과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과 그 의의를 파악</u>하고 농지 개혁과 친일파 청산이 추진되었음을 안다. ④ <u>6·25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 및 그 참상을 알고, 전후 남북한의 갈등이 증폭되었음을 안다.</u> ⑤ <u>전후 복구 과정을 거치며 남과 북에 정치 경제적으로 다른 체제가 뿌리내렸음을 파악</u>한다. ⑥ <u>냉전으로 인해 분단, 전쟁과 갈등을 겪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서 서로 비교</u>한다.</p>	<p>남북한 정부 수립과 전쟁 전후의 과정 파악 및 상호 비교</p>
<p>역사 (8)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p>	<p>① <u>냉전 체제의 변화 양상</u>이 동아시아와 남북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 ⑤ 1960년대 이후 <u>북한의 정치 경제적 변화</u> 과정을 파악한다.</p>	<p>국제 정세가 남북한의 변화와 발전에 미친 영향 파악</p>
<p>역사 (9) 세계화와 우리의 미래</p>	<p>③ <u>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u>을 살펴보고 <u>평화 통일을 위한 과제와 방안</u>을 탐색한다. ④ 동북 아시아의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하여 <u>관련국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u>하는 자세를 갖는다. ⑤ <u>한국의 국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고 국제 공헌을 위한 방안</u>을 탐색한다.</p>	<p>남북 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및 주변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평화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 노력</p>

3) 사회과교육의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

사회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의 측면에서도 평화교육과의 관련성을 고찰해 볼 수 있다. 그중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³⁾

(4) 소집단별 협동 학습을 통해 민주 시민의 중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 참여 의식, 타인에 대한 존중,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여기서는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 협동심 등을 함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질성을 띤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소집단 내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모습에서부터 평화의 의미를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 내의 분쟁과 갈등 등에 대해 보다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평화교육에 대한 연구물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평화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연구로는 정영수, 고병현, 오인탁, 최관경, 이경태 등의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병현은 '평화'라는 용어의 개념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평화교육의 목표, 주제, 방법, 실천 방안 등을 구체적으

¹²⁾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10학년 과정은 '사회'와 '역사'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역사'로 표시한 것은 '사회'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¹³⁾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교육과정』(2007).

로 제시하고 있다.¹⁴⁾ 더 나아가 사회와 의식의 구조를 ‘평화’ 개념에 걸맞게 바꾸는 것을 평화교육의 거시적인 과업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한다. 오인택은 평화교육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평화에 대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평화를 위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¹⁵⁾ 최관경은 평화의 의미를 분석하고 평화교육의 본질과 특성을 밝히면서 세계화, 지구촌 시대로 불리는 21세기에 인간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세계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평화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¹⁶⁾ 정영수는 평화교육이 단지 학교교육의 과제일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과제이므로 비판적 평화교육을 통해 삶의 조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⁷⁾ 이경태는 평화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전쟁 억제, 인류 복지 증대, 인권 보호, 생태계 보호, 인간화된 기술 등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평화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교사, 행정 등에 대한 재고와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⁸⁾

다음으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로는 김지수, 심성보 외, 정희태, 추병완 등의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연구에서는 대체로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과 도덕과를 연관짓는 시도를 주로 하고 있다.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김지수는 평화교육을 통일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평화교육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폭력, 모순,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평화교육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¹⁹⁾ 또한 앞으로의 통일교육이 필연적으로 평화교육적

14) 고병현,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평화교육 심포지엄』 (1993), pp. 50~70.

15) 오인택, “평화교육의 이념과 내용”, 『기독교 사상』, 9월호 (1988), pp. 100~113.

16) 최관경, “21세기의 평화교육”, 『교육철학』, 제24권 (2003), pp. 187~209.

17) 정영수,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pp. 173~193.

18) 이경태, “평화교육에 관한 서설적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2집 제3호 (2005), pp. 79~99.

접근을 수반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평화교육만으로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나라 현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성보 등은 분단된 한국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소 더디더라도 남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평화교육적 접근이 통일교육의 중요한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정희태는 기존의 통일교육이 학교 현장의 호응과 지지를 폭넓게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비폭력 및 갈등해결에 초점을 둔 평화지향적, 평화교육적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²¹⁾ 추병완은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로서 평화교육의 위치를 설정하고 향후 학교 통일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교육적 방안을 교수학습, 교사, 학급 분위기, 평화적 상상력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고 있다.²²⁾

한편, 평화교육과 사회과교육 및 갈등해소 측면과 연결시킨 연구로는 민정숙 외, 오오타니, 설규주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민정숙 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으로 평화교육을 제시하고 있다.²³⁾ 오오타니는 일본의 중학교 사회수업 중 세계지리 및 역사 부분에서 한국과 조선을 가르칠 때 자신의 국가(일본)와 상대 국가(한국)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갈등 및 편견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19) 김지수, “통일교육의 연장선에서 본 평화교육의 의의와 한계”, 『교육비평』 (2005). pp. 228-244.

20) 심성보 외,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제16집 (2004), pp. 5-38.

21) 정희태, “평화교육의 수용을 통한 통일교육 개선”, 『통일전략』, 제7권 제2호 (2007), pp. 123-155.

22) 추병완,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적 접근의 타당성”, pp. 103-125.

23) 민정숙, “한국사회의 갈등과 평화교육의 방향”.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²⁴⁾ 설규주는 기존의 도덕과 중심의 직접적인 통일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국가, 민족, 세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일어나는 갈등 해소 자체에 초점을 두는 보다 거시적, 포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⁵⁾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들의 성과인 평화교육의 이론적 토대와 방향, 평화교육과 학교교육, 평화교육과 교과교육과의 관계 등도 고려하면서 학교급별 평화교육의 실태와 의미를 사회과 수업 및 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학교 평화교육을 위해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Ⅲ. 학교급별 평화교육 실태 분석

1. 사회과 수업 관찰 및 면담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평화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중고 사회과 수업을 관찰하고 해당 교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관찰 및 면담 대상으로는 수도권에 위치한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3년~8년차의 교사를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2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명의 사회과 수업을 각각 2시간~4시간씩 관찰하였으며 모든 수업은 녹화되었다. 수업이 끝난 직후 면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메일로 보강 면담을 추가하였다. 수업 관찰 및 면담과 관련된 사항의 개요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²⁴⁾ 오오타니 다케오, “한일간 평화교육 사례 2 ; 중학교 사회현장으로부터 세계지리와 역사학습에서 한국, 조선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국교육 연구소 소식』 (1997), pp. 72-79.

²⁵⁾ 설규주, “갈등해소 중심의 통일교육과 사회과 논쟁문제 학습”.

〈표 4〉 평화교육을 소재로 한 사회과 수업 관찰 및 면담 개관

학교급	지역	학교	교사	성	경력	대상학년	차시수	주요 수업 내용	수업 방식	날짜
초등	인천	A	a	여	3년	4	4	- 차이와 차별 - 평화로운 의사소통 - 평화 통일	개인 활동 모둠 활동	2008년 11월 15일
	경기	B	b	여	3년	3	2	- 남북 통일 - 타인 이해	개인 활동 모둠 활동	2009년 7월 7일
중	서울	C	c	여	5년	3	2	- 남북 통일에 대한 인식 - 편견 극복을 위한 노력 - 새터민 이해	강의 개인 활동	2009년 7월 10일
고등	경기	D	d	여	8년	2	3	- 통일의 필요성 - 통일 방안 비교 - 통일을 위한 노력	강의 모둠 활동	2008년 12월 18일 2008년 12월 22일 2008년 12월 23일
	서울	E	e	남	8년	2	2	- 남북 갈등 - 남남 갈등	강의 모둠 활동	2009년 7월 9일

2. 평화교육을 소재로 한 사회과 수업 관찰 결과 분석

1) 초등 사회과를 통한 평화교육 수업 관찰

〈표 5〉 초등학교의 사회과 평화교육 수업 개관

	A 초등학교	B 초등학교
수업 목표	차이와 차별을 넘어 평화적 의사소통을 실천하며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남북 분단이 주는 고통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서 평화적 관계를 실현한다.
내용 전개	1. 차이와 차별 이해 - 사과(apple)의 특징 살펴보며 차이와 차별의 의미 이해하기 -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 찾아보기 2. 평화로운 의사소통 -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의미 파악하기 - '갈등'의 이미지와 의미 표현하기	1. 남북 분단과 평화 통일 - 남북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문제점 -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과제 2. 타인 이해 - 친구들과의 갈등 사례 공유 - 갈등 해소를 위한 다짐 및 실천

	3. 평화 통일 - 남북 분단의 원인과 문제점 - 통일을 위한 노력	
주요 방법	- 공통점에 따라 무리짓기 게임 - 사과(apple)를 통해 사과(apologize)하기 - 단어나 그림의 의미를 행동과 말로 타인에게 전달하기 - 여섯 가지 색깔의 생각모자 놀이	-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한 문답 -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 - 마음풀이 수첩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 - 이해의 편지 쓰기
주요 자료	- 사과 - 사과(apology)를 위한 학습지 - 단어 카드 - 색깔 모자	- 김민기의 〈작은 연못〉 노래 - 남북 분단 관련 동영상 - 이솝우화 〈여우와 학〉 이야기 - 마음풀이 수첩

A 초등학교에서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총 4차시 분량의 평화교육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a 교사는 사회 수업 2시간과 재량 시간 2시간을 확보하였다. B 초등학교에서는 사회 시간을 활용하여 2차시 분량의 평화교육 수업을 진행하였다.

a 교사와 b 교사는 평화라는 주제를 '일상적인 상황'과 '남북 문제'에 모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두 교사의 평화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과 궁극적인 목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a 교사는 사과라는 사물을 활용하여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면서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차이와 차별로 인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남북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살기 위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

반면, b 교사는 정반대의 순서를 취하였다. b 교사는 남북 간에 전쟁을 하고 갈등을 겪는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그와 같이 평화가 부재하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누리자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두 교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평화교육에 대한 관점과 학급 경영의 목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두 교사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남북 문제보다는 일상 생활에서의 평화였다.

한편 수업 방식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의 특성상, 교사의 강의보다는 학생 활동, 학습자료 시청 등의 과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수업이 특정한 지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의 차별 해소, 평화적 공존 등과 같은 가치·태도 영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체험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등 사회과를 통한 평화교육 수업 관찰

〈표 6〉 중·고등학교의 평화교육 수업 개관

	C중학교	D 고등학교	E 고등학교
수업 목표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고 새터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는다.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을 파악할 수 있다.	남북 갈등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현상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내용 전개	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파악 - 자신의 최초 입장 확인 - 입장 변화 확인 2. 편견 극복을 위한 노력 -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 확인 3. 새터민 이해 - 근거 없는 편견 수정	1. 통일의 필요성 - 분단 과정 -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2. 남북한 사회와 통일 방안 - 남북한 사회 모습 비교 - 통일 방안의 내용 3. 통일을 위한 노력 - 북한 사회 문제 토론 -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	1. 다양한 사회 갈등 사례 - 6가지 사례 제시 - 각 사례의 원인 탐구 2.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 - 각 사례와 남북 분단의 관련성 탐색 3.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 개인적 노력 - 사회적, 제도적 노력

주요 방법	- 학습자 발표 - 전체 토론	- 분단 과정에 대한 강의 와 퀴즈 - 통일 한국을 묘사하는 일기쓰기 - 북한 관련 사회 문제 해 결을 위한 소집단 토론	- 사례 탐구 - 모둠별 토론 - 모둠별 발표
주요 자료	- 두 종류의 〈우리의 소 원〉 노래 - 분단 과정 및 통일 사 회를 담은 동영상 - 탈북자의 삶과 생각을 담은 동영상	- 고 2 〈정치〉 교과서 - 파워포인트	- 남남 갈등에 대한 신문 기사와 방송 보도 자료

중등 수준에서는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의 수업을 살펴보았다. C 중학교와 E 고등학교에서는 시간표를 조정하여 사회 시간을 2시간으로 묶어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D 고등학교에서는 〈정치〉 교과서의 진도에 맞추어 1차시씩 3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C 중학교에서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수업을 시작하였다. c 교사는 ‘우리의 소원이 정말 통일인가?’라는 간단하지만 의미있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c 교사는 이러한 답변을 출발점으로 삼아 통일에 대한 학생 자신의 솔직한 입장을 적어 보고, 통일을 원하는 이유 혹은 원하지 않는 이유를 발표해 보도록 했다. c 교사는 직접적으로 통일에 대한 ‘계몽’을 하기보다는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통일의 당위성을 스스로 판단해보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한민족,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다소 정서적인 접근보다는 전쟁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만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더욱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2차시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c 교사는 1차시에서 도출한 통일의 당위성을 통일을 위한 노력과 준비로 전이시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한 편견과 오해를

푸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 통일에 대한 오해 등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 보도록 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c 교사는 그 모든 의견을 칠판에 붙이고 북한이나 북한 사람에 대한 ‘사실’에 해당하는 것(예: 말투가 다르다, 가난하다 등)과 단순한 ‘편견’ 또는 ‘오해’에 해당하는 것(예: 이기적이다. 개성이 없다. 예의가 없다. 비도덕적이다, 배신을 잘 한다 등)을 구분하면서 편견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D 고등학교의 d 교사는 사회과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평화교육이라는 주제를 강조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선택과목 <정치>에 있는 ‘민족 통일의 과제’라는 단원을 활용하면서 부분적인 재구성을 가미하였다. 이에 따라 분단의 과정,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통일방안 비교, 통일 이후의 사회 모습 상상, 통일을 위한 노력, 북한 및 통일 관련 문제 토론 등과 같이 교과서 내용을 큰 틀로 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목표와 내용 등이 대체로 충실하게 다루어졌다.

E 고등학교의 e 교사는 <정치> 단위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소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e 교사는 ‘평화’ 혹은 ‘통일’에 직접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이 부재한 상태로서의 ‘갈등’ 사례를 전면에 내세웠다. 갈등 사례는 모두 6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제 2 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고도제한 문제, 서해교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심을 둘러싼 갈등, 특정 가수가 한 발언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논란, 특정 단체의 대북전단살포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북한에 대한 시각차로 인한 남쪽 사람들 사이의 대립 등이 그것이다. 어떤 것은 북한 및 통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했다. e 교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모든 갈등 사례의 뿌리에는 북한 및 통일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했다. e 교사는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례로 제시된 모든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남북 갈등임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남북 갈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그러한 논란과 갈등의 해결을 위해 남북 분단 해소와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학교 평화교육 관련 사회과 교사 면담 결과 분석

수업을 공개한 초중등교사와 실시한 면담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주요 면담 내용 개관

영역	예시
공통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수업에서 혹은 수업 이외의 시간에) 평화 관련 내용 혹은 남북 문제 등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가? -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가? - 통일이나 국제 평화 등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사회과 수업에서 평화교육(통일교육 포함)을 실시한다고 할 때, 타교과에 비해 유리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각각 무엇인가? - 사회 교과서의 내용 중 특별히 평화교육(통일교육 포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다루기에 적합한 단원은 어느 곳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 -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에 평화교육(통일교육 포함) 관련 내용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평화교육이 예컨대, 사회과에서의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국제 이해교육 등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교급별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할 때, 각 학교급 사회과에서의 평화교육은 목표, 내용, 방법면에서 각각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이 좋은가? - 관찰된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한 개별 질문

1) 초등 사회과 교사 면담 결과

(1) 평화교육 관련 수업 형태 및 시기

a 교사와 b 교사는 대체로 정규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평화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과내용의 특성상 사회 시간과 도덕 시간에 상대적으로 언급을 더 하게 되는 편이며 수업 외 시간으로는 현충일이나 6·25 등에 즈음하여 이른바 계기교육 형태로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 외에도 인성지도, 생활지도 중에 자연스럽게 평화교육 관련 내용을 언급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a 교사: 애들이 어리니까 작은 일에 맘도 상하고 다투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싸우지 말라고... 왜 싸우면 안되는지... 서로 싸우면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이런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살죠. 그것도 다 평화교육이라면 평화교육 아닌가요?

(2)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

a 교사와 b 교사는 모두 통일교육이 평화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분리된 것처럼 다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 분쟁, 남북 문제, 세계 평화 등을 다루는 교육이 유기적,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 순서에 있어서는 입장이 달랐다. a 교사는 학교 생활이나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 등과 같은 일상적 상황으로부터 민족, 국가, 세계의 거시적인 문제로 나아가는 것을 선호한 반면, b 교사는 국가 간의 갈등, 전쟁 같은 거대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보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 나아가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두 교사는 일상 생활에서의 분쟁 해결과 평화적 공존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

b 교사: 1차시 남북 문제하고 2차시 하기 직전에 제가 살짝 연극을 했어요. 너희들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내가 실망했다. 너희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오늘 쉬는 시간에 너희가 또 싸우고 이르니까 선생님 너무 힘들다. 애들이야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싸우고 떠돌고 하는데요. 2차시 수업이 마침 마음풀이 수첩 읽으면서 서로 화해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미리 분위기를 좀 잡았죠.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요.

(3) 학교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a 교사와 b 교사는 모두 학교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었으나 현재 평화교육이 실시되는 수준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b 교사는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자체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b 교사는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학생의 탓이라기보다는 교사의 관심 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너무나 많은 종류의 ‘○○ 교육’(예컨대 인권교육, 진로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학교 안팎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평화교육에만 관심을 더 기울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b 교사는 적어도 평화교육과 관련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만이라도 풍부하게 지원된다면 조금이라도 그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b 교사: 학교에서는 사회 수업, 국어 수업 이런 거 말고도 별별 교육이 다 있어요. 진로교육도 해야 되고 양성평등교육도 해야 되고 보건교육, 에너지교육 뭐 별게 다 있어요. 평화교육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볼 때는 그 중 하나일 뿐이거든요.

(4) 사회과 수업에서 평화교육이 가지는 의의와 장단점

a 교사와 b 교사는 사회과 평화교육 중 일부분이 도덕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도덕과가 상대적으로 가치·태도 영역을 강조한다면, 사회과에서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와 동시에, 사회 교과가 현재 암기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암기와 지식 위주의 학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한편, 초등교사들은 사회과의 내용 요소 속에 한국 현대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6학년 사회과의 경우 남북 분단, 전쟁, 통일을 위한 노력 등이 담겨 있어서 자연스럽게 평화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한국 현대사에 대해 우리 사회에 완전히 합의된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의 변화에 따라 통일교육, 평화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특히 북한에 대한 지원, 북한과의 대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일관된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5) 평화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 교과서 내용

b 교사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단원과 수준의 사회과 수업을 평화교육과 연관지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3학년 문화 단원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 4학년 지방 자치 단원에서는 다양한 의견 차이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 6학년 한국사 단원에서는 분단과 전쟁, 6학년 세계 지리 단원에서는 지구촌의 여러 가지 분쟁 해결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a 교사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 민주적 가치 등을 강조하는 사회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교과서 내용이 아니더라도 기능이나 태도 측면에서도 사회과가 평화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았다.

a 교사: 아이들끼리 욱하고 싸우고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이라도 막아 보고 또 제대로 해결해 보려면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건 아무래도 사회과 수업이랑 관련이 돼요. 선거, 토론, 다수결 이런 절차나 규칙 같은 걸 다루기에 좋으니까요.

(6) 사회과에서의 평화교육 비중 및 방향

교사들은 이미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평화교육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어떤 영역이 특별히 더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 교육, △△ 교육 식으로 다양한 범교과적 교육을 모두 다루다 보면, 각각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데도 교사와 학생의 학습 부담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평화교육’으로만 한정해서, 또는 그것만을 독자적으로 늘리기보다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만한 통합적인 주제로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7) 초등학교에서의 평화교육 방향

a 교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경험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상적인 접근보다는 일상 생활, 활동, 경험에서 출발하여 북한과 세계 다른 나라의 문제 대해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한편 b 교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의 경우는 아직 역사적 시대 인식을 인지, 구별하는 능력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 능력이 부족한 편이므로 현재 나타나는 객관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 중등 사회과 교사 면담 결과

(1) 평화교육 관련 수업 형태 및 시기

중학교 교사인 c 교사는 평화교육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d 교사와 e 교사 역시 정기적으로 평화나 통일을 주제로 하여 다루기보다는 남북 문제 관련 이슈가 언론에 나올 때 수업 도입부에서 뉴스 내용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하는 정도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e 교사: 고등학교 1학년에 <사회>하고 2학년에 <정치> 가르칠 때 관련 단원이 나오면 좀 다루게 되죠. 특별히 평화교육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현대사에서 좀 의미있다 싶은 날 즈음에는 학생들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6·15 선언이나 6·25 같은 주제를 당일 수업 시간에 좀 말하기도 하고 우리반 종례 시간에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런 정도지요. 별도로 평화교육 수업을 준비해서 하기는 어려워요.

(2)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

d 교사와 e 교사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일부 영역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d 교사는 군사적 문제, 이산가족, 식량 위기 등과 같은 주제들은 평화교육과 가깝고 그 외 남북과 관련된 정치, 외교, 경제적인 문제들은 평화교육의 외부에 속하는 요소들이라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하면서 평화교육과 결합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 통일교육을 온전히 평화교육 측면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놓치는 요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e 교사는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각각의 존재 의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으로 통합되기는 쉽지 않고 결국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밖에 없지만 굳이 상위 영역을 정한다면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평화교육이 더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c 교사

는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한 결과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의 일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 c 교사: 사실 이번 수업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연결해서는 생각 안해 봤어요. 그런데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때 그 당위성이 더욱 분명해 진다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3) 학교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c 교사는 학교교육을 통해 세계 평화라는 주제, 그리고 지구적 관점 등을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통일이나 평화라는 주제 자체가 범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교과에서 몇 차례 제시되고 그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d 교사는 평화교육이라는 것이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와 관련된다면, 타인과의 관계 범주가 학교, 지역, 국가, 세계 등으로 달라질 뿐이지 본질 자체는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와 같은 일상적 공간에서의 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평화교육이 학생들의 삶과 너무 유리된 내용이 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 교사는 점점 더 다원화되고 다양한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학교 차원의 평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효과는 학교교육에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단순한 활동 중심보다는 논술, 토론 등과 연계해서 인지적 영역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본다면 학생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4) 사회과 수업에서 평화교육이 가지는 의의와 장단점

c 교사와 d 교사는 다수의 학생과 교사들은 통일이나 평화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과에서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타교과에 비해 평화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평화에 대한 당위성을 교사가 강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과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e 교사는 현대 또는 미래 사회의 과제나 헌법의 주요 원리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교과 내용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 사회과에서 평화교육을 다루기 용이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가치 및 태도 함양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중등 교사들은 사회과의 수업 시수가 적기 때문에 교과 내용 이외의 것을 다루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c 교사는 학생들 역시 교과서 이외의 내용을 다루는 경우 시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에 소홀히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과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어느 정도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비중있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 교사 역시 대학입시 문제가 걸려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평화교육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에 접근할 때 정부의 성격에 따라 대북 정책이나 분위기가 달라지면 교육의 방향이나 접근 방식을 결정하기가 혼란스럽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5) 평화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 교과서 내용

c 교사는 중학교 〈사회〉의 ‘지구촌 사회와 한국(지역 간의 교류와 갈등,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제)’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단원은 직접적으로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언급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상 학년말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학교 3학년은 11월 중순에 사실상 모든 교육과정 운영이 끝이 나는 상황에서 거의 다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d 교사와 e 교사는 고등학교 <사회> 중 ‘우리나라 시민 사회의 발전과 과제’, ‘정치 생활과 국가’,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선택교과인 <정치> 과목의 ‘국제 사회와 정치’, ‘정치 발전의 과제’ 등의 단원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점 및 과제로서 분단과 통일 문제, 사회적 갈등 해결, 정치적 의사 결정 등의 내용과 함께 통일 및 평화 내용을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6) 사회과에서의 평화교육 비중 및 방향

c 교사는 평화교육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관련 내용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인지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사회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자체가 워낙 많은 상황이고 교육과정 문서에 언급된 각종 범교과 영역만 해도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이 내용들을 모두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창의재량이나 교과재량 시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동시에 평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각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c 교사: 평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통일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려면 교사부터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론 통일을 원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후 세대만큼은 아니라는 점은 일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d 교사는 평화교육 비중이 더 늘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양의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실제 교실 수업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형식적으로 텍스트의 분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실에서 더 많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 교사는 지금도 통일은 어느 정도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원칙으로서의 평화교육의 내용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7) 중학교/고등학교에서의 평화교육 방향

c 교사는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좀 더 인지적으로,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좀 더 정의적으로 평화교육의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고 내용면에서는 초등학교에 비해 좀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여 현 상황에 대해 학생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평화와 관련한 가치 문제에 있어서 교사가 당장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한두 번의 수업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e 교사도 같은 입장이었다.

c 교사: 물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주입해야 될 때도 있죠. 그치만 통일관이 나 북한관 이런 거는 즉각적인 개입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내면화 하도록 두는 게 낫죠.

d 교사와 e 교사는 초등학교는 체험 중심으로 경험에 기반한 지식 습득과 가치·태도 형성을 꾀하고, 중학교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도덕적 가치 등에 대한 학습을 하고, 고등학교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고등학교에서는 목표를 갈등 원인 분석 능력 향상(인지적), 갈등 해소를 위한 올바른

원칙 정립(정서적)으로 설정하고 내용으로는 국내외적 갈등 사례를 다루면서 토의, 토론, 발표, 논술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다.

IV. 학교급별 평화교육 실태 차이의 현상과 그 의미

1. 학교급 측면

- 1) 초등: 평화와 공존에 대한 가치·태도 중심의 내용 + 놀이와 활동 중심의 방법

초등학교에서의 사회과 평화교육은 상대적으로 가치·태도 영역을 중시하는 특징을 띠고 있었다. 물론 남북 문제, 통일 문제도 다루지만 학교 생활, 가정 생활과 같은 일상 공간 속에서의 타인 존중, 갈등 해소 등과 같은 부분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고 사과 모양 관찰하기, 색깔 모자 놀이, 마음풀이 수첩 쓰고 읽기 등과 같은 게임과 활동의 방법이 비중있게 활용되었다. 반면 교사가 직접적으로 강의 형태로만 진행하는 시간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이것은 초등학교급이라는 특성이 다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도 남북 분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양태의 갈등과 분쟁을 다룰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내용의 수준이 깊지는 않다. 또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등교사들이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놀이와 활동에 익숙하다는 점도 이러한 수업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중등: 분단과 갈등에 대한 지식·정보 중심의 내용 + 강의와 토론 중심의 방법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사회과 평화교육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치·태도보다는 지식과 정보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단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통일 및 평화 관련 내용 요소가 어느 정도의 폭과 깊이를 확보하고 있고 학습자의 수준도 초등학생에 비해 정보를 수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도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 비해 강의와 토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물론 여기서 강의라는 것은 단순한 교사의 설명이라기보다는 교사가 제시한 사진, 노래, 동영상 등과 같은 자료에 대한 심화적, 부연적 해설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학습자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과 소집단 간의 분석 및 토론 활동 등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었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활동을 하더라도 그 성격에 있어서는 인지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교사 측면

1) 초등: 사회과에 대한 약한 전공 배경, 통합교과적 수업 지향

초등학교 교사는 그 양성과정에서부터 교과에 대한 전공 배경이 약하다. 따라서 어떤 초등교사가 교육대학교의 사회교육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다른 과를 졸업한 교사에 비해 사회과 수업에 대해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은 사회과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더라도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주제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실제 관찰된 a 교사와 b 교사의 사회과 수업을

통한 평화교육 역시 단순한 사회과 수업이라기보다는 사회과, 도덕과는 물론 생활 지도의 특성까지도 모두 띠고 있었다.

2) 중등: 사회과에 대한 강한 전공 배경, 교과로서의 사회과 특성 부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대체로 사회과의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평화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특히 사회과의 목표와 방법을 평화교육의 그것과 연결지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졌다. 교사들은 사회과의 목표인 시민성(citizenship) 함양은 다양한 일상적, 거시적, 구조적 공간에서 겪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목표를 구체적인 남북 분단 상황, 남북 혹은 남남 갈등 상황 등에 대입하여 풀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방법적 측면에서도 단지 통일과 평화라는 가치의 내면화를 강조하기보다는 학습자의 분석, 의사결정, 판단 등과 같은 사회탐구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과목의 특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과 성격 및 내용 측면

1) 초등: 개인 및 국가(또는 민족) 차원에서의 통일과 평화의 의의 강조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실시된 평화교육 수업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인과 국가(또는 민족)라는 단위가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지구촌 전체의 분쟁과 갈등보다는 남한의 북한과의 갈등과 전쟁이 주요 소재로 활용되었으며, 그것과 관련지어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과 같은 미시적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연결짓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 혹은 민족적 분쟁과 갈등,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분쟁과 갈등 해소를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의 논

리적, 체계적 관련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였다. 그것은 양자의 관계가 사회과의 목표(시민성 함양)로 매개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소 병렬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중등: 시민 및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통일과 평화의 의의 강조

중학교 사회과에서 실시된 평화교육 수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시민과 사회라는 단위가 강조되었다. 교사들은 사회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시민’을 제시하였고 그것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환기시켰다. 개인이나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 강조될 때 그것의 배경으로서 더불어 강조되는 것은 ‘국가’보다는 ‘사회’가 된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평화교육을 단순히 남북 분단 문제로만 관련짓기보다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차별 해소 및 공존(c 교사의 경우), 갈등과 분쟁의 보편적 성질(e 교사의 경우) 등으로 연결지으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사회과의 성격과 목표 등에 대한 선지식과 이해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학습자 측면

1) 초등: 평화교육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 학습자의 일상과의 관련성 높음

초등학생들은 평화교육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대체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교육과정상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학습 자료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접근했기 때문에 선지식 자체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으로 인해 오히려 호기심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 또한 a 교사와 b 교사

의 경우 모두 갈등과 분쟁, 평화 부재의 상태를 일상 생활로 연결시켰고 궁극적으로 일상 속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평화 실천 의지 제고 및 내면화 등의 과정이 대체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2) 중등: 평화교육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학습자의 생활 세계로의 전이 정도 낮음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평화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히 새롭다는 반응이나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교사가 제시하는 남북 관계 관련 질문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하는 정도였다. 또한 수업에서 다룬 내용이 곧 학생들의 학급 생활이나 다른 학생들과의 우호적 관계맺음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예를 들어 탈북자에 대한 우리의 바른 시각, 통일 방안 분석, 남남 갈등 및 남북 갈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 등과 같은 다소 거시적,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학생 자신의 생활 세계로 전이되거나 평화라는 가치가 내면화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학교급별 평화교육의 효과성 제고 방안

1. 학교급간 연계성 강화

- 1)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의 연계성 제고 및 평화교육 범주 확대

면담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이 지적하듯이 학교 평화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평화교육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다루는 데 가장 좋은 것은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보다 정규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지금도 남북 관계, 분단, 통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단지 통일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다소 독자적인 내용 요소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²⁶⁾

각급 학교에서 평화교육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의 범주를 남북 문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실, 학교, 가정 등과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부터 국가와 지구촌 사회로까지, 그리고 개인적 문제에서부터 구조적, 거시적 문제로까지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확장되어 설정된 평화교육 내용 요소가 교육과정 개발단계에서부터 각급 학교급에 고루 배치될 필요가 있다.

2) 초중고 (사회과) 교사를 위한 공동 연수 실시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부담은 다시는 학생들이 특정 내용을 배우지 않을 것처럼, 즉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사실 그러한 오해는 다른 학교급에서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가르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더구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학교급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학교급간 교사들의 의사소통 단절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학교급간 단절 혹은 불필요한 단순 반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사 합동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경우에 초등교사는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

²⁶⁾ 설규주, “갈등해소 중심의 통일교육과 사회과 논쟁문제 학습”.

학교에 진급해서 어느 교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평화교육을 다루는지 알 수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이전 학교급에서 통일이나 평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지식을 가지고 진급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학교급에 상관없이 특정 내용의 단순 반복 혹은 특정 학교급에 치우친 과중한 수업 분량 부담을 모두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급별 맥락성 강화

1) 학습자의 수준을 융통성있게 고려한 평화교육 내용 선정

평화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학교급간 연계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학교급별 맥락성이다. 초등과 중등에서의 학습자 수준은 결코 같을 수 없다. 선지식의 차이는 물론이고 학습 방법에 대한 선호 및 숙달 정도도 다르다.

초등학교의 경우 남북 관계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과 정보, 순서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언급하고 그것이 학생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관계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주제가 단지 일상 생활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가치·태도의 내면화 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식 중심, 기능 중심의 평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것은 학습자와 학교급의 수준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측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중고등학교에서는 평화교육에 대한 접근이 단지 정서적, 감상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미시적 공간에서의 평화도 적극 지향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노력도 요구된다.

2)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교육 방법 활용 및 교류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는 수업 방법에서 강점을 보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내용의 수준과 조직 정도에서 강점을 보인다. 평화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학교급별로 이미 강점이 있는 부분을 더욱 활용하되, 다른 학교급으로부터 배울 필요도 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 수준의 평화교육으로부터 관련 내용 조직, 개념과 용어 정의 등을 배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활용하는 동기유발이나 학생활동 등과 같은 교수학습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습자들과 교사가 대체로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이 단지 재미나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개념과 태도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강의는 정말 잘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학습자들을 집중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강의와 함께 학습자들에게 토론, 제작, 표현 등과 같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타학교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화교육의 강점을 적극 배우고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병헌. “캐나다와 영국의 평화교육”. 『초등우리교육』, 10월호 (1991), pp. 50~55.
- .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평화교육 심포지엄』, 1993. pp. 50~70.
-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 교육과정』, 2009.
-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교육과정』, 2007.
- 김지수. “통일교육의 연장선에서 본 평화교육의 의의와 한계”. 『교육비평』, 2005. pp. 228~244.
- 민정숙. “한국사회의 갈등과 평화교육의 방향”.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1권 제1호 (2006), pp. 71~92.
- 박광기 외.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설규주. “갈등해소 중심의 통일교육과 사회과 논쟁문제 학습”. 『시민교육연구』, 제33집 (2001), pp. 163~190.
- . 외. 『초등교사를 위한 정치교육 입문』. 서울: 학지사, 2009.
- 심성보 외.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제16집 (2004), pp. 5~38.
- 양기근. “세계화 시대의 평화의 문화 실현전략—문화다양성과 평화교육을 통한 접근”.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풍논집』, 제29권 (2001).
- 오오타니 다케오. “한일간 평화교육 사례 2 ; 중학교 사회현장으로부터 세계지리와 역사학습에서 한국, 조선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국교육 연구 소소식』, 1997. pp. 72~79.
- 오인탁. “평화교육의 이념과 내용”. 『기독교 사상』, 9월호 (1988), pp. 100~113.
- 이경태. “평화교육에 관한 서설적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2집 제3호 (2005), pp. 79~99.
- 정영수.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연구』, 제31권 제5호 (1993), pp. 173~193.
- 정희태. “평화교육의 수용을 통한 통일교육 개선”. 『통일전략』, 제7권 제2호 (2007), pp. 123~155.
- 최관경. “21세기의 평화교육”. 『교육철학』, 제24권 (2003), pp. 187~209.
- 추병완.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적 접근의 타당성”. 『통일문제연구』, 제15권 1호 (2003), pp. 103~125.

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peace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their implications

— Focusing on social studies instruction —

Seol, Kyu-joo(Gyou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conflicts in human society are growing with such social changes as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zation. Peace education, which aims for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plays a crucial role in that regard. Peace educa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Korea, as it has been divided for over 50 year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eace education is being provided at different levels of school and suggests the pla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eace education in schools. Two methods have been used: observation of social studies instruction for peace education and interviews with social studies teachers. The result shows that different forms of peace education is being practiced depending on the level of school, teachers' major field, characteristics and content of the subject matter, and students' level of interest. More effective peace education can be provided in schools by enhancing the interconnectedness among different levels of school and maximizing the unique strengths of each level of school.

Keywords: peace education, peace education in school, social studies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설규주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사회과의 진화에 대한 반성과 전망』, 『담임 반 수업과 담임 아닌 반 수업의 차이와 그 의미: 사회과 수업관찰 및 면담결과를 중심으로』, 『초등 사회과 수업의 패턴 고찰을 통한 사회과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사회를 담고 있는 글쓰기, 사회를 만들어 내는 글 읽기』,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과제』 등이 있다.

새터민의 남한 사이버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김현아(열린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의 사이버 학습 경험을 질적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버학습경험이 있는 새터민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표집방법은 눈덩이 표집으로, 자료 분석은 3명의 분석자에 의한 내러티브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를 근거로 새터민 사이버학습 경험을 분석한 결과 9개 범주, 27개 하위영역, 90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9개의 범주는 남한사회에서 배움의 의미, 낯선 남한의 교육체계,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대인관계 특성,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서의 고충, 새터민 사이버대학생 위한 고려사항, 새터민의 학습스타일, 새터민이 경험하는 학업에 대한 동기유발,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지지체계,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기대효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후 연구의의와 추후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새터민, 성인교육, 사이버학습 경험, 내러티브분석

* 본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논문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새터민 2007년 2월 기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은 1만 113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섰고, 2009년 3월까지 총 1만 5,836명이 국내에 입국, 그중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8년도에는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북한시절 직업은 노동자와 무직인 경우(88%)이며, 학력별로는 고등중졸이 70%이고 전문대졸이상은 16%에 해당된다.¹⁾ 이 중 2009년 10월 현재 사이버대학 재학 새터민은 119명으로, 2006년 1학기 31명에 비해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²⁾ 한편, 북한의 교육권은 학습이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의무교육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경제사정 악화로 의무교육제는 거의 붕괴상태에 빠졌으며, 교육에 대한 당적 통제, 학습활동의 자유권과 교육에 대한 학습기회의 보장권 침해로 교육에 있어서 인권보장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³⁾ 남북한은 체제 및 교육 형태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며, 두 국가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될 때 생겨나게 되는 교육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터민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령기 청소년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⁴⁾ 성인의 정규교육과정

1)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일부』 (온라인), 2009년 3월; <www.unikorea.go.kr>

2) 통일부 내부자료.

3) 김평선, “북한의 인권보장의 실태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4) 강희석, “새터민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조영아·전우택, “북한출신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1호 (2004), pp. 167~

으로서 사이버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사이버 교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의 성과 향상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도입되어 왔다. 2001년부터는 사이버대학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2009년 11월 현재 17개 고등교육법 상의 사이버대학교와 2개의 평생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교가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인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초·중·고등학교, 교원연수기간,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기관에 이어 유아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를 해마다 확대해가고 있다⁵⁾. 특히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평생교육과 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사이버교육은 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 학습형태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⁶⁾

이-러닝(e-learning)은 칸(Khan)에 의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자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로 정의되며, 흔히 교육공학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목표와 방법을 주도하는 교육훈련방법’ 정도로 쓰이고 있고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학습자 스스로를 기반환경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학습 콘텐츠를 학습자의 인지구조로 재구조화하는 일련의 학습활동’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닝(e-learning)은 상호작용적 학습 환경,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의 제공, 열린 학습체계, 온라인 검색

186 ; 최경자, “새터민 학생의 학습 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5) 편집부 저, 『전자상거래백서 2000』 (서울: 산업자원부 한국전자거래협회, 2000).

6) 유평준, “원격대학원 온라인수업의 학습참여도, 학업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학습자관련 변인”, 『교육정보방송연구』, 제9권 4호 (2003), pp. 229~267.

활동, 다양한 전문가적 관점들의 제공, 편리한 사용 환경, 용이한 온라인 지원체제, 실제적인 문제해결 환경과 협동 사회 환경의 제공, 비용면에서의 높은 효과, 면 대면 학습방식과 비교했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반복수강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⁷⁾

사이버학습에 있어서 학습자 특성은 학업수행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온라인 학습공동체에서 학습자의 개인과제와 협력과제 수행 경험, 팀 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경험, 학습자의 지식수준이 학업수행에 영향을 끼친다.⁸⁾ 특히 강의에 대한 호감도는 학업달성에 대한 의지와 관련되며 학습에 대한 낮은 호감도는 학업달성에 대한 의지결여로 학업을 피하게 되고 자신이 배울 능력이나 전략, 기술 등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⁹⁾ 그 밖에도 사전지식 및 학습자원 등 촉진환경이 충분할수록 새로 학습해야 할 정보의 지각, 선택, 기억, 저장, 인출이 쉬워지고,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가 높아지므로, 학습에 대한 인지적 몰입이 촉진되고 학습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¹⁰⁾ 이러한 특성에서 볼 때, 새터민들의 학습자 특성이 어떠한 지 그리고 이들의 학습자 특성이 학습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수자 특성이나 학습내용, 학업에 대한 촉진요소 등도 효율적인 사이버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이버교육의 특성상 교수자와 학습

7) 정혜진, “사이버 대학의 e-learning 환경이 학습자의 학업성취감과 강좌 몰입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 사이버 강의 수강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 14~16.

8) Dixon, J. K., “A Collaborative Model for the Use of Technology by Preservice and Inservice Mathematics Teachers in Their Teaching Practices”, *Center For Teaching Learning Mathematics*, vol. 22, no. 22~23 (2000), pp. 100~110.

9) Prinrich, P. R. & Schnuk, D. H.,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NJ: Prentice-Hall, 1996).

10) 권성호, “웹기반 가상교육에서 협력적 상호작용촉진을 위한 학습자 지원전략 개발”, 『교육공학연구』, 제17권 3호 (2001), pp 29~51.

자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교수자는 단순한 지식의 제공자가 아닌 촉진자이며 학습의 안내자로서 교수자의 학업수행에 대한 격려와 촉진, 안내 등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¹¹⁾ 이때 적절한 강의스타일의 정도가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높이고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²⁾ 원격교육의 중도탈락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학습내용 자체가 학습자의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론적이라서 흥미가 떨어진다고 하였다.¹³⁾ 사이버학습에서는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 이해력 향상 및 인터넷 기술 등을 실제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목표를 향한 의식적 활동 및 행동적인 학습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기대효과가 놓아질 수 있다.¹⁴⁾ 새터민들이 사이버 공동체 공간 내에서 교수자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어떤 학업에 대한 선호도를 지니며, 학습에 있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보는 것은 남북한 통일 이후 성인교육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입국하여 겪게 되는 교육경험은 외국의 이주난민의 학습경험에서 이론적 토대를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의 이주난민들은 개인적, 문화적 어려움과 더불어 학교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다.¹⁵⁾ 이주난민 학생들은 학업성적의 평가기준의 차이에

11) Moore, M. & Kearsley, G., *Distance Education: A Systems View* (Belmont: Wadsworth Pub, 1996).

12) Fulford, C. P. & Zhang, S., "Perceptions of interaction: The critical predictor in distance educ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vol. 7, no. 3 (1993), pp. 8~21.

13) 정인성 · 최성희, "온라인 열린 원격교육의 효과 요인 분석", 『교육학연구』, 제 37권 1호 (1999), pp. 369~388.

14) 강인원 · 최지호 · 이성근, "사이버대학의 e-Learning 서비스에서 신뢰 차원이 학 교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34권 4호 (2005), pp. 1143~1164.

15) Bemak, F., Chung, R. C-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refugees". In P.

서 오는 적응의 문제와 스트레스가 더 해진다.¹⁶⁾ 교육평가의 도구 자체가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고,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사의 질, 교사의 편견, 의욕 없는 교사, 교수매체의 부족, 과대한 학급인원, 난민에게 적합하지 않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본국의 평가도구에 대한 문화적 편견 등이 포함된다.¹⁷⁾ 학급규제의 기준과 학교에서의 행동의 차이가 더해지면서 과외 시간에도 이주난민 신입생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게 되고, 학업에 대한 기대감과 개인적 성장이 생활방식 및 세계관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이주난민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가 학업성공의 가치를 문화적 동화, 건강, 사회적 연계망, 문화적응, 기쁨, 즐거움, 흥미와 같은 질적인 측정에 두기 보다는 성적순위, 시험점수, 자기수행, 학급순위, 능력별 학급편성, 승부와 같은 경쟁적 성공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미국 한인 이민 1세대 36명과 심층면담 한 결과, 자녀교육, 직업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등의 정보를 얻고 싶으나, 그들이 부딪히는 언어장벽은 이용 가능한 정보원의 범위를 제한하며, 이민자의 사회적 고립과 주류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¹⁹⁾ 그 밖의 다른 이주민에 관련된 연구²⁰⁾에서도 소수민

B. Pedersen, J. G. Draguns, W. J. Lonner, & J. E. Trimble (Eds.), *Counseling across culture* (5th ed., pp. 209~232).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Inc., 2002.

16) Bemak, F., Chung, R. C-Y., "Working with children and families from recent immigrant groups" (2nd ed., pp. 84~101). In P. Pedersen & J. Carey (Eds.), *Multi-cultural counseling in school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2003), pp. 41~42.

17) Dana, R. H. "Psychological assessment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ethnic group members". In J. A. Aponte & J. Wohl(Eds.), *Psychological intervention and cultural diversity*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2000), pp. 59~74.

18) Herzberg, M., "Having arrived: Dimensions of educational success in a transitional newcomer school", *Anthropology & Educational Quarterly*, vol. 29, no. 4 (1998), pp. 391~418.

족 주변의 도움보다는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과 같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인 정보원에 대한 의존성에는 경제적 빈곤, 문화적 차이, 소외감, 인종차별, 소극성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였다.

새터민의 정보 빈곤 유발요인에는 공급자 중심의 정보지원 체계, 정보지원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의 미비, 정보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언어소통 능력의 부족, 정보기술 활용능력의 부족, 정보인식 수준과 교육수준의 한계, 정착생활의 태도와 자세의 한계 등이 있다. 한편 새터민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한국정보화진흥원(KADO)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음악/라디오듣기/영화보기, 신문/잡지/뉴스보기 다음으로 업무 및 학업관련 정보검색인 것으로 나타났다.²¹⁾ 이는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입국하여 처음 학습하게 되는 컴퓨터 사용이나 이들이 지니는 경제적 빈곤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업무 및 학업관련 등의 긍정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적 방식(top-down approach)이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정보소외계층의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방식(bottom-up approach)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²⁾ 따

19) Roh, Jin-Ja, *An investigation of the perceived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and the use of community public libraries among first-generation adult Korean immigrants living in the Dallas, Texas, a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2002).

20) 이재환·윤유라, “외국인노동자 H의 삶과 정보 빈곤”,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6권 1호 (2005), pp. 181~202 ; Fisher, K. E., “Information behavior of migrant Hispanic farm workers and their families in the Pacific Northwest”, *Information Research*, vol. 10, no. 1 (2004).

21) 조용완,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와 정보 빈곤에 관한 연구—부산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22) 강상현·강홍렬·김은미·차남경,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경제적 함의』 (서울:

라서 새터민과 같은 정보소외계층의 사이버학습 경험을 이해한다면 이들의 남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교육은 지식정보 사회에서 일부계층에 의해 이루어졌던 지식과 정보의 독점화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며, 지식과 정보의 다양한 생산과 이에 따른 창의력의 발휘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고²³⁾ 여성의 자존감 향상,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획득하고 지식을 적용하도록 한다.²⁴⁾ 따라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네트워크와 자원을 통해 공식적인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배경의 남한사람들과 교류하게 됨으로써 문화적 수용력과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시절 및 탈북과정에서 배움의 시기를 놓친 새터민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장경험이 있는 새터민들이 학위취득을 통해 경력관리를 해 나간다면 새터민들의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터민들의 보다 효과적인 사이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대학교 경험이 있는 새터민들의 사이버학습 경험들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효과적인 이-러닝(e-learning)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지원체계 서비스체계를 마련한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으로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사이버학습 경험을 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 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그들 자신의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대학교’라는 공간으로 진로를 선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pp. 1~163.

23) 최성우, “미래사회와 정보화 교육”, 『서울교육』, 제15권 9호 (2000).

24) 김수아,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 돋우기 실천(empowerment)’ 가능성에 대한 연구: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p. 18~23.

새터민들의 학습경험의 사례들을 이들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학습만족도와 성공적인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바람직한 이-러닝(e-learning)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새터민 사이버학습 경험자들이 경험 한 내용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대상자는 새터민 사이버 학습 경험이 있는 새터민 10명이다. S사이버대학교 2명, K사이버대학교 1명, K디지털대학교 1명, K디지털대학 2명, O사이버대학교 4명이었다. 이들 중 사이버대학교 졸업자는 2명이었고, 나머지는 8명은 모두 재학생으로서 각각 2년 4명, 3년 3명, 4년 1명이었다. 이들의 전공은 사회복지학, 경영학, 세무회계, 평생교육, 중국어문화, 디지털 콘텐츠이다. 남한 거주 기간은 3년~8년으로 평균 5년이며, 성별은 남 2명, 여 8명, 평균연령은 41세이다.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은 고등졸 2명, 전문학교졸 2명, 대학중퇴 2명, 대학교졸 4명이고, 졸업 후 남한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새터민은 2명이다.

2. 자료 수집

이들의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 중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1차적으로는 연구자와 평소 라포 형성이 되어 있는 새터민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고, 대상자가 면담 후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사이

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새터민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사이버대학교 교수 중 새터민 재학생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표집방식은 희귀한 표본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표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새터민과 그들이 추천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의 사이버교육 대상자들이 대부분 성인학습자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성인학습자 관점에 기초한 학습자들이 사이버 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 태도 및 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질문지는 “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이버 학습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주로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선호하는 교수의 수업스타일은 무엇입니까?”, “학습에 효과가 있었던 학습방법은?”, “강의 과정 부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수업시간 중 학습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등 반 구조화 된 형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구성하였다.

면담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상담교수와 새터민 대안학교 교사로 새터민 상담 및 교육경험 5년 이상인 자가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2009년 6월 초에서 2009년 8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면담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 대상자의 독립된 사무실, 비교적 소음이 적고 칸막이가 설치된 커피숍에서 진행되었다. 면담은 일대일로 진행되었으며, 소요시간은 70분에서 120분 정도였다.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은 반 구조화 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부가적인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였고, 더 이상의 내용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다음 질문을 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소형녹음기로 녹음되었고, 면담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상품권을 주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새터민의 남한사회 사이버학습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들 중 내러티브 분석을 사용하였다. 내러티브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면담이나 문헌연구에서 제공된 삶의 이야기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문화적 환경에 의해 구성된 실재(reality)를 중요시하기²⁵⁾ 때문이다.

내러티브분석을 위해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 박사 2명과 임상심리 박사과정 1명이, 전 분석 과정에 참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녹음된 내용을 중심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전사분량은 A4 용지로 220장 정도였다. 심층 면담 한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과 분석방법을 공동 연구자에게 전해주고, 6회 총 70시간에 걸쳐 만나 분석단계별로 각자 분석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정리한 내용을 공동연구자들의 메일로 발송하여 확인과 수정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 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Ⅲ. 결과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를 근거로 새터민의 한국에서의 사이버학습 경험에 대해 질적 분석한 결과, 9범주, 27하위영역, 90개념을 도출하였다. 연구 분석결과에는 표 1에 제시하고, 각각의 구체적 범주와 개념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²⁵⁾ Lieblich, A., Tuval-Mashiach, R., & Zilber, T.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lif: SAGE Pub., 1998).

〈표 1〉 새터민의 사이버학습 경험 분석

개념	사례	하위 영역	범주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 지식 필요	7/10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학습	남한사회에서 배움의 의미
남한사회 적응의 필수요건으로서 컴퓨터	4/10		
개인의 노력이 인정받는 남한사회에 대한 만족	3/10	새터민이 인식한 남한사회	
꿈과 목표추구로서의 남한의 학업	4/10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한 남한사회	2/10		
남북한의 지식격차	2/10	남북한 교육문화 차이	낮선 남한의 교육체계
남북한의 교과목 차이	5/10		
틀에 박힌 북한의 암기식 교육	5/10		
다양하고 자율적인 남한의 사이버학습	3/10	남북한 학습방식 차이	
낮선 사이버학습 방식	5/10		
남북한 학습평가방식의 차이	4/10	언어소통의 어려움	
객관식 평가의 수월함	6/10		
언어이해의 어려움	6/10		
영어이해의 어려움	4/10		
외래어이해의 어려움	5/10	언어소통의 어려움	
단어 학습 보조 장치의 필요	7/10		
새터민을 이해하는 교수에 대한 믿음과 의지	3/10	교수와의 관계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대인관계 특성
교수와의 직접적인 교류선호	6/10		
학습동기로서의 교수의 지지와 격려	6/10		
남한동료와의 동등한 경쟁심 추구	3/10	교우관계	
동료인정에서 얻은 기쁨	4/10		
함께 하고자 하는 새터민 동료의식	5/10		
남한지인에게 도움요청	4/10	도움요청 태도	
도움요청에 대한 미안함	3/10		
새터민 선배를 통한 도움추구	2/10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학습도움 추구	2/10		
정보습득을 위한 인터넷 검색 활용	3/10		

게시판의 적극적 활용	4/10	학습교류 형태	
무지노출에 대한 걱정	6/10		
공개적인 사이버교류 기피	3/10		
댓글을 통한 인정과 지지경험	4/10		
새터민의 학업중단에 대한 우려	3/10	새터민의 이미지 고려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서의 고충
자기관리가 중요한 사이버학습	4/10		
새터민 정체성 밝히기	5/10		
남한의 레포트 수준 타진해보기	4/10	학업스트레스	
레포트 작성의 어려움	5/10		
시험부담	2/10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	4/10		
초기 학습적응의 어려움	6/10		
나이로 인한 학습부담	4/10	학업의 장애요소	
학업과 직장병행의 어려움	5/10		
자녀양육으로 인한 학습부담	2/10		
대학생활 안내의 필요성	5/10	새터민을 위한 배려 요구	
새터민 특화교육 희망	3/10		
새터민에 대한 학교의 관심 요구	3/10		
경제적 안정 우선	5/10	효과적인 사이버학습을 위한 선행조건	
사이버학습 기초로서의 컴퓨터 활용 능력	5/10		
사이버학습 동기로서 학업열의	5/10		
사전학습으로서의 남한생활 경험	4/10		
배움을 목적으로 한 순수한 학업충고	4/10		
실제 사례중심의 이해용이	3/10	선호하는 사이버 강의형태	새터민의 학업 스타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교수방식 선호	3/10		
질판강의 선호	7/10		
동영상 강의 선호	2/10		
반복학습 추구	5/10		
남북한 비교설명을 통한 이해	5/10	선호하는 학습형태	
실재적인 강의내용 집중	3/10		

시각적인 자료를 통한 기억	3/10	효과적인 학습방식	
지식습득을 위한 메모활용	3/10		
체계적인 학습습관	3/10		
학습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7/10	학습의 촉진요소	새터민이 경험하는 학업에 대한 동기유발
학업지속에 대한 강한 의지	8/10		
나이를 뛰어넘는 배움에 대한 도전	3/10		
부단한 학습노력	8/10	학업에 대한 성공 경험	
북한시절 우수한 학업성적	3/10		
남한에서의 우수한 학업경험	5/10		
학업성취로 인한 기쁨	3/10	오프모임에 대한 견해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지지체계
새터민 동료모임의 필요성	2/10		
오프모임의 필요성	4/10		
새터민 편견으로 인한 오프모임 참석 의 어려움	2/10	오프모임에 대한 견해	
타인경계로 인한 오프모임 참석의 어 려움	2/10		
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오프모임 참석 의 어려움	7/10		
학습동반자로서의 가족	5/10	학습에 대한 가족의 역할	
학습에 대한 가족의 지지	8/10		
멘토의 필요성	4/10	힘이 되어주는 멘토	
적극적인 새터민 멘토 활동	5/10		
가족 내의 학습모델링 효과	5/10	사이버 학습에 대한 전이	
가족에게 사이버 학습 권유	3/10		
새터민 동료에게 사이버학습 권유	5/10		
반복강의의 이점	4/10	사이버대학의 이점	새터민 사이버학습 의 기대효과
사이버학습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 혜택	5/10		
시공간을 뛰어넘는 학습 가능	4/10		
학업과 직장병행의 용이함	5/10		
혼자서 하는 것이 편리한 사이버 학습	3/10		

통일 이후 사명감	4/10	새터민 역할의 중 요성	
북한문화 안내자로서의 역할	2/10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 교양지식	2/10	학습의 부수적 효 과	
대학생으로서의 자긍심	6/10		
새터민 동료의 부러움	2/10		
앞으로 인한 대인관계 자신감	2/10		

1. 남한사회에서의 배움의 의미

1)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학습

새터민들은 남한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적응을 위해서는 배움을 통해 알아야 한다고 점을 강조한다. 남한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설명이 필요 없는 기초지식마저도 새터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이러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추가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례 5는 특히 정보화 시대인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것이 남한사회 적응의 필수요건이라고 말한다. 컴퓨터 활용능력은 남한사회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 지식 필요. 한국에서 누구나 다 아는 예를 들게 되면 문화나 역사나 그런 거 할 때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를... 한국 사람들은 고종이 누군지 알지만 저희는 고종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대학 선생님이 역사 강의할 때 고종 황제가 이렇다가 얘기는 하잖아요 그냥. 구태여 고종 황제가 누구라고 설명을 안 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누구라도 다 아는 건데, 저희는 모르거든요. 실례로 들면 그런 것들. 당연히 모르지요. 저쪽 역사가 조금씩 틀리니까. (사례10)

남한사회 적응의 필수요건으로서 컴퓨터. 그러니까 첫째로는 컴퓨터를 우

선 능숙하게 다뤄야 하구요, 정보화 시대니까, 그리고 한국은 인터넷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인터넷에서 알아보면 되는데 그게 아마 새터민들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사례5)

2) 새터민이 인식한 남한사회

일하면 일한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인정해주는 남한사회 분위기는 북한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점이며, 따라서 새터민들에게 개인의 노력이 인정받는 남한사회가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남한사회에서 배우다는 것은 경제적 안정이 주는 안주한 삶이 아니라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꿈과 목표 추구의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부단히 계속해서 자기 계발을 해야 하는 남한사회가 처음부터 적응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개인이 노력이 인정받는 남한사회에 대한 만족. 여기서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머리 깨져도 하면 되지만..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일하면 일 하는 대로 대우해주고, 배우면 배우는 대로 대우해 주잖아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2)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한 남한사회. 분명 그거예요! 저는..분명! 저는 그래. 뜻이 멀어진 애들한테 그래요. 아~생각해봐라. 너네 여기 와서 하루 밥 먹고 이려고..남한 땅에 와서 밥이나 먹고 그러자고..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와보니까. 그저 와서 무의미하게 훑 난 보내고 싶지 않다고... (사례3)

2. 낯선 남한의 교육체계

1) 남북한 교육문화 차이

남북한의 사회구조적 차이로 인해 새터민들은 남북한 지식 격차를 심각하게 하였다. 특히 사례 10은 남한사회가 마치 “현대판 타임머신”을 타

고 온 듯 하고, 자신들의 교육수준은 백지상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새터민들은 남북한 지식격차로 인해 강의를 들을 때에도 역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고 말한다. 남한의 교육환경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남북한 교과목 차이로 인하여 생소한 교과목들이 많고, 북한에서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서로 다른 교육내용으로 배웠기 때문에 수업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남북한의 지식격차. 그 다음에는 뭐 우리하고 뭐라고 할까, 사회구조 자체가 너무 틀리잖아요. 이 자체가 30~40년 뒤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뭐 현대판 타임머신으로 왔으니까.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나 같잖아요. 백지장 인데.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 강의할 때는 다 알 것 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르는 때가 많거든요. (사례10)

남북한의 교과목 차이.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는 우리 안다지만 여기서 보 면은 제가 했던 건 경영이니까 자본주의 경제원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다 해서 물론 그 과목이 있긴 하지만, 보면 그 과목 하나 들 어가지고 다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례7)

새터민들이 경험하였던 북한은 틀에 박힌 암기식 교육을 통해 학습을 하였던 사회였다. 이러한 북한의 틀에 박힌 암기식 교육방식에 대해 사례 7은 자기생각이 아닌 “짜여진 대본을 주고 외워서 쓰는”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무조건 암송한 것을 그대로 외워서 써야하는 북한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새터민들은, 남한의 사이버학습에 대해 토론하고 싶을 때 토론하고 자유로운 교육방식이라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관식이 많은 데, 그건 어디까지나 딱 짜여진 대본을 주는 거죠. 고거를 외워서 쓰는 거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창의가 아니예요. (사례7)

2) 남북한 학습방식 차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새터민들에게 사이버 공간 자체가 낯설고 게시판 활용, 질문, 쪽지, 레포트, 팀 프로젝트와 같은 사이버 교육 방식이 낯설기만 하였다. 또한 단답형, 객관식, 토론 등과 같은 다양한 남한 학습평가방식에서 새터민 학습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사례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는 북한의 교육에 비해 경험이 풍부한 새터민 성인에게 남한의 객관식 평가는 비교적 수월하다고 말한다.

객관식 평가의 수월성. 그런 건 여기가 좀 쉽다고 해야 할까. 왜냐면 객관식이니까 주관식 같은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걸 해야하니까 바쁘니까(힘드니까). 객관식은 사람이 외운 것도 뭘 하나 툭 튀겨주면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객관식은 그런 것인데 그런 건 좋더라구요.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게 좋아요. (사례6)

3) 언어소통의 어려움

언어이해의 어려움. 새터민들은 한 민족이지만 남북한의 한글문화는 맞춤법에서부터 숨은 뜻에 이르기까지 차이점이 있고 이로 인해 남한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한다. 학습상황에서 흔히 쓰고 있는 레포트,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엠피, 멘토 등의 한자어, 외래어식 표현의 언어소통에 장벽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조금 낫지..아직도..많이..한글의 문화, 뜻풀이 보면 우리하고 틀린 게 많아요. 헛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 거는 우리는 이런 거 없는 건데.. 우리는 이런 뜻으로 배웠는데 왜 이렇게 하지..안간 힘으로 썼는데, 안간 힘으로 쓴대요. 같은 나라 우리 한 민족 말인데..뜻풀이가 우리하고 틀리구나..대표적으로 그렇지.... 여러 면에서 많이 틀리니까.. (사례4)

영어이해의 어려움. 새터민들은 학습상황에서 모르는 영어가 나올 때마다 당황스럽다고 하며 한글말로 따로 적어서 익히기도 하지만, 사이버학습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이나 검색창과 같은 단어 학습 보조 장치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말한다.

말을 모르니까 컴퓨터에 들어붙어서 그 말을 또 찾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로 창에 찾아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사례2)

3.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대인관계 특성

1) 교수와의 관계

새터민 성인 학습자에게 교수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낮은 사이버학습 환경에서 새터민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교수자에게 강한 신뢰감을 보였다. 특히 교수자의 피드백에서 보여주는 지지와 격려는 사례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새터민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켜주고 있다.

학습동기로서의 교수의 지지와 격려. 쪽지 답 글이 왔는데.. 처음 글자가 ‘**학우님 레포트 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쁜 데 더 어떻게 이쁘게 봐줍니까 잘 쓰셨습니다’ 하고 왔는 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쁘지도 않는데 이쁘다 하는 게 좋고..글도 내가 볼 때는 많이 허접하고, 빈 구석이 많은데..그 모자란 것을 첫 평가를 그렇게 해주니까. 사람이라는 게 칭찬이란 게 좋은 거 같아요. 내가 못해서 누군가 나를 잘 한다 잘 하네요. 아..싫어도 그 의무감이 있어서..열심히 하면..아..어렵פות이 알게 되더라구요. 아..열심히 하게 되더라구요. (사례4)

교수와의 직접적인 교류 선호. 새터민들은 학교의 직원이나 학습동료 보다는 교수가 직접 멘토를 연결해주거나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를 해주

는 등 다양한 교수역할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 사이버 공간 속에서 교수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나아가서 교수와 직접적인 면담이나 전화 요청 등의 교수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선호하였다.

아 그러니까 내가 교수님 내가 고민이 이렇다는 거 너무나도 무식하다보니까 정말 고대로 퀴즈 모르는 거 다 썼어요. 이런 과정으로 2학년 1학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기말고사 시험을 받자니까 정말 나로써 이 문제가 또 이렇게 막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교수님 웃어주지 말고 알려달라고 그 교수님이라는 게 너무나도 내 잘난 글을 내 짧게 쓴 게 한 한 페이지 좀 넘게 쓴 거 같아요. 근데 그걸 지루하게 보지 않고 다 읽고서 내 인테 회답해 가지고서 예~내인데다가 힘을 주고 시험을 다시 재시험 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시험을 쳐가지고 서리 내 정말 성적이 올라갔어요. 내 정말 그렇게 공부 했어요 내 교수님 한테에~~ (사례8)

2) 교우관계

새터민들은 남한 학습 동료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면서 동등한 경쟁을 추구하려고 하며, 새터민들 동료학습자에 대해서는 강한 동료의식을 보인다. 새터민이라고 불쌍하다 동정하고 봐주는 것보다는 남한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를 원하였고, 남한에 온 이상 한국 사람과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서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새터민들은 남한의 학습 동료들이 자신들의 과제를 참고하거나 인정해줄 때, 커다란 기쁨을 느끼고, 힘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새터민들끼리 정서적인 교류뿐 아니라 지속적인 학업이나 정보를 교류하는 등 함께 하고자 하는 새터민 동료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남한동료와의 동등한 경쟁추구. 대단한 거는 아니고, 살아남자니까, 열심히 해온 거지요. 내가 살아남자니까. 근데 이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

들보고 그렇습니다. 어느 탈북자가 잘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말아라. 그 사람보다 더 나은, 한국사람, 잘된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라. 니 라이벌로 잡고 그 카고 따라가기 위해서 해라. (사례9)

동료인정에서 얻은 기쁨. 2차 3차 에서는 나하고 같이 들어간 새터민 아이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고.....우리 같은 팀에 들어갔어요. 같은 팀에 넣어 달라 해가지고..그래서 우리가 2차, 3차에서 우리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올렸는데.. 이상한 거 있지요. 그 중에서 2/3는 내 자료가 다 올랐어요. 우리 팀에서 올리는 자료에도..너무 좋은 거 있죠. 누가 말한 건지 다른 사람도 다 알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뿌듯하고..사람들이 인사 올때 마다 너무 그런 거 있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용기가 생기고..사람들이 댓글을 올려가지고 힘을 주니까..기분이 좋았고..제일 좋았던 거는 팀 프로젝트가 그랬던 거 같아요. (사례1)

함께 하고자 하는 새터민 동료의식. 같이 배우는 사람들끼리 정도 들고..해서.. 지금도 같이 다니던 사람들끼리 자주 연락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에서 **에서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다 같은 학원에 다녔던 사람들이 다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사례2)

3) 도움요청 태도

새터민들은 학습상황에서 물어 볼 내용이 너무 많고 일일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였다. 남한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새터민들에게는 질문거리가 되고 잦은 질문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상대방 특히 남한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 도움요청에 대한 미안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소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새터민들에게 인터넷 검색에 대한 의존이 훨씬 더 두드러진 듯하다. 더 나아가서 간접적인 사이버매체보다는 직접적인 대면관계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사이버학습 경험이 있는 새터민 선배나 평소 친분이 있는 남한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주로 비공식적

인 정보원에 의존하였다. 일부 새터민들은 토론에서 남한의 학습동료들이 어떻게 글을 올리고 생각을 하고 있나 관찰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거나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학생간의 상호의견을 주고 받는 등의 적극적으로 사이버 학습교류를 보였다.

도움요청에 대한 미안함. 그런데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데, 대고 물어 보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자꾸 질문하자니까. (사례9)

정보습득을 위한 인터넷 검색 활용. 그런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은 인터넷 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한국에서 흔히 쓰는 유행어도 저희한테는 생소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그저 뭐 저는 기본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는데, 검색창에 다 치면 바로바로 말이, 답이 나오거든요. 모를 것도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사례10)

새터민 선배를 통한 도움추구. 그런 것도 제가 **라고 사이버대학교 5년 전에 졸업한 새터민 분 통해서, 그 분이 입학시켜주고 수강신청도 다 해줬어요. (중략) 이 학교에서도 새터민 선배분들이 6~7명 되니까..그분들한테 물어서 하면 됩니다. (사례2)

남한지인에게 도움요청. 그리고 인맥이 텅없이 부족하잖아요, 검색으로도 안 되고 해서 제가 성당을 좀 다녔어요. 같은 나이의 분들 모여서 뭐하면 제가 자문을 구하니까 그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례5)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학습도움 추구. 그게 안 된다면 사이버상으로도 동아리, 토론물 많이 올리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수집하고 교수님들한테도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사례5)

4) 학습교류 형태

많은 새터민들은 남한사회에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모를 때마다

자주 질문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무지를 밝히는 것이라는 우려가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무지노출에 대한 걱정은 새터민 신분에 대한 공개적인 노출이 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따라서 공개적인 사이버 교류를 기피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댓글을 통한 인정과 지지경험을 한 새터민들은 게시판에 통해서 자신들의 학습의 어려움이나 지금까지의 삶을 노출 하는 등의 적극적인 교류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무지노출에 대한 걱정. 모르는 말도 너무 많고 하니까 그 선생님한테도 한 두번 물어 보기가 쉽기 자주 물어보면 이 무식한 걸 자주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컴퓨터로 하다가 왔다고 하니까 그다음엔 이 선생님도 막 웃는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모르니 우습지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안타깝지..(중략). 어떤 교수님은 정말 난 저래 새터민이라고 그래서 무식하다고 밝히니까 너무 모르니까 진짜 선생님도 허물없이 나 이렇게 무식하다고 웃지 말고 내가 이해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글을 쓰기도 하면... (사례8)

공개적인 사이버교류 기피. 제가 교수님들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가 무슨 과 몇 번 누굽니다. 쪽지는 괜찮잖아요. 공개하는 건 싫고. (사례5)

게시판의 적극적 활용. 그거는 게시판에 글 올리면 나 이렇게 썼는데.. 그냥 그 결말을 쓰다니니까 내 생활 이렇게 쓰다니니까..어렵지 않게 썼는데.. 처음에는 많이 실망도 하고..솔직히 짜증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쓰다니 내 지나간 생활이 과거불안이 막....갑자기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니까 우리는 또 그런 표현풀이 방식을 배우니까 그거를 살짝 표현해 적다니니.. (사례4)

댓글을 통한 인정과 지지경험. 이번에 **과목 같은 거는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이 과목 너무 좋다고 **글을 한번 올렸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사이버로 공부한다는 것이 긴가민가했어요. 등록을 해서 듣고는 있지만 이왕 배웠으니 알아야 되는 거고 해서..댓글을

올려보는데..**쪽에 부지런히 제가 댓글을 올리는 것은 너무 좋은 거 있지요. 나이가 있지만 지금 공부하는 거 축하한다고..거기에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댓글 달아줬어요. '내가 뜨거운 것 같다.' 근데 그게 정말 기분 좋은 거 있지요. 칭찬받은 거 같고, 아이처럼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나를 이렇게 봐주는데, 당연히 잘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사례1)

4.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서의 고충

1) 새터민 이미지 고려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서 새터민 이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많은 학생들은 새터민이라는 정체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새터민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학업에 대한 포부나 적극적인 학습 도움요청을 하고 남한의 지지체계를 확보해나간다. 또한 새터민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는 학습동료들에게 새터민이라는 신분을 알리고 상호 교류를 통해 남한사회의 편견을 해소시켜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이버학습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칫 잘못 하면 중도탈락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새터민들이 학업중단은 곧 새터민의 이미지와 결부된다고 말한다.

새터민 정체성 밝히기. 이제처럼 자기소개서에 새터민이라고 올렸어요. 저는 새터민입니다. 그런데 남한사회에 와보니까 정말 발전된 사회를 볼 때, 내가 좀 뒤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내 자리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싶다고..그래서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고..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많은 힘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희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많이 부탁드린다 하고.. 썼지요. 그랬더니 교수님들도 오..정말 좋습니다. 수고했다고. 하지요. 저는 아예 그렇게 공개했어요. (사례1)

자기관리가 중요한 사이버학습.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 하면은 이거 안 다니는 것보다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일반 대학 다니는 사람보다 사이버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심리적 부담이 더 할 거예요. 아마. 의지도 더 필요하고. 자기 통제안하면 그냥 강의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체크만 해도. 대학은 무조건 가야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어차피 들어야 되고, 진도는 나가니까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지식이 그만큼 늘잖아요. (사례10)

새터민의 학업중단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뭐 다 다녔으면 좋겠어요. 다 사이버대학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또 다니면 끝까지 다니면 좋겠고... 왜냐면 자꾸 중간에 다니다가 안 다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테도 안 좋거든요. 이미지만 나빠지고... 괜한 제도다 이렇게 하면... 전 끝까지 졸업되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피해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례10)

2) 학업스트레스

초기 학습적응의 어려움. 새터민 사이버대학생들은 사이버 학습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레포트 시기를 놓치거나 시험을 치르는 방식을 알지 못하여 초기 학습적응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사례 8은 특히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서 레포트, 멘토,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남한의 학습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입학 후 1, 2학기는 학습적응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한다.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 교수님들이 쪽지를 해서 글을 보내는 것을 이해를 못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요 기말고사요 그 말조차도 이해를 못 했어요. 기술하는 것이 뭐고 레포트는 뭐고 북한말로는 기술하라는 것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인가? 리포트 보러 뭐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사 내가 하나하나 그런걸 알자고 적어주니까 배우는 과정이 이제사 알아요. 2학년 2학기 되니까 이제사 그 뜻을 이해해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1학년 2학기 때 그 시험을 완전히 선생님 알다시피 학년을 올라갈까 말까 하는 정도의 성적이 나왔어요. (사례8)

특히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레포트 작성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의 레포트란 어떤 형식으로 작성성이 되고 어느 수준인지를 타진해보는 모색 과정을 탐색하기도 한다.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인한 학업부담이 있고, 이로 인해 시험에 대한 부담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포트 작성의 어려움. 그래서 나는 리포터 작성할 줄도 잘 몰라서 그 리포터가 어떤 식인지 잘 몰라서 북한말로 해서 어떤 주제가 돼서 어떤 구절을 축소해야 되는지 이걸.. (사례8)

남한의 레포트 수준 타진해보기. 처음에는 이해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싶다가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눈치 보고 안하다가 나와 짝이 된 사람한테 그냥 전달했어요. **전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요 하다가는 레포트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나는 **전자에서 일한 적도 있고 해서 그냥 경험을 적었다 했더니 내가 쓴 걸 보더니 잘 썼네 하더라고요. 내가 안한 거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내 쪽만 알고...그런데 막 어이 없이 제출하면 기가 딱 막혀 할까봐 어느 정도인가 하고 타진해본다고... 제출을 못했고, 그런데 제출한 거를 보니까 아!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사례1)

시험부담. 이제까지 아직까지는 시험 칠 때는 이 스트레스 받아서 몽롱 그래지고 밤12시 1시까지 악을 쓰고 공부했어요. (사례8)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 그런데 중국어는 기초가 조금 있었으니까.. 중국어 실습 이런 거는 다른 거예요. 영토라든가 중국의 문화 이런 거 하는 건데..경제..내가 뭐 그런데 관심도 없고..중국에서 언어만 배웠지 다른 거는 모르잖아요. 그것만..D를 맞았어. D 맞았어..방**교수님 과목.. (사례4)

3) 학업의 장애요소

성인학습자로서 나이에 대한 학습 부담과 학업과 직장생활병행의 어려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학업의 장애요소로 부각되었다. 새터민들

은 배우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만, 조금 더 젊은 나이에 남한에 와서 배우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나이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자녀양육이나 남한의 직장생활과 동시에 학업을 병행하다보니,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려니 시간을 내어 강의를 듣기도 빠듯하고 학습내용을 따라가기도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5.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을 위한 고려사항

1) 새터민을 위한 배려 요구

남한의 대학문화가 낯설은 새터민 사이버대학생들은 새터민들이 사이버 학습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대학생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에게는 엠티, 멘토 등의 낯선 대학생활 용어나 시험방식, 레포트 작성방식, 사이버 학습에 필요한 사이버 공간의 이해를 포함한 사전교육이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일부 새터민들은 사이버대학생활에 기초되는 교양교과목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사례3은 무엇보다도 새터민에 대한 학교의 작은 관심과 지지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새터민들에게 학교가 보내주는 따스한 관심은 이들에게 학업을 지속시키고 남한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주는 데 힘이 되는 듯하다.

대학생활 안내의 필요성. 그런데 그런 모임을 가는데 아이들이 엠티라는 게 뭐이고 멘토라는 게 뭐이고 그런 술어가 다 써져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술어를 써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한사람에게 번역을 해서 말해 달란 말입니다. (사례8)

새터민 특화교육 희망. 새터민들이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걸 모르잖아

요. 거기에 대해서 새터민에 대한 특별과목을 만들어서. (사례5)

새터민에 대한 학교의 관심요구. 저기서는(북한에서는) 하겠으면 말고 하겠으면 말고 하지 말고..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편견 가질 수 있어요. 너네는 공부 아무리 해도 써먹을 때도 없고. 너네 좋아서 공부할 테면 하고 말려면 말고 무관심 하면 솔직히 용기 냈다가도 에휴! 내가 이거 해서 뭐하랴..써먹을 수 없어도 공부하면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다는 한 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들만의 도움이라는 게 크게 보다는 한 학기 한번 정도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례3)

2) 효과적인 사이버학습을 위한 선행조건

경제적 안정이 우선. 많은 새터민들은 남한에서의 생활이 안정될 때 학습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한다. 남한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학업을 병행해가며 자신들의 꿈과 목표를 추구해나가고자 하는 새터민들에게 경제적 불안정은 학업을 포기하게도 만든다고 한다.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재북 및 재중 가족 부양을 함께 해야 하는 새터민들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과 학업지속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할 것이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생활의 안정이 되어야만 한다.

새터민들이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저처럼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쌤도 아시다시피 여기 정착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선 생활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생활이 안 되면 생활이 안 되면.. (사례5)

사이버학습 기초로서의 컴퓨터 활용능력. 새터민들은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학습을 하기란 참으로 힘들다고 말한다. 이에 사이버대학 입학 전에 직업훈련이나, 개인 학원,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서 워드프로세서, 엑셀, 컴퓨터 활용능력과 같은 컴퓨

터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전 컴퓨터 교육을 통해 컴퓨터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이버학습의 기초가 갖추어지는 듯하다.

사이버라는 말도 모르고 그것 자체를 모르고 들어도 못보고 이해도 내가 할 수 없더라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니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컴퓨터도 알아야하고 나는 컴퓨터도 모르고 그럼 컴퓨터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럼 어떻게 내가 시작하겠나 했는데 그래서 제일먼저 컴퓨터 개념을 알자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 시키는 게 있어요. (사례8)

사전학습으로서의 남한생활 경험의 중요성. 새터민들은 남한입국과 동시에 학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남한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학습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따라 하기가 쉽다고 한다. 사례 7은, 특히 남한생활 경험이 남한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게 만들고 문화나 사회생활의 안정감을 주게 하며, 남한에서 경험한 직장생활이나 일생생활 경험에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학업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그분들 위해서 따로 뭐 이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어느 만큼 이해하고 들어올까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와서 그런데 뛰어들기 보다는 1, 2년 정도 이사회에 적응하고 그래도 말귀도 대충, 아무리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못 알아들을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여기 적응된 다음에 해야만 나한테도 어느 정도 살이 되는 거지 전혀 모르고 시간 때우기만 해서는 그리고 그런 거는 서로 정 바쁘면 알아봐서 전화해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자기 공부는 아니죠. (사례7)

사이버학습 동기로서 학업열의. 새터민들은 사이버학습은 스스로 하

는 공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학업에 대한 포부와 열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사례 10은 자격증 취득이나 학위 취득의 목적보다는 자신들이 왜 사이버대학을 가려고 하는 지, 어떤 배움을 목적으로 진학을 하였는지 배움에 대한 순수한 학업충고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 온 아이들 지금 온라인 대학 같은 거 다니자면 일반대학 다니는 애들은 이렇게 낮게 보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사이버대학 다니려면 정말 열의가 많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막.. 힘을 북돋아주고 싶어요. (사례1)

배움을 목적으로 한 순수한 학업충고. 일단은 사이버대학 가는 목적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학이 하도 많은데 왜 딱 사이버 대학이냐. 그거 목적을 자기가 알고 가야죠. 남들 다 사이버대학 다니니까 나도 사이버대학 다니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사례10)

6. 새터민의 학업스타일

1) 선호하는 사이버강의 형태

새터민들의 학업스타일은 성인학습자로서 실제 사례중심의 설명방식이나 어려운 말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천천히 설명해주는 교수방식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하였다. 또한 사이버학습 형태 중에는 칠판강의나 동영상 강의와 같이 정적인 강의보다는 교수자의 움직임이 있거나 시각적인 학습내용이 집중이 잘 되고, 보다 더 잘 기억이 된다고 하였다. 오랜 기간 주의집중 하기가 힘들고 남한의 학습언어 이해가 어려운 새터민 성인학습자들에게 시각적 자료제시는 장기기억에 보다 효과적인 학습매체인 듯 인상을 받았다.

실제 사례중심의 이해용이. 저희는 원래 자기 영어대로 설명하면 아무 귀에도 안 들어 오거든요. 그걸 쉽게 설명해주게 되면 들어오거든요. 돈을 예

를 들어서 10만 원을 넣었는데 내가 내일 10만 원을 뽑을 거다, 그래도 그 하루 이자를 쳐 준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해주면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아, 일반 은행에서 하는 건 그런 게 없는데, 그렇고 뭐. 예를 들게 되면 CMA RP 라고 하게 되면 그걸 설명해주는 걸 알아서 쉽게 설명해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런 게 고객 돈 가지고 임시로 굴리다가 아무 때나 환매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주게 되면 저희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죠. (사례10)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교수방식 선호. 근데 그게 남한이라고 다 그렇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원래 북한에 있을 때 명강의면 유식한 말 쓰는 게 명강의라 했는데 여기는 같은 표현도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안 쓰고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분들 있어요. 특히 이거는 더 하죠. 교수님들이 강의하실 때는 특별히 그런 것을 유의하셔야하는데 이걸 저의 입장이고요 ** 교수님 같은 분은 알아듣기가 쉬워요. (사례6)

칠판강의 선호. 그런 방식으로 볼 때, 교수가 칠판에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곁쳐서 할 때 그때가 가장 편해요. 그리고 이해도 잘 되요. 그리고 민사법 같은 거는 앉아서 그냥 말만 하다나니 막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칠판에 적으면서 할 때는 의례히 집중이 되고, 이해도 잘 되고. 그런데 민사법이나 행정법 할 때는 그냥 딱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강의가 조금 딱딱하면서 잠이 와요. 그런데 칠판에 적을 때는 웬만해서는 잠이 안와요. (사례1)

동영상 강의 선호. 아~설명방법이요 ... 동영상 같은 거 있죠. 설명하다가 동영상으로 참고하라고 어떤 교수님의 경우 동영상을 띄워놓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인식이 빨리 될 수 있죠. 동영상으로 교재내용에 맞게 동영상을 하면 인식이 이해가 오래가요. (사례6)

2) 선호하는 학습형태

새터민들은 학습을 할 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듣는 학습활동을 추구하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실재적인 강의에 보다 더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집

중하였다. 또한 사례 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남한의 자활은 북한의 당일꾼들의 개별교양”과 같이 남한의 전공 용어의 개념을 이해할 때 북한에서 경험했던 내용과 관련시켜 남북한 비교설명을 통한 이해방식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다고 말한다.

반복학습 추구. 나는 예....이제 영상보고 하는 공부를 다른 분들은 한 서너 시간만 듣게 되면 이해하게 되는데 나는 불이해해서 내 절로 또다시 또 듣고 서리 계~속 반복 길가다가도 이어폰 꽂구서리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고저 내가 요 말이 요렇구나, 하게 되는걸 다가오게끔. (사례8)

실재적인 강의내용 집중. 대체로 그런 강의가 재밌고, 그리고 또 현실하고 많이 밀착된 강의가 또 강의자체도 재밌고, 호기심도 많이 가고. (사례10)

남북한 비교설명을 통한 이해. 이제처럼 여기서 자활센터다, 자활센터다 하면 북한에서 낙오자를 교양하는 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북한에서는 낙오자 교양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렇게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개별교양이라고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당일꾼들의 개별교양, 이렇게 해놓으면 자활이랑 이기 딱 맞아떨어집니다. (사례9)

3) 효과적인 학습방식

새터민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방식으로 활용되는 학습기술은 시각적인 요점 정리나 시각적인 자료, 메모를 활용해서 보는 방식 등을 통해 기억하였다. 사례 4는 이러한 학습방식에 대해서 “귀에는 안 들어와도 계속 훑어보면 머리에 저장 된다”고 표현한다. 낯선 학업 방식과 생소한 교과목,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새터민들에게 시각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듯하다. 학습에 임하는 사전 준비행동으로는 미리 학습내용을 프린터 해서 훑어보고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였고, 일부 새터민들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조금 더 배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새터민들에게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학습습관을 가져오게 하는 듯하다.

시각적인 자료를 통한 기억. 자꾸.. 훑어보라. 훑어보면 눈에 들어오고, 귀는 안들 어와도 머리에 저장되거든요. 내가 10문제 봤다면 1문제는 되요. 100문제 보면 10문제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상당한 지식이고 쌓이는 거 같아요. (사례4)

지식습득을 위한 메모활용. 일단 메모지를 준비하고.. 메모지를..그다음에는 전화기도 옆에다 딱 켜놓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라고..일단 메모지 지요. 메모지고..강의 다 들은 다음에는 프린트할 종이를..저는 이면지를 쓰거든요. 애가 쓴 종이랑 나머지는 다 모아서..프린터를 해놓고..그걸 다 준비해놓고..모르는 거 있으면 메모해놓고..그걸 또 물어보고.. (사례3).

체계적인 학습습관. 예전부터 기초가 있었으면..처음으로 하다보니까..자꾸 잊어요. 어떤 교수님들은 중요한 거란 거를 동그란 거로 표시한 거 있어요. 아..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구나. 차례표 있잖아요. 목차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목차에 있는 거 —년부터 —년까지 사회보장제도 언제부터 시작되었고..딱 체계를 써 가지고.. (사례4)

학습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저는 전에 공부한 거,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 프린터 해가지고..강의하기 전에 딱 뽑아놓아요. 그래서 메모도 하고..그러지요. (사례1)

7.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1) 학습의 촉진요소

학업지속에 대한 강한 의지. 새터민들은 힘들어서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는 무엇보다도 꼭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 이들은

“힘들어도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생각하지.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그만두고 싶다가 보다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힘들어도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생각했지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자체도 안하죠. 그건 저 생각이고 다른 분들 모 하다가 정신건강 에이 걸어치우자 같은 생각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밖에 걸어 치우자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사례6)

나이를 뛰어넘는 배움에 대한 도전. 새터민들은 늦은 나이에 남한의 학습을 배워야한다는 학습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연연해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배움에 대해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남한의 학습동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나이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서두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정말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힘이 좀 생기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내 나이 또래에 앉히는데 50살 60살짜리도 하는데 내이 40살인데 50살 저만한 나이 보다는 하겠구나. 이렇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니면 내 빨리 급하게 하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막 낮추며 그저 이렇게 요기서부터 시작해요. (사례8)

부단한 학습노력. 새터민들은 남한사람들이 공부하는 분량의 몇 배는 더 해야 한다는 각오로 학습에 임하였다. 따라서 밤잠을 자지 않고 학습에 임하거나, 직장에서 짬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단히 학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사례 4는 공부에만 매진하다보니 어디를 가더라도 학습한 내용이 머리 속에 떠오르고, 공부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 세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공부하면..아! 뭐라고 그러더라? 한국말로 뭐라고 하던데..내 공부하다보니, 화장실 가도, 중국어 글이 자꾸 머리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정신과 갔을 때 뭐라고 하던데..아무튼 병중이지만 나쁜 거는 아니고 좋은 건데..어쨌든 공부에다 자기가 집중하니까 그 세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이번에는 아! 중국어 중간고사 하면..내가 하는 거는 자꾸 봐야 돼..자꾸 화장실 가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누웠다가도 자꾸 책이 생각나가지고..교재를 가져와가지고 아..그랬지.. (사례4)

2) 학업에 대한 성공경험

북한이나 남한에서 학업에 대한 성공경험을 한 새터민들은 학업에 대한 동기유발이 훨씬 더 강하였다. 특히 사례10은 “혼이 빠진 것처럼 밤을 새워서 학업에 몰입하다 보면 쾌락 같은 걸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새터민들에게서 학업성취를 통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성공적인 학업경험은 새터민들에게 분명 성취감을 유발하며, 부단한 자기계발과 배움에 대한 순수열정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듯하다.

북한시절 우수한 학업성적. 그때 공부하는 방법이 쓰이겠지요.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 1, 2등을 놓쳐 본 적이 없어요. (사례1)

남한에서의 우수한 학업경험. 처음 학기는 6과목, 계절 학기는 100점 받았구요. 이번 학기는 8과목 신청했어요. 과 수석 해서. (사례4)

학업성취로 인한 기쁨. 사람이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쾌락 같은 거 느끼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내가 배운 **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 만들고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밤 썰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게 되면. 근데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거는 밤새요. 싫은 거는 뭐 하라고 해도 한 시간도 못하는데. 이런 **작업 같은 거 막 짚은 거 놓고서는 편집할 때는 사람이 거기에 혼이 빠졌다고 할까요? 세 시간, 네 시간 그저 밤

새벽 세 시, 네 시까지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데서 뭐 쾌락 같은 걸 느끼죠. (사례10)

8.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지지체계

1) 오프모임에 대한 견해

새터민들은 사이버 환경이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만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오프모임을 통해 정보교류도 하고 학업에 대해 느끼는 막막한 심정을 함께 나누면서 학업의 고충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자신들과 비슷하게 사이버 학습을 하고 있는 새터민들과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였다. 이렇듯 새터민들에게 오프모임은 학습에 대한 지지체계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나 마음을 쉽게 열기 힘든 이들에게 새터민에 대한 편견과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빠듯한 남한생활은 오프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약이 되고 있다.

새터민 동료모임의 필요성. 솔직히 처음 입학올 해서 첫 학기에 우리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면은 글썽 그거를 사람마다 틀리니까 학교에서 한번 모임 같은 거 할 때 그래도 그나마 거기 선후배들이 같은 사람들 안에서도 선후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번 모여서 이제 자기가 공부하면서 겪었던 이런 얘기 경험담 그런 게 한번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례7)

오프모임의 필요성. 오프라인 모임에 가서 한번쯤 얘기도 하고 그제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정보가 없으면 그냥 도중에 뭘지 모르니까 막막하니까 다 포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사례7)

새터민 편견으로 인한 오프모임 참석의 어려움. 글썽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마음을 열고 가서, 막 교수님이랑 친하고 이래야 하는데, 저희는 진짜로 사귀고 싶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하고 막 친해지고 싶고, 막

이런데 저희가 먼저 다가가질 못하겠어요. 솔직한 말로, 왜냐면은 저희도 일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모욕 받는거. 저희 말하면 앞에서 막 사람 면전에다 놓고 흉내 내요. 식당에서. 그때 보면 저희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보겠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를 보면 불쌍하다고 보니까. 동정을 하든, 약시 보든.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가도 어차피 그런 일을 당할 건데... 그러니까 될수록 저도 피하지요. (사례10)

타인경계로 인한 오프모임 참석의 어려움. 그냥 강의와 관련된 것만 들어보고 별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성격 때문이겠죠 뭐. 성격도 그렇게 뭐 남하고 막 이렇게 사귀는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대인기피증 같은 거 있어요. 있지요. 마음을 쉽게 열지 않고, 남하고 자꾸 섞이려고 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 보면 대체로 뭐 남하고 잘 섞이고, 동아리도 잘 참가하고. 저는 별로 그런데 가면 우습게 볼 것 같고... (사례10)

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오프모임 참석의 어려움. 아 내가 참 여기서 생활하기 힘든 건 시간 내기 힘들더라고요. 동호회모임이 있어도 모임을 내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 맞춘다는 게 힘들어요. 북한보다 더 힘들어요. 북한은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은 시간조정이 쉽죠. 여기는 다양하고 거리도 멀고... 어렵다 그렇지만 동호회모임도 문화니까. (사례6)

2) 학습에 대한 가족의 역할

지지체계가 미약한 새터민들에게 가족은 힘든 학습을 지속시키게 하는 강력한 지지체계가 되고 있었다.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들은 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좋아하고 매우 뿌듯하게 여기며, 사례 3이 “이 남한사회에 와서 진짜 살자고 하는 구나!”라고 표현하는 바와 같이 남한 사람들과 뒤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때로는 가족들끼리 서로 학습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공부한 경험을 서

로 나누어 가지기도 한다.

학습동반자로서의 가족. 야.. 어머니 나도 이런 나이에 어머니 나이에 공부 할까요? 그러지요. 그러면 제가 젊었을 때 많이 공부해라 그리고 어떨 때는 강의 나오는 걸 보고, 강의가 영 아이들도 흥미 있어서 같이 들어요. (사례8)

학습에 대한 가족의 지지. 일단, 자기 마음이 좋겠지요. 엄마가 공부하니까..이 사회에 와서 그저 진짜 살자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식구가 남보다 그게 그래도 뒤지지 말아야 된다. 일단은 공부 하는 것 만으로도... 우리 애도 참 좋아해요. (사례3)

3) 힘이 되어주는 멘토

새터민들은 학습자로서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자신들의 학업의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멘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멘토는 망막한 사 이버학습에 있어서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든든한 의지가 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새터민으로서 효과적인 남한의 학습방법이나 학업에 대한 포부, 학업의 위기극복 방법 등을 새터민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새터민 멘토 활동을 기꺼이 하고자 하였다.

멘토의 필요성. 그러니까 보완적인 그런 멘토가 정말로 중요한 거 같아요..그렇게만 해준다면 정말 남한사람들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시작을 하면 잘 하잖아요, 시작이 어려워져서 그렇지. 그걸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한 거 같아요. (사례5)

적극적인 새터민 멘토 활동. 그때 나는 자신 있게 말한단 말이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온 길을.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나가서 발표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최**씨가 이렇게 우리 애들인데다 이게 일할게 도중에 판단하고 이 길을 나가야 하는데 이런 욕심이 없는데 그래 니 나가서 발표해라 그래서 내 나가서 한번 발표를 하기도 했던 말이예요. 이거 성공하자면 나도 이런 단계

를 다 거쳤다는 거 이런 고비를 넘겨야 만이 나중에 자격고시 졸업해서 당당히 자격이 3개에서 4개는 나온다는 거 내 소관 틀이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주니까 그저 아이들이란 게 자기는 너무 무식해서 그런지 남들과 대화를 말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쪽지를 백번이라도 써서 해라고. (사례8)

9.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기대효과

1) 사이버학습에 대한 전이

가족 내의 학습모델링 효과. 사례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새터민 학습자는 가족 내의 모델링이 되어 다른 가족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모습을 따라하거나, 새터민 학습자처럼 되고자 하는 학업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학령기의 자녀를 둔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 부모님의 공부하는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귀감이 되어 자녀양육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가 하루는 뭘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 딱 덮어버리고..그래서 다른 짓 하는가 해서 그게 뭔데? 하고 봤더니 글씨 내 책을..그래서 너 이 책을 왜 보니? 하니까 어머니 공부하는 게 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그러면서 엄마 책 나중에 자기한테 주면 안돼? 이래요. 기가 막혀 했더니..엄마 공부하는 거 자기도 나중에 자격증 따겠대요. 나한테도 가르쳐 줘 하면서...내 공부를 자기도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중략) 저녁에는 내가 책을 보다가 잠들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제 따라 해요. 자기도 옆에다 책을 갖다 놓고 안보더라도 훑내 내요. 책 보고 그러다가 자고. (사례1)

가족에게 사이버학습 권유. 사이버학습의 효과와 이점에 대해서 체험을 한 새터민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가족에게 사이버 학습을 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학습에 대해 경험한 것을 서로 도와주거나 상의하는 모습이었다.

와이프도 딱 그렇게 해주니까 공부하는 시간 활용하기 참 좋더라 해가지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례6)

새터민 동료에게 사이버학습 권유. 새터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사이버학습을 새터민들 동료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학습을 권유하기도 한다. 새터민 동료들이 원하는 사이버학습은 무엇보다 새터민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주고 있는 듯하다.

주위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제가 많이 추천을 해요. 제 추천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한 둘 셋은 되는데 지금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친구는 다니고, 한 친구는 이번에 입학하겠다고 자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이번에 새로 나온 친구도 하나 소개해줬더니 자기는 2월 달에 입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례10)

2) 사이버대학의 이점

사이버학습은 새터민들에게 특히 많은 이점이 있어 보인다. 학업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학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특별히 남한사람들과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고 혼자서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에 공부할 수 있으며, 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사이버학습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특히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교육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새터민들에게 남한이 주는 학습에 대한 기회이며,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고마워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반복강의의 이점. 근까... 이제처럼 오프라인으로 가서 공부하면 그 시간이 끝나면 질문을 못해.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러나 사이버는 내가 듣고 이해

못되는 것 다시 들어. 반복. 이게 더 이득입니다. 이게 공부에 더 도움이 돼요. (사례9)

사이버학습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혜택. 뭐 사이버는 공부는 무료로 하는 거고..그거 하나만 해도 제일 조건인데...그게 풀리잖아요. 사이버대학교에 바랄 게 없어요. (중략) 우리 사람들한테는 진짜 제일 큰 조건이 경제적인 것 같아요. 그걸 한쪽으로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그러니까 요구 조건이라는 게 뭐 더 있을래야 없지요. (사례3)

시공간을 뛰어넘는 학습가능. 어떤 점이 불편하지 않는가 하면, 우선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사이버대학이니까. 내가 자유로운 시간에 할 수 있고, 잠을 안 자고도 들을 수 있잖아요. 새벽 한 시고 두 시고, 사이버 아니고 오프라인이면 그렇게 못 그러잖아요. 사이버는 그게 진짜 너무 좋아요. (사례3)

학업과 직장병행의 용이함. 기본 사이버 대학은 일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사례10)

혼자서 하는 것이 편리한 사이버학습. 모든 게 서툴잖아요. 서투니까 아, 이 컴퓨터는 나만 잘 하면 되겠구나, 저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갔다나요. 일 반대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사람 대하는 것도 어성버성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만 잘하면 된다. (사례5)

3) 새터민 역할의 중요성

사이버학습에서 나타나는 새터민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으로서 새터민들의 역할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새터민들은 자신들이 학습을 통해 익힌 남한의 지식과 가치를 통일 이후 북한주민에게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명감이 강하였다. 또한 이들은 게시판이나 토론방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북한의 문화를 알리고 설명하는 북한문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새터민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통일 이후 남북한 문화

연계인의 역할을 실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통일이후 사명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의미를 모르고, 말이 민 주주의지 봉건사회보다 못한 사회니까..아무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중 에 통일되면 인터넷, 컴퓨터 같은 것을 활용해서 세계 과학이다 뭐 이런 것 도 알려주고 싶고...자원봉사란 것도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고 해서..자본 주의라는 것도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고 해서..우리가 참 통일이 되면 어 떻게 보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례2)

북한문화 안내자로서의 역할. 저는요. 게시판에 들어가서 교수의 질문을 딱 보면, 청소년들의 옷차림 문제, 이렇게 딱 뜨면 북한을 갔다 딱 집어넣습 니다. 생각해보세요. 그쪽 분야, 어쨌든 저는 그런 그계 토론방에 들어가서 다 북한을 설명해 줍니다. 남한 대 북한,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사례9)

4) 학습의 부수적 효과

새터민 성인들은 대학생이라는 것 자체에서 오는 자긍심이 있고, 새터 민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며, 이러한 자긍심이 대인관계에도 영 향을 끼친다고 한다. 또한 새터민들은 사이버학습을 통해 성인으로서 남한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기초 교양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일상적 인 생활용어에서부터 예절, 재테크와 같은 경제 상식에 이르기까지 사이 버학습을 통해 익힌 다양한 교양관련 기초 지식은 사례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내색조차 못하고 지나쳐야했던 몰랐던 부분을 배워서 알게 되면서 업이 되고 얘기하면서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말한다. 새터민에게 있어서 사이버학습의 결과는 대학생이라는 자부심과 동료 새터민들의 부러움,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 되는 지식의 습득, 대인관계 자신감과 같 은 보다 큰 부수적 학습 결과를 가져온다.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 교양 지식. 그렇죠. 그분들도 생활적으로 인식 이 된 거니까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정의를 알고프거든요. 그

래야 정확한 인식이 들어온단 말예요. 에티켓을 설명을 못 하는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이번에 에티켓을 배우면서 동서양의 예절에서 에티켓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때려준단 말예요. 에티켓이라는 말이 프랑스... 어월부터 배우니까 에티켓도 외래어인데 그걸 안단 말이에요. (사례6)

대학생으로서의 자긍심. 그 뭐 실제 대학생이라는 자부심이 생기죠. 다른 사람 일반대화 할 때도 배우지 않은 것 보다 대학에 배우고 있다고 하면 자기 우월감이 가지게 돼요. (사례6)

새터민 동료의 부러움. 내 북한에서 사람들은 그 모임장소 가게 되면 내 이제 온지 1년밖에 안됐는데 내 지금 이 사이버 2학년 2학기 들어섰다고 하니까 모두 놀라하지요. 야 우리 5년짜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름길을 빨리 알려줬나.. (사례8)

앞으로 인한 대인관계 자신감. 음... 글썸 어찌됐든 뭔가를 배웠으니까 제가 좀 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도 자신감 같은 것도 있었겠죠. 왜냐면 여기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얘기하다보면 용어 같은 것들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모르는 것처럼 하면 좀 내색안고 모르면서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몰랐던 부분에서 그 부분을 배웠으니까 업이 됐겠죠. 얘기하면서도 자신감 같은 것도 있었을 꺼고 어차피 또 우리 사람들한테 배워주는 입장에서도 뭔가 내가 알았으니까 그들한테도 설명도 좀 했을 꺼고 예. (사례7)

IV. 논의

본 연구는 새터민의 사이버학습 경험에 대해 10명의 새터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터민의 사이버학습 경험의 이야기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새터민 사이버학습 경험을 분석한 결과 9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남한사회에서 배움의 의미이다. 새터민들은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컴퓨터 활용능력이 필수요건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특성은 남한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성인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가 주로 고등학교 학력취득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과 지속적인 학습의욕을 고취하는 것과²⁶⁾는 다른 연구결과이다. 남한의 일반성인과는 달리 새터민들은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사이버 학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남한사회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느끼면서, 남한에서 배운다는 것의 의미는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한 남한사회에서 필수요소이고, 꿈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는 북한의 교육실태²⁷⁾와는 달리,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기계발이 가능한 남한의 평생 교육적 사이버학습의 효과²⁸⁾인 듯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새터민에게 사이버학습은 배움을 통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으면서도, 남한의 다양한 상식과 지식을 습득하여 남한의 사회문화를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둘째, 낮은 남한의 교육체계이다. 새터민들은 남북한 교육문화와 학습방식의 차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한의 교육체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특히 남북한 교과목이나 학습평가 방식의 차이점으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을 겪었고, 틀에 박힌 북한의 암기식에 비해 남한의 사이버학습은 낯설지만 자유롭고 다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26) 최상근 · 김규태, “방송통신고등학교 성인학습자의 생활과 문화 특성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제10권 1호 (2004), pp. 101~136.

27) 김평선, “북한의 인권보장의 실태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28) 유평준, “원격대학원 온라인수업의 학습참여도, 학업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학습자관련 변인”, 『교육정보방송연구』, 제9권 4호 (2003), pp. 229~267.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의 이주난민이 학습상황에서 문화적 어려움과 더불어 학교의 교육환경이 다름으로 인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²⁹⁾나, 북한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낯선 대학체계와 내용,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특히 영어 및 남북한 학습 방법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결과³⁰⁾와도 유사하였다. 특히 학업평가방식에 대한 차이는 이주난민의 학업성적의 평가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적응의 문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³¹⁾와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 새터민들은 사이버학습의 학업평가 방식 중 객관식 평가에 대한 수월함을 강조한다. 이는 북한의 암기식 교육에 비해 비교적 쉽게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경험을 유추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객관식 평가가 새터민 성인의 사이버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새터민 청소년들은 교육내용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 부족뿐 아니라 교사의 설명과 암기 풍토에 익숙하여 남한의 자율적인 교수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다는 연구결과³²⁾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새롭게 발견된 점은 새터민들의 남한의 자율적 학습에 대한 만족도인데, 새터민 성인 학습자의 경우, 청소년과는 달리 자기주도적인 학습형태를 띠며 따라서 자율적

29) Bemak, F., Chung, R. C-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refugees". In P. B. Pedersen, J. G. Draguns, W. J. Lonner, & J. E. Trimble (Eds.), *Counseling across culture*, (5th ed., pp. 209-232). (Thousand Oak, CA: Sage, 2002).

30) 이해경,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체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1) Bemak, F., Chung, R. C-Y., "Working with children and families from recent immigrant groups" (2nd ed., pp. 84-101). In P. Pedersen & J. Carey (Eds.), *Multi-cultural counseling in school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2003), pp. 41-42.

32) 최경자. "새터민 학생의 학습 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p. 34-35.

이고 다양한 남한의 학습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새터민들은 남북한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언어의 차이, 영어나 외래어식 표현 때문에 남한의 학습체계를 더욱 낯설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장벽이 이용가능한 정보원의 범위를 제한하며, 이민자의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시킨다는 결과³³⁾나, 새터민의 정보 빈곤 유발요인이 언어소통 능력의 부족도 있다는 연구결과³⁴⁾와 유사하였다. 한편 새터민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습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제시한, 단어검색창과 같은 ‘단어학습보조 장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사이버 학습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대인관계 특성이다. 구체적으로 교수와의 관계, 교우관계, 사이버공간에서의 학습교류형태, 도움요청 태도의 특성을 보였다.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교수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선호하고, 자신들을 이해해주는 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과 의지를 표시하였고, 교수의 지지와 격려가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에 있어서 교수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행연구 결과³⁵⁾ 새터민 고등학생이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듯이 학생을 믿어주는 교사로부터 끊임없는 자극과 격려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³⁶⁾와 일치하였

33) Roh, Jin-Ja. *An investigation of the perceived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and the use of community public libraries among first-generation adult Korean immigrants living in the Dallas, Texas, a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2002).

34) 조용완.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와 정보 빈곤에 관한 연구—부산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35) Coleman, J.,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Salem, New Hampshire: Ayer co. 1988).

36) 강희석, “새터민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pp. 85~86.

다. 사이버학습상황에서 새터민의 동료관계는 남한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학업에 대한 기쁨을 느꼈으며, 남한동료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추구하였고, 새터민 동료와 함께 하려는 동료의식이 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정규학교 새터민 청소년들이 새터민에 대한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태도에 대해 거부감을 준다는 연구결과³⁷⁾와는 차이점을 보였는데, 사이버학습 상황에서 새터민들은 남한동료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특성이 나타났고,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새터민 동료들을 지지하고 함께 배우고자 하는 동료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새터민들은 학습상황에서 물어 볼 내용이 너무 많고 일일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였다. 잦은 질문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상대방 특히 남한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프리카 출신의 유학생이나³⁸⁾ 한국의 중국 및 일본 유학생들이³⁹⁾ 도움요청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결과들이 소극적인 도움요청에 그치는 반면, 본 연구결과에서 새롭게 발견된 점은 새터민들은 사이버학습 상황에서 간접적인 소통방식이지만 보다 안정적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교류형태는 무지노출에 대한 걱정을 강하게 하였고, 무지노출에 대한 걱정은 새터민 신분에 대한 공개적인 노출을 꺼리게 만들기도

37) 이수정 · 김현아 · 원재연 · 윤상석, “북한이탈청소년종합대책연구Ⅲ: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p. 164.

38) Constantine, M. G., Kindaichi, M., Okazaki, S., Gainor, K. A., & Baden, A. L.,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the cultural adjustment experience of Asian international college women”,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vol. 11 (2005), pp. 162~175.

39) 김영경, “중국·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 분석”, 『상담학 연구』, 제10권 1호 (2009), pp. 535~559.

하였으나, 일부 새터민들은 댓글을 통한 인정과 지지경험으로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학습의 어려움이나 자신들의 삶을 노출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새터민 학생들은 학업수준이 너무 낮아서 창피를 당할까봐 못하고 있으므로 교사가 먼저 다가가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⁴⁰⁾와 일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새터민들의 사이버 학습교류 형태는 학습 초기 적응과정에서는 무지노출이나 신분공개의 부담감을 지니고 있어 교수와의 관계에 보다 의존적이지만, 댓글을 통해 학습동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경험을 한 새터민들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흥미, 몰입, 동기요인이 공동체 구성원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느끼는 집단유대감,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집단존중감, 집단영향력, 소속된 공동체 내부 구성원과의 동질성을 느끼고 공유된 활동을 하려고 함으로써,⁴¹⁾ 사이버학습을 하고 있는 새터민들은 사이버 공간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서의 고충이다. 새터민들은 나이와 자녀양육, 직장병행으로 인한 학업부담이 학업의 장애요소가 되기도 하고, 사이버 학습 환경 이해와 언어소통,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초기 학습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특히 레포트 작성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과 정보습득 능력의 한계 경험, 인간관계의 어려움, 타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의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학업과 경제적 활동을 병

40) 한상훈, “새터민 학생 적응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적응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제27회 교육연구논문, 2005).

41) 황상연, “사이버공간에서의 학습활동 형태 및 학습자 특성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pp. 90-91.

행해야하는 어려움, 미래와 취업에 대한 걱정, 자기만의 정체감 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⁴²⁾와 유사하였고, 새터민 학생의 학습 부적응은 기초학습능력 저조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크다는 연구결과⁴³⁾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가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특이한 점은 사이버대학으로 진학을 한 새터민들이 대부분 나이, 자녀양육, 직장병행과 같은 학업장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높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지식층으로서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서 새터민 이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새터민 정체성을 밝히고, 사이버학습은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학습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한계가 있음을 우려하였다. 새터민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학업에 대한 포부나 적극적인 학습 도움요청을 하고 새터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며, 남한의 지지체계를 확보해나가고 있었다. 정규학교 새터민 청소년들이 문화자본 부족에 대한 대처전략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탈북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대학생활에서의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이들로부터 다양한 지지체계를 확보한다는 연구결과⁴⁴⁾와 유사하다. 하지만 새터민 청소년들이 또래관계나 지지체계 확보를 위해 정체성 드러내기를 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새터민 성인들의 경우 입학원서에서부터 새터민으로서의 남다른 학업포부를 공개함으로써 교수에게 보다 적극적인 학습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학습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프모임에 참

42) 조영아·전우택, “북한출신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1호 (2004), pp. 167~186.

43) 김미숙,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4).

44) 이수정 외, “북한이탈청소년종합대책연구Ⅲ: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 연구”.

석하게 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터민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었다.

다섯째,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을 위한 고려사항이다. 남한의 대학문화가 낮은 새터민 사이버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와 새터민을 위한 맞춤형 특별 교과목 개설, 새터민에 대한 학교의 관심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에 재학 중인 새터민을 위해 대학 입학 전 대학생활 관련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예비대학 프로그램이나 학습지원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⁴⁵⁾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새터민 사이버학습을 위해, 초기 학습적응을 위한 학교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새터민들이 경험하는 교육 간극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한의 학업체계(예: 학점체계, 수강신청 방법, 시험방식,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이해, 남한의 사이버학습에 필요한 기초 교육 용어(예: 레포트, 퀴즈, 멘토, 엠티, 팀 프로젝트), 대학생활 소개(예: 수업장애 해결방법, 오프모임, 동아리 활용, 스터디)를 포함한 동영상 「사이버대학 생활안내서」의 개발이나, 이를 위한 입학 초기 사전 모임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대학에서의 글쓰기」 「사이버 공간의 이해」, 「컴퓨터 활용 기초」 등이 신·편입학생 필수 교양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사이버 학습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우선이고, 사이버 학습의 기초로서 컴퓨터 활용능력을 기르는 것과 사전 학습으로서 남한생활 경험이 중요하며, 사이버학습의 동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에 대한 열의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학습에 있어서 자신들의 요구와 능력, 자기 주도적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경험을 사용하는 것, 학습 준비도를 확인하는 것, 유소년 시절부터 사춘기까지 꾸준히 증가한 학습주변 삶의 문제들과

45) 위의 글.

청춘기 동안 급격히 증가한 것을 체계화하는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⁴⁶⁾와 일치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새터민에게는 학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며, 남한생활 경험을 통해 배움의 필요성도 절실해지고 그때의 경험이 중요한 지식 습득의 원천이 되고 있는 듯하다. 새터민들은 직업훈련과 같은 다른 평생교육 시스템처럼 지원 수당금을 목적으로 학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학습은 더욱이 배움에 대한 순수한 목적이 있고 학업에 대한 열의가 뚜렷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충고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여섯째, 새터민의 학업 스타일이다. 선호하는 강의형태는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방식이나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해주는 방식과 칠판강의 및 동영상과 같은 시각적이면서도 동적인 사이버 강의형태를 선호하였다. 낯선 교과목과 학업방식 차이, 남북한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안 되는 문제로 인해 학업부담이 심한 새터민들에게 효과적인 학습기술은 시각적으로 기억하는 방식이었고, 학습이해를 위한 노력으로 학습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인 학습 습관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자의 강의 스타일이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몰입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⁴⁷⁾와 일치하였고, 교사가 새터민 학생 수준을 파악하여 쉬운 언어로 천천히 말했을 때 학습이해가 잘 된다는 연구결과⁴⁸⁾와도 일치한다. 선호하는 학습형태는 반복학습과 실제적인 강의 내

46) Knowles, M. S., Holton, E. F., & Swanson, R. A., *Adult Learner* (5th) (Houston, Texas: Gulf Pub, 1998) ; 김영천, “성인학습자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자 특성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p. 22~25.

47) 정혜진, “사이버 대학의 e-learning 환경이 학습자의 학업성취감과 강좌 몰입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 사이버 강의 수강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p. 51~52.

48) 김선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방안”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

용 집중, 남북한 비교설명을 통해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새터민의 언어실태 조사결과,⁴⁹⁾ 새터민들은 실제 생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자료들, 즉 동영상 자료나 드라마, 담화 내용들의 실제적 교재나 수업방법이 필요하다는 연구⁵⁰⁾나 학습내용이 학습자의 일과 관련이 없을 때 중도탈락하기 쉽다는 연구결과⁵¹⁾와 유사하다. 학업스타일은 북한의 교육방법인 깨우쳐주는 교수법과 원문 통달식 교육방법에 익숙한 결과로 보인다. 깨우쳐주는 교수법이 이야기, 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잘 하는 방식이며, 또한 원문 전체를 암기하여 기억하는 방법으로 혁명역사, 당 정책, 국어과목에서 많이 사용되는⁵²⁾ 원문 통달식 교수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닝(e-learning) 방식 중 웹 강의나 음성강의보다는 동영상이나 칠판강의를 선호하였고, 새롭게 발견된 점은 남북한 비교설명을 통한 이해방식이다. 이러한 결과는 스스로 컴퓨터 기능을 조절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웹 강의 방식보다는 북한시절 주된 학습방식이었던 칠판강의에 대한 익숙함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시절 학습경험을 남한의 새로운 학습내용과 비교하며 학습하는 교육경험 자료를 기록한다면, 통일 이후 교육통합에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새터민이 경험하는 학업에 대한 동기유발이다. 학업지속에 대한 강한 의지와 나이를 뛰어넘는 배움에 대한 도전, 부단한 학습노력

위논문, 2005).

49) 문금현,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연구” (서울: 국립 국어원, 2006).

50) 최경자, “새터민 학생의 학습 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p. 34~35.

51) 정인성·최성희, “온라인 열린 원격교육의 효과 요인 분석”, 『교육학연구』, 제 37권 1호 (1999), pp. 369~388.

52) 한만길·현주·김창환·오기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은 새터민들이 학업을 하는데 촉진요소로 작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북한 교육체계에서 학업적으로 성공했던 경험이 크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다. 성인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 성취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교육에 대한 태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과 성인들이 일생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사건, 변화나 정보요인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상호 관련되며 교육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⁵³⁾와 일치한다. 학습태도는 집중과 노력을 의미하며, 노력은 학교나 가정에서의 학습량을 의미한다.⁵⁴⁾ 또한 사이버 강의 학습자가 감정적으로 몰입했을 경우 학습에 적극성을 보이며 학업에 대한 만족도와 사이버 대학의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⁵⁵⁾와도 일치하였다. 무엇보다도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부단한 학습노력이 학업에 대한 강한 동기유발을 하고 있는 듯하다.

여덟 번째,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지지 체계이다. 새터민들은 효과적인 사이버학습을 위해서 새터민 동료모임이나 오프모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새터민에 대한 편견, 타인경계의 성향, 시간을 내기 힘든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오프모임을 참석하기 힘들다고 한다. 오프모임에 대한 견해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새터민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말투가 달라서 잘 나타나지 않으려는 이유와 학습 수준이 많이 부족해서 학습을 포기하기 때문⁵⁶⁾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53) 한상훈,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관계”, 『평생교육학연구』, 제9권 3호 (2003), pp. 225~246.

54) 이해명,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1998).

55) 정혜진, “사이버 대학의 e-learning 환경이 학습자의 학업성취감과 강좌 몰입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 사이버 강의 수강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 51.

56) 최경자, “새터민 학생의 학습 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 149.

남한의 학습동료 지지체계가 미약한 새터민들에게 가족은 든든한 지지 역할을 해주었고, 학습동반자로서 함께 학습경험을 공유하기도 한다. 새터민들은 자신들의 학업의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절실하다고 하며, 비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새터민 동료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기도 하였다. 새터민 학습에 있어서 멘토링 제도를 강조하는 선행연구결과⁵⁷⁾와 일치하였다. 새터민들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오프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새터민의 효율적인 사이버학습체계를 위해 같은 전공의 남한 멘토나 새터민 동료 멘토가 제도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추어질 필요성이 있겠다.

아홉 번째,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기대효과이다.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가장 큰 효과는 가족 내의 학습모델링 효과와 가족 및 새터민 동료에게 학습을 권유하는 사이버학습의 진이현상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볼 때, 새터민들에게 사이버학습 경험은 가족 뿐 아니라 동료 새터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모범적인 역할 모델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정부의 무료 학습지원제도, 혼자서 학습이 가능한 점, 반복강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열린 학습, 학업과 직장생활 병행이 가능한 사이버 대학의 이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편적 대중으로 존중받아야할 소외된 집단들에게, 정보 접근의 평등성과 민주성이라는 디지털 공동체의 특징이 매우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⁵⁸⁾와 유사하다. 특히, 경제적 안정이 우선인 새터민들은 정부의 교육지원 제도를 매우 만족스러워하였다. 그리고 새터민들은 사이버학습의 활용에 대한 기대로 통일 이후 사명감과 북한문화 안내자의 역할을 병행하고

57) 이수정 외, “북한이탈청소년종합대책연구Ⅲ: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청소년들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 연구”.

58) 박기범, “공동체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과제: 다문화교육 사이트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48권 1호 (2009), p. 115.

있었다. 이는 체험적 다문화 평생교육의 원리와 상이한 문화 집단 간 자유로운 교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호혜적 평생교육의 원리⁵⁹⁾에 비추어볼 때, 사이버학습에 있어서 새터민의 역할을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 모르테인(Mortein)과 스마트(Smart)는 성인학습자의 참여 동기로서 사회적 관계, 외부적 기대, 사회적 복지, 전문성 향상, 도피, 자극이라고 보았으며, 직업과 관련하여 유용한 지식과 학위, 직무관련 기술을 습득하여 과업수행 및 지위향상,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문성 향상과⁶⁰⁾ 유사한 결과이다. 그밖에도 남한생활에 적응이 되는 교양지식, 대학생으로서의 자긍심, 새터민 동료의 부러움, 앓으로 인한 대인관계 자신감 증진이라는 학업의 부수적 효과도 가져오고 있었다. 사이버학습은 여성의 자존감 향상,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획득하고 지식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연구결과⁶¹⁾와 일치하였다. 더 나아가서 새터민들에게 사이버대학에서의 학습은 대학생이라는 자부심과 주위의 부러움, 남한사회에 필요한 교양과 지식을 알아감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증진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부수적 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학습 경험이 있는 5개 사이버대학교의 서울·경기 지역 새터민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방 거주나 새터민 청소년 사이버 학습자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통

59) 배영주, “다문화 평생교육의 정립을 위한 체험적-호혜적 운영원리 탐색”,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2, no. 2 (2009), pp. 61~87.

60) 김영천, “성인학습자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자 특성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p. 24~25.

61) 김수아,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 돋우기 실천(empowerment)’ 가능성에 대한 연구: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p. 18~23.

일교육 및 남북문화 통합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남북 통합 이-러닝(e-learning) 운영방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평생교육 기회를 통한 자기계발과 성장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러닝(e-learning) 운영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류 문화에 통합되고 자기계발에 성공한 역할모델로서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새터민·다문화 사이버교육 준전문가 인력양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새터민의 직업훈련이나 기타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의 통합적 접근(집합교육-방문교육-온라인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새터민 정착지원기관에서의 온라인 교육 활용방안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의 다문화 교육의 온라인 교육방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사이버대학교의 소수 민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등의 운영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터민과 같은 소수 민족을 위한 사이버 학습 방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성별이나 발달단계(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에 따른 사이버학습 경험의 의미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사이버대학교 졸업생이 졸업 이후 남한의 노동시장에 어떻게 기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새터민의 진로탐색 과정에 사이버학습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넷째,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한 경험이 있으나 중도에 탈락한 새터민들의 중도탈락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볼 필요가 있겠다.

■ 접수: 2009년 11월 10일 / 수정: 2009년 11월 16일 / 게재확정: 2009년 11월 23일

【참고문헌】

- 강상현·강홍렬·김은미·차남경.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경제적 함의”.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pp. 1~163.
- 강인원·최지호·이성근. “사이버대학의 e-Learning 서비스에서 신뢰 차원이 학교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34권 4호 (2005). pp. 1143~1164.
- 강희석. “새터민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pp. 85~86.
- 권성호. “웹기반 가상교육에서 협력적 상호작용촉진을 위한 학습자 지원전략 개발”. 『교육공학연구』, 제17권 3호 (2001), pp. 29~51.
- 김미숙.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4.
- 김선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방안”.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수아.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 돋우기 실천(empowerment)” 가능성에 대한 연구: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p. 18~23.
- 김영경. “중국·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 분석”. 『상담학연구』, 제10권 1호 (2009), pp. 535~559.
- 김영천. “성인학습자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자 특성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p. 22~25.
- 김평선. “북한의 인권보장의 실태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문금현.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2006.
- 박기범. “공동체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과제: 다문화교육 사이트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48권 1호 (2009), pp. 45~55.
- 배영주. “다문화 평생교육의 정립을 위한 체험적-호혜적 운영원리 탐색”.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2, no. 2 (2009), pp. 61~87.
- 오난희. “북한이탈아동·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유평준. “원격대학원 온라인수업의 학습참여도, 학업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학습자관련 변인”. 『교육정보방송연구』, 제9권 4호 (2003), pp. 229~267.

- 이수정 · 김현아 · 원재연 · 윤상석. “북한이탈청소년종합대책연구Ⅲ: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p. 164.
- 이재환 · 윤유라. “외국인노동자 H의 삶과 정보 빈곤”.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6권 1호 (2005), pp. 181~202.
- 이해명.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1998.
- 이혜경.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체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인성 · 최성희. “온라인 열린 원격교육의 효과 요인 분석”. 『교육학연구』, 제37권 1호 (1999), pp. 369~388.
- 정혜진. “사이버 대학의 e-learning 환경이 학습자의 학업성취감과 강좌 몰입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 사이버 강의 수강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 51~52.
- 조영아 · 전우택. “북한출신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1호 (2004), pp. 167~186.
- 조용완.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와 정보 빈곤에 관한 연구—부산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최경자. “새터민 학생의 학습 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p. 34~35.
- 최상근 · 김규태. “방송통신고등학교 성인학습자의 생활과 문화 특성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제10권 1호 (2004), pp. 101~136.
- 최성우. “미래사회와 정보화 교육”. 『서울교육』, 제15권 9호 (2000).
- 통일연구원.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04, pp. 191~192.
- 편집부 저. 『전자상거래백서 2000』. 서울: 산업자원부 한국전자거래협회, 2000.
- 한만길 · 현주 · 김창환 · 오기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 한상훈. “새터민 학생 적응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적응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제27회 교육연구논문, 2005.
- 한상훈.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관계”. 『평생교육학연구』, 제9권 3호 (2003), pp. 225~246.
- 황상연. “사이버공간에서의 학습활동 행태 및 학습자 특성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pp. 90~91.

- Bemak, F., Chung, R. C-Y. Working with children and families from recent immigrant groups(2nd ed., pp. 84~101). In P. Pedersen & J. Carey (Eds.), *Multi-cultural counseling in school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2003. pp. 41~42.
- .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refugees. In P. B. Pedersen, J. G. Draguns, W. J. Lonner, & J. E. Trimble (Eds.), *Counseling across culture*, (5th ed., pp. 209~232). Thousand Oak, CA: Sage, 2002.
- Coleman, J.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Salem, New Hampshire: Ayer co., 1988.
- Constantine, M. G., Kindaichi, M., Okazaki, S., Gainor, K. A., & Baden, A. L.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the cultural adjustment experience of Asian international college women".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vol. 11 (2005), pp. 162~175.
- Dana, R. H. Psychological assessment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ethnic group members. In J. A. Aponte & J. Wohl (Eds.), *Psychological intervention and cultural diversity* (pp. 59~74).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2000.
- Dixon, J. K. "A Collaborative Model for the Use of Technology by Preservice and Inservice Mathematics Teachers in Their Teaching Practices". *Center For Teaching Learning Mathematics*, vol. 22, no. 22~23 (2000). pp. 100~110.
- Fisher, K. E. "Information behavior of migrant Hispanic farm workers and their families in the Pacific Northwest". *Information Research*, vol. 10, no. 1 (2004).
- Fulford, C. P. & Zhang, S. "Perceptions of interaction: The critical predictor in distance educ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vol. 7, no. 3 (1993). pp. 8~21.
- Herzberg, M. "Having arrived: Dimensions of educational success in a transitional newcomer school". *Anthropology & Educational Quarterly*, vol. 29, no. 4 (1998). pp. 391~418.
- Knowles, M. S., Holton, E. F., & Swanson, R. A.. *Adult Learner*(5th). Houston, Texas: Gulf Pub, 1998.
- Lieblich, A., Tuval-Mashiach, R., & Zilber, T.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lif: SAGE Pub. 1998.
- Moore, M. & Kearsley, G. *Distance Education: A Systems View*. Belmont: Wadsworth Pub, 1996.

Printrich, P. R. & Schnuk, D. H.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NJ: Prentice-Hall, 1996.

Roh, Jin-Ja. *An investigation of the perceived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and the use of community public libraries among first-generation adult Korean immigrants living in the Dallas, Texas, a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2002.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e-learning Experience in South Korea

Kim, Hyun-ah(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Open Cyber University)

Purpose: In this paper, North Korean defector experience in e-learning is studied.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main method of research is the in-depth interview. **Method:** The subjects of the interview are 10 North Korean defectors. For data analysis, which is proposed by narrative analysis, has been used. **Results:** There were 90 concepts, 27 subcategories and 9 categories extract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ose 9 categories are as follows: North Korean defectors' meaning on learning in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a strange experience about educational system in South Korean, North Korean defecto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e-learning environment, difficulty of North Korean cyber university student, condition precedents for improving the effect of North Korean defectors' e-learning, North Korean cyber university student's requirement, study style that North Korean defectors' preferring, North Korean defector's learning motivation,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support system in learning environment, the effect of expectation in North Korean defector's e-learning.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s, e-learning experience, adult education, narrative analysis

김현아

경북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상담심리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열린 사이버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는 『새터민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 『새터민의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도움요청 장애요인』, 『새터민의 가족상담 모형 개발』, 『남북문화 간 통합을 위한 새터민 조력자의 교육모형 개발』, 『북한이탈청소년 종합대책연구Ⅲ: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 연구』, 『이주난민의 정신건강과 상담』 등이 있다.

【서평】

연옥의 안과 밖: 북송(北送)과 탈북(脫北)의 이야기들

테사 모리스-스즈키, 『북한행 엑서더스』 (서울: 책과함께, 2008)

이순형 · 김창대 · 진미정, 『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이상신(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나를 거쳐서 슬픔에 잠긴 도시로 가거라
나를 거쳐서 영원한 괴로움 속으로 가거라
나를 거쳐서 사라져 버린 족속 곁으로 가거라

— 단테, 『신곡』

사회과학의 연구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 중의 하나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로 연구대상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가능할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일이 많다. 연구 대상과 연구자가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채 온전하게 객관적 관찰만 한다는 것은 심지어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에서도 힘든 일이다. 20세기 양자역학의 발전이 과학자들에게 남긴 교훈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행위 그 자체가 연구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물며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 있어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지 모른다.

최대한 과학적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들을 더하고 뺄 수 있는 숫자로 환산하여 연구하는 방식이다. 인간을 숫자로 대체함으로써 사회과학자들은 연구대상에서 인간의 얼굴을 최대한 탈색하고 비로소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서 대할 수 있게 된다. 통계를 통해 사회과학자들은 개인 하나 하나의 슬픔과 기쁨, 고통과 역정에 대한 스토리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통제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론 구축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연구 방법론은 종종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망각시킨다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밤길에 열쇠를 잃어버린 한 주정뱅이가, 열쇠를 떨어뜨린 그 자리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밝은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더라는 이야기처럼, 사회과학자들은 종종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라서가 아니라 과학적 연구에 적합한 주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사소한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토론하고 이론을 만든다. 이렇게 현실과 유리된 유리알 유희로서의 과학은 결국 과학자들을 인간의 삶에서 격리시킨다. 연금술사 파우스트에게 메피스토펠레스가 속삭인 것처럼, “모든 이론은 잿빛이며 오로지 영원한 것은 저 생명의 푸른 나무뿐”인 것이다.

테사 모리스-스즈키의 책 『북한행 엑서더스』와 이순형·김창대·진미정의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은 통일과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그들의 연구 주제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종종 쉽게 망각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미덕을 지닌 책들이다. 테사 모리스-스즈키의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1959년부터 시작된 재일교포 복송사업이

며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은 2009년 현재 우리의 현실인 탈북민들의 삶의 모습이다. 두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의 시간적 배경에는 50년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한반도의 분단이 빚어낸 동아시아의 블랙홀에서 파괴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들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 테사 모리스-스즈키의 책이 북한, 남한, 일본, 소련, 미국, 그리고 국제 적십자사의 치열한 정치적 투쟁 속에서 정작 북송의 대상이었던 재일교포들이 소외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반면, 이순형·김창대·진미정의 책은 탈북민들의 가족이 탈북과정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는가를 탈북민의 관점에서 추적함으로써 이들이 남북한 사회의 다른 소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쓰였다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역사가로서 테사 모리스-스즈키가 답하려 하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다. 왜 8만 6,603명의 재일교포와 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인 일본인 6,730명과 중국인 7명이 ‘자발적으로’ 북송선에 몸을 실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의 책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선 매우 훌륭한 답을 내놓지만, 본인도 인정하듯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선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 그들이 북한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그 누구도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중 소수만이 중국으로 다시 탈북했고, 약 120명은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귀환했다는 것 정도만이 알려져 있다.¹⁾ 『북한행 엑서더스』에서 물음표로 남겨졌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답은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 속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량 이주 과정에서의 신산한 개인의 삶은 1959년의 북송과정에서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의 참화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들이 또 다

1) 테사 모리스-스즈키, 『북한행 엑서더스』 (서울: 책과함께, 2008), p. 34.

른 희망을 품고 다시 돌아간 것이 어처구니없게도 북한이었다는 것이 북송의 아이러니였다. 이제 북한에서 도망쳐 나온 이들에게 제2의 엑서더스의 종착역은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 두 책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석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하는 무엇임이 이 두 책은 동시에 일깨워주고 있다.

I. 북한행 엑서더스

자주 인용되는 서양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테사 모리스-스즈키가 공들여 묘사하고 있는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이야기처럼 이 속담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건이 또 있을까 싶다. “1959년 12월 17일 밤 도쿄 시나가와 역에서 니가타 항까지 간 362명의 이야기를, 1959년 12월 21일 북한의 청진을 향해 니가타 항을 출항한 976명의 이야기를, 1959년 12월부터 1960년 말 사이에 같은 루트를 따라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5만 1,978명의 이야기를, 1959년 12월 귀국운동 개시 때부터 1984년 종료 때까지 북한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꿈꾸고 일본에서 귀국한 9만 3,340명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여행에 대한²⁾” 기록인 이 책은 재일교포들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려 했던 국제적십자사의 선의가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어떻게 이용당하는 지를 보여준다. 테사 모리스-스즈키는 스위스, 한국, 일본, 북한, 오스트레일리아를 넘나들며 마치 추리소설의 탐정처럼 이 북송 사건의 진말을 헤쳐 나간다.

²⁾ 위의 책, p. 31.

1956년 4월 한 무리의 재일조선인들이 일본 적십자사 건물 앞에서 북한으로의 귀국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일본 적십자사의 공식적인 입장³⁾은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는 국제 적십자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 북한 적십자와의 교섭, 그리고 소련 정부의 수송선 제공이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테사 모리스-스즈키는 이것을 “은폐의 이야기⁴⁾”라고 단언한다. 북송에 대한 진실은 “일본의 권력 계급에 속해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이며, “이 사람들은 조선인 마이너리티를 일본에서 북한으로 대량 이주시키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이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 이면의 이야기에 무지했다는 것은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⁵⁾ 북송 사업은 일본의 치안을 교란하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귀찮은 존재로만 인식되었던 재일 조선인들을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방법을 통해 제거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철수 이후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고 싶어 했던 김일성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북송의 여정이 시작된 곳은 한반도였다.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 뒤이은 분단과 극심한 이념갈등, 제주도 4·3 항쟁과 한국 전쟁 등으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1945년 광복 후 약 200만 명에 달하던 재일조선인 중 100만 명 이상이 남한으로 귀국했지만, 곧 이은 분단으로 말미암아 일본에는 6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남게 된다.⁶⁾ 이들에게

3) 위의 책, pp. 105-143.

4) 위의 책, p. 122.

5) 위의 책, p. 122.

또 다시 대규모 이주가 강요된 것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어 드디어 일본이 다시 독립국이 되면서부터였다. 재일조선인들을 사회불안 요소 정도로 인식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이 조약 발효와 더불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과 대만인은 일본 국적을 잃게 된다고 선언해버린다.

잃은 것은 국적뿐만이 아니었다. 동시에 재일조선인들은 공영주택 입주권과 주요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도 잃었다. 일본 거주 외국인들은 국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로부터도 제외되었고, 공무원 혹은 의료 등의 전문직을 가질 수도 없게 되었다. 또 그들은 일단 해외로 나간 후 일본으로 자동적으로 재입국할 권리도 잃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나 가족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했다.⁷⁾ 이미 일본에서 노골적인 차별의 대상이었던 재일조선인들은 복지혜택의 상실로 인해 헤어내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받았다. 특히 취업 사정이 매우 열악해서 1950년대 초에는 취업 연령에 있는 재일조선인 3/4이 실업 중이거나 임시직으로 일해야 했다.⁸⁾

북한으로의 이주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진 재일조선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으로 보였음이 틀림없다. 딱히 북한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북송을 선택한 사람들의 97%는 남한 출신이었고, 이 중에는 4·3 항쟁을 계기로 제주도에서 탈출해온 사람들도 상당수 끼어있었다. 한국전쟁 직후, 아직도 피비린내 나는 이념 대립의 기억이 선명한 남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들은 별로 없었고, 이승만 정권은 곤궁에 빠진 재일조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6) 위의 책, p. 43.

7) 위의 책, pp. 95~101.

8) 위의 책, p. 101.

1950년대 초 일본 정부에게 재일조선인들은 큰 두통거리였다. 곤궁한 하층민을 형성하고 있던 이들을 일본 정부는 잠재적 치안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좌익성향이 강했던 조선인 사회는 1955년 5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을 조직하는 등 공안 문제의 위험성도 같이 지니고 있었다.⁹⁾ 따라서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려는 의도를 1954년부터 가지고 있었다. 모리스-스즈키는 1954년 1월에 이미 일본적십자사에서 평양의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메시지를 보내 북한 내 일본인의 일본 귀국과 재일조선인중 원하는 자들의 북송을 맞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것을 밝혀낸다.¹⁰⁾

위에 언급했지만 지금까지도 일본 적십자사가 밝히고 있는 북송의 발단이 된 사건은 1956년 4월의 재일조선인 농성이다. 하지만 모리스-스즈키는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사 문서보관소를 뒤진 끝에, 사실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55년부터 일본 적십자사가 재일조선인의 북송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증거 서류를 찾아낸다.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과 남한 정부가 국교 정상화를 타진하고 있던 당시, 이승만 정부가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 뻔한 북송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는 없었고, 그 대안으로 찾아낸 방법이 적십자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북송은 일본 내 좌우 세력이 모두 공감했던 문제였다. 보수 집권당인 자민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인 사회당조차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¹¹⁾ 거기에 사회당 내부에선 김일성의 북한 사회를 신뢰하는 측면도 있어서, 당시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던 일본 정계에 있어서 북송 문제는 드물게 좌우가 모두 찬성하는 과업이었다. 여기에 체제

9) 위의 책, pp. 104~105.

10) 위의 책, p. 127.

11) 위의 책, pp. 139~140.

선전을 소망했던 북한 정부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다. 여기에 1958년에는 중국이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남아 있던 30만 명 정도의 군대를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북한의 전후 재건 사업에도 투입되었던 이 중국군이 떠나자 북한은 노동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중국 내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귀국을 중국에 요청하여 결국 4만 명 정도의 귀국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다.¹²⁾ 이런 상황에서 60만 명에 달하는 일본 내 조선인들은 북한 정부에게 매력적인 노동력으로 보였을 것이다.

북송을 원하는 재일조선인들, 이들을 일본 밖으로 쫓아버리길 갈망한 일본 정부, 그리고 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한 북한 정부까지 북송에는 장애가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 변수로 작용한 것이 이승만 정부의 태도였다. 이승만 정부는 재일조선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지만, 이들의 북송은 극력 반대했다. 1956년 4월 북송을 요구하며 일본적십자사에서 농성을 벌인 47인의 재일조선인들을 북송시키기 위해 일본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사 간 협조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의 북송에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데, 이는 남한 정부가 이 첫 북송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영국 국적의 해운회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 때문이었다. 또 남한 정부는 이승만 라인을 넘어온 일본 어선들을 나포, 700명에 달하는 일본 어선 선원들을 억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¹³⁾

북송 사업에 결정적인 골칫거리로 등장한 남한 정부의 위협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소련의 개입이었다. 1957년 뉴델리에서 열린 적십자 운동의 국제회의에서 일본은 로비를 통

12) 위의 책, p. 273.

13) 위의 책, pp. 189~201.

해 결의 제20을 통과시킨다. 그 내용은 전쟁을 비롯한 재해가 일으키는 이산 가족 문제에 대해 각국 정부와 적십자사는 “온갖 수단을 강구해 이들 어른 및 아이들이 그 의사에 따라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는 거주지가 어딘지를 불문하고 가장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그 가족과 재회하는 것을 용의하게 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다.¹⁴⁾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조항은 부산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선원의 석방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북송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추인을 얻어낸 것이었다.

뉴델리 결의 제20을 통해 국제적 명분 쌓기에 있어 한국정부를 수세에 몰아넣는데 성공했지만, 일본과 북한은 그래도 북송선박을 남한 해군이 공격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도움을 청한 것이 소련이었다. 소련이 북송사업에 선박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자 드디어 북송 사업에 대한 마지막 장애물을 해결한 셈이 되었다. 그리하여 1959년 12월 21일, 소련 선박이 976명의 재일조선인을 싣고 북한으로 출발한 것을 필두로 그 후 25년간 지속되어 9만 3천여 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이 거대한 “북한행 엑서더스”가 시작된 것이다.

모리스-스즈키가 재구성하는 이 50년 전의 비극은 마치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고 스틸이 넘친다. 그러나 현실은 탐정소설처럼 이야기 마지막에 명탐정이 모든 것의 비밀을 일목요연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모리스-스즈키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때때로 막다른 골목길에 부딪히며 그녀가 찾지 못한 결말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것은 탐정의 능력 문제가 아니다. 현실에서는 종종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4) 위의 책, p. 226.

II.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

『북한행 엑서더스』가 이야기가 벽에 부딪히는 지점은 재일조선인들이 북한으로 입국한 이후이다. 그들이 그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무척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을 것이라고는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한민족의 엑서더스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대규모 탈북이라는 형태로 다시 반복되기에 이른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 탈북의 행렬은 바야흐로 남한 내 새터민 2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제 탈북민들의 삶의 문제는 북한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순형·김창대·진미정의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은 『북한행 엑서더스』가 멈춘 그 지점에서의 답이 무엇일지를 다름대로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연구다. 『북한행 엑서더스』가 재일조선인들의 시각에서 북송문제를 보려고 시도한 것처럼, 이 책에서도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 새롭고 신선한 시각”을 얻고자 노력했으며, “양적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현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¹⁵⁾ 탈북자들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주제를 위해 이 연구에서 조사한 대상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받고 나오는 탈북민이나 그들에게 소개받은 비슷한 처지의 탈북민 19인과 관련자 4인이다. 여기에 국외에서도 탈북민 3명과 관련자 2인을 추가로 인터뷰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15) 이순형·김창대·진미정,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p. 20.

이 책에 따르면, “가족의 분산과 재회, 가족관계의 복잡한 구성, 가족 내부의 갈등과 이해관계 등이 그들의 탈북 경험 안에 내포”되어 있으며, “탈북민의 가족은 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하면서 생존하는 놀라운 탄력성(resilience)을 가지고 있다.¹⁶⁾” 이 탈북민의 가족 문제는 그들의 개인 문제이면서, 북한, 남한, 중국 및 제3국에 그들의 가족이 흩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국제적인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이곳 저곳에 흩어진 탈북민의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초국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탈북민의 가족 문제는 남한 정부에서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2007년 통과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률 19조 2항에서는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이 목적하는 바는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북한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결혼 관계를 이루었던 탈북민이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복잡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인 이 법률은, 남한 사회가 탈북민을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그 가족 문제를 남한의 사회 문제의 일환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법률안과 관련된 한 탈북민 가족의 사례는 탈북민 가족의 해체 및 재구성의 문제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 탈북 여성은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통일부가 비보호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도중 남편 역시 남한

16) 위의 책, p. 2.

에 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자신이 탈북해 중국에서 조선족 남편과 사는 동안, 남편도 북한에서 재혼을 해서 새 부인과 아이들이 생겼고 이들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오게 된 것이다. 남편은 북한에서부터 가족과 함께 왔으므로 남편의 호적에는 재혼한 부인과 아이들이 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반면, 부인은 조선족 남편과 사실혼관계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호적에는 북한의 남편이 현재 남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비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탈북민의 이혼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이혼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미 다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합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남한의 법규정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¹⁷⁾

이 책에서는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을 (1) 비자발적 해체와 재구성 (2) 선택적 해체와 재구성, 그리고 (3) 아노미적 해체와 재구성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¹⁸⁾ 첫 번째 비자발적 해체와 재구성은 외부 환경 요인 때문에 탈북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이 해체되었으나 해체 이후에도 끊임없이 가족을 다시 찾으려 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선택적 해체와 재구성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가족이 해체된 후 원가족의 재결합에 노력하기 보다는 새로운 생식가족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 언급된 가족 해체와 재구성 유형은 세 번째인 아노미적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적 혹은 비자발적 요인들이 이리저리 뒤엎힌 복잡한 가족 해체유형을 뜻한다. 탈북민들은 북한 탈출 및 중국 체류 과정, 그리고 남한행 및 남한 사회 적응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체를 경험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가고 있다.

비교적 적은 숫자의 참여자들을 심층 면접하여 그 내용을 심도 깊게 분석한 것은 이 연구의 장점이자 동시에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

17) 위의 책, p. 67.

18) 위의 책, pp. 61-80.

서 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은 남한에서 이혼한 탈북민인데, 이들의 가족 경험이 전체 탈북민의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책의 연구 주제가 가족 해체와 재구성이었다면, 같은 상황하에서도 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함께 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Ⅲ. 귀환 혹은 탈출

『북한행 엑서더스』와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은 모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행하는 여행의 이야기이다. 1959년의 북송민들, 2009년의 탈북민들은 모두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1959년의 여행이 어떤 파국적 결말을 맞았는지는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다.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기 힘들어진 일본을 떠나 따뜻한 고국에서의 환영과 새 삶을 기대했던 그들이 일본과 북한 정부 모두에게 속았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량 이주는 필연적으로 남한과 북한, 일본에 걸친 가족의 파편화 현상을 가져왔다. 주로 북송과정의 정치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모리스-스즈키의 책이 비교적 소홀히 다루고 있는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 그것이 개인의 심리와 가족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은 훌륭한 보완재 역할을 해준다.

이 서평을 준비하면서 놀란 것은 뜻밖에 국내에서 북송과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9만 3천 명의 재일조선인들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북한에 보내진 그 정치적 맥락과 파장에 대한 연구가 남한에서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일 정도였다. 부끄럽게도 외국인 연구자의 도움을 얻어 한민족의 잊혀졌던 역사

의 한 조각을 되찾았다는 것은 우리 국내 연구자들 모두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20세기 한민족은 민족 전체의 디아스포라와 엑서더스를 경험했다. 단지 9만 3천 명의 북송민과 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에선 한민족 전체가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향한 것이 20세기 우리의 역사였다. 한번 떠난 고향으로는 영원히 되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아직도 어딘가를 향해 전진 중이다. 북송과 탈북의 이야기는 이 여행의 과거이며 현재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지도이기도 하다.

저명한 재일교포 소설가 유미리는 손기정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육상선수였다가 동생이 이념문제로 일본 헌병에게 사살된 후 일본으로 건너온 양임득의 외손녀다. 죽기 사흘 전까지도 계속 마라톤을 뛰었다는 양임득의 행적을 찾아 한국에 온 유미리는, 외할아버지의 고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녀의 글은 북송과 탈북의 경험을, 그리고 그 외중에 해체되는 고단한 가족의 현실을 잘 요약하고 있다.

외할아버지는 동생을 대신해 사력을 다해 도망친 게 아니었을까. ‘나처럼 빨리 달렸으면 춘식이라도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통한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도망자’가 된 것이다. 징병으로부터도, 조국으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모든 것을 뿌리치고 도망치다가 ‘고독’이라는 골인 지점을 빠져나갔다……. 핏줄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 또한 지금까지 수없이 도망쳐왔다. 집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지금도 어디선가 위기의 그림자가 닥쳐오면 언제라도 도망칠 자세를 취하고 있다.¹⁹⁾

19) 유미리, 『세상의 균열과 혼의 공백』 (서울: 문학동네, 2002), pp. 50~51.

이상신

University of Iow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작으로 “Authoritarians at Risk: A Re-Examination of Authoritarianism from the Perspective of Prospect Theory”, “직접민주주의와 소수자 차별: 2004년 미국 대선과 미국의 동성결혼 금지법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정치심리학: 역사와 현황” 등이 있다.

원고 집필요령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원고의 총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서평의 경우는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3.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필자명, 국문요약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논문제목, 영문필자명, 영문요약문, keywords, 필자 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4. 필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먼저 기재한다.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표시를 하여 원고의 첫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5. 논문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하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6.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차로 매긴다.
7. 본문에서 짧은 인용은 “ ”로, 긴인용은 본문보다 들여쓰기로 하며, 강조의 표시는 ‘ ’로 한다.
8. 북한연구의 특성상 원문을 인용할 경우가 많은 바, 직접 인용 시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 북한 자료는 출판시기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으므로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년도를 명기한다.
 - 예) 김일성,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1960.8.25)”,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298~299.
9.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 그림의 번호(<표 1>, <그림 1>)를 부여하고 하단에는 출처 또는 자료라고 쓴 후 완전한 각주양식으로 표기한다.
10.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표기하고,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 처음으로 어떤 저작에 관해 주를 사용할 때는 완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양식이란 저자의 이름, 저서의 이름(논문이름), 그리고 출판에 관한 사항(저서인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인 경우 학술지의 이름, 권호, <vol. no.>, 학술지의 출판 년, 월), 페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사용할 때는 마침표 없이 ;로 연결한다.

(1) 단행본

- 이온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pp. 20~28.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55~57.
- 저자의 이름으로 연구기관, 단체, 정부의 기관 등도 사용되며, 편, 편저, 편역, 1인 이외의 공저, 공편 등의 사항을 표기한다.
-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p. 20 참조.
-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세균 외 공저,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 3~36.
- 최종태 · 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 3~36.
- Chong-Shik Chung and Chong-Wook Chung, eds., *Major Powers and Peace in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9), pp. 25~34.
- F. Parkinson 저, 정규섭 · 강원식 역, 『국제관계사상』 (서울: 일신사, 1994), p. 15.

(2) 논문

<학술지>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명』, 제×권 ×호 (출판년도)의 양식으로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제9권 1호 (2002), pp. 6~51.
- Donald S.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단행본 수록)

- 김세균, “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 융합체제’의 성립과 공고화 과정”, 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 3~36.
-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p. 247.

(학술회의)

-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 대주제』, 주최 및 학술회의 명 (학술회의 날짜).
- 양문수, “김정일 방중 이후의 남북경협: 북중경협 확대와 한국정부의 과제”, 『북한체제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 학술회의 (2006년 3월 31일).

(3) 학위논문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p. 10~15.
- Taik-young Hamm,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96), pp. 7~21.

(4) 신문

- 『로동신문』, 2004년 8월 15일.
- *The Korea Times*, April 20, 2003.

(5) 인터넷 자료

- 뉴스 기사의 경우
“우리가 버린 脱北청소년들”, 『조선일보』 (온라인), 2004년 7월 14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40421.html>>.
- 논문 등의 경우
유호선,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2004);
<<http://www.budreview.com/html/18/18-nondan-yoo-sun-ho.htm>>.
- url을 명시할 때 세미콜론으로 연결, 웹페이지 내에서의 인용위치를 명시하는 것 등은 불필요

11. 첫 번째 표기한 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

- (1) 바로 앞번호의 각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는 국문은 위의 책, 위의 논문, 위의 글로, 영문은 Ibid.로 처리한다.
- (2) 주 번호상 바로 앞 번호가 아닌 경우는 출판사향을 삭제하고 저자 이름, 저서 및 논문명의 축소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이온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p. 22.
 - Suh, *Kim Il Sung*, p. 60.
 - 함인희,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p. 270.
 -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p. 577.

12. 참고문헌 작성

- (1) 일반적으로 국문, 영문, 기타의 순서로 배열한다.
- (2) 각각은 저자의 이름에 따라 국문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영문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3) 참고문헌 작성의 기본양식은 각주에서의 심표 대신 마침표가 사용되고 괄호가 제거된다. 영문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last name)을 먼저 쓴다. 2행부터는 들여짜기를 해야 한다.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 Suh,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김연철.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추격발전과 전통적 정치체제: 북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비교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 (2004), pp. 107~128.
 - Macdonald, Donald S.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통일과 평화』 윤리규약

I. 저자(투고자) 연구윤리와 책임

1. (중복투고 및 게재의 금지)

『통일과 평화』 이외의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2. (교신저자 및 책임저자의 역할)

-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3. (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

다음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복게재의 심의와 원칙)

- ① 중복게재 및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6.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도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 시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행위
- ② 참고문헌의 왜곡: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하며,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③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④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자기표절)의 금지: 저자(투고자)는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출간된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한다.
- ⑤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7. (논문의 수정)

저자(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I. 편집위원의 윤리규약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III. 심사위원의 윤리규약

1.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안 저자(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IV. 윤리위원회와 제재

1. (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2. (소명 기회의 보장 및 비밀 보장)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투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저자(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를 적용

③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

4. (연구윤리규정 위반내용 공개)

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인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